

정책자료 2018-10-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2)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비교 공동 연구

-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진 소개]

Eva Beaujouan(Eva.Beaujouan@wu.ac.at)은 오스트리아 비트겐슈타인 인구통계센터의 연구자로 주요 연구 분야는 출산과 가족, 부부 관계, 교육과 출산율, 만혼 출산의 원인과 결과이다. 최근의 연구 성과물로 “미국과 유럽의 생애 출산 의도와 완결 출산율 간의 차이,” “부모와 자녀의 가족 규모의 연관성: 세대간 관계의 비교,” “오스트리아의 만혼 출산 의도와 출산율” 연구가 있다.

Sarah Brauner-Otto(sarah.brauner-otto@mcgill.ca)는 캐나다 맥길 대학교 사회학과와 부교수이며 인구분석 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인구학, 가족사회학, 출산, 거시-미시 연관성, 인구와 환경이다. 최근의 연구로 “미국 청년들의 불확실성, 의심, 연기: 경제적 환경과 출산 기대,” “1980~2013년 기간 동안의 캐나다 출산율 추이: 지역적 차이”이 있다.

Yen-hsin Alice Cheng(aliceyh@gate.sinica.edu.tw)은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의 연구자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가족인구학, 청소년발달, 생애주기연구이다. 최근 연구 주제로 대만과 선진 저출산 국가의 가족 변화, 대만 취약 계층의 인구 분석, 대만의 동성 연애자와 동성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등이 있다.

Minja Kim Choe(mchoe@hawaii.edu)은 하와이 이스트웨스트 센터의 선임연구자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가족과 젠더, 출산과 생식보건, 저출산 정책, 인구변동에 대한 통계 분석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국과 아시아의 가족 변화,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아시아 국가의 출산 변동, 중국의 인구 변동, 동남아시아의 인구 변동, 일본의 생애 주기 역할 변화 등이 있다.

Setsuya Fukuda(fukuda-setsuya@ipss.go.jp)는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의 수석 연구자로 주요 연구 분야는 인구사회학, 생애주기분석, 젠더, 패널데이터분석, National Transfer Accounts이 포함된다. 최근 수행한 연구에는 교육 특성별 출산율: 양성 출산율 모형 적용, 양성 불평등한 사회로부터의 변화: 일본, 독일, 네덜란드의 성 역할 분업과 출산, 동아시아와 남유럽 국가의 가족 형태, 제6차 일본가족조사 등이 있다.

Anne H. Gauthier(Gauthier@nidi.nl)는 네덜란드 학제간 인구연구소의 교수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가족 정책, 가족 연구 비교, 생활시간조사분석을 포함한다. 최근 연구에는 육아 휴직 정책이 고용, 출산, 양성 평등, 보전에 미치는 영향,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GGS), 생애 과정에서의 양성 불평등성: GGS로 부터의 주요 결과, 동아시아 국가와 선진 국가의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과 출산에 대한 장애 등이 있다.

Stuart Gietel-Basten(sgb@ust.hk)은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서 인구학, 고령화, 인구정책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최근 연구물로 왜 인구가 문제가 되는가, 출생아 수·정책·중국의 한자녀 정책, 경제발전·소득불평등과 중국 중년층의 건강, 기대 수명을 고려한 동아시아 국가의 고령화 측정, 후기 인구변동 사회에서 두 자녀에 대한 관념: 대만의 출산 의향, 중국의 출산율: 불확실한 미래 등이 있다.

Nathalie Le Bouteille(nathalie.lebouteille@orange.fr)은 프랑스 Picardie Jules Verne 대학교의 교수로 주요 연구 분야는 인구학, 인구경제학이다. 주요 연구로 부모됨과 혼외 출산 : 스웨덴의 가족 권리, 스웨덴과 아일랜드의 사회 변동 시기에서 개인 삶에 대한 제도, 이혼의 자유 혹은 결혼의 보호인가 :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이혼법, 스웨덴 영유아 보육 정책의 모호성 : 역사적 산물, 스웨덴의 가족 정책, 사회 정치, 출산율 등이 있다.

Yoon-Jeong Shin(yjshin@khasa.re.kr)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주요 연구 분야는 가족경제, 가족 정책, 가족인구학, 출산, 아동 이민 등을 포함한다. 최근 연구로서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배우자 간 사회경제적 격차 변화와 저출산 대응 방안,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 정책 비교 연구 등이 있다.

Tomáš Sobotka(tomas.sobotka@oeaw.ac.at)는 비엔나 인구통계 연구소,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 (비트겐 슈타인 인구통계 및 글로벌 인적자원 센터)의 연구자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과 가족 변화, 출산율 측정, 출산 의도와 이상적인 자녀 수, 교육과 출산 등이다. 주요 연구물로 저출산 국가의 만혼 현상: 자녀 출산 의도·경향과 결과, 유럽 국가의 무자녀 현상: 1900~1972 출생 여성 대상 장기 분석, 후기 인구 변동 시대의 출산율: 출산 연기·저출산·불안정한 출산율로의 변화 등이 있다.

Zsolt Spéder(speder@demografia.hu)는 헝가리 인구연구소의 원장으로 주요 연구 분야는 가족 형성과 출산율, 가족에 대한 태도와 가치,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국제 비교 연구이다. 최근 연구로서 유럽 4개 국가의 자녀 출산 연기·출산 포기·출산 의도, 출산 의향과 실현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후기 인구 변동 시대에서의 출산 의도의 실현 과 실패, 헝가리의 사회 변동 시기의 출산율 하락과 저출산, 결혼과 동거 등이 있다.

Laurent Toulemon(toulemon@ined.fr)은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의 수석연구자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프랑스와 유럽의 출산율 동향과 결정 요인, 출산 의도, 출산율 측정 방법론, 결혼과 이혼, 비혼 동거 부부의 삶, 아동과 가족, 생애 주기별 재생산 보건을 포함한다. 연구 성과물로서 유럽 국가의 출산 동향과 가족 정책, 프랑스의 성인으로서 이전에 있어서 성별 격차, 프랑스의 가족 형성 : 개인의 선호와 결과, 프랑스의 안정적인 출산율 하에서 감소하는 출생아 수 등이 있다.

【편집】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자료 2018-10-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2)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비교 공동 연구

-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발행일 2018년 12월

저자 인구정책연구실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발간사 <<

한국은 유래 없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가 확대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향후 출산아 수는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노인 부양비의 증가 등 인구 고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사회가 고도화 됨에 따라서 수반되는 현상으로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문화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으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반면에 동아시아 저출산 국가들 중에서는 아직도 가시적으로 출산율 회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고안함에 있어서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을 따라야 할 이상적인 모형으로 간주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보육 정책의 확대, 육아 휴직 정책의 강화, 아동 수당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과 대만도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는 최근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 확립을 통하여 출산율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책 방향의 전환을 통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최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효과적인 정책 모형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간에 걸친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o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Effectiveness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를 통하여 유럽 가족 정책의 동향과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강구하였다. 본 국제 공동 비교 연구를 통하여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수행해 온 저출산 정책의 한계점을 되돌아보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의 Laurent Toulemon 박사의 연구 책임 하에 Setsuya Fukuda (일본), Yen-hsin Alice Cheng (대만), Chen-Hao Hsu (대만), Stuart Gietel-Basten (홍콩), Minja Kim Choe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자와 함께, Anne H. Gauthier (네덜란드), Nathalie Le Bouteillec (스웨덴), Anders Ögren (스웨덴), Eva Beaujouan (오스트리아), Sarah Brauner-Otto (미국), Tomáš Sobotka (체코), Zsolt Spéder (헝가리)의 유럽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신윤정 연구위원과 우해봉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이 참여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8년 1월 18~19일 파리 국립인구연구소, 6월 5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인구학회에서 연구 진행을 위한 연구진들 간의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본 국제 공동 비교 연구의 주요 결과는 2019년 1월 14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연구진, OECD 관련자,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하여 발표하고 한국의 저출산을 둘러싼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물에 대하여 검독과 조언을 제공해 주신 KDI School의 최슬기 교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8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
제2장 분석 브리프: 저출산을 둘러싼 주요 요인	13
제1절 출산 의도와 실현의 격차 (Zsolt Spéder)	15
제2절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무자녀 현상: 비혼이 주된 원인인가? (Tomáš Sobotka)	18
제3절 혼인 감소와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Laurent Toulemon)	23
제4절 한국의 자녀 출산에 대한 가족 태도와 근로 환경 (Eva Beaujouan)	29
제5절 주거와 출산의 쿼텀과 템포: 시계열적 변화와 국가 간 차이 (Sarah Brauner-Otto)	35
제6절 동아시아의 자녀 양육비와 저출산 (Setsuya Fukuda)	38
제7절 대만 가정의 노동 부담 및 출산의향 (Yen-hsin Alice Cheng, Chen-Hao Hsu)	40
제3장 정책 브리프: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45
제1절 스웨덴의 가족 정책: 장기적인 약속 (Nathalie Le Bouteillec, Anders Ögren)	47
제2절 가족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 (Anne H. Gauthier)	53
제3절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과 인구 정책 (신윤정, 우해봉)	57
제4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문제에 대한 재검토 (Stuart Gietel-Basten)	59
제5절 문화적으로 특수한 저출산으로의 경로 (Sarah Brauner-Otto)	64
제6절 한국의 일과 가족: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Minja Kim Choe)	71
제7절 출산 장애와 정책 효과의 측정 방식에 대하여 (Anne H. Gauthier)	79
APPENDIX: EXTRACTS FROM VARIOUS SURVEYS ABOUT OBSTACLES TO FERTILITY	85

제4장 연구 논문	91
제1절 도움 없이 불가능한 추가 자녀 출산: 대만 가정의 노동 분담 및 출산 의향 (Yen-hsin Alice Cheng, Chen-Hao Hsu)	93
제2절 동아시아의 자녀 양육비와 저출산: 한국, 일본, 대만 및 EU 25개국 비교 연구 (Setsuya Fukuda)	122
제3절 동아시아의 저출산과 인구정책 (신윤정, 우해봉)	146
제4절 아시아의 가족계획사업 및 출산 선호도 (Stuart Gietel-Basten)	164
제5절 유럽의 출산 의향 실현 격차: 거시사회적 환경의 역할 (Zsolt Spéder)	204
제6절 주택 및 출산: 거시적 차원의 다국적 조사, 1982-2016년 (Sarah Brauner-Otto)	228
제7절 육아에 대한 한국,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의 가족 의식 및 근로 환경 (Eva Beaujouan)	265
부록	291

표 목차

제2장

〈표 2-1〉 성별 및 연령대별 의식 지표 2004-2014년 설문조사	33
〈표 2-2〉 근로 환경의 질(직무 긴장 및 장시간 노동)	34

제3장

〈표 3-1〉 설문조사 질문 예	80
-------------------------	----

제4장

〈표 4-1〉 3,564 부부의 성격에 관한 통계요약	116
〈표 4-2〉 가사노동시간 중 남편의 비중에 대한 OLS 회귀모델	117
〈표 4-3〉 패리티 1 이상인 여성들의 추가출산의사를 예측하는 로짓 회귀분석모델의 오즈비	119
〈표 4-4〉 여성의 자녀출산의사를 결과변수로 처리한 성향점수매칭 모델의 추정치	121
〈표 4-5〉 분석 데이터의 국가 및 기간	124
〈표 4-6〉 국가별 생애임여 단계 진입 및 종료 연령 및 잉여 기간	129
〈표 4-7〉 산아제한 정책 전환까지 지연된 기간, 주요 아시아태평양 국가	169
〈표 4-8〉 2005년 조사대상국의 특징	206
〈표 4-9〉 다양한 사회 그룹별, 3년 내 출산 의향 실현율(7-36개월 내 출산), 유럽 11개국	211
〈표 4-10〉 모델의 개별 변수	217
〈표 4-11〉 새 천년 전환기의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승산비)(7-36월 내 출산, 11개 유럽 국가)	219
〈표 4-12〉 3년 내 출산 의향과 3년 내 실현 가능성에 기여하는 거시경제적 요인 (개별 및 국가 효과)	222
〈표 4-13〉 주택 상황 측도에 대한 기술통계	239
〈표 4-14〉 주택 상황 지표 및 기간 TFR,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260
〈표 4-15〉 자가소유 제도 및 기간 TFR,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261
〈표 4-16〉 주택환경지표 및 기간 TFR, 지역별(동유럽 대 비동유럽 국가),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261
〈표 4-17〉 주택환경지표 및 기간평균 초산연령,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262
〈표 4-18〉 자가소유제도 및 기간평균 초산연령,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262
〈표 4-19〉 주택환경지표 및 기간평균 초산연령, 지역별(동유럽 대 비동유럽 국가),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263

〈표 4-20〉 한국,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의 연령별 기간 첫째 출산율에 대한 35세 및 40세 이상의 출산 기여율(%)	270
〈표 4-21〉 근로 환경의 질(직무 긴장 및 장시간 노동)	274
〈표 4-22〉 성별 및 연령대별 의식 지표 “여성의 노동 참여가 미취학자녀에게 악영향을 칠 수 있다” (동의/매우 동의한 비율) 2004-2014년 설문조사	277
〈표 4-23〉 자녀 연령별 보육시설 참여율(보육시설 등록률)	277
〈표 4-24〉 남녀 소득 비율	280
〈표 4-25〉 15-64세 남녀의 무급 가사 노동 시간(하루 평균)	280
〈표 4-26〉 성별 및 연령대별 의식 지표 2004-2014년 설문조사	281

그림 목차

제2장

[그림 2-1] 1950-1976년생 동아시아 여성의 무자녀율	19
[그림 2-2] 1972년생 선진국 여성의 최고 및 최저 무자녀 수준(위 패널) 및 최고 및 최저 증가율(아래 패널)	20
[그림 2-3] 2016년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 당 자녀수) 및 기혼 및 미혼 구성요소	25
[그림 2-4] 연령별 출산율 변화 및 결혼변화(구조변화) 및 출산율변화(비율효과)에 따른 요소 분해분석. 대만(1975-2015)(기간합계출산율 변화: 여성 1인당 3.1명 → 1.2명)/ 프랑스 본토(1966- 2016, 기간합계출산율 변화: 여성 1인 당 2.9명→ 1.9명)	26
[그림 2-5] 연령 및 기혼여성별 출산율 (연당 천명(좌측)) 및 연령별 기혼여성 비율 (퍼센트(우측)) 프랑스 본토 1966 (좌) 및 2016 (우)	27
[그림 2-6] 연령별 출산율 변화 및 결혼변화(구조변화) 및 출산율변화(비율효과)에 따른 요소 분해분석. 프랑스본토(1966-2016) 기혼여성의 출산율(좌)/미혼여성의 출산율(우)	28
[그림 2-7] 2000-2015년 교육비 지출, GDP 대비 초등부터 제3차 교육까지	34
[그림 2-8] 임대주택 지원 지수와 기간 합계 출산율 및 첫째 자녀 출산 평균 연령 (1992~2014)	36
[그림 2-9] 주택구매지원 지수와 첫째 자녀 출산 평균 연령 (1996~2016)	36
[그림 2-10] 대출·판매 지원 지수와 첫째 자녀 출산 평균 연령 (1996~2016)	37
[그림 2-11]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교육비	39
[그림 2-12]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국가 간 상관관계	39
[그림 2-13]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 한국, 일본, 대만	40
[그림 2-14] 아내의 수입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가사노동에 투입한 총시간과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 간의 연관성(2016년 기준, 대만)	43

제3장

[그림 3-1] 남성의 취업률 대비 여성의 취업률(2000-2007)	48
[그림 3-2] 출산율, 자녀/여성, 1980-2016	49
[그림 3-3] 유급 육아휴직일, 1974-2017	50
[그림 3-4] 실업률 및 출산율, 1983-2016	50
[그림 3-5] 성별에 따른 유급육아휴직일수, 1974-2017	52

[그림 3-6] 주요 국가의 대륙별 기간 합계 출산율 추이	70
[그림 3-7] 한국 여성의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 1980-2015년	73
[그림 3-8] 연령대별 영구적 비혼율, 한국, 1955-2015년	75
[그림 3-9] 한국의 기간 TFR 추세, 코호트 TFR, 및 평균 이상자녀수, 1960-2015년	75
[그림 3-10] 연령별 출산율, 1960 - 2015년, 한국 주요 연도	75

제4장

[그림 4-1] 2016 대만 여성의 소득 및 가사노동비중과 남성의 가사노동 비중	121
[그림 4-2] 연령별로 정규화된 한국(2000년과 2012년)과 일본(1999년과 2014년)의 1인당 근로소득(LI), 소비(C) 및 생애적자(LCD)	125
[그림 4-3] LCS 진입 연령과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의 국가 간 상관관계	130
[그림 4-4] 동아시아의 LCS 진입 연령과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의 시계열 상관관계	131
[그림 4-5] 0-24세 자녀의 1인당 양육비 구성	132
[그림 4-6] 0-24세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 비중	133
[그림 4-7] 0-24세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 지출 비중	133
[그림 4-8]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교육비	134
[그림 4-9]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의료비	135
[그림 4-10] 속도 조정된 TFR과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의 국가 간 상관관계	136
[그림 4-11]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인적자본과 속도 조정된 TFR의 국가 간 상관관계	137
[그림 4-12]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인적자본과 속도 조정된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 한국, 일본 대만	138
[그림 4-13]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와 의료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국가 간 상관관계	139
[그림 4-14]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 한국, 일본 대만	140
[그림 4-15]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 한국, 일본 대만	141
[그림 4-16] 1950 to 2015 동아시아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1950년-2015년)	149
[그림 4-17] 동아시아 국가의 코호트 출산율(1932년 코호트-1974년 코호트)	149
[그림 4-18] 일본의 기간 합계출산율 및 코호트 총출산율(1955년-2014년)	150
[그림 4-19]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 및 코호트 총출산율(1960-2017)	151

[그림 4-20]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152
[그림 4-21] 동아시아 국가의 기준 코호트와 후속 코호트 사이의 연령별 코호트 누적 출산율의 차이	153
[그림 4-22] 1941년-1945년 코호트과 1971년-1975년 코호트 사이의 코호트 출생률과 출생아수 진행률 추이	154
[그림 4-23]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출산 진행률 변화가 1941년-1945년에서 1966년-1970년 코호트의 출산율 감소에 미친 영향	155
[그림 4-24] 결혼 여부 및 출산 코호트별 40세-44세 유자녀 여성의 율	156
[그림 4-25] 출산 선호도와 의사결정에 적용된 계획된 행동 이론	166
[그림 4-26] 한 자녀를 장려하는 가족계획 포스터, 한국, 1980년대	171
[그림 4-27] 홍콩의 가족계획 포스터, 1982년. '자녀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둘도 많다.'	175
[그림 4-28] 가족계획을 선전하는 우표	178
[그림 4-29] 날짜를 표시되지 않은 인도 가족계획포스터 번역: 건강한 가정을 위해, 둘째를 갖기 전에 3년을 기다리세요. 정부 보건종사자, 병원 및 보건소에서 이러한 가족계획방법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179
[그림 4-30] 한 자녀 가정 이미지로 소가족을 장려하는 우표 2개	180
[그림 4-31] 소가족을 장려하는 네팔 랄리푸르 지역의 벽화 광고	184
[그림 4-32]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 생산성센터 포스터, '하나는 부족합니다'	192
[그림 4-33] 3년 내 출산할 의향을 가진 비율, 유럽 11개국, 전체 및 활성 표본 중 (21-44세 모든 여성 +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남성)	208
[그림 4-34] 3년 내 출산할 의향이 없는 이들의 7-36개월 내 비출산율, 유럽 11개국, (여러 해, 2004-2015년)	209
[그림 4-36] 출산율, 1982-2016년, 주요 국가	237
[그림 4-37] 주택 상황 지표 및 기간 TFR, 반복적 횡단면 분석의 회귀 계수. 주택과 출산 변수 간 2년 시차	255
[그림 4-38] 선형 예측, 시간 경과에 따른 주택 상황 지표별 기간합계출산율(TFR)	256
[그림 4-39] 선형 예측, 시간 경과에 따른 지역별 및 주택 상황 지표별 기간합계출산율(TFR) (동유럽 대 비동유럽)	257
[그림 4-40] 주택 상황 지표 및 평균 초산연령. 반복적 횡단면 분석의 회귀 계수. 주택 및 출산 변수 간 2년 시차	258
[그림 4-41] 선형 예측, 시간 경과에 따른 기간평균 초산연령 및 주택 상황 지표	259

[그림 4-42] 선형 예측, 시간 경과에 따른 지역별 및 주택 상황 지표별 평균 초산연령 (동유럽 대 비동유럽)	260
[그림 4-43] 시간 경과에 따른 주택환경지표	264
[그림 4-44] 1인당 주택담보대출 및 자가점유율	265
[그림 4-45] 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코호트 출산율	268
[그림 4-46] 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기간 합계출산율	269
[그림 4-47] 한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이상자녀수 분포	269
[그림 4-48] 구매력평가(PPP)에 기반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상수 2011년 미국달러)	271
[그림 4-49] 여성 실업률(여성 노동력 %)	271
[그림 4-50]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 시간	274
[그림 4-51] 시간제 고용, 여성 및 남성(여성/남성 총고용률)	276
[그림 4-52] “여성의 노동 참여가 미취학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에 대한 의식 지표(동의/매우 동의한 비율), 추세 1980-2012년	277
[그림 4-53] 의식 지표, 추세 1980-2012	280
[그림 5-54] 2000-2015년 교육비 지출, GDP 대비 초등부터 제3차 교육까지	282
[그림 4-55] 코호트 출산 진도비의,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	292
[그림 4-56] 1901-1970년생 여성의 출산진도비, 한국	293
[그림 4-57] 코호트 출산율, 7개 인구조사 기반, 1901-2010년생 여성, 한국	293
[그림 4-58] 한국,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의 연령별 기간 초산율	294
[그림 4-59] 고용 형태별(시간제/전일제) 유자녀 여성 고용률(0-14세 자녀 1명 이상)	295

제 1 장 서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

Laurent Toulemon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최근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간합계출산율은 1.3명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 변동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기간 동안 평균 자녀 출산 연령이 30세로 지속되고 순 이민에 따른 인구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50세 이전에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가 현재 규모에서 절반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은 45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기간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매우 낮은 출산 수준을 대체하려면 출생아 수의 60%에 해당하는 인구를 이민을 통하여 유입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주는 매우 낮은 출산율은 다음과 같은 출산 행태의 몇 가지 주요한 변화로 부터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낮은 출산율을 결과케 한 대표적인 출산 행태의 변화로 무자녀의 증가와 3명 이상의 자녀 출산의 감소를 들 수 있다 (Sobotka, 제2장 제2절; Boujouan, 제2장 제4절; 신윤정, 우해봉, 제3장 제3절). 출산율이 향상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출산율 동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근 기간합계출산율은 출산 연령 증가 (템포 효과)에 따라 왜곡되어 있으며, 템포 조정 기간합계출산율과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최근 기간합계출산율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그 동안 지속되어 온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미래 잠재적인 부모의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합계출산율이 반등할지라도 출산아 수의 감

1) 본 프로젝트의 원 제목은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o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Effectiveness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이며 한글 보고서의 제목은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공동 비교 연구: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번역하였다. 유럽 국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은 “가족 정책(Family Policies)”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저출산 정책”으로 부르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프로젝트 원 제목의 “가족 정책(Family Policies)”를 “저출산 정책”으로 번역하였다. 보고서 원문에서 유럽 연구자들이 지칭하는 “가족 정책(Family Policies)”은 “저출산 정책”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대 수명의 향상과 1인당 GDP의 증가 등 건강과 소득 수준에서 과거 30년 동안 상당한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해 왔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의 미래는 심화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특징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인구 구조 변화로 야기된 문제들을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Basten, 제3장 제4절).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에 필적할 만큼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출산과 관련하여 유럽 국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출산율에 대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출산을 둘러싼 현상에 대하여 명백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는 않다. 미시적인 분석은 출산과 관련한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어진 환경 하에서 출산과 관련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미시적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가족 정책의 효과성은 대부분 매우 미약하고 효과가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개인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이 거시 수준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 출산율, 첫째 자녀 출산 연령, 혼인, 고용 상태 간의 관계는 개인 수준에서 분석되는 경우와 거시 수준에서 분석되는 경우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국가 간에 보여지는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시 분석은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하여 차이점과 유사성을 제시한다. 시계열적인 변화 그리고 서로 다른 시계열 경향 간의 상관 관계 분석은 시대를 가로질러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거시적인 계량 모형을 통하여 인과 관계를 유추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국가들 간의 차이,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 나타나는 단기와 장기 경향 간의 차이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상당히 복잡한 계량 모형은 안정적이지 않고 강건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가 특수적인 효과로서 양성 평등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내 노동의 분업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가정 내 노동에 대해 이루어지는 양성 분업은 국가별 혹은 시대별 또한 인구 집단별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Cheng, 제2장 제7절). 다른 한편, 지연된 효과(lagged effects)가 존재하는 것은 모형을 통한 계량 분석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때로는 매우 오래된 지연된 효과가 남아 있을 수 있으

며 경로 의존성이 작용하기도 한다. 가족 정책은 그 자체가 출산 이슈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의 결과물일 수도 있으며, 이는 계량 모형에서의 인과 관계를 역순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다. 출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량 모형을 이용한 연구방법론 자체가 약하고 정확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낮게 나타나는 출산율 하에서 평균 자녀 수의 분포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상 자녀로 이전되는 출산 진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Sobotka, 제2장 제2절; Beaujouan, 제2장 제4절; 신윤정, 우해봉 제3장 제3절; Choe, 제3장 제6절).

본 연구에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원인들을 기술하고, 각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가족 정책 체계 내에서 저출산 현상이 갖는 관련성이 주는 함의점을 살펴 보았다. 공동 연구진들이 수행한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2장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제3장은 각 국가의 경험을 통해 나타난 가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4장은 제2장과 제3장에서 연구진들이 작성한 내용을 심화하여 작성한 연구 논문으로 구성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양성 평등성과 자녀 양육비 부담이 저출산 현상에 갖는 함의점을 살펴보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 그리고 저출산에 미친 영향력들을 심도 깊게 다루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주거 정책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유럽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출산율 수준에 어떠한 함의점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일련의 잠재적인 요인들을 논의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저출산의 요인들은 개인의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학계에서 알려진 요인들로서 특히 동아시아의 배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산 행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준다. 출산을 강제하지 않는 국가에서 출산 의향과 출산 기대는 출산 행태를 이해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Zsolt Spéder는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Generation and Gender Survey (GGS)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의향과 출산 실현 간에 존재하는 국가별 격차를 살펴보고, 같은 국가 내에서 교육 수준, 근로 상태, 자녀 수 등 세부 인구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출산 의향과 출산 실현 간의 격차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국가의 복지 체계가 출산 의

향의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낮은 출산율이 공적인 이슈로 간주되는 국가에서 부부들은 높은 출산 의향을 보였지만 출산 실현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의향과 실현 간의 격차는 출산이 개인적인 이슈로 간주되는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Tomáš Sobotka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무자녀” 현상이 비혼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Laurent Toulemon은 분해 방법론을 통하여 매우 낮은 출산이 비혼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 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여 주었다. 프랑스 사회가 적정한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혼외 출산을 터부시하지 않는 사회적 규범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율을 상승시키는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한 국가에서는 결혼의 감소가 비혼자 및 혼외 출산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반면에, 다른 국가에서는 혼외 출산율이 매우 낮고 무자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서 청년 결혼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반드시 숙고할 필요가 있는 연구 결과이다.

Eva Beaujouan은 한국,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대상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가족 태도와 근로 환경을 분석하여 여성이 노동 시장에 대해 갖는 인식이 출산과 지속적인 직업 활동 및 경력 개발을 병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교육 비용과 낮은 가족 형성 및 이에 따르는 만혼 출산이 둘째 혹은 셋째 자녀로의 이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Sarah Brauner-Otto는 주거 공급의 부족이 청년들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서 독립하여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을 이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부들이 자녀를 낳는 것을 피하게 한다고 보았다. 유럽 국가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세와 주택 구매에 대한 지원과 출산의 템포 및 쿼텀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주거 시장이 복잡한 형태로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Setsuya Fukuda는 National Transfer Account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일본, 대만의 자녀 양육 비용과 저출산 간의 관계를 유럽 국가들과 분석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매우 높은 교육 비용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부모들과 자녀들이 높은 교육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대만의 부부에 대한 최근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Yen-hsin Alice Cheng과 Chen-Hao Hsu

는 가정 내 노동 분담 특히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가 출산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출산 증진 효과는 대학교 졸업 학력과 자녀를 한 명 가지고 있는 부부에게서만 관찰되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는 여성들이 가족 내 노동을 덜 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역할의 변화는 북구 유럽 국가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더 많은 자녀 수와 높은 출산율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제3장은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현상이 사회 정책 내에서 가족 정책이 갖는 지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살펴 보았다. 가족 정책이 출생아 수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웰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족 정책의 이행과 적법성과 관련된 제도적 그리고 역사적 한계를 살펴 보았다. Nathalie Le Bouteillec과 Anders Ögren은 스웨덴의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스웨덴에서 육아 휴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느리게 증가하여 1974년 0.5%에서 1994년 10%, 2017년 28%로 증가하였다. 느린 속도로 증가한 스웨덴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가족 정책의 장기적인 추진과 안정성이 부부의 안정적인 출산 행위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스웨덴 가족 정책의 성공은 부부 간의 양성 평등성이 강한 상태에서 아버지들의 육아 휴직 참여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스웨덴의 사례는 최근 한국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들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현상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각 종 국제적인 지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성 평등성이 낮은 것이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Anne Gauthier는 가족 정책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일관성, 지속성, 안정성의 세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정책은 가시적이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지원의 유형들 간에 내부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책이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선호와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정부가 장기적으로 가족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출산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Yoon-Jeong Shin과 Haebong Woo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정책 변화를 기술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일본,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한국에서 매우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싱가포르, 대만, 한국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매우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잔존하고 있는 발전주의와 가족주의의 영향이 직장 과 가족 내에서 성 역할의 변화 등 사회적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였다.

Stuart Gietel-Basten은 “동아시아 인구문제 다시 보기”를 제안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 이슈를 저출산 현상만에만 국한하여 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출산율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와 사회 조직과 관련한 사회적인 현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인간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식이 요구되며 출산 의도와 실현 사이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광범위한 사회 시스템의 결과로서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책을 통하여 출생아 수를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교육 정책, 노인 부양, 노동 시장 등 매우 다양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출산율 향상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한 것이며 출산율 향상을 통하여 가족과 사회 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젠더 관계와 인구 고령화 등 직면한 이슈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Sarah R. Brauner-Otto와 그의 동료들은 KIHASA-EWC 공동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각 국가의 체계는 매우 다양하며 실증 분석을 통하여 각 국가의 체계가 출산율에 주는 함의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았다. 경로 의존성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나타나는 출산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며,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들도 서로 다른 일련의 사회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 정책은, 그것이 출산율 향상에 목적을 두거나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와 무관하게, 그 국가의 역사적인 과정, 문화, 사회적 체계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Minja Kim Choe는 한국의 일과 가족의 변화를 분석하고 조화로운 향상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게 한국은 과거 50년 동안 매우 빠른 경제 성장과 학력 수준의 신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여 노동 시장에 여성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이 점차로 더 많이 참여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유지해 오던 가족의 역할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자녀를 가진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었고 보육 서비스와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수행되고 있으나 출산율의 가시적인 회복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과 유연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행복한 가족 생활”이라는 목적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사회경제적인 조건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전통과 규범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주요한 변화들이 이루어져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생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Anne Gauthier는 출산 행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전략으로서 출산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문항의 개발, 이론에 기반한 계량 모형의 추정, 정책 선호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실험 연구를 통하여 특정 정책 수단이 갖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역할에 대한 선호와 출산 결정에 있어서의 장애와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출산 행태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획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았다. 부부들의 행태를 통하여 출산에 대한 장애 요인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로 의존성은 실증적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얻어진 증거들은 국가적인 배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양성 불평등성이 높을 때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 있는 부부의 출산율이 더 높을 수 있으며, 반면에 양성 불평등성이 낮을 때 불평등한 부부가 낮은 출산 수준을 보일 수 있다. 유럽 국가의 젠더 혁명은 저출산 현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최근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주된 사회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증거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가족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 것을 요구한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초저출산은 장기적인 인구 동향에 있어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이익을 줄 수 있겠으나 코호트 완결 출산율이 1.3명 이하이고 순 이민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상당히 빠른 인구 감소와 심한 인구 고령화로 연결될 수 있다. 가족 정책은 특별하게 출산율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한 국가 내에

서 저출산 이슈 이외에도 경제적인 부의 축적, 웰빙, 건강 수준의 향상 등 다른 이슈들이 산적되어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 감소와 사회 통합이 더 현저한 사회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출산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저출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상으로 사회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후일 수 있다. 정책은 사람들을 강제하지 않고 유인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출산아 수를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성 불평등성은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이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시대는 이미 지나 갔다. 여성은 더 이상 남성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 경제 활동 참여, 불평등한 가족 내 상호 역할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는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긴 노동 시간은 여성이 자녀를 돌보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이것은 남성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높은 교육 비용과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당한 투자는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이 개인적인 투자인지 혹은 공적인 투자인지에 대한 질문은 교육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에는 논외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제 근로와 육아 휴직제도 뿐 만 아니라 조세 체계, 교육 체계, 주거 정책 역시 출산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과 부부의 선택은 사회적 체계의 맥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family package”라고 불리는 가족 형성과 함께 따라오는 많은 의무들이 자녀 출산과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여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없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정한 행동은 장려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 여전히 원칙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출산 장려 정책은 웰빙이라는 질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떠나서 복지 정책 그리고 가족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이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출산율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출산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한 국가의 역사적인 발달 과정, 문화, 사회 체계와 부합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국가는 자국의 상황에 맞는 고유의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여성들이 출산 후에 직장으로 빨리 복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독일의 보육 정책과 같이 사람들의 자발성을 유도하도록 정책

을 설계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정책은 서로 다른 배경 - 예를 들면 근로 문화, 교육 정책, 아버지의 육아 참여 정도 등- 하에서 자녀 양육에 적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이슈를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인 양성 평등은 그 자체로 만으로도 달성이 필요한 과제로서 출산율 향상 보다 더 오랜 기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일 가족 양립과 가족의 공고성은 여성과 함께 남성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회 체계적인 이슈이다. 양성 평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혼외 출산, 동성 부부 등)을 받아들이고 포용적인 가족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사회 시스템의 큰 변화를 요구 한다. 한국 정부는 보육 정책과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교육 비용, 근로 시간, 결혼 규범 등 광범위한 사회 체계의 현격한 변화가 가족 정책을 보완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 2 장

분석 브리프: 저출산을 둘러싼 주요 요인

제1절 출산 의도와 실현의 격차

제2절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무자녀 현상:
비혼이 주된 원인인가?

제3절 혼인 감소와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제4절 한국의 자녀 출산에 대한 가족 태도와 근로 환경

제5절 주거와 출산의 퀀텀과 템포: 시계열적 변화와 국가 간 차이

제6절 동아시아의 자녀 양육비와 저출산

제7절 대만 가정의 노동 분담 및 출산의향

2

분석 브리프: << 저출산을 둘러싼 주요 요인

제1절 출산 의도와 실현의 격차

Zsolt Spéder (헝가리 인구연구소)

일부 유럽 국가의 초저출산율 및 평균 이상자녀수와 합계출산율 간 차이, “출산 격차”는 출산 의향과 출산 행동(의향의 결과)에 대한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실제로 이상 자녀수는 대체 수준 이상이지만 실제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인 경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정책 개발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인 “이상자녀수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물에는 무엇이 있는가?”는 개인 차원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자녀를 두 명 이상 원하지만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 장애물에 대한 연구는 정책 형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이상자녀수를 계획한 남성과 여성을 추적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가 필요하다. 초기 미국 연구는 출산 의향 실현이 불완전할 뿐 아니라 실현된 자녀 수의 절반 가량이 “오버슈팅” 또는 “언더슈팅”의 결과라며 우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유럽 저출산 국가의 세대 및 성별 설문조사(Vikat et al. 2007)는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일반, 국가별 및 사회그룹별 관계 확인에 도움이 되는 출산 의향과 행동 결과에 대한 연구를 약속했다.

유럽 전역의 “성별 및 세대 설문조사(GGS)”를 사용한 경험적 전망 분석은 2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3년 간의 기간에 집중한다. 또한 출산 의향이 나타나는 시점인 1차 웨이브부터 1차 웨이브에서 측정된 출산 의향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와 실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2차 웨이브 까지 관찰한다. 다양한 개인적 및 고수준 요인을 분석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의향 실현을 돕거나 저해하는지 요인을 테스트할 수 있다. 정책을 출산 의향 실현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선택한 경우, 모든 지원 및 저해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인을 살펴보고 단기 의향 실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유럽은 국가별로 의향 실현 속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동거인이 있는 경우, 27개월 내

3년 출산 의향 실현율은 프랑스와 스웨덴이 49.7-49.4%로 절반 수준인 것에 반해 러시아와 불가리아는 각각 18.9% 및 23.3%로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조사 기간 동거인의 29.1%가 출산을 해 중간 위치에 있다. 출산 의향 실현율의 차이는 개별 요소(구성 효과)와 국가별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원/저해 요소에 대한 결과는 몇몇 국가의 연구와 11개 유럽 국가의 비교 연구에 기반한다. 개인 또는 그룹별 요소의 경우 연령, 동반 상태 및 출산력과 같은 인구학적 요소는 출산 의향 실현 또는 미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 동반자가 없고 출산력이 높은 중년(하위표본의 35세 이상)은 출산 계획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 정책 관점에서 연기는 의도하지 않게 실패율을 높여 자녀 수를 줄일 수 있고 동반자 관계는 출산 의향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출산력과 실현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적 출산 수준과 관련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저출산 국가(이탈리아, 헝가리, 스위스)는 무자녀 그룹이 유자녀 그룹보다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무자녀 그룹과 한 자녀 그룹의 실현율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 프랑스와 대조를 이룬다. 다시 말해, 이탈리아, 헝가리, 스위스와 같은 저출산국에서 첫째 출산은 둘째 이상 출산보다 모호하고 “오래 걸린다” 이는 저출산국의 정책 결정 시 첫째 출산 장려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 중 교육 수준은 포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지위(교육, 소득, 여성과 동거인의 노동시장)의 영향 또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탈리아는 남성의 교육 수준이 출산 의향 실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프랑스는 여성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특히 이탈리아에서 출산 의향 미실현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독일은 남성이 실업 상태이거나 여성이 전일 고용된 경우 실패율이 높았다. 이들 모두는 출산 의향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가정 규범과 인식 또한 중요하다. 주관적 규범 지수는 주로 국가별 분석 및 통합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다. 이는 “중요한 관련인”이 이들의 출산을 기대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 의향 실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거시적 수준 차이의 경우, 더욱 광범위한 지역 차원 요인(서유럽 대 동유럽/시장경제 대 탈사회주의 경제)과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 통계 방법 또는 다변량 모델링을 사용하면 서유럽과 탈사회주의 동유럽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난다. 탈사회주의 국가의 출산 실현율은 현재 서유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서유럽보다

동유럽에서 3년 내에 계획된 출산 의향을 실현하지 못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다. 이는 탈사회주의 국가의 급격한 생활 조건 변화로 인해 출산 의향 실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동유럽과 서유럽을 구분해 살펴볼 경우, 탈사회주의 국가는 주관적 저소득층의 출산 의향 실현율이 고소득층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격변기’ 동안 취약한 재정 상황이 출산 의향 실패율을 크게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단기 출산 의향 실현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국가별 차이의 원인을 조사했다. 국가별 특성 중 세 가지 질/차원이 실현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출산 의향 실현에 도움이 되는 거시사회적 조건과 이에 반하는 경향이 있는 기타 조건이 있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이론적 기반에서 이러한 거시사회적 조건을 파악하려고 했다.

첫째, 분석 결과 예상했듯이 경제적 역학과 불확실성이 국가 간 차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플레이션 변동 또는 실업률이 높으면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출산 의향이 변경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복지국가개입은 출산 의향 실현과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복지국가개입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낮춰 안정감을 높여준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조건 또한 중요하다. 출산 의향이 사적 문제로 인식되는 사회의 실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대가 강한 사회 및 사회 집단은 출산 의향이 과장되어 실제 실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출산 의향 실현 분석의 주요 관찰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을 연기하면 가임 기간 단축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출산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시점을 포함한 정책을 알리고 “시간이 될 때”가 아닌 늦지 않게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첫째를 출산하고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이는 저출산 국가의 정책 설계 시 첫째 출산 장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경제적 역동성뿐 아니라 제도적 변화로 야기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해 출산 결정이 변경/연기될 수 있다. 책임성은 출산 의향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특성이다. 모든 정책 개입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넷째, 문화 풍토, 보편적 문화 가치와 조건도 무시할 수 없다. 출산 의향을 성공적으로 실현을 위해 개인의 고려 사항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인식이 중요하다. 출산을 장려하는 공동체/대중의 기대는 비건설적일 수 있다. 이는

지나친 낙관주의가 될 수 있고 실제 상황에 맞춰 출산 의향이 바뀔 수 있다.

Reference

Vikat, A., Spéder, Zs., Beets, G., Billari, F.C., Bühler, C., Désesquelles, A., Fokkema, T., Hoem, J.M., MacDonald, A., Neyer, G., Pailhé, A. Pinnelli, A. and A. Solaz, 2007.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S):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s and Processes in the Life Course. *Demographic Research* Volume 17, Article 14. 389-440. www.demographicresearch.org

제2절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무자녀 현상: 비혼이 주된 원인인가?

Tomáš Sobotka (비엔나 인구통계 연구소,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
비트겐슈타인 인구통계 및 글로벌 인적자원 센터)

1. 소개

결혼을 계속 연기하고 결국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 증가는 오늘날 동아시아와 싱가포르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동아시아는 대부분 결혼 관계에서 출산이 이뤄진다. 실제로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혼외출산율은 2-4%에 불과하며 홍콩은 이보다 높은 8% 수준이다(Raymo et al. 2015).

본 정책 브리핑은 무자녀 현상을 동아시아 초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고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 4개 선진국과 싱가포르(여기서는 이들 5개국을 “동아시아”로 총칭함)에서 증가하고 있는 무자녀 여성 비율에 집중한다. 또한 결혼과 출산의 연관성에 관해 논의한다. 비혼에 대한 정책 토론은 결혼과 출산 결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비논리적 가정에 기초한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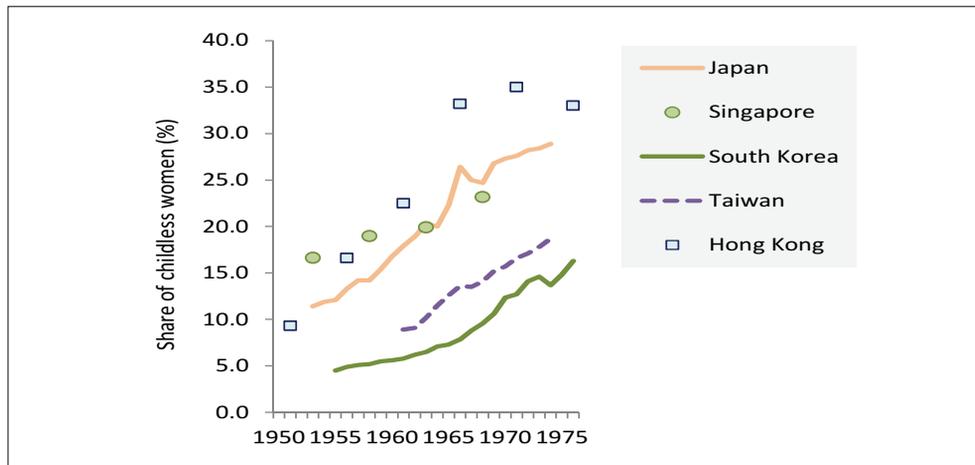
2. 동아시아의 무자녀율 급증

동아시아의 영구적 무자녀율은 매우 빠르게 증가해 싱가포르, 일본, 홍콩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그림 2-1, Frejka et al. 2010 참조). 1965-70년 출생한 싱가포르 여성의 23%가 무자녀 상태이다. 일본은 1950년대 초 이후 출생한 여성부터 무자녀율이 꾸준히 증가해 1970년대 중반생 여성의 10명 중 3명이 무자녀이다. 공식 추정치에 따르면 1971년생 홍콩 여성의 무자녀율은 3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과 대만은 보다 최근 무자녀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반생 대만 여성 5명 중 1명, 1976년생 한국 여성의 16%가 무자녀이다. 이들 양국은 30대 여성의 미혼율이 증가해 무자녀율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동아시아의 무자녀율은 증가세가 빠르고 수준이 높다. 1972년경 출생한 선진국 여성의 경우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무자녀율이 가장 높고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이 뒤를 이었다(그림 2-2). 동아시아와 남유럽 지역에서도 1960년-1972년생 여성의 무자녀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지만 일부 유럽은 안정세를 유지하거나(예: 네덜란드, 영국) 다소 감소했다(스웨덴, 스위스).. 유럽 이외 지역의 경우 미국 여성의 무자녀율이 크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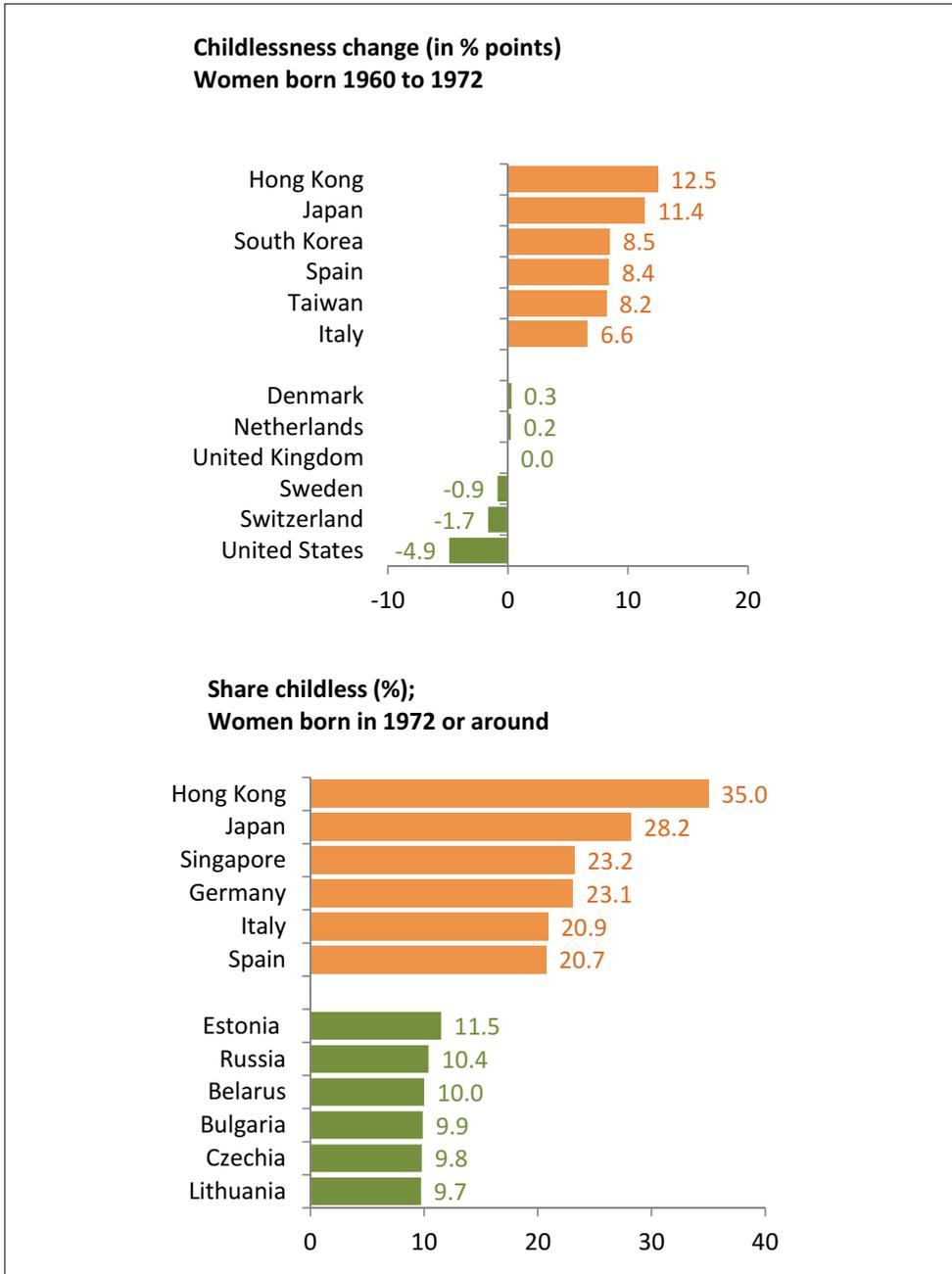
[그림 2-1] 1950-1976년생 동아시아 여성의 무자녀율

(단위: %)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CFE 데이터베이스(2018), 국가 통계청.

[그림 2-2] 1972년생 선진국 여성의 최고 및 최저 무자녀 수준(위 패널) 및 최고 및 최저 증가율(아래 패널)



주: 35개국 데이터(5개 동아시아, 29개 유럽 국가 및 미국 포함, 유럽 국가의 경우 Sobotka (2017) 참조). 일부 국가는 1960년과 1972년생 코호트가 아닌 이들 코호트에 가장 근접한 가용 코호트 데이터를 사용했다.

3. 무자녀가 저출산과 완결 출산을 감소에 미친 영향

동아시아 지역 여성의 무자녀율은 매우 높고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초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 일본, 대만 유자녀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2명으로 일부 중부, 동부 및 서부 유럽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홍콩 유자녀 여성의 자녀 수는 평균 1.7명으로 스페인 및 러시아와 비슷하다. 그러나 홍콩과 일본의 높은 무자녀율은 동아시아 여성의 완료 출산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무자녀 증가는 또한 특히 한국, 홍콩 및 일본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 감소의 주원인이다.

4. 기혼 여성의 무자녀율 증가

동아시아 지역의 극히 낮은 혼외출산율은 결혼 제도와 출산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결혼 직후 출산하는 관습이 약화되고 있다. 과거 기혼 부부의 무자녀율은 장기 불임률과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미미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생 기혼 여성은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그림 5). 싱가포르 기혼 여성의 무자녀율은 1930년 2%에서 1970년 11%로 급증했다. 현재 싱가포르 무자녀 여성 10명 중 4명 이상, 일본의 경우 10명 중 3명이 기혼 여성이다. 또한 일본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 후 첫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결혼 연령 상승으로 인한 불임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

5. 결혼에서 출산으로 정책 중심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

동아시아는 1950년대-1970년대 중반 출생한 여성의 무자녀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이들 여성 코호트는 고등 교육 확대, 가족과 출산에 대한 규범과 가치관 변화, 기혼 여성의 고용 증가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한 세대이다. 동아시아는 성불평등이 만연하고 자녀 교육비가 높고, 청년 세대의 고용 불안과 경제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이들 요소는 대부분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가족 형성을 저해한다.

동아시아의 무자녀율 증가를 만혼과 비혼의 결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혼과

출산 결정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무자녀가 반드시 미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기혼 부부의 무자녀 증가율도 상당하지만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혼과 출산 간 인과 관계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자녀 계획이 없는 남녀는 결혼을 연기할 수 있다. 나아가 20~30대 청년의 상당수가 성역할, 압력, 자녀와 가족 친족에 대한 의무로 인해 “결혼 패키지” 자체를 꺼릴 수 있다. 이들 의무는 특히 여성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Bumpass et al. 2009, Raymo et al. 2015). 관계의 맥락이 변하고 장래 파트너에 대한 기대도 바뀌었다. 시간 경과에 따라 미혼 여성과 남성이 급증해 미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감소했다.

동아시아의 출산 장려 정책은 결혼 장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결혼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자녀 양육비, 부모의 의무 또는 성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높으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족 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출산 계획, 포부, 바람 그리고 출산 실현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에 집중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아시아 청년층은 후년에 자녀를 원하더라도(Gietel-Basten et al. 2018), 양육비, 직장 및 기타 부담으로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출산 정책은 기혼 부부만이 아닌 미혼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Bumpass, L.L., Rindfuss, R.R., Choe, M.K. and Tsuya, N.O. 2009.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low fertility: the case of Japan.” *Asian Population Studies* 5(3): 215-235.
- Cohort Fertility and Education (CFE) database. 2018. Data on cohort fertility rates and parity distribution accessed in July 2018 at <http://www.cfe-database.org/>.
- Frejka, T., Jones, G.W. and Sardon, J.-P. 2010. “East Asian childbearing patterns and policy developmen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3): 579-606.
- Gietel-Basten, S., Casterline, J. and Choe, M.K. (eds.)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Edward Elgar Publishing.

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Data on childlessness and parity distribution of the female population by year of birth.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Germany) and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Austria); www.humanfertility.org, accessed in July 2018.

Raymo, J.M., Park, H., Xie, Y. and Yeung, W.J.J. 2015. "Marriage and family in East Asia: Continuity and chan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015 (41): 471-492.

Sobotka, T. 2017. "Childlessness in Europe: Reconstructing long-term trends among women born in 1900-1972." Ch. 9 in Kreyenfeld, M. and Konietzka, D. (eds.): *Childlessness in Europe: Contexts, causes, and consequences*. Springer, Cham, pp. 17-53.

제3절 혼인 감소와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Laurent Toulemon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1. 핵심 내용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히 급격한 혼인과 출산의 감소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출산율 분해 결과들은 혼인한 사람들의 출산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증가하기도 하였음), 최근의 매우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결혼 감소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정부가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분해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결과들은 출산율이 많이 낮지 않은 국가들에게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출산율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선진 국가에서 혼인의 감소는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다.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혼외 출산의 차이에 따른 것이며 혼인한 사람들의 출산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심층적인 분해 분석 결과는 출산율이 서로 다른 수준을 보이는 것이 결혼 감소에 따른 것이 아니며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의 출산율이 서로 다른 것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혼외 출산은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가족 규범이 유연한 국가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출산 장려 정책이 결혼 장려

정책에 기초해서는 안 될 것이며 파트너를 맺고 전통적인 남성 생계 부양자 부부 모형을 따르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국가별 출산율의 차이는 결혼가정의 출산이 아닌 비혼 가정 내에서의 출산과 관련이 있다

베이비 붐 세대가 끝나면, 서방 국가들은 출산율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부는 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초저출산율(합계출산율 TFR, 1.3 이하)을 겪게 될 것이고, 일부는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합계출산율 1.8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출산율 추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이러한 변화는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출산율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는 이러한 변화가 대상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출산 자녀 수에 따른 부부와 출산 순서 등), 특정 국가의 전반적 환경에 따라 그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결혼감소가 출산율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결혼의(업무) 강도와 전체 출산율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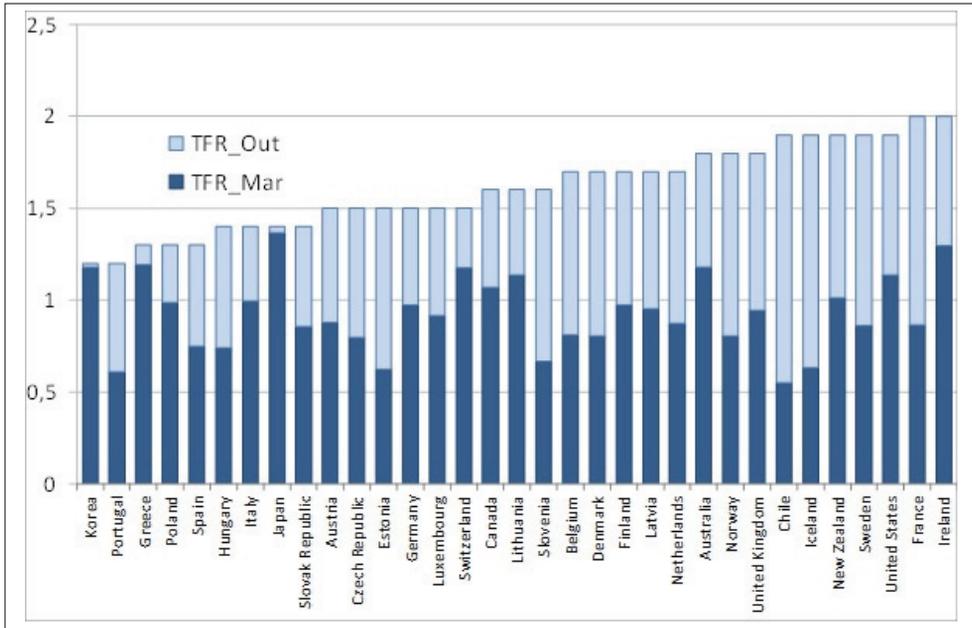
두 나라의 시간 추세를 비교하기 전에 OECD 회원국들을 세 가지 지표, 즉 2016 년의 기간합계출산율과 결혼 가정과 비혼 가정의 구성 요소들을 기준으로 해 보고자 한다. 기간합계출산율은 결혼 가정의 합계 출산율과 비혼 가정의 합계 출산율의 합이다. 결혼 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지는 않지만,²⁾ 기혼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합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 년 OECD 국가를 합계출산율 (TFR) 수준과 비교해 볼 때, 기혼가정과 미혼가정에서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제거했을 때 그 결과는 명징했다. 요약하면, 국가 간 차이는 주로 비혼가정의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결혼 구성 요소와 TFR 간의 국가 간 상관관계는 무의미하다(그림 2-3).

따라서 출산율이 결혼 여부에 따른 행동으로 설명이 된다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혼

2) 각 지수는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이다. 연령별 기혼여성 출산율이란 해당 연령대 모든 여성(결혼 여부 무관) 대비 해당 연령의 기혼여성 출산율의 비율을 의미한다. 비혼여성 출산율이란 해당 연령대 모든 여성 대비 해당 연령의 비혼 여성 출산율의 비율을 말한다. 이 두 지수를 합계출산율에 합산한다.

가정의 출산아 수가 아니라, 오히려 비혼 가정의 출산아수라는 의미다.

[그림 2-3] 2016년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 당 자녀수) 및 기혼 및 미혼 구성요소



주: 국가는 TFR증가 순으로 정렬. TFR_Mar: 결혼가정의 구성 요소; TFR_Out: 비혼가정의 구성 요소. 합계: 합계출산율 (여성 1인 당 자녀들).

자료: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3. 출산율 감소에 대한 분해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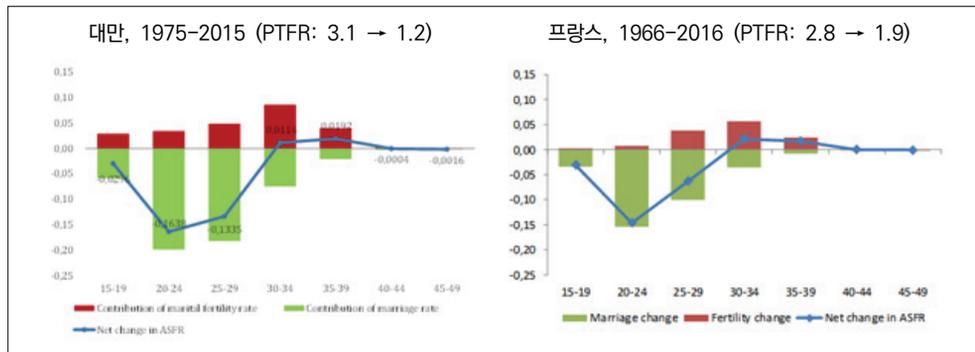
분해기법은 (두 국가 혹은 단일 국가 내에서 두 기간)의 비율효과의 비중 차이는 물론 구조효과의 비중 차이를 구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분해기법은 Kitagawa(1955)의 기념비적 연구가 발표된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해오고 있다. 그의 연구 이후로 TFR 추세를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가지 요소는 연령 (또는 연령 집단)별 결혼 한 여성의 비율 변화 (구조 효과)와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 및 비혼 여성의 출산율의 변화 (출산율 효과)를 말한다. 이 분석은 아시아 학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기법으로, TFR의 급격한 감소 원인이 대부분 혹은 전적으로 결혼 한 여성의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은 거의 안정적인데 반해, 미혼 여성의 출산율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분해기법의 분석결과는 결혼

의 증가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두 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만약 구조효과 그 자체가 출산율 추이의 결과일 경우 그러한 분해기법의 결과를 단순히 인과관계로만 해석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결혼 구조는 사회적 행동의 많은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여성들이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둘째, 현재의 출산율 추이와 관계 없이 선진국에서는 매우 유사한 추세가 관찰된다. [그림 2-4]는 지난 20년간 대만과 프랑스에서 동일한 분해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보여준다. 양국의 분해기법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출산율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져 이를 일정부분 상쇄하고 있다. 결혼한 여성의 비율 감소가 출산율 감소를 “설명해주는” 주요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 분해는 대만의 경우 현재 TFR이 여성 1인당 출산아의 수가 약 1.2 명 (1.9 명 감소)이고, 프랑스는 1.9명 (0.9명 감소 이후)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 차이는 다른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대만의 경우, 미혼 여성의 출산 비율이 8%이고, 프랑스의 경우 60%이다. [그림 2-5]는 1966 년과 2016 년의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출산율 및 연령별 기혼여성의 비율(점선으로 된 곡선)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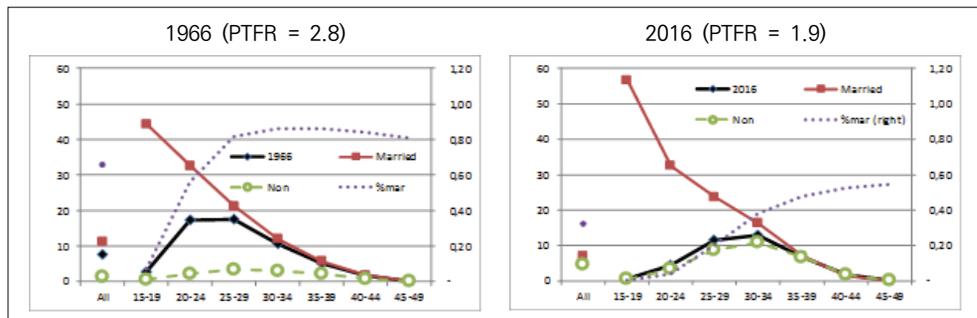
[그림 2-4] 연령별 출산율 변화 및 결혼변화(구조변화) 및 출산율변화(비율효과)에 따른 요소 분해분석.
 대만(1975-2015)(기간합계출산율 변화: 여성 1인당 3.1명 → 1.2명)/ 프랑스 본토(1966-2016, 기간합계출산율 변화: 여성 1인 당 2.9명→ 1.9명)



자료: 대만: 엘리스 청(personal communication)/프랑스: 국립통계경제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기혼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기혼여성의 표준 비율은 66 %에서 32 %로 하락했다.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결혼 한 여성이 점점 더 선택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1966년과 2016년 사이 연령별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증가했다(결혼 이후의 기간 별로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산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지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출산율 변화의 주요 원인은 미혼 여성의 출산율에서 비롯된다. 1966년 미혼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1.3명이었으며, 2016년 4.5명으로 증가해, 미혼 여성의 표준화 출산율은 3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전체 출산율은 미혼 여성의 출산율과 거의 비슷하다. 젊은 나이의 대부분 여성들은 미혼이며, 고령자의 경우 기혼 및 미혼 여성의 출산율은 상당히 비슷하다.

[그림 2-5] 연령 및 기혼여성별 출산율 (연당 천명(좌축) 및 연령별 기혼여성 비율 (퍼센트(우축)) 프랑스 본토 1966 (좌) 및 2016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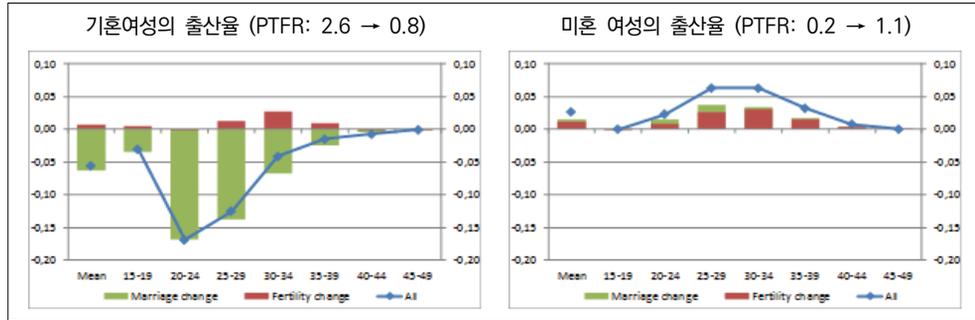


자료: 국립통계경제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그림 2-6]은 프랑스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출산을 분리해서 추가적인 분해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혼여성의 출산율 감소는 대만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혼 여성의 출산율이 급증하여, 이들의 TFR 기여도는 여성 1인당 0.2명에서 1.1명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프랑스의 전반적인 출산율 변화는 두 가지 추가 구성 요소로 분해 될 수 있다. 첫째, 기혼여성의 출산율 감소는 주로 기혼여성의 비율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과 상당히 유사하다. 둘째, 미혼여성의 출산율이 크게 증가로 기혼여성의 출산율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했다. 또한 미혼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을 견인하고,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 아시아국가들과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6] 연령별 출산율 변화 및 결혼변화(구조변화) 및 출산율변화(비율효과)에 따른 요소 분해분석.
프랑스본토(1966-2016) 기혼여성의 출산율(좌)/미혼여성의 출산율(우)



자료: 국립통계경제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1950년대 유럽에서 미혼여성의 출산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혼의 감소는 유럽의 저출산국에서처럼 아시아 선진국(일본, 대만, 한국, 홍콩)에서 가족역할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산행태의 변화는 세계적으로 사회적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결혼과 임신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비혼 출산이 옵션이 될 수 없는 국가들은 “가족 패키지(family package)”가 엄격한 국가들이다. 다시 말해,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함께 사는 파트너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함께 산다는 것은 결혼을 의미한다. 또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결혼한 남성은 가족의 수입(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부는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국가에서는 기혼 여성과 남성은 결혼 전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행동을 해야 하며, 가족 내에서 차별화되고 불평등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가족 패키지를 포기한다. 이는 “가족 패키지” 개념 하에서는 결혼한 부부에게 엄격한 역할행동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그 결과 결혼율과 비혼 부부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출산율로 이어진다.

가족 행동이 보다 다채로운 국가의 경우, 젊은이들이 독립적으로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즉, 함께 살지 않아도 성관계를 할 수 있고, 결혼하지 않고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아 양육할 수 있다. 여성들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가족의 형태가 훨씬 더 다양할 뿐만 아

나라 합계출산율도 더 높다.

참고문헌

- Yip, P.S.F. and M. Chen. 2016. “An elasticity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pronatalist measures in Taiwan.” *Asian Population Studies* 12(3): 273-293.
- Kitagawa, E. 1955. Component of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0 (272): 1168-1194.
- Rindfuss R.R, Choe M., and S. Brauner-Otto. 2016. The Emergence of Two Distinct Fertility Regimes in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Population Research Policy Review* 35:287-304.

제4절 한국의 자녀 출산에 대한 가족 태도와 근로 환경

Eva Beaujouan (오스트리아 비트겐슈타인 인구통계센터)

1. 서론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와의 비교 연구 결과 한국의 가족 형성을 저해하는 몇 가지 요소를 확인했다. 가정 형성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산의 물적 조건을 직접 개선하기 위한 정책뿐 아니라 근로 환경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유자녀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출하고 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유급 노동을 재구성하고 남녀 모두의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매우 높은 양육비(주로 교육비)는 자녀수를 제약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간주된다. 빠른 경제 발전 속에서 이데올로기는 천천히 변하지만 특히 여성의 새로운 역할과 일과 가정 영역의 새로운 필요성 등과 같은 불평등은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세대 간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청년 특히 여성들의 정치 개입과 노동 시장 참여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2. 가족 형성과 첫째 출산

가. 노동 시장에 대한 여성의 인식

세대가 바뀌면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잠재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경제 발전으로 개인의 전망이 빠르게 바뀌었고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필수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 문화는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성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팽배하고 유자녀 여성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이다(Riley 2016).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노동력이 여전히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이는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임금 수준에도 반영되어 있다. 여성은 또한 (무급) 가사 노동의 5분의 4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한국의 조직 문화는 성불평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만이 이들의 노동 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노동 시장의 성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으며 세대 간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작지만 명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표 1).

나. 근로 조건, 근로 환경의 질

한국은 대다수 노동자가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고 직무 긴장도가 높은 편이다(표 2). 또한 동반자관계를 까다로운 사회 참여 활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유시간에는 가능한 여유롭고 편안한 활동을 선호할 수 있다. 이는 가족 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여전히 정치적 우선과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Noland(2012)는 기존 노동력뿐 아니라 여성 노동력의 효과적 활용을 최근 경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했다.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절되어 있는 유자녀 여성의 의도적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 노동 경직성

현재 남성은 물론 여성도 4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동 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여성의 경우 결혼 또는 임신을 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오스트

리아는 보수적 사회에서 노동 유연성과 특히 시간제 근로제를 활용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첫째 이를 통해 남녀의 노동 긴장을 더욱 적절히 재분할 수 있다. 둘째 가정을 형성한 후 여성에게 전업주부보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유자녀 여성의 노동이 가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남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전제되어야 한다.

라. 남성의 중요성

동아시아에서 실시된 세계가치관조사와 국제사회조사는 남성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이 부재해 남성의 역할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반길 수 있다. 남성의 장시간 노동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크게 줄여 출산 포기를 불러올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결혼 패키지”가 여성에게 매력적인지, 가사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사 분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한국은 최근 근로 시간을 개혁했고 직장 문화도 함께 변화한다면 가정 형성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남녀의 균형과 출산 의향이 중요하다.

3. 둘째 이상 출산

둘째 이상 출산은 출산율을 대체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가정 형성의 1단계를 완료한 후(여성은 이미 주부임), 자녀를 늘리려면 근로 환경과 성평등 이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고려 사항은 이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압박은 양육비 증가로 이어졌다(그림 2-7). 현재 자녀(첫째)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고려하면(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임), 최고의 교육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둘째 출산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러한 교육열을 되돌아보고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수 있다.

4. 고령 출산과 기타 결합 형태

여기서는 가정 환경이 출산을 향상을 저해하는지에 관해 간단히 논의한다. 연령별 초산율 그래프에 따르면 출산 연기가 보편적이지만 출산 연령은 완만하게 늘어났다. 고령 출산은 제한적이며 TRF가 매우 낮음에도 2014년 기준 40세 이후 초산율은 대부분 서양 국가가 2-5%인 것에 반해 1.4%에 불과했다(Beaujouan and Sobotka 2019). 첫째, 출산을 위한 동반자관계가 유연하면 출산 연기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은 제약이 많은 결혼보다 자유로운 관계에서 출산을 선호할 수 있고 따라서 출산 연령이 빨라질 수 있다. 둘째, 여성은 여전히 고령 출산과 결혼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출산을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Yoo(2016)에서는 1980년생 코호트에서 45세 기혼율이 “회복” 시나리오에 따라 (95%에서) 70-85%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출산이 결혼 제도 내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물론 총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35세 이상 여성과 커플의 동반자관계 형성과 출산 장려는 한국의 출산율 회복을 촉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이들 연령층의 특수성을 겨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Yoo(2016)에 따르면 출산율 회복은 초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그룹과 교육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들 그룹은 노동 시장 참여가 활발하고 가족을 위해 특히 경력과 같은 개인의 꿈을 포기하기를 꺼려한다.

5. 빠른 변화로 인한 세대 간 차이

시장 경제는 고대 사회와 매우 다른 생활 방식을 추구한다. 신세대와 구세대가 사회에 대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Kyung-Sup and Song (2010)는 가족 제도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빠른 시장 경제 도입으로 신세대는 전통 규범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수 있다(Teitelbaum 2018).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번 연구를 통해 세대 간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세대는 여성의 유급 노동에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자녀를 위해 집에 있어야 하는 어머니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는 더욱 평등한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신세대가 또는 여성의 바람과 구세대가 만든 현실 간 차이로 인해 개혁이 둔화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직장인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문화 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Teitelbaum 2018).

6. 가족 정책 및 정부 개입

한국 정부는 지난 계획에서 부모에게 물질적 복지를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책으로는 단기간에 출산 추세를 바꾸지 못하고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국가의 특이성은 계속 유지된다. 이제 정부에서 직장 문화, 출산 시 남성의 역할, 성평등 등 전통성이 약화된 현대 사회에 적합한 출산율 개선 정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Beaujouan, Éva, and Tomáš Sobotka. 2019. “Continuing increase in late childbearing in low-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 Societies*.
- Kyung-Sup, Chang, and Song Min-You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39-564.
- Noland, Marcus. 2012. “Korea’s Growth Performance: Past and Future,”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7(1): 20-42.
- Teitelbaum, Michael S. 2018. Political Effects – Real and Imagined – In Low Fertility Societies. In: Poston, Dudley L., Lee, Samsik and Kim, Han Gon (eds.), *Low Fertility Regimes and Demographic and Societal Change*, 193-212. Springer.
- Yoo, Sam Hyun. 2016.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in cohort marriage: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35(1): 1045-1078.

〈표 2-1〉 성별 및 연령대별 의식 지표 2004-2014년 설문조사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남성				여성			
	15-29	30-49	50-69	전체	15-29	30-49	50-69	전체
오스트리아	11.3	17.6	23.6	15.5	11.8	11.8	25.3	11.8
프랑스	6.9	8.4	16.4	7.9	11.4	11.5	16.6	11.4
한국	23.6	36.2	48.3	32.2	12	24.5	47.4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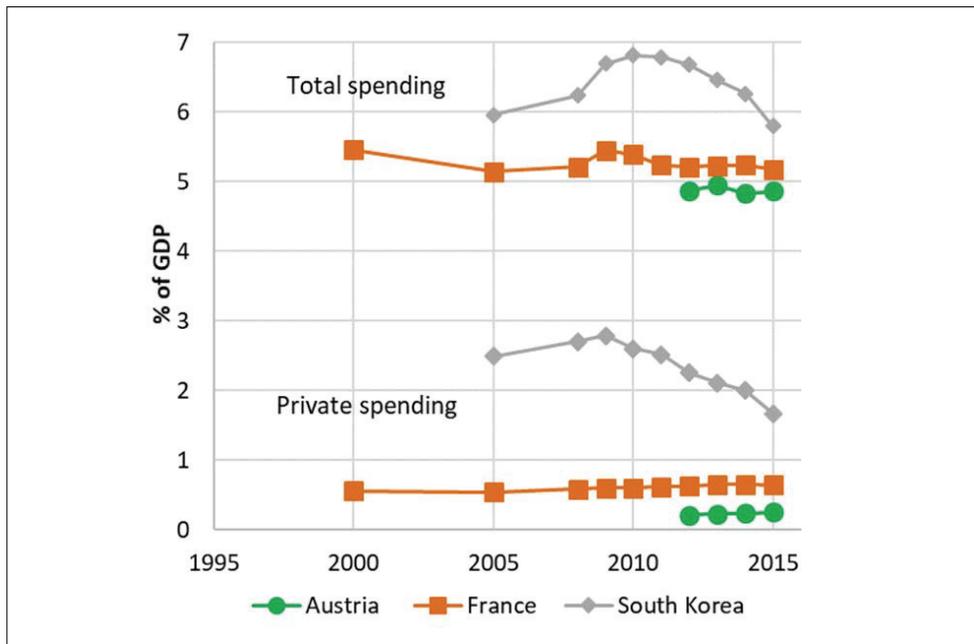
자료: 세계가치관조사 1990, 1996, 2001, 2006, 2010년 및 한국에 대한 2012년 국제사회조사, 1988, 1994년 국제사회조사, 2006년 유로바로미터 및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1990, 2008, 2012년 유럽가치관조사

〈표 2-2〉 근로 환경의 질(직무 긴장 및 장시간 노동)

	직무 긴장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2015)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 (2015,본업 기준)
오스트리아	44.4	4.9
프랑스	45.2	4.9
한국	53.7	22.6

자료: OECD 고용전망보고서(2017) 표 1.2 노동시장 성과 스코어보드: 일자리 수, 일자리의 질 및 포용성의 주요 지표

[그림 2-7] 2000-2015년 교육비 지출, GDP 대비 초등부터 제3차 교육까지



주: 교육비 지출은 학교, 대학교 및 기타 공립 및 사립 교육 기관에 사용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 기관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부수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가족이 구매한 교과서, 사교육 비용, 학생의 생활비와 같은 교육 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된다.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교육 기관에 대한 직접 지출은 물론 가계에 제공하고 교육 기관이 관리하는 교육 관련 공적 보조금을 포함한다.

자료: OECD, <https://data.oecd.org/eduresource/private-spending-on-education.htm#indicator-chart> 및 <https://data.oecd.org/eduresource/public-spending-on-education.htm#indicator-chart>

제5절 주거와 출산의 권택과 템포: 시계열적 변화와 국가 간 차이³⁾

Sarah Brauner-Otto (맥길 대학교)

1. 서론

왜 주택인가 본가를 떠나 자신만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독립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애전환 사건이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은 산업국가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성인이 되면 자녀를 갖기 전에 본가를 떠나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임대 또는 구매를 통해 자신만의 주거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출산이 연기된다. 따라서 주택 상황은 청년들의 주택 선택권을 형성하는 거시적 요소인 동시에 저출산환경의 출산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다. 본 브리핑은 1982년부터 2016년까지 다음 국가의 주택과 출산 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요약했다.

- 비동유럽: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동유럽: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조지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2. 주택 상황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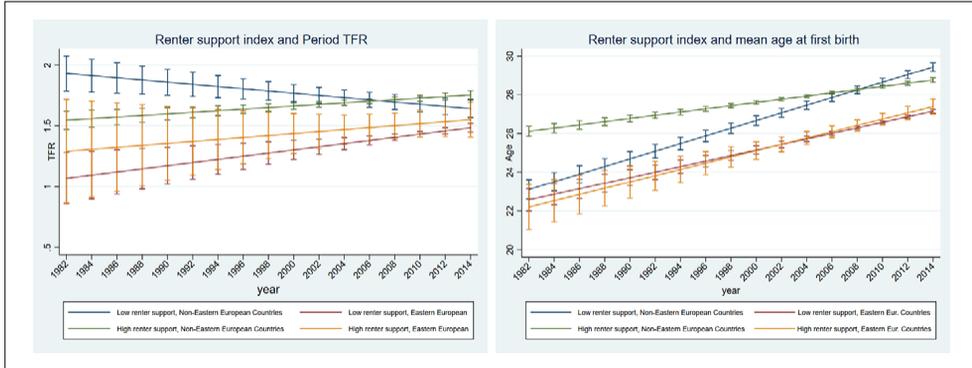
가. 임대

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독립 방법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확대되거나 저렴해지면 청년들의 독립, 결혼, 출산 시기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연구

3) Brauner-Otto, Sarah R. 연구보고서에 기반한다. “주택 및 출산: 거시적 차원의 다국적 조사, 1982-2016년” 여기 제시된 결과, 해석 및 결론은 저자의 견해이며 OECD 또는 INED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번 정책 브리핑의 기반이 된 연구의 재정을 지원해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에 감사한다.

결과 최근 몇 년간 임대주택을 적극 지원해온 비유럽국가의 기간 TFR이 증가하고 평균초산연령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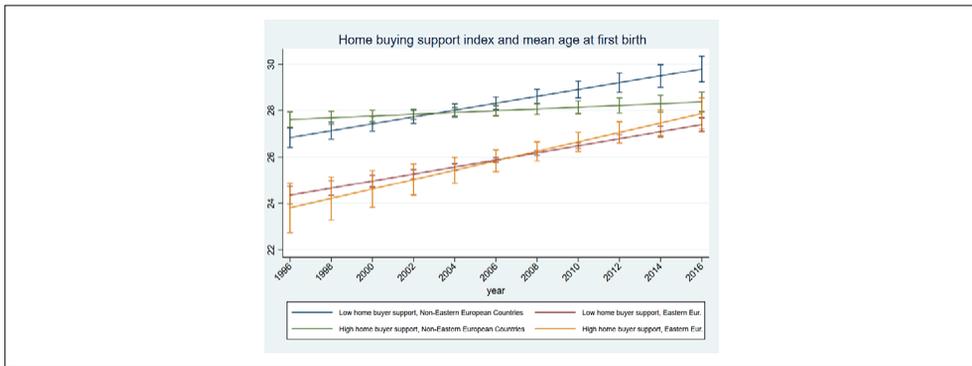
[그림 2-8] 임대주택 지원 지수와 기간 합계 출산율 및 첫째 자녀 출산 평균 연령 (1992~2014)



나. 주택 구매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다. 자가소유는 출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택 구매 능력은 주택 비용, 공식 대출의 가용성과 경제성(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규범(세대 간 생전 이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을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출산 연령이 빨라지고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 주택구매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비동유럽국가의 경우 평균초산연령이 더욱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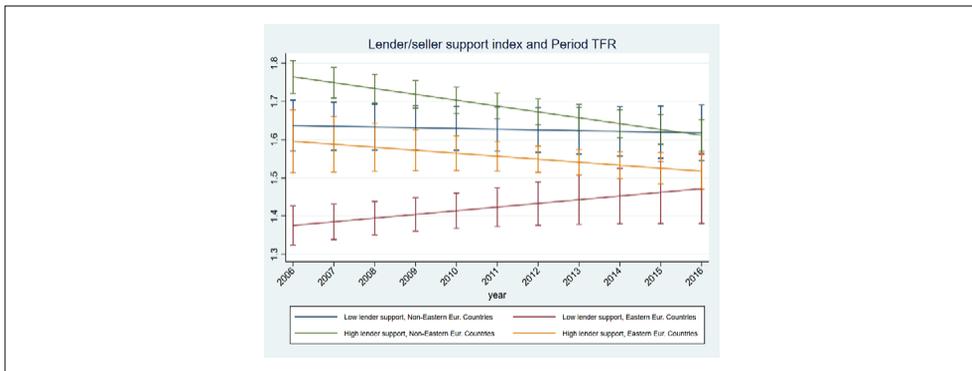
[그림 2-9] 주택구매지원 지수와 첫째 자녀 출산 평균 연령 (1996~2016)



다. 대출 · 판매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만 주택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은행 또한 청년들이 독립해서 가정을 시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담보 대출은 대출기관의 대출의사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대출기관이 수집한 대출자에 대한 정보와 압류 및 퇴거에 관한 관료주의적 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관이 더욱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관료주의가 효율적일수록 청년들의 대출 가능성이 높아져 주택 구매 능력이 증가하고 출산 연령이 빨라지고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다. 2000년대 초까지 대출기관/판매자를 더욱 적극 지원하는 국가-연의 기간 TFR이 더욱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산 시기에 대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2-10] 대출 · 판매 지원 지수와 첫째 자녀 출산 평균 연령 (1996~2016)



3. 발전 방향

이번 연구는 지리적 영역(동유럽 대 비동유럽 국가)에 따른 출산의 양과 속도 변화를 보여주는 복잡한 상황을 분석했다. 이들 요인은 TFR(임차인의 경우만) 증가와 평균출산연령 감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동유럽 국가의 세입자 또는 주택 구매자 지원 정책은 정책 개입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출자 또는 판매자 지원은 더 이상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적절한 정책 분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6절 동아시아의 자녀 양육비와 저출산

Setsuya Fukuda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3개국과 EU 25개국의 NTA 데이터로 산출한 양육비를 비교하고 출산과의 국가 간 상관관계를 면밀히 조사했다. 동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한 결과 정부의 양육비 지원 수준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와 유럽 국가는 자녀 교육비에 대한 사적 지출 비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비는 유럽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정부 부담률이 매우 높았다.

출산과 자녀 양육비에 대한 국가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행 연구에서 제안했듯이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지출과 국가 출산율 간 뚜렷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Lee and Mason 2010; Ogawa et al. 2009; Ogawa, Matsukura and Lee 2016). 이러한 관계는 유럽 데이터에서도 나타났지만 동아시아 3개국을 추가한 후 더욱 뚜렷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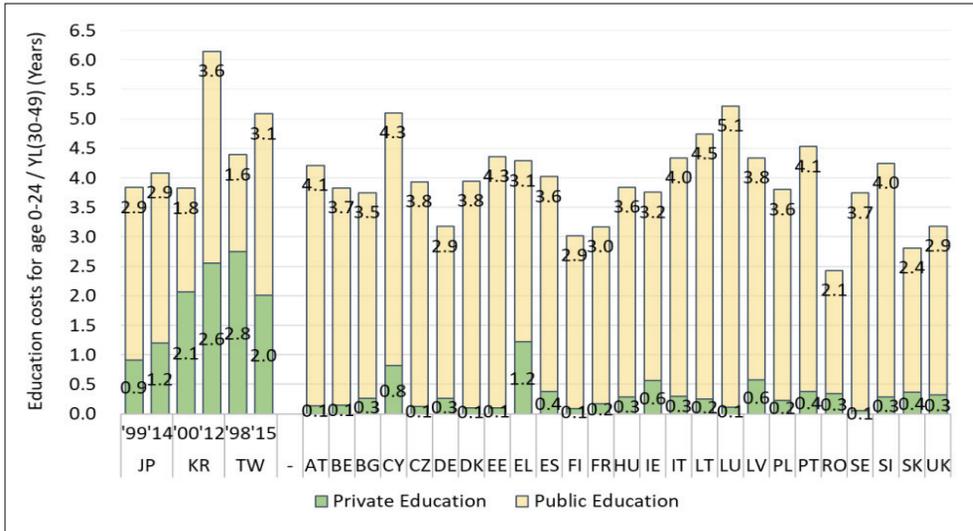
그러나 자녀의 사적 교육비와 출산 간 시계열 관계는 동아시아 국가 간에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 자녀 교육에 대한 1인당 사적 지출 수준이 가장 높았다. 또한 2000-2012년 자녀 교육비에 대한 1인당 사적 지출과 출산율 간 뚜렷한 시계열 상충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교육비가 최근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대만과 일본의 경우 두 변수 간 명확한 시계열 상충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만의 최근 출산율 감소는 직접 양육비보다 결혼 연기 또는 비혼과 같은 요소가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이 한국과 대만의 거의 절반 수준인 일본은 지난 10년간 출산율이 꾸준히 회복되었으며 최근 교육비의 사적 지출이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최근 출산율 증가와는 무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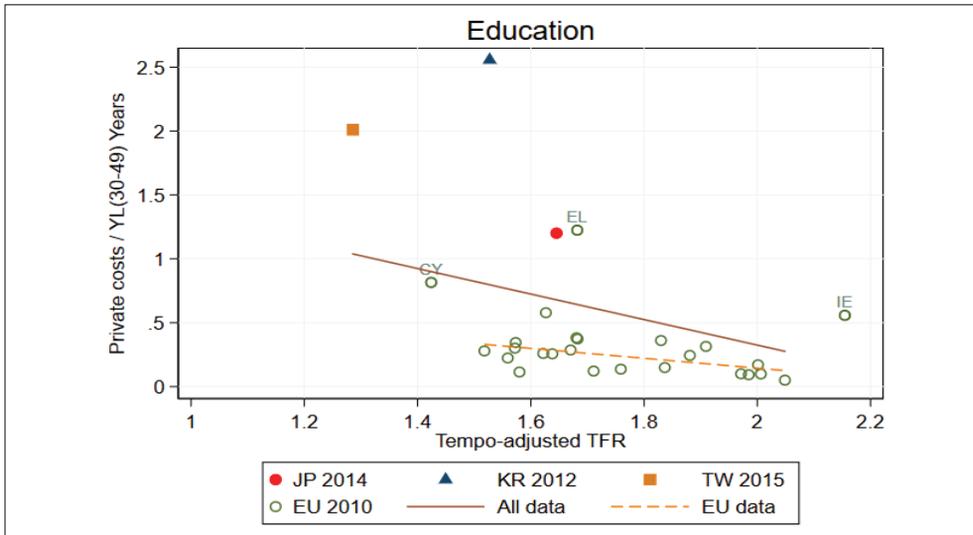
이번 단순 상관관계 분석은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지만 한국의 경우 높은 교육비 사적 지출이 출산율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에 대한 사적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사적 지출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교육열”을 완화하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강력한 견습 문화를 통해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 저출산에 대한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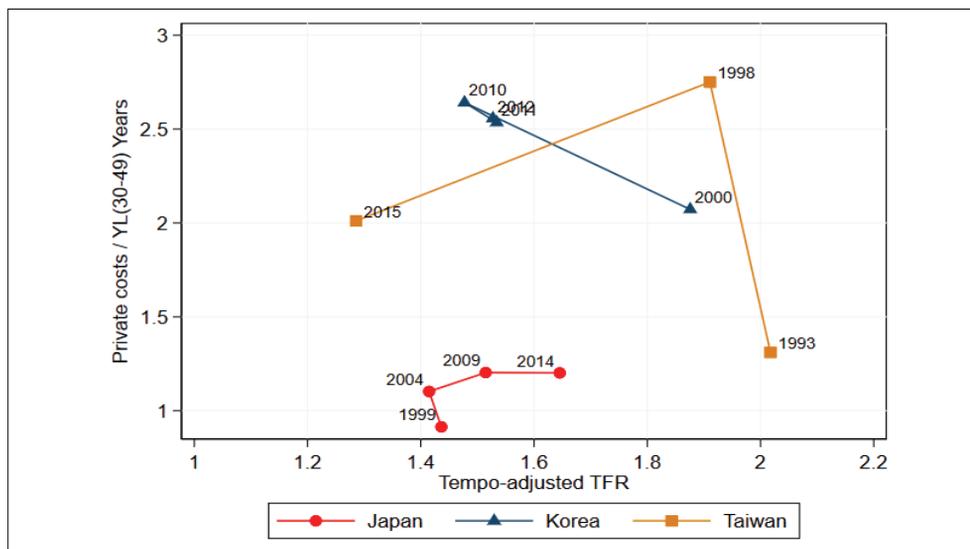
[그림 2-11]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교육비



[그림 2-12]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국가 간 상관관계



[그림 2-13]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 한국, 일본, 대만



제7절 대만 가정의 노동 분담 및 출산의향

Yen-hsin Alice Cheng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Chen-Hao Hsu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지난 20 세기 동안 대다수 선진국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1.3명 이하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 많은 서방 국가들이 템포 효과의 감소로 출산율의 역전 현상을 경험했지만, 이외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출산율이 상당히 낮다. 대표적인 저출산국가로는 동아시아 선진국과 남유럽 국가들을 꼽을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양성평등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다시말해, 여성이 고등 교육을 받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등 사회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집 안에서는 가사일, 자녀 양육이나 부모 봉양 등 여전히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간 불평등한 가사노동의 분담 현상은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의 저출산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Anderson and Kohler 2015; Esping-Andersen 2009; McDonald 2000). 인구 통계 학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성

차별적 혁명”이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가사 노동의 평등 주의적 분할이 이루어지면서 북유럽 국가 (Goldscheider, Bernhardt and Lappegård 2015)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율은 인구 통계 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통계 학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지체된 성평등 혁명”이라고 묘사하면서, 북유럽 국가들 (Goldscheider, Bernhardt and Lappegård 2015)에서 볼 수 있듯이, 배우자 간에 가사노동을 좀더 평등하게 나눌 경우, 인구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한 연구는 가족 내 가사 노동 분담이 여성의 추가 출산의향 및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주로 서구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져왔다 (Kan and Hertog 2017).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출산율이 배우자 관계의 특성 및 가사 분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대만 남성의 가사 노동(육아 및 가사 노동 포함)과 부부 관계의 특성 (예를 들어, 연령 및 교육 정도 비교, 가구 총소득에서 아내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및 노동 시간)이 여성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연구는 젠더역할과 관련해 좀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저출산율의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만의 경우, 동거인이 있는 여성의 경우(미혼여성 및 기혼여성) 1987년 기준 가사 노동에 투입한 총시간은 동거 남성에 비해 약 13배 이상 더 많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5.5배로 하락했다(Hsiao 2005). 본 연구에서는 2016 년 실시된 “여성 결혼, 출산 및 고용 (Women’s Marriage, Fertility, and Employment, WMFE) 조사”를 바탕으로 두 가지 연구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남편의 적극적 가사노동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들
- 2)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기출산자녀가 있는 여성의 추가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016년 조사의 전체 표본 크기는 27,634 명이며, 이중 14,788 명이 기혼 여성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대만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가사노동이나 육아에서 남편의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여성의 소득과 가사노동 분담 비중이 남편의 소득과 가사노동 분담 비

중이 비슷해지면서,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상대적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는 임계 값 70%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폭이지만 다시 증가한다(그림 2-9 참조). 그러한 상관관계 연계가 “젠더일탈 중립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수준별로 그러한 패턴을 면밀히 살펴보면 또 다른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다. 다시 말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대신, 가족 내에서 여성의 소득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의 소득비중이 증가하면서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한편,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 증가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미미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교환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경제교환이론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대적 향상은 대체적으로 가사노동의 보다 균등한 분담으로 이어진다(Brines 1994; Greenstein 2000; Gupta 2006; Schneid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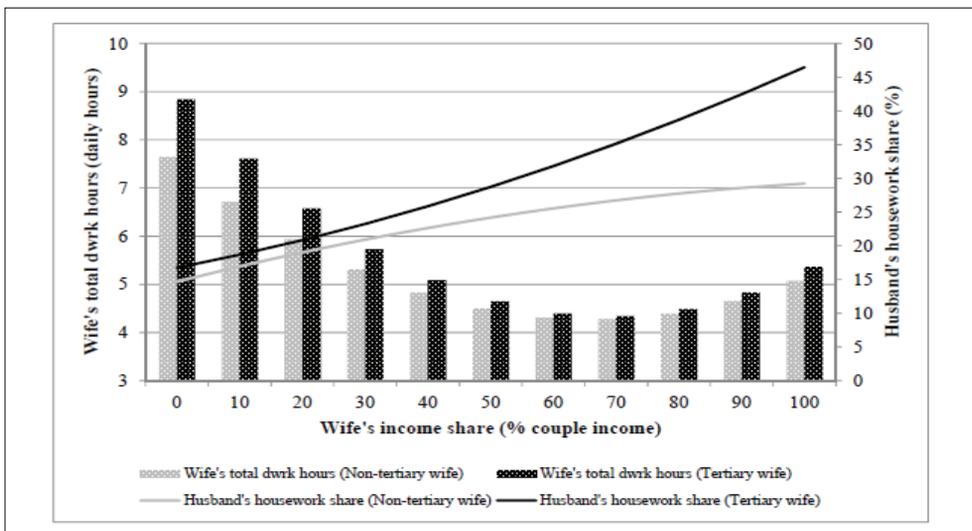
출산의사와 관련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의 분담이 여성의 출산의사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가사일이 아닌 육아에서 남편의 참여율이 높은 경우에만 국한한다. 이는 집중 케어가 필요한 신생아를 둔 부부의 경우, 육아를 부부가 공평하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좀 더 전통적인 성역할이 존재하는 유럽에서 수행된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Cooke 2004, Cooke 2009). 또한, 남편의 육아 지원은 일과 가정에서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육아가 혼자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추가 출산할 의향이 높아지고, 나아가 다자녀가구가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이 결과는 남편의 높은 육아 참여가 직업여성의 출산의사 제고에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Miettinen, Lainiala and Rotkirch 2015, Pinnelli and Fiori 2008).

마지막으로, 반사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육아보조는 아내의 출산의사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출산아수가 1명인 부부에게만 국한해서 나타나며,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핀란드와 이탈리아(Miettinen, Lainiala and Rotkirch 2015, Pinnelli and Fiori 2008)와 같은 대다수 저출산국가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더불어 대만의 경우, 남편의 육아 참여가 아내의 출산의사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특히 남편과 공동육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 사이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의 출산의사 제고에는 가사노동 분담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교육 정도가 낮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 상황에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과 재정지원이 결합된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자면, 최근 연구들의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 예상보다는 좀 더 낙관적인 인구 통계적 미래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하나인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추가출산의사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보다 더 강하며,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가사일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추가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내무부 1975-2016),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들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Cheng 2014)을 감안할 때, 향후 결혼과 출산율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면서 사회와 남성들의 태도도 그에 따라 변화할 때,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Esping-Andersen 2016).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4] 아내의 수입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가사노동에 투입한 총시간과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 간의 연관성(2016년 기준, 대만)



제 3 장

정책 브리프: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제1절 스웨덴의 가족 정책: 장기적인 약속

제2절 가족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

제3절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과 인구 정책

제4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문제에 대한 재검토

제5절 문화적으로 특수한 저출산으로의 경로

제6절 한국의 일과 가족: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제7절 출산 장애와 정책 효과의 측정 방식에 대하여

APPENDIX

3

정책 브리프: <<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제1절 스웨덴의 가족 정책: 장기적인 약속

Nathalie Le Bouteille (프랑스 Picardie Jules Verne 대학교)

Anders Ögren (스웨덴 Uppsala 대학교)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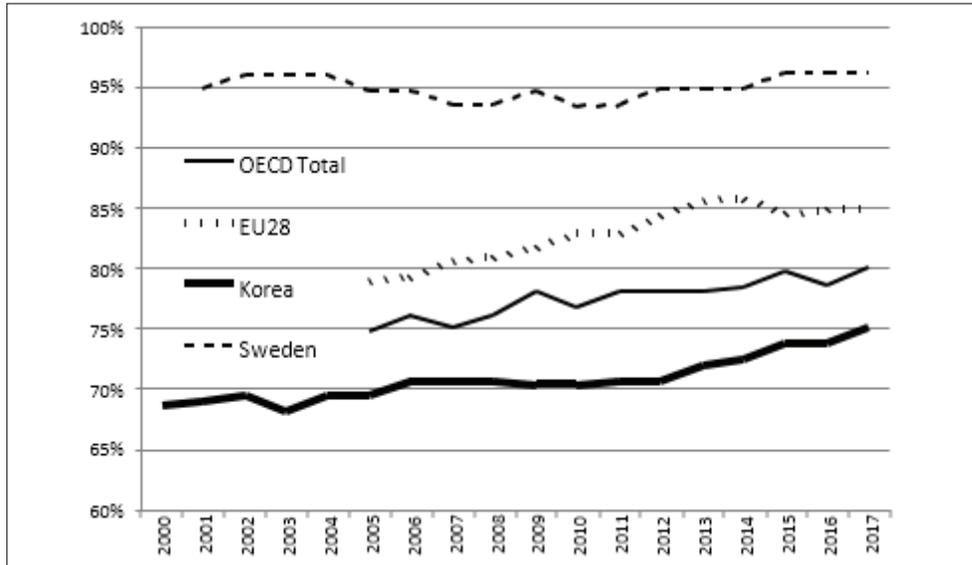
효율적인 정책의 도입은 도입할 정책, 집행 방식 및 시기뿐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족 정책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가족의 구조와 규모를 바꾸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대한 변화가 빈번히 일어나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효율적일 수 없다. 특히, 경제동향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들이 적어도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가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 년이라는 시간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역사적으로 육아는 어머니만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족정책의 과제는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기회 감소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 문제는 양성평등이나 자녀 양육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경제에서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본 사례 연구는 스웨덴 가족 정책,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아 휴직에 관한 사례연구다. 스웨덴을 선택한 이유는 성공적으로 가족정책을 집행한 모범사례 국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 유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17]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비율은 남성과 비슷하게 높다. 이 수치는 국제 표준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아래의 [그림 1]에

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여성의 사회진출 비율은 EU와 OECD의 국가의 수치보다 현저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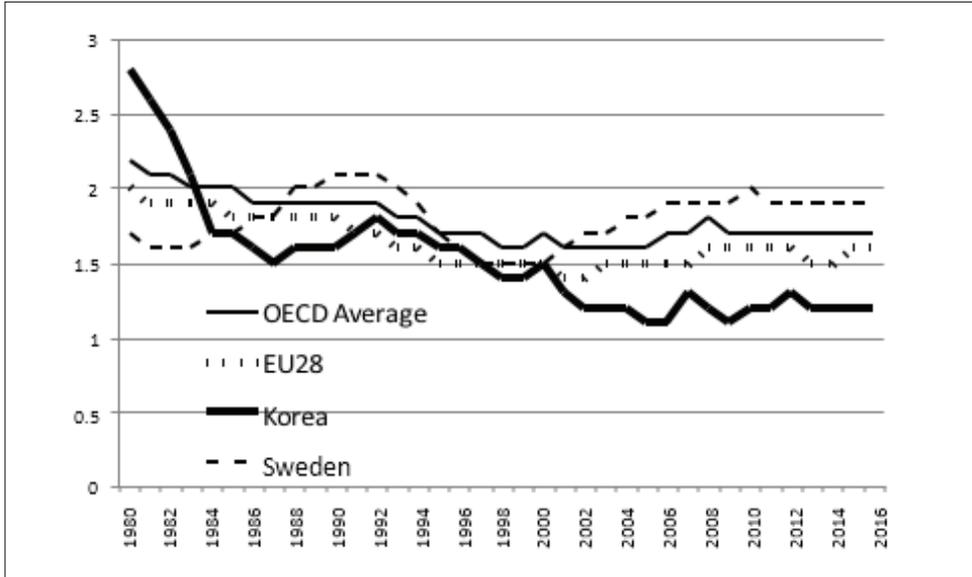
[그림 3-1] 남성의 취업률 대비 여성의 취업률(2000-2007)



자료: OECD (2019), 취업률(지표). doi: 10.1787/1de68a9b-en. 연구자의 계산

노동시장 접근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출산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바로 이것이 스웨덴이 국제적 수준과 비교했을 때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OECD 회원국, 특히 한국보다 훨씬 높은 출산율을 최근 들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판단된다([그림 2-18] 참조). 스웨덴과 달리, 한국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했을 때 사회진출 비율이 현저히 낮다. 2017년 현재 대체로 한국 여성 중 단 57%만이 직장생활을 하는 반면, 남성은 전체 76%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75%, 남성의 78%가 각각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OECD (2019), 취업률(지표). doi: 10.1787/1de68a9b-en). 따라서 한국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접근하기 훨씬 더 어렵게 되어 있다.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이다.

[그림 3-2] 출산율, 자녀/여성, 198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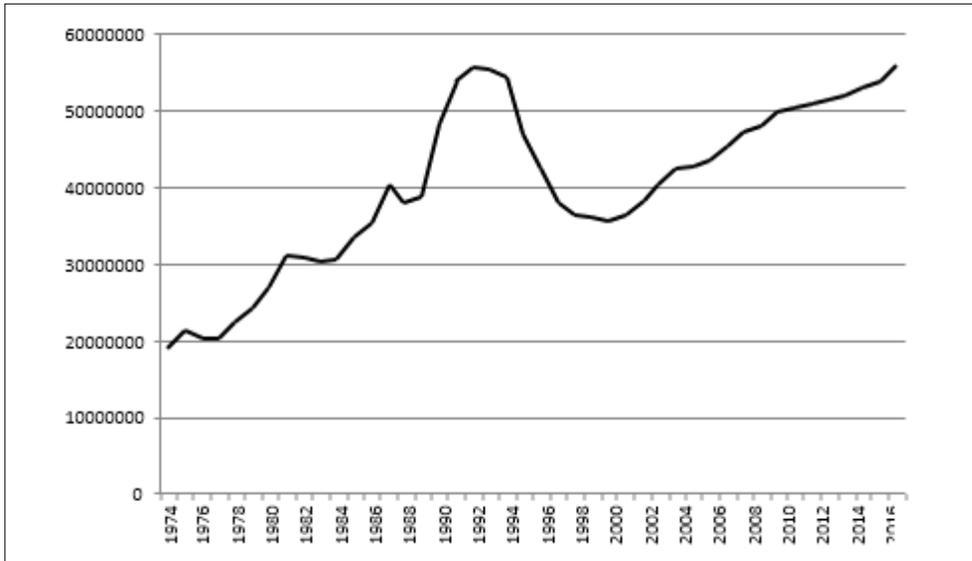


자료: OECD (2019), 출산율 (지표). doi: 10.1787/8272fb01-en

2. 스웨덴의 육아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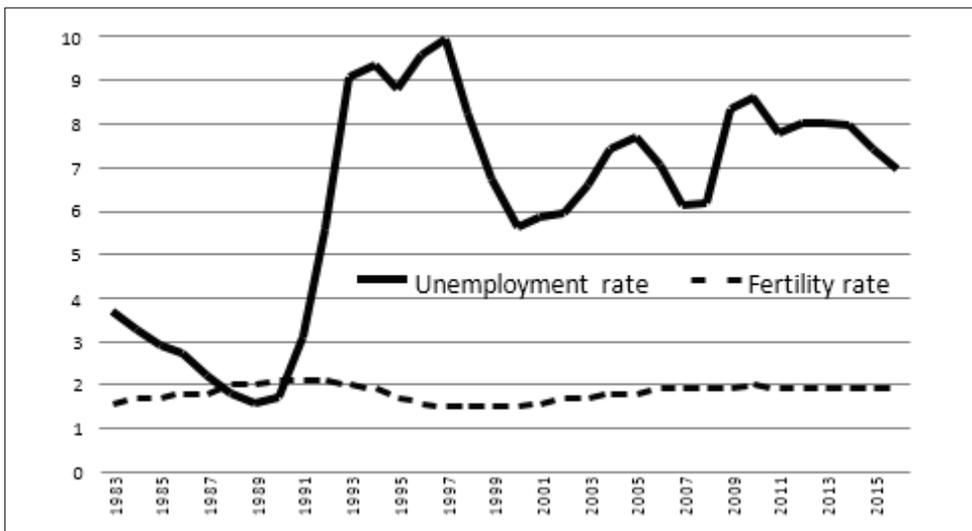
처음 실시 당시인 1955년 3개월이었던 스웨덴의 출산휴가는 1962년 6개월로 확대됐다. 이후 1974년 양부모 모두 적용되는 육아휴직으로 변경됐다. 육아휴직 기간은 1975년 7개월, 1978년 9개월, 1978년 12개월, 1989년 15개월로 각각 늘어났다. 아래 [그림 2-19]에서 볼 수 있듯이 육아 휴직에 할당된 전체 일수는 눈에 띄게 빠르게 증가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육아 휴직 일수의 감소는 1992년 스웨덴의 경제적 위기의 결과였다. 당시 경제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육아휴직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첫째, 경제적 불안정과 실업 증가는 같은 기간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아래 그림 2-20 참조). 둘째, 육아 휴직 수당감소로 이어졌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휴직 수당은 급여의 90%에서 75%로 감소했다가 1988년에 다시 80%로 인상되었다(Le Bouteillec 2000, 2002).

[그림 3-3] 유급 육아휴직일, 1974-2017



자료: Försäkringskassan, 스웨덴 통계청(SCB-Statistics Sweden)

[그림 3-4] 실업률 및 출산율, 1983-2016



자료: OECD (2019), 출산율(지표). doi: 10.1787/8272fb01-en and OECD (2019), 실업율(지표). doi: 10.1787/997c8750-en

경제적 위기, 출산 및 육아휴직 간의 연관성이 의미하는 바는 가계가 경제적 동인에 민감하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불안 및 실업과 같은 경제적 동인 중 일부는 단기간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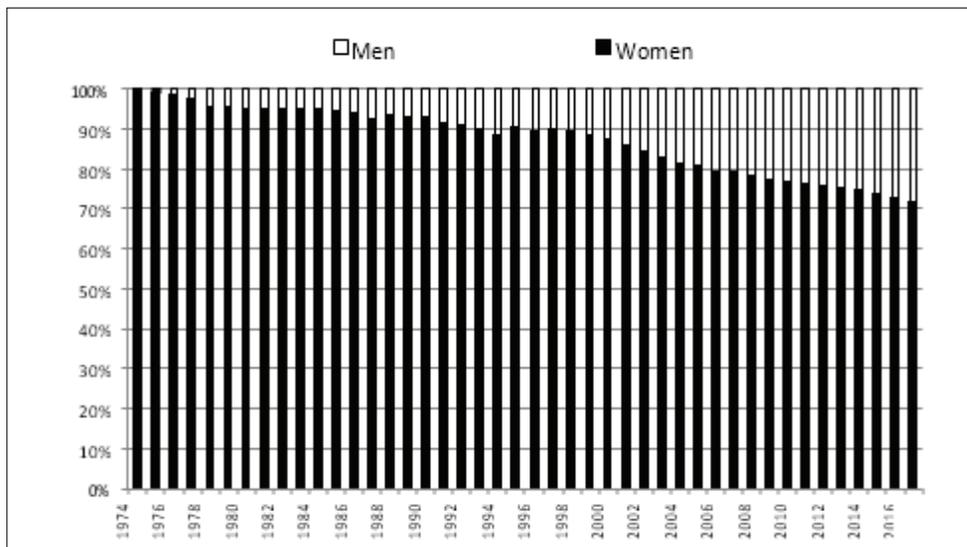
책 시행으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스웨덴의 경우, 실업과 육아휴직 수당 감소 중 무엇이 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수당의 경우 1998년 다시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도 증가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가족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974년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양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육아휴직제도는 자녀의 건강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과 소득의 감소 등 육아휴직을 선택한 부모의 희생이다. 이는 최근 많은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정책 연구에서 지적돼 왔다(Duvander, A.-Z and Andersson, G. (2006), Duvander, A.-Z., Ferrarini, T. and Johansson, M. 2015), Ekberg, J., Eriksson, R. & Friebel, G. (2013), Moberg, Y. (2018), SOU 2017 : 101, SCB - Statistics Sweden 2018).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남성들의 수를 제고하기 위해, 스웨덴에서는 지난 수년 간 정보, 캠페인 및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이중 가장 주요한 것 중 하나는 1995년에 도입된 잘 알려진 ‘아버지의 달 (pappamånad)’ 제도다. 육아휴직일 중 30일은 여성(어머니)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수로 지정했다. 양도 불가능한 휴직일 수는 2002년 60일, 2016년 90일로 각각 늘어났다. (Le Bouteillec 2000, 2002, SCB - 통계 스웨덴 2018). 아래의 [그림 2-21]에서 알 수 있듯이 양부모(아내/남편)의 육아 휴직일수 분배는 장기간 노력의 결과였다. 1974년 남성이 사용한 육아 휴직일수는 전체일수의 0.5%에서 2017년 28%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주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정책들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정책효과와는 반대로 위기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행한 결과, 이러한 위기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스웨덴의 가족정책의 성공 비결은 정책의 일관성에 있다는 것이다.

[그림 3-5] 성별에 따른 유급육아휴직일수, 1974-2017



자료: Försäkringskassan, 스웨덴 통계청(SCB-Statistics Sweden)

참고문헌

- Duvander, A.-Z and Andersson, G. (2006)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in Sweden: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father's uptake of parental leave on continued childbearing" *Marriage and Family Review* 39, 121-142
- Duvander, A.-Z., Ferrarini, T. and Johansson, M. (2015) *Familjepolitik för alla? En ESO-rapport om föräldrapenning och jämställdhet* [Family policy for all? An ESO- report on parental allowance and equality] 2015:5, Stockholm, Elanders Sverige AB
- Ekberg, J., Eriksson, R. & Friebel, G. (2013) "Parental leave - a policy evaluation of the Swedish "daddy-month" refor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7, 131-143.
- Försäkringskassan (2012) "Föräldrapenning. Analys av användandet 1974 - 2011" [Parental allowance. Analysis of the use, 1974 - 2011] Social Insurance report 2012:9
- Försäkringskassan. Enheten för statistik och analys on-line: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barn-familj/foraldrapenning>
- Le Bouteillec, N. (2000) *Famille, Economie et Developpement de l'Etat-providence*

- en Norvège et en Suède aux XIXe et XXe siècles.* Doctoral thesis. Sciences-Po, Paris
- Le Bouteillec, N. (2002) “Politique Familiale et fécondité : grille d’analyse à partir du cas de la Suède” in Aglietta, M, Blanchet, D. & Héran, F. (eds.) *Démographie et économie.* Conseil d’Analyse Economiqu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Moberg, Y. (2018) “Speedy Responses: Effects of Higher Benefits on Take-up and Division of Parental Leave” Uppsala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2018:14
- OECD – Data online (see respective reference)
- SCB – Statistics Sweden 2018 “På tal om kvinnor och män. Lathund om jämställdhet” [“Women and Men in Sweden. Facts and Figures”]
- SCB – Statistics Sweden. Data online (see respective reference)
- SOU 2017:101 *Jämställt fröldraskap och goda uppväxtvillkor för barn – en ny modell för föräldraförsäkringen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Equal parenthood and healthy child conditions – a new model for the parental insurance]* Stockholm, Elanders Sverige AB

제2절 가족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

Anne H. Gauthier (네덜란드 학제간 인구연구소)

1. 서론

본 브리핑은 가족 정책 시행에서 배운 몇 가지 교훈과 이들이 출산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요약했다. 가족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 간 내부 응집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 수단의 목표가 서로 상충되어 가족들에게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둘째, 이들 가족 정책은 시민들의 선호도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즉, 사회에서 쉽게 수용할 수 없거나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정책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 방안

이 자주 바뀌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출산 결정을 최선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가지 요소, 즉 응집성, 일관성 및 안정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2. 퍼즐

경제적 관점에서, 자녀를 가질지 갖지 않을지 결정은 직접 양육비(즉,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접 지불하는 비용)과 간접 양육비(즉, 출산 시 노동시장 이탈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금액)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고 이론적으로 직접 및/또는 간접 양육비를 줄이는 가족 정책을 통해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 이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실시되었지만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 만큼이나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Thevenon and Gauthier 2011의 검토 참조). 이는 정책이 출산에 미칠 영향을 중재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타 요소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브리핑에서는 이중 세 가지 가능한 요소를 살펴보았다.

3. 정책의 내부 응집성

가족 정책의 “튕박스”에는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책부터 보육과 휴가 제도의 보조금 지원까지 매우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가정의 복지와 자녀 양육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정책 목표가 상충되거나 가정에 상반되는 영향을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반면, 가정의 두 번째 소득자, 즉 여성의 소득에 높은 과세를 부과하는 조세 제도도 있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반면 정확히 반대 방향을 지향하는 정책도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여성 고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영유아 보육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출산과 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가족 정책의 이러한 응집성 부족으로 가족에게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족 형성과 노동시장 진입 선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할 수 있다.

4. 가족 정책과 기타 제도의 일관성

두 번째 요소는 노동시장, 교육제도 및 사회규범 등 가족이 참여하는 제도와 가족 정책 간 상보성 또는 일관성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가정에 넉넉한 현금 지원을 제공하거나 관대한 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매우 길거나 임신부 또는 젊은 여성을 차별하는 경우 이러한 가족 정책은 출산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이 매우 일찍 끝나지만 방과후 보육 시설이 부족한 경우 관대한 가족 정책 대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첫 번째 요소가 가족 정책 방안 간 내부 응집성을 가리킨다면 이 두 번째 요소는 가족 정책과 기타 제도 간 일관성을 가리킨다.

그 외에 대중의 선호도와 요구 및 광범위한 규범체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관대한 휴가 제도는 출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육아휴직할당제를 도입하더라도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지 않는 규범을 운영하거나 기업에서 남성의 육아 휴직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외부 보육에 호의적이지 않거나 보육 수준이 낮은 경우 출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5. 정책 안정성

세 번째 요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정책의 안정성이다. 복지국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성 또는 경로의존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지만 최고 일부 국가의 가족 정책 방안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경제 위기 또는 침체로 정부가 일부 가족 지원 정책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성격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 일부 정책이 폐지되고 다른 정책이 도입된 결과일 수 있다. 또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되어 정책 방안이 취소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출산 시 현금 지원(출산 보너스)을 몇 년간 제공했다가 폐지했다. 또는 육아휴직제도(기간, 현금 급여 또는 자격 등)를 급하게 또는 계속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정책이 계속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생기면서 정책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

안정성의 다른 차원은 사람들이 정책 방안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다. 남성육아휴직을 예로 들 수 있다. 스웨덴처럼 성평등지수가 높은 나라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따라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거나, 특히 남성육아휴직처럼 다소 “기질에 맞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정책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6. 결론

정부는 육아 휴직 또는 보육 서비스와 같은 단일 정책에 집중해 가족 정책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족의 복지와 가족과 일의 양립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시 더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본 브리핑은 이 중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소를 살펴봤다. (1) 정책 방안의 내부 응집성: 전반적으로 정책 목표의 방향이 동일한가 또는 가족에 상충된 영향을 미치는가? (2) 가족 정책과 다른 제도와의 일관성: 시행 중인 정책과 예상 근로 시간, 수업 시간 및 사회 규범 등 기타 제도 간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 또한 선호도와 요구에 부합하는가? (3) 시간 경과에 따른 정책의 안정성: 정책이 급하게 자주 변경되는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장기간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따라서 가족 지원 정책 설계 시 더욱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또한 단일 정책 방안이 아닌 전반적인 가족 환경과 이들 정책이 다양한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

참고 문헌

Thévenon, O. Gauthier, A.H. (2011). Family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a ‘fertility-booster’ with side-effects. *Community, Work & Family*. 14, 2: 197-216.

제3절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과 인구 정책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 속도가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했다. 이들 국가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3명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은 출산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세 전후), 이후에도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산아제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했던 동아시아 각국 정부도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추세다. 동아시아 4개국이 추진 중인 가족정책은 일부 유럽 국가의 정책과 표면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국가의 가족정책은 경제개발 모델과 연동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일부로 시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동아시아 가족정책의 세부사항을 기술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고는 동아시아의 인구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확대를 고찰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서 현재 동아시아 국가가 직면한 저출산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구 변천을 경험한 국가였다. 다른 동아시아 국들과는 달리, 일본의 출산율 감소는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자연적 현상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자유방임적 가족정책으로 이어졌고,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상황에서도 지속됐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지 20년만인 1994년 마침내 출산 장려 정책인 “엔젤 플랜(Angel Plan)”을 발표했다. 오랫동안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경제개발 모델을 추진해왔으며, 자녀양육의 부담을 직장 생활과 가족의 수입에 기여해야 하는 여성들에게만 전적으로 떠안김으로써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출산 및 양육관련 비용을 최소화했다.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그 자체가 아닌 경제발전을 위해 성평등 및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일본과 달리 싱가포르, 대만, 한국은 모두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강력한 국

가 주도의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했다. 싱가포르의 천연자원 부족한 도시 국가로서 독립 직후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자 싱가포르 정부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1987년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출산 장려정책은 인종적 균형, 우생학적 고려, 시민의 경제활동 참여 강조, 국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의 집권 등으로 인해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싱가포르의 인구정책은 하향식 의사결정 시스템과 국가주도의 정책시행으로 인해 싱가포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

대만과 한국은 매우 유사한 인구학적 과도기를 경험했으며, 양국의 인구정책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경제개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대만과 한국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인구문제에 직접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역사가 있으나, 저출산문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시기가 늦었다. 한국은 1980년대 군부독재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1990년대 후반 발생한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의 정책 전환이 지연됐다. 대만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이 한국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보다 정책전환을 하기에 좀더 용이한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대만의 출산정책은 페미니스트들과 환경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2006년 인구정책지침(2006 Population Policy Guidelines)은 과거 사용된 양적지표(합계출산율)들 대신, 생태적 균형이나 성평등 등과 같은 질적 목표를 강조했다. 인구정책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제일 먼저 시도된 국가는 대만이었으며, 다소 늦었지만 뒤이어 한국도 그 뒤를 따랐다. 한국의 경우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출산장려정책의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로 인해 양국의 인구정책의 실질적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013년 대만 정부는 “인구정책지침(Population Policy Guidelines)”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량적 목표를 설정했다. 2008년판 인구정책백서는 현재 여당인 민진당(DPP)이 작성했고, 2013년판 백서는 이전 여당인 국민당(KMT)이 작성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진보와 보수 정치진영의 폭넓은 공감대가 없이는 인구정책의 변화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개발도상국들이 활용하고 있는 경제개발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보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지우는 반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지만, 실질적 변화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인구정책이 지금처럼 개발논리에만 근거할 경우,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 중인 인구정책들은 과거의 전략들을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제4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문제에 대한 재검토

Stuart Gietel-Basten (홍콩과학기술대학교)

1. 이차원적 접근법

초저출산은 인구 고령화, 정체 및 감소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이민자가 대규모로 유입되지 않는 한, 출산 증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를 ‘이차원적’ 즉 저출산에서 인구 고령화, 인구 규모 정체와 인구 감소의 연쇄 관계로 생각한다.⁴⁾ 한국⁵⁾도 다른 저출산국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기간합계출산율 변화로 측정된 효과는 미미했다⁶⁾⁷⁾. 저출산, 고령화,

4) Coulmas, Florian. 2007. *Population Decline and Ageing in Japan—The Social Consequences*. Abingdon: Routledge.

5) Chin, Meejung, Jaerim Lee, Soyoung Lee, Seohee Son, and Miai Sung. 2012. Family Policy in South Korea: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 (1): 53-64. doi:10.1007/s10826-011-9480-1.

6) Song, Yoo-Jean, Kyung-Sup Chang, and Gabriel Sylvian. 2013. Why Are Developmental Citizens Reluctant to Procreate? Analytical Insights from Shirley Sun’s Population Policy and Reproduction in Singapore and Takeda Hiroko’s The Political Economy of Reproduction in Japan.” *Inter-Asia Cultural Studies* 14 (3). Routledge: 481-92. doi:10.1080/14649373.2013.801624.

7) McDonald, Peter. 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 (3): 485-510. doi:10.1111/j.1728-4457.2006.00134.x.; e.g. Chen, Yu-Hua. 2012. Friends i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Taiwan.”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10 (1): 78-88.

인구 감소에 대한 이러한 이차원적 접근법에서는 성공 정책이 부족해 ‘실버 쓰나미 (silver tsunami)’, 심지어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⁸⁾ 이차원적 접근법의 또 다른 문제는 저출산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책임과 비난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다. 사실상 여성의 몸을 국가의 인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⁹⁾ 청년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며 출산의 책임을 전가한다.¹⁰⁾

2. ‘문제’의 정의 개선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실제로 우려한다면, 먼저 이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문제는 단순히 65세 또는 66세 또는 심지어 18세 인구수가 아니라 보건, 복지뿐 아니라 산업, 교육 부문 등의 다양한 제도와 이들 인구 수의 연관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즉, 다차원적 방식으로 ‘인구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인구 감소/소멸의 경우에도, 문제의 본질에 정확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심지어 고전 경제학에서도 총인구는 성장 모델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저출산은 문화와 전통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가? 지역 서비스 제공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3. ‘문제’ 해결

출생아수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출생아가 ‘노동자’가 되려면 20년을 기다려야 할 뿐 아니라 그 전까지 양육과 교육에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오히려 제도적 개혁(예: 연금 및 의료제도), 고정/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및 저활용 노동력의 활성화를 통해 투자를 훨씬 빨리 회수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단순히 출생아수를 늘리는 것보다 제도 개혁과 생산성 향상이 효과적이다. 고통스러울 수 있는 개혁의 필요성을 수용하기 위한 첫 단계는 이들 제도가

8) Asahi.com. 2014. Sense of Crisis in Decrease of the Population.” Accessed August 29, 2018. Asahi.com <http://www.asahi.com/articles/DA3S11514442.html>.

9) Lee, Meilin. 2009. Transition to below Replacement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 in Taiwan.”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7 (1): 71-86.

10) Pope Benedict XVI. 2006. Address of His Holiness Benedict XVI to the Members of the Roman Curia at the Traditional Exchange of Christmas Greetings.” The Vatican Official Website. Accessed August 29, 2018.

서로 다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인구학적 환경에서 설계되고 구축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중심적인 21세기 환경에 맞춰 “발전 국가”와 고용주의 태도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¹¹⁾

4. 저출산, 제도 오작동의 증상

그렇다고 저출산 또는 초저출산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일부 지역, 특히 한국의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출산율이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될 경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다차원적 접근법과 제도적 맥락에서 초저출산은 근본적 ‘문제’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하는 제도적 (오작동) 문제로 간주될 있다.¹²⁾ 현재 아시아태평양 출산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이전세대보다 인생을 누리고 일할 기회가 많다. 그러나 동시에 인생은 위험하고 심지어 연약해 보이기까지 하다.¹³⁾ 대학졸업자는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일자리마저 부족해 보인다. 주택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 출산 후 직접/간접 양육비는 놀라울 정도이다. 국가제도와 고등교육제도가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면 부모는 민간부문에 의지해야 하고,¹⁴⁾ 이는 지대추구행위로 이어진다.¹⁵⁾ 장시간 노동문화와 취약한 지위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가족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해왔다.¹⁶⁾이들은 출산 다운스트

11) Choi, Young Jun. 2012. End of the Era of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Diverging Welfare Regimes in East Asia.”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40 (3): 275-94. doi:10.1163/156853112X650827.

12) Bumpass, Larry, Ronald R. Rindfuss, Minja Kim Choe, and Noriko O. Tsuya. 2009.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Low Fertility.” *Asian Population Studies* 5 (3): 215-35. doi:10.1080/17441730903351479.

13) Beck-Gernsheim, Elizabeth. 2002. *Reinventing the Family. In Search of New Lifestyles.* Cambridge, UK: Polity Press.

14) E.g. Roesgaard, Marie H. 2006. *Japanese Education and the Cram School Business: Functions, Challenges and Perspectives of the Juku.* Copenhagen: NiAS Press.

15) Anderson, Thomas, and Hans Peter Kohler. 2012. *Education Fever and the East Asian Fertility Puzzle: A Case Study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PSC Working Paper Series. Philadelphia, PA.

16) Chang, Kyung-Sup. 2010.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Abingdon: Routledge; Esping-Andersen, G?ta.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2009. Cambridge, UK: Polity Press.

럼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¹⁷⁾ 예를 들어 낮은 혼외출산 수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유럽보다 출산율이 낮은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출산 제약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여러 그룹 간 출산에 대한 제도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더욱 심도 깊게 연구해야 한다. 양적 측면에서 교육 수준과 직업별 출산율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지역별 차이를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질적 접근법을 통해 이들 제도적 상호작용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¹⁸⁾

5. 자녀에 대한 선호도 및 미충족 욕구

초저출산이 엽스트림 제도의 오류로 나타난 증상이라는 증거는 이상자녀수와 실제 출산율 간 격차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상자녀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 지역은 남녀 모두 실제 자녀수가 이상자녀수보다 적은 경향이 있다.¹⁹⁾ 또한 무자녀율과 비혼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이른 나이에 이들 자격에 대한 선호도를 밝힌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²⁰⁾ 다시 말해, 실제로 남녀의 이상자녀수는 국가 및 기타 제도에서 제시한 결과에 부합한다.

17)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 (1). Springer Netherlands: 1-16. doi:10.1007/bf03029445.

18) E.g. Freeman, Emily, Xiaohong Ma, Ping Yan, Wenshan Yang, Lih-Rong Wang, and Stuart Gietel-Basten. 2018 “‘I Couldn’t Hold the Whole Thing’: The Role of Gender, Individualisation and Risk in Shaping Fertility P참고문헌 in Taiwan?”. *Asian Population Studies* 14(1): 61-76.

19) Basten, Stuart and Georgia Verropoulou. 2015. A Re- Interpretation of the ‘Two-child Norm’ in Post-Transitional Demographic Systems: Fertility Intentions in Taiwan.” *PLoSOne* 10(8): e0135105. doi:10.1371/journal.pone.0135105; Casterline, John, and Stuart Gietel-Basten. 2018. Exploring Family Demography in Asia Through the Lens of Fertility P참고문헌?. In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P참고문헌*, edited by Stuart Gietel-Basten, John Casterline and Minja Kim Choe, 1-15. Cheltenham, UK: Edward Elgar; Choe, Minja Kim, and Kyung-Ae Park. 2018. How is the Decline of Fertility Related to Fertility Preference in South Korea??. In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edited by Stuart Gietel-Basten, John Casterline and Minja Kim Choe, 305-322.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 See chapters in Gietel-Basten, Stuart, John Casterline and Minja Kim Choe (eds.). 2018.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P참고문헌*. Cheltenham, UK: Edward Elgar and for Europe, Sobotka, Tomáš, and Eva Beaujouan. 2014a. Two Is Best? The Persistence of a Two-Child Family Ideal in Europe.” *Population & Development Review* 40 (3): 391-419.

6. 권리에 기반한 저출산 접근법

국가 “목표”보다 일반인들의 “포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동의한 재생산권 의제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회의 선언문의 목적 7.14는 재생산 건강을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재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했다.²¹⁾ 이 선언문은 주로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의 출산을 제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저출산 국가 국민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선호도를 중심으로 권리 기반 접근법을 도입해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을 완전히 재고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몸을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낙인을 찍는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국가가 아닌 개인의 재생산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시아태평양 저출산 지역은 대부분 국가와 개인의 재생산 목표가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이는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7. 정책 결과

실제와 이상 자녀수 간 격차를 야기하는 원인을 더욱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차원적 접근법을 적용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국가, 민간부문, 가족 및 개인의 출산 환경 재구성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른 부문에서도 노동보호법 강화와 시행부터 가족 친화적 노동 문화 개발과 보육의 질 향상까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개별 ‘가족’ 정책을 확인했다. 그러나 다차원적 접근법은 출산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교육비와 수업료를 심각한 출산 제약요인으로 간주한 경우, 대학입시 제도 개혁, 사교육 규제 개선 및 국가 교육 투자 강화 등을 ‘출산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등) 보양 의무를 출산 제약 또는 ‘결혼 패키지’ 회피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경우, 적절한 장기 요양 및 고령층의 소득 보호가 출산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는가? 아마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21세기 인구학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개혁일 수 있다.

21) UNFPA. 2004. Programme of Action: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5-13 September 1994. New York, NY: UNFPA.

제5절 문화적으로 특수한 저출산으로의 경로²²⁾

Sarah Brauner-Otto (캐나다 맥길 대학교)

1. 소개

경제선진국의 기간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감소했지만 감소 시점, 속도, 수준 및 구성요소는 큰 차이를 보였다. ²³⁾²⁴⁾²⁵⁾ 이러한 차이는 국가의 특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요인으로 저출산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국가별 제도 필터, 역사적 경로 의존성, 다양한 가치체계 및 다양한 초기 출산패턴으로 인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혁신이 추후 출산 수준 및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제도 환경의 조절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2. 국가별 저출산 차이

저출산국의 출산력 패턴은 매우 다양하다. 그림 1은 국가 그룹별 1980-2017년 기간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s)(패널 A)과 1960-1976년생 여성의 완료코호트 출산율을 보여준다. 출산율 추세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동기간 노르웨이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반면 한국의 출산율은 크게 감소한 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오늘날 저출산국의 기간출산율은 여성 1명당 최대 1

22) 본 브리핑은 2014-2016년 동서센터(East-West Center)와 KIHASA가 후원한 회의와 2권 분량의 보고서에 기반한다(Rindfuss and Choe 2015, 2016). 모든 저자가 이들 회의 및 요약 문서의 초안 작성에 기여했다. 본 브리핑은 첫 번째 저자, 4번째 저자부터 알파벳순으로 나열된 저자가 편집했다.

23) Perelli-Harris, B., W. Sigle-Rushton, M. Kreyenfeld, T. Lappegard, R. Keizer, and C. Berghammer. 2010. "The Educational Gradient of Childbearing within Cohabitation i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4):775-801.

24) Rindfuss, R.R., M.K. Choe, and S.R. Brauner-Otto. 2016. "The Emergence of Two Distinct Fertility Regimes in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5(3):287-304.

25) Rindfuss, R.R., M.K. Choe, and S.R. Brauner-Otto. 2016. "The Emergence of Two Distinct Fertility Regimes in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5(3):287-304.

명까지 차이가 난다. 코호트 출산율은 기간 TFR보다 변동이 적고 감소세가 완만하고 전반적인 출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기간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초산 연령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 두 수치를 종합하면 출산 연기로 인한 속도 효과도 여전히 중요하고 최근 TFR 감소세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3. 제도적 틀

부모는 더욱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실제 및 인지된 필요와 다른 한편으로 육아, 노동, 경제적 안전 및 비가족/비노동 활동과 관련된 욕구 및 선호도를 절충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노동 시장에 참여하던 자녀가 유아기일 때 가정에 머물든 부모가 선호하는 경로를 추구하지 못하면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 선호하는 경로의 실현 가능성은 커플 역할, 결혼 및 동반자 관계 시장,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 교육제도, 보육, 노동시장, 경제 순환, 주택 시장, 가족, 이민, 의료서비스(피임 및 생식기술), 사회규범 및 젠더 방식의 제도적 측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²⁶⁾²⁷⁾

4. 경로 의존성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요인은 각국의 제도적 경로 의존성, 고유한 국가 가치, 정치 역사 및 과거 정책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이들은 국가, 시장, 및 가족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다양한 유산과 시작점을 반영한다.²⁸⁾²⁹⁾ 국가별 요인은 (a) 제도 및 정

-
- 26) For more details on this framework see Rindfuss, R.R. and S.R. Brauner-Otto. 2008. "Institution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mplications for fertility tempo in low-fertility setting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57-87; Rindfuss, R.R. and M.K. Choe. 2016.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Rindfuss, R.R. and M.K. Choe. 2015. *Low and lower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27) Balbo, Nicoletta, Francesco C. Billari, Melinda Mills. 2013. "Fertility in Advanced Societies: A Review of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29(1): 1-38.
- 28)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UK: Polity Press.
- 29) Mayer, K.U. (2004) 'Whose lives? How history, societies, and institutions define and shape life course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1(3): 161-87.

책 및 (b) 출산 수준의 윤곽을 그린다.

이 경로 의존성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정책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1) 국가의 기존 가치체계와 문화규범을 반영한 정책 혁신은 의심의 여지가 적고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2) 국가의 실현 가능한 대응은 정책의 동기와 정책 설계 및 자금 조달 방식에 의해 어느 정도 결정되고 이들 모두는 각국의 경로 또는 제도에 의해 형성된다. 예를 들어 홍콩은 저출산을 문제로 여기지만 낮은 세율, 정부 개입 최소화 방침으로 인해 세금을 크게 인상해야 하는 정책을 채택하지 못한다. 30) 반면 노르웨이는 높은 세율이 요구되는 높은 공적 제공으로 재분배를 더욱 확대했다.³¹⁾

출산과 같은 제도, 정책 및 행동은 함께 진화하지만 진화 속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 기존의 제도, 문화, 역사 환경에서 출산 변화는 제도, 정책 및 개인의 포부, 선호도 및 행동을 포함한 피드백 루프의 일부로 나타난다. 이들 관계의 순환적 특성은 공식 제도와 개인의 포부 또는 행동 간 불일치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지만 출산율이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한 자녀 정책을 30년 이상 시행한 결과 새로운 한 자녀 가족 규범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향후 출산율은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기존 제도를 조정하는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경로 의존성은 특정 국가에서 성공한 정책을 다른 지역에서 시행할 경우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즉, 정책 접목 실패 사유).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간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멈추지 못했다.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3년 20% 미만에서 2016년 53%로 급증했지만 시설 기준을 보장하는 관리감독과 훈련된 교직원을 확충하지 못해 열악한 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열악한 시설과 시민들의 우려는 역설적으로 출산율을 낮출 수 있다. 요약하면, 새로운 정책이 광범위한 제도적 환경 그리고 일반적으로 훨씬 천천히 변화하는 문화적 신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책 접

30) Basten, Stuart. 2015. "Understanding Ultra-Low Fertility in Hong Kong." Pgs 63-86 in Rindfuss, R.R. and M.K. Choe. 2015. *Low and lower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31) Kravdal, Oystein. 2016. "Not so Low Fertility in Norway—A Result of Affluence, Liberal Values, Gender-Equality Ideals, and the Welfare State" pgs 13-48 in Rindfuss, R.R. and M.K. Choe. 2016.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동시에 사회 전반의 유사점은 경로 의존성이 동일한 하위그룹을 만들고 이들 그룹 내에서 정책을 접목할 경우 더욱 성공적일 수 있다. 이들 하위그룹은 복지 구조, 경제 정책 및/또는 문화 전통과 같은 요소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높은 성평권과 강력한 유교문화를 예로 들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남편, 시댁, 자녀 및 가족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강요하는 “결혼 패키지”가 널리 퍼져있다.³²⁾ 또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매우 경쟁이 치열한 교육제도로 인한 막대한 자금과 시간 투자 및 부모와 자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³³⁾ 동아시아에서 이들 두 요인은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경로 의존성은 경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저출산 환경에서 출산, 특히 기간 출산율은 변동이 심할 수 있고 실제로 변동이 심하다. 최근 특히 젊고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초산 연기로 인해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 영국 등 출산율이 다소 낮은 국가의 기간 TFR이 더욱 낮아졌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안정적 경제 상황과 가족친화적 정책, 난민들의 고출산으로 인해 기간 TFR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5. 다양한 제도 패키지, 유사한 출산 수준

지역마다 자체 제도-출산 경로가 있지만 다른 시기에 다른 제도 패키지에서 유사한 출산 수준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양성평등(예: 유급 및 유연한 육아 휴직, 양질의 보육), 일하는 엄마 지원과 남성의 가사와 육아 기여, 직장 인근의 저렴한 주택, 안정적 경제 상황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덕분에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사회경제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기간 및 코호트 출산율을 기록했다.³⁴⁾

동기간 영국은 유사한 출산율을 보였으나 주로 아동 빈곤 퇴치와 저소득층 학부모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매우 성별화된 제도 패키지를 운영했다. 육아 휴직은 일반적으로

32) Bumpass, L.L., R.R. Rindfuss, M.K. Choe, and N.O. Tsuya. 2009.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Low Fertility: The case of Japan.” *Asian Population Studies* 5(3):215-235.

33) Jones, Gavin and Wajihah Hamid. 2015. “Singapore’s Pro-natalist Policies: To What Extent Have They Worked?” pgs 33-62 in Rindfuss, R.R. and M.K. Choe. 2015. *Low and lower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34) Kravdal 2016.

남성보다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3세 이상 아동은 물론 취약 가정의 경우 2세 아동에게 일정 시간 무료로 보육 서비스를 널리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 고용은 널리 확산되었지만 소득 궤도가 낮아 고소득 능력을 갖춘 여성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들 제도(유연하지만 규제가 없는 노동 시장과 결합된 계층화된 성별 가정 정책체제)는 취약계층의 출산 연령 감소와 출산율 증가를 장려하지만 인적 자본이 더욱 많은 이들의 출산 연기 또는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평균 출산율은 비교적 높았다.³⁵⁾

제도의 다양한 구조적 특성 또한 초저출산국의 출산 수준이 유사해지는데 기여했다. 한국과 이탈리아를 예로 들 수 있다. 두 국가는 기간 및 코호트 출산율이 매우 낮고 초저출산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초산 연령이 가장 높다. 또한 몇 가지 출산 제약 요인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국은 주로 여성이 육아를 책임지는 강력한 성역할과 “가족 문화”가 조성되어 있고³⁶⁾ 주택 가격이 매우 높아 청년들이 빈번하게 부모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독립과 출산 시기가 늦다.³⁷⁾³⁸⁾ 가족 정책과 노동 시장의 특징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고 고용 불안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나 양국은 중요한 차이점도 몇 가지 있다. 한국은 1970년대 빈곤한 저개발국가에서 2012년 1인당 GDP 23위로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³⁹⁾ 반면 이탈리아는 장기간 경제 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고 고용이 불안하다. 한국은 노동 시간이 길고 경직되어 있다. 2017년 기준 이탈리아 남성의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인데 반해 한국은 거의 47시간에 달했다.⁴⁰⁾⁴¹⁾

35) Sigle, Wendy. 2016. “Fertility and Population Change in the United Kingdom.” Pgs 77-98 in Rindfuss, R.R. and M.K. Choe. 2016.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36) Tanturri, Maria Letizia. 2016. “Aging Italy: Low Fertility and Societal Rigidities.” Pgs 221-258 in Rindfuss, R.R. and M.K. Choe. 2016.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37) Tanturri 2016.

38) Lee, Samsik and Hoyjin Choi. 2015. “Lowest-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outh Korea.” pgs 107-124 in Rindfuss, R.R. and M.K. Choe. 2015. *Low and lower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39) Statistics Korea. 2014. kostat.go.kr/portal/eng/index.action.

40) Statistics Korea. 2014.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Downloaded 7 January 2019. <http://kostat.go.kr/portal/eng/pressReleases/1/index.board?bmode=read&aSeq=37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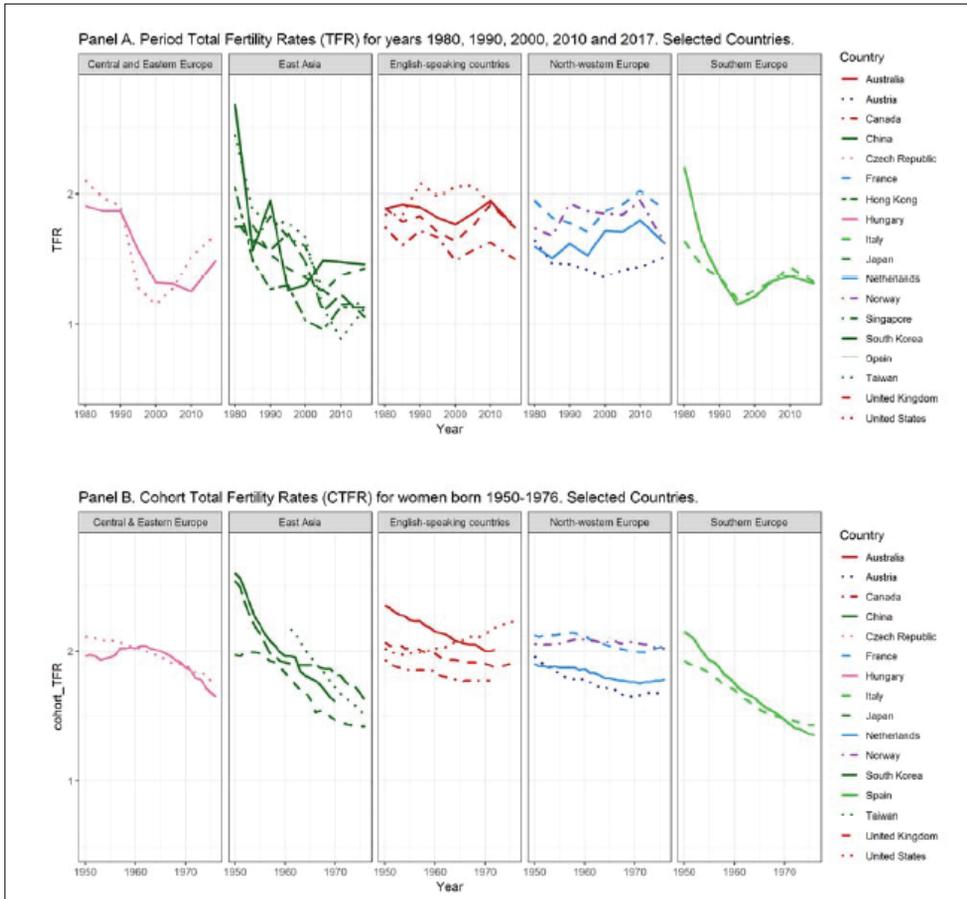
41) Eurostat 2017. Labor Force Survey LFS series - detailed annual survey results.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 Downloaded 7 January 2019.

또한 결혼과 출산과 관련하여 문화적 및 규범적 차이가 매우 크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 여성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결혼 패키지와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인해 자녀의 교육과 미래 경제적 성공 보장을 포함한 집안 일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한국은 혼외출산이 매우 드물다(출산의 2%). 이탈리아와 기타 남유럽 국가에서는 지난 30년간 혼외출산이 크게 증가해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2017년 전체 출산 중 혼외출산 비중, 이탈리아: 30 %, 스페인: 46 %).

6. 결론

점점 많은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준과 추세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하기 위해서는 현재 출산 수준에 이르게 된 각국의 고유한 출산 경로를 이해해야 한다. 출산율을 한 번에 높일 수 있는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출산 경로와 문화, 제도적 구조에 부합하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도를 효과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 맥락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림 3-6] 주요 국가의 대륙별 기간 합계 출산율 추이



주: 중국의 1980-2010년 기간출산율 데이터는 Cuiling Zhang가 120개국 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를 사용해 추정했다. 1976년생 여성의 완료 출산율의 경우 39-41세까지는 관찰된 출산율에, 42세 이상은 추정된 출산율에 기반한다. 자료: Eurostat 데이터베이스, Human Fertility Database, European Demographic Data Sheet 2018, OECD, 국가통계청 및 인구조사 데이터. 기타 자료: 연구보고서 및 논문

제6절 한국의 일과 가족: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Minja Kim Choe (하와이 이스트웨스트 센터)

한국은 20세기 후반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출산 감소를 경험하고 2000년대부터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했다. 한국 정부는 초저출산이 노동력 감소,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재정적 및 사회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2003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 정책과 프로그램은 출산율 변화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전통문화규범 변화의 관점에서 최근 한국에서 나타난 일과 가정 행동 변화를 살펴본다. 이번 검토가 한국 여성의 일과 가족 생활 및 지금까지 인구 정책과 프로그램이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향후 인구 정책과 프로그램 방향에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1.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교육확대

한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0-15년마다 1인당 GDP가 4배씩 증가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1인당 실질 GDP(현재 미국달러)는 1970년 300달러 미만에서 2015년 25,000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2017년 세계은행). 이러한 고도성장은 교육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975년 6%에서 1980년 22%로 그리고 2005년에는 81%까지 증가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남성과 같아졌다(한국 통계청 2017a).

2. 한국의 전통가족제도

21세기초 한국의 가족과 친족제도는 조선시대(1392-1910) 확립된 유교사상, 일제 식민지 통치(1910-1945), 1948년 이후 한국의 법체계, 1960년 이후 경제사회적 급변기 등(Choe and Park 2018) 네 가지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 유교사상은 친족, 성

별, 세대, 연령 및 사회계층에 기반한 규칙과 관계를 강조한다. 유교사상에 따른 적절한 관계는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사회의 기초이다.

한국의 전통가족제도는 가문의 존속과 번영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한다. 부계계승으로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특히 아들 출산이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세대간 관계는 가족 제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어른 세대는 자녀 세대를 교육시키고 경제적으로 부양한다. 그리고 부모와 기타 가문의 어른 봉양과 조상 제사를 자녀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간주했다. 한국 전통가족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성역할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성인 남성이 가장이 되어 경제와 사회적 책임과 권위를 갖고 여성은 자녀, 노인 및 기타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살림을 한다. 가족제도와 유교사상의 이러한 원칙은 유교규범을 따르는 전통과 유학자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러한 유교문화 유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종속이다. 동아시아 사회는 사회적으로 내재된 맥락 안에 개인을 놓고 개인보다 공동체의 욕망과 관심을 중요시하는 “공동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가족과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거의 여유가 없다.

일본은 일제강점기(1910-1945)에 일본 메이지민법을 본 딴 현대적 법체계를 한국에 도입했다. 현대 한국 민법은 가장과 같은 기본적인 유교규범을 제도화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또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현재 교육제도는 19세기말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 도입되어 일제강점기 동안 확장됐다. 현대 교육제도는 성평등과 개인의 권리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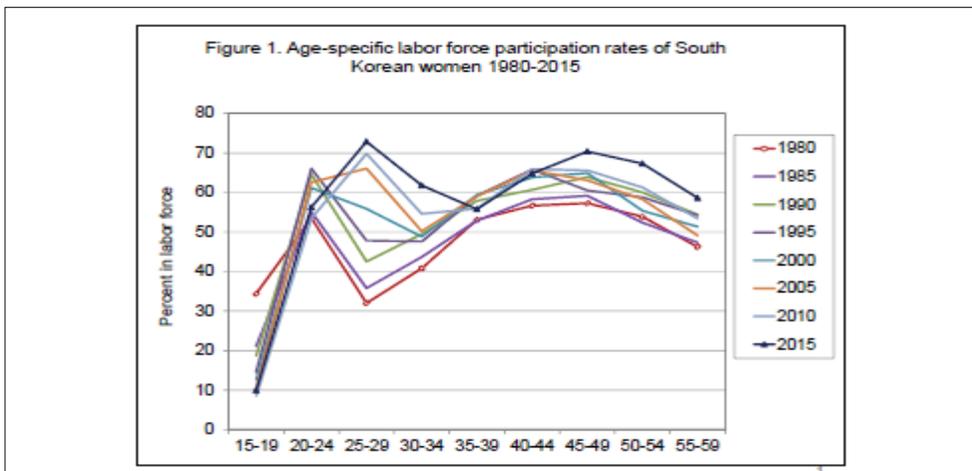
한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일제에서 해방되었고 1948년 남쪽에 대한민국이,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됐다 한국 헌법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민법은 가장, 입양, 상속 및 친족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반영해 여성보다 남성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꾸준한 개정을 통해 여성의 평등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05년 민법개정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됐다.

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경제발전과 교육확대로 기혼 여성을 포함한 한국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규범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계속 제약했다. 2017년 15-64세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OECD 평균 63.6%, 일본 68.1%와 비교해 58.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한국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했다가 이후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이 M자형을 그린다(그림 1). 이는 한국뿐 아니라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은 다른 경제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 여성의 M자형 노동시장 참여는 (1) 교육 확대와 경제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성역할이 형성되는 동시에 (2)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계속된 결과이다. 한국은 경제 발전과 여성의 교육 확대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기회가 증대됐지만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어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간주되는 기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서구 국가는 물론 일본과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보다도 훨씬 단기간에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도 빠르게 변했으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제도는 느리게 바뀌었다(Chang 2013).

[그림 3-7] 한국 여성의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 1980-2015년



자료: 통계청. KOSIS. <http://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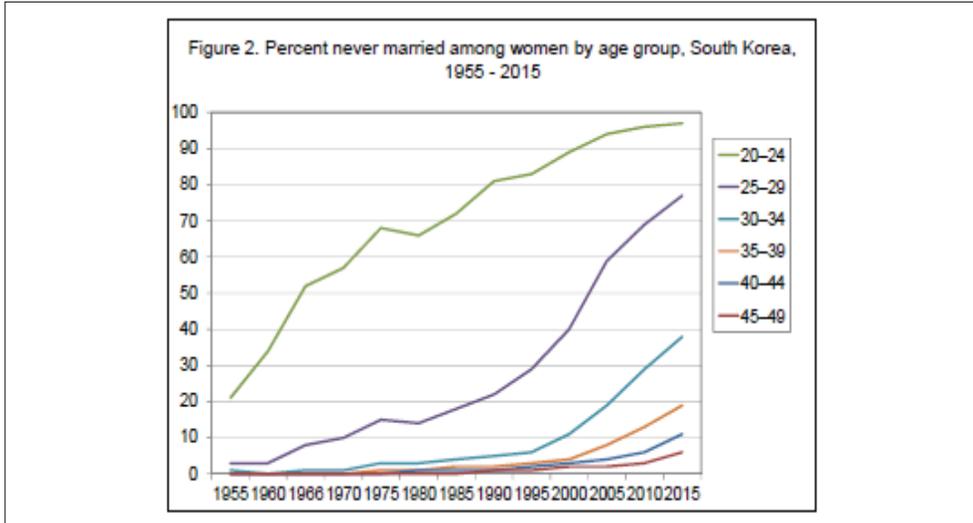
4. 결혼 행동 변화

전통적 성역할이 허물어지는 변화는 결혼과 출산 행동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은 1955년부터 남녀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가임기에 결혼을 하지 않는 비중도 높아졌다(그림 2-11). 젊은 한국 여성의 비혼 또는 만혼 현상은 결혼으로 인한 극단적인 여성의 역할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 발전과 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족제도와 문화 규범이 강하게 자리잡은 한국 사회의 특징은 결혼 전후 달라지는 성역할로 정의될 수 있다. 한국 여성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가사노동에서 자유롭다. 또한 취업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추구할 수 있고 취업 여성의 경우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기혼 여성은 전통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이들은 결혼 후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자녀를 출산하고 살림을 맡고 가족을 돌봐야 한다. 또한 취업 여성의 경우 가정을 위해 소득을 사용해야 한다.

5. 출산 행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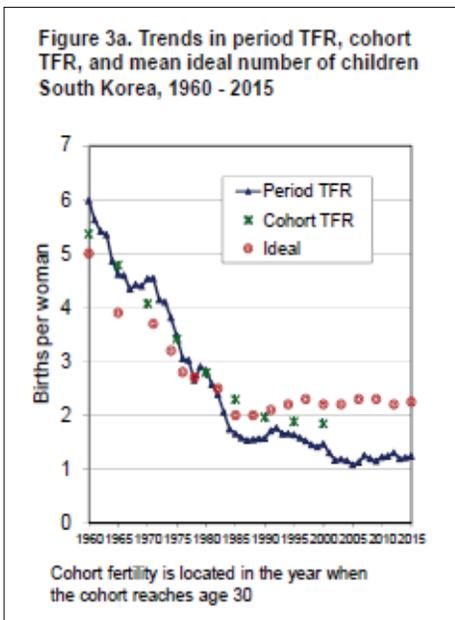
1960년대 이후 한국 여성의 출산 행동은 출산율 급감, 세계 최저수준의 혼외출산율, 초산연령 증가, 기혼부부의 거의 보편적 출산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간합계출산율(TFR: Period Total Fertility Rate)은 1960년 5.98명에서 1983년 2.3명으로 감소하고 2001년 1.3명으로 역대 최하 수준을 기록한 후에도 2005년 1.08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후 기간 TFR은 1.2명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한국 통계청 2017b). 최근 몇 년간 늦은 결혼이 늦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졌다(그림 2-13).

[그림 3-8] 연령대별 영구적 비혼율, 한국, 1955-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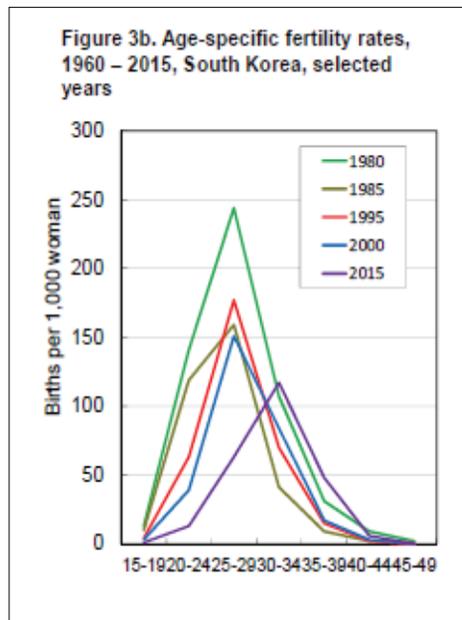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복수의 연도.

[그림 3-9] 한국의 기간 TFR 추세, 코호트 TFR, 및 평균 이상자녀수, 1960-2015년



자료: 한국 통계청 2017. 2016년 출산통계

[그림 3-10] 연령별 출산율, 1960 - 2015년, 한국 주요 연도



출산 시점이 변화할 때 기간 TFR은 이상적인 완결 자녀수의 척도가 아니다. TFR은 완결 자녀수를 측정하는데 취약하다. 상당히 최근까지 코호트 출산율은 약 1.8명으로 기혼 여성의 이상자녀수보다 크게 낮지 않았다(그림 3).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코호트 출산율 수준이 감소할지 그리고 감소한다면 얼마나 감소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Yoo and Sobotka (2018)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속도 조정된 합계출산율은 약 1.5명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출산 행동에는 전통가족제도가 일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강력한 가부장제 전통으로 인해 혼외출산율이 매우 낮고 2005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계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혼외 출산한 자녀의 부는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수 없거나, 경우에 따라 부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가족 호적에 출생을 신고해야 했다. 아버지 없이 자랄 경우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힐 수 있다. (부계) 혈통 유지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대부분 한국 여성은 결혼 후 바로 자녀를 낳았다.

6. 성역할 선호도 및 행동

최근 한국에서 여성들의 자녀수와 고용 선호도를 조사하는 전국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15-49세 기혼 여성의 54%가 시간제 고용을, 36%가 전일제 고용을, 10%가 무직 상태를 선호했고 자녀수는 62%가 2명 이상을, 32%가 1명을, 6%가 무자녀를 선호했다. 20-44세 미혼 여성도 기혼 여성과 유사한 응답 분포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Lee et al., 2015). 현재 한국 여성의 일과 가정 행동 패턴은 여성의 선호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고용 형태의 경우 대부분 전일제로 근무하거나 무직 상태였고, 자녀의 경우 대부분 첫째 출산 이후 출산을 중지했다.

7. 21세기 인구 정책

한국 정부는 출산 추세가 노동력 감소,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재정적 및 사회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2003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했다(Republic of Korea Committee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2005, 2010, 2015). 출산 행동을 바꾸기 위해 설계된 가족 정책은 기본적으로 출산 프로그램과 가정친화적 기업 프로그램 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여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의 책임을 조정해 궁극적으로 출산율과 고용율을 여성이 선호하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정책과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협소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프로그램은 기간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결혼 연기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한국 여성의 일과 가정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8. 가족 친화적 인구정책 및 프로그램의 주요 고려 사항

본 절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여성의 결혼, 출산 및 고용 장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과 프로그램은 여러 생애과정 단계의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정책과 프로그램은 결혼, 경력 축적, 출산 및 육아 및 자녀 교육 등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단계에 맞춰 조정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급속한 경제 성장은 사람, 가정 및 공동체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고 일과 가정 행동의 선호도가 매우 다양한 사회를 낳았다. 따라서 정책입안자가 시민들의 다양한 선호도와 요구를 이해하고 유연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일과 가정 정책 특히 가정친화적 기업 프로그램은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 기업마다 사업 규모, 유형, 경영 방식과 목표 및 재정 자원이 다르고 프로그램 사용자(대부분 직원)의 사회경제적 및 가족 배경과 선호도 또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직장 및 가정 정책에는 유연한 프로그램과 시행 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정책과 프로그램은 양성평등과 차별금지에 전념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이들의 주요한 변화 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 정책 입안자, 시행 기관 및 사용자는 적시에 포괄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선호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일과 가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 즉,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가와 야외 활동 시설을 갖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필요하다. 일곱째, 행복한 가정은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 가족이 매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 통근시간, 수업시간 및 기

타 학습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문화 전통과 규범은 물론 오늘날 사회경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일과 가족 정책과 프로그램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이들 정책은 한국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Chang, Kyung-Sup, Mijung Chin, Miae Sung, and Jaerim Lee (2013). *Understanding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Identification and Implications in the Era of Low Fertility and Aging in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hoe, Minja Kim and Ki Tae Park. 2018. "How is the decline of fertility related to fertility preference in South Korea?" pp. 305-322 in Stuart Gietel-Basten, John Casterline, and Minja Kim Choe (eds.) *Family Demography in Asia*. London: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 Republic of Korea Committee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2005. *Saeromaji Plan I: Basic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2011-2015*.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_____. 2010. *Saeromaji Plan II: Second Basic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2011-2015*.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_____. 2015. *Saeromaji Plan III: Third Basic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2016-2020*.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tatistics Korea. 2017a. *2014 Social Indicators in Korea*. Daejeon, Korea: Statistics Korea.
- _____. 2017b. *2016 Birth Statistics*. Daejeon, Korea: Statistics Korea.
- World Bank. 201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7*,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u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n 20 March 2018.
- Yoo, Sam Hyun. 2014. "Educational Differentials in Cohort Fertility during the Fer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30: 1463-1494.

제7절 출산 장애와 정책 효과의 측정 방식에 대하여

Anne H. Gauthier (네덜란드 학제간 연구연구소)

1. 소개

출산 또는 무자녀 결정은 개인의 선호도, 양육비 및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정부는 이들 요소 각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론상 경제자원 이전 등을 통해 양육비를 낮추거나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자원 이전과 또는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한편으로 확인된 출산 장애물을 신중히 측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책이 이들 장애물을 극복한 (또는 극복하지 못한) 방법과 이들 정책이 대중의 선호도에 부합하는 정도를 이해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출산 장애물과 정책의 가능한 영향 측정에 사용된 네 가지 분석 전략을 알아본다. 이들 전략은 모두 대중의 선호도와 인식된 출산 장애물을 측정하는 방법과 정책 변화를 기록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해야 한다. 본 브리핑의 결론에서는 향후 데이터 수집에 대한 몇 가지 권고안을 제안한다.

2. 출산 장애물

출산 결정과 정책 영향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첫 번째 분석 전략은 대상자를 선정해 출산 장애물에 대해 직접 물어보는 방식으로 설문조사에서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가까운 미래에 출산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없다고 응답하면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를 물을 수 있다. 자세한 질문 사례는 아래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출산 장애물을 해소하는 정책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3-1〉 설문조사 질문 예

설문조사	질문
2003년 인구정책수용 설문조사	자녀를 (더 이상) 원치 않는 이유(예: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일 때문에 자녀를 가질 여유가 없다)
일본국가출산 설문조사	이상자녀수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예: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직장 또는 사업의 방해)
Flash Eurobarometer 247 (2008년 9월)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어려움(예: 높은 양육비,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료: 이들 설문조사에 관한 Gauthier (2016)의 결과 참조.

그러나 이들 데이터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데이터와 출산 결정을 연결시키기 어렵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 출산의 장애물이라고 응답해도 이들 비용 감소가 출산 결정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지적한 주원인을 정부가 해결했는가, 출산을 결정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등과 같은 추가 질문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 질문이 포함된 설문 조사는 많지 않다. 둘째, 이들 데이터에는 설문조사 질문과 대답 카테고리의 기준이 부족하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국가 또는 시기별로 비교할 수 없어 정책 분석 가능성이 크게 제한된다. 따라서 설문조사 항목을 신중하게 설계하고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3. 이론 중심 방식

출산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두 번째 분석 전략은 출산의 이론적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전략은 설문조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전략과 유사하지만 예를 들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출산 동기와 같은 특정 이론에 기반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전략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론이 주로 사용된다.

첫째 1차 세대 및 성별 설문조사(GGS: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의 질문 개발에 사용된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이다(Ajzen and Klobas 2013). 계획된 행동 이론은 (1)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2) 출산에 대한 주관적 규범 및 (3) 출산 통제 등 세 가지 요인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세 번째 요인은 앞에서 검토한 일부 설문조사 항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경우, “다음 항목은 향후 3년 내 출산 여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육아 능력” 및 “육아 휴직 가용성” 등을 응답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계획된 행동 이론은 출산 결정에 대한 심도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했으나(예: Dommermuth, Klobas, and Lappegard 2011). 정책의 역할 이해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이론은 GGS 폴란드어 버전 질문 개발 개발에 사용된 밀러의 출산의향 이론(Miller 2011)이다. 출산의향 이론은 출산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동기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으로 인해 취업 및 경력 개발이 더욱 어려워진다”(부정적 동기) 및 “자녀가 있으면 늙어서 외롭지 않다”(긍정적 동기) 등이 있다. 이들 항목 분석은 유망하지만(Mynarska and Rytel 2017 참조)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 많은 나라에서 시험하지 못했다.

마지막 이론은 출산율이 높았던 1970년대 개발돼(Bulatao 1975) 이후 시대변화에 맞춰 수정된(Nauck 2014 참조) 자녀 가치 이론이다. 자녀 가치 이론은 양육비에 초점을 맞춘 출산에 대한 고전 경제 이론과 달리 자녀의 비용과 이익을 모두 강조한다. 여러 나라에서 시험됐지만(Nauck 2007) GGS와 같은 국가간 출산력 비교 조사에는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4. 정책 선호도

정책 선호도에 초점을 맞춘 세 번째 전략은 정책 격차는 물론 특정 정책의 수용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에 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출산지원금 정책은 현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양육비 인하와 같은 다른 조치를 더욱 선호하는 경우 수용도가 낮을 수 있다. 이 방식은 1990년대 여러 국가의 가정 및 출산 설문조사와 2000년대 인구 수용 정책 설문조사(Population Acceptance Policy Surveys)에 사용되었다.

이들 데이터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출산 결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정책 수용도와 출산 결정을 연결시키려고 시도했던 조사는 인구정책수용도 조사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정책수용도 조사에서 응답자는 선호하는 정책 방안을 표시하고 이들 방안이 자신의 출산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응답한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했다.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약 20%가 선호하는 정책 방안이 시행될 경우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이들 중)(Gauthier 2016). 이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정책에 대한 출산 결정 반응성이 비교적 낮음을 보여준다.

5. 정책 실험

마지막 분석 전략은 출산 장애물 또는 선호도에 의존하지 않고 정책 시행과 출산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앞의 전략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위해 국가 간 또는 시기 간 정책 차이를 사용하는, 일명 자연적으로 발생한 실험을 활용한다(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 검토는 Thevenon and Gauthier 2011 참조). 마찬가지로 모집단 소그룹 전반에 걸친 정책 적합성 변화 또한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측정에 사용된 자연 발생 실험을 형성한다 (휴가 제도의 경우 Gauthier and Bartova 2018 참조).

이 분석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주요 날짜(예: 정책 시행일), 정책 방안 세부 정보, 자격 기준 등과 같은 정책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는 자원 기반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다양한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리적 범위 제한, 정책 세부 사항 부족, 정기적 업데이트 부재 등과 같은 한계가 있다.

6. 결론

가족 복지와 출산 결정 지원 정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 브리핑은 출산 장애물과 잠재 정책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석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번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출산 장애물 설문조사를 구성하는 최적의 방법에 대한 기준 부족은 이들 데이터 사용과 출산 결정에 대한 인사이트 구축을 저해한다. 따라서 관련 기준을 개발하고 다양한 국가적 맥락에서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금까지 출산 장애물과 정책 영향에 대한 정보는 주로 서유럽 국가의 경험에 기

반했다. 국가 간 비교 가능 데이터 부족은 동아시아와 같은 다른 저출산 지역과 국가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국제 비교 가능 설문조사 도구를 사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정책 및 상황별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만 투자가 부족하여 국가 간 비교 가능 표준 및 형식을 사용해 이들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문서화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 Ajzen, Icek and Jane Klobas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 8: 203–32.
- Bulatao, R.A. (1975).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Philippines . Honolulu: East-West Center.
- Brzozowska Zuzanna and Monika Mynarska (2017). Fertility intentions and their realisation: insights from the polish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Working paper 16.
- Dommermuth, Lars, Jane Klobas, and Trude Lappegard (2011). Now or later?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iming of fertility intention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6 : 42–53.
- Gauthier, A.H., Bartova, A. (2018). The impact of leave policies on employment, fertility, gender equality and health. In: Kristen M. Shockley, Winny Shen, Ryan C. Johnson (eds). *Cambridge Handbook of Work-Family in Global Perspective*.
- Gauthier, A.H. (2016). Governmental support for families and obstacles to fertility. In: R. Rindfuss and M. Choe (eds). *Low fertility in Europe and East Asia* (Springer).
- Miller, Warren B. (2011). Differences between fertility desires and intentions: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olicy.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Vol. 9, pp. 75-98
- Mynarska, M. and J. Rytel (2017). From motives through desires to intentions: investigating the reproductive choices of childless men and women in Poland.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50 (3):1-13 .

Nauck, Bernhard. (2014). Value of Children and the Social Production of Welfare. *Demographic Research*, 30, 1793-1824.

Nauck, Bernhard (2007). Value of Children and the Framing of Fertility: Results from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urvey in 10 Societ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 5: 615-629.

Thévenon, O. Gauthier, A.H. (2011). Family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a 'fertility-booster' with side-effects. *Community, Work & Family*. 14, 2: 197-216.

APPENDIX: EXTRACTS FROM VARIOUS SURVEYS ABOUT OBSTACLES TO FERTILITY

Below are extracts from various surveys about obstacles to fertility or theory-driven determinants of fertility.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v2.7

yes → read introductory text ↓

no → go to 6.18

Even though you might not intend to have a/another child, we would still want your opinion about this possibility.

- 6.18 Suppose that during the next 3 years you were to have a/another child. I would like you to tell me what effect you think this would have on various aspects of your life. Please choose your answers from the card.

Show Card 2.80: Better or Worse.

If you were to have a/another child during the next three years, would it be better or worse for ...	much better	better	neither better nor worse	worse	much worse
a. the possibility to do what you want	1	2	3	4	5
b. the amount of money you can spend	1	2	3	4	5
c. the possibility to realize other goals in life	1	2	3	4	5
d. the joy and satisfaction you get from life	1	2	3	4	5
e. your employment opportunities	1	2	3	4	5
f. your partner's employment opportunities	1	2	3	4	5

- 6.19 I'm going to read out some statements about conditions that might need to be fulfilled before people have a/another child. Please tell me to what extent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se statements, choosing your answer from this card.

Show Card 2.81: Agreement Scale

	strongly agree	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a. I will be able to financially afford to have a/another child during the next 3 years.	1	2	3	4	5
b. I will have access to suitable housing to allow me to have a/another child during the next 3 years.	1	2	3	4	5
c. I will be healthy enough to have a/another child during the next 3 years.	1	2	3	4	5
d. I will feel ready to have a/another child during the next 3 years.	1	2	3	4	5

e. I will have a suitable partner with whom to have a/another child during the next 3 years.	1	2	3	4	5
f. I will be able to balance my work and family life if I have a/another child during the next 3 years.	1	2	3	4	5
Routing check: R is male? See 1.01 yes → ↓ no → go to item h					
g. My partner will be healthy enough to have a/another child during the next 3 years.	1	2	3	4	5
h. I will have access to satisfactory childcare if I have a child during the next 3 years.	1	2	3	4	5
i. I will have access to sufficient parental leave if I have a child during the next 3 years.	1	2	3	4	5

- 20 Now I'm going to read out some statements about what other people might think about you having a/another child during the next 3 years. Please tell me to what extent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se statements, choosing your answer from this card.

Show Card 2.82: Agreement Scale.

	strongly agree	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a. Most of my friends think I should have a/another child.	1	2	3	4	5
Routing check: R has at least one parent alive? See 4.01 - 4.06 yes → ↓ no → go to item c					
b. My parents think that I should have a/another child.	1	2	3	4	5
Routing check: R has a partner? See 2.01 yes → ↓ no → go to 7.01					
c. My partner thinks that I should have a/another child.	1	2	3	4	5

Eurobarometer Survey Flash 247 (September 2008)

Difficulties in daily life faced by families

Q2. I am going to read out a list of difficulties which families could face. In your opinion, from this list, what are the two main difficulties?

[ROTATE ITEMS - READ OUT - ONLY TWO ANSWERS ARE POSSIBLE!]

High cost of raising children	1
High cost of housing	2
Difficulty of combining work and family life.....	3
Too little support from employers	4
Unequal sharing of household tasks between partners.....	5
Arranging good childcare	6
Burden of caring for ageing parents or relatives	7
The quality of schooling	8
The level of public financial support for families	9
[None]	10
[Other]	11
[DK/NA]	99

Source: http://ec.europa.eu/commfrontoffice/publicopinion/flash/fl_247_en.pdf

Polish wave 2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Table 1: Motives for childbearing

Negative motives	Instrumental motives	Emotional mo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ising children makes it more difficult for parents to engage in paid employment and to have a professional career • Partners have less time for each other when children are born • Raising children limits parents' leisure time • Raising children is difficult financially • Raising children brings many worries and concerns • For women, it is difficult to combine work and childbearing • Raising children brings too much responsibility • Pregnancy and delivery are strenuous for women • A fear that a child will be born i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ren are necessary for the future of Polish economy (people to work) • Children will support their elderly parents • Children will inherit parents' properties • Children prevent parents from feeling lonely in older age • Children take over par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values • Parenthood means fulfilling religious feeling about family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 experience a special love and closeness through parenthood • We want to watch children grow and develop • Parenthood makes a union stronger and more committed • A parent feels more complete as a woman / a man

Population Policy Acceptance Survey – round 2

CF 2

There are different reasons for not wanting a(nother) child. To what extent are the following reasons important to you personally for (definitely or probably) not wanting a(nother) child?
(Put one cross in each line)

	1. Very important	2. Important	3. Neither im- portant nor unimportant	4. Un- important	5. Very unimportant
a. I already have all the children I want					
b. My state of health does not allow it					
c. I live alone and I don't have a steady partner					
d. My job and professional activities would not allow it					
e. I would have to give up leisure-time interests					
f. I want to maintain my present standard of living					
g. A(nother) child would cost too much					
h. I am too concerned about the future my children will have					
i. I would not be able to enjoy life as I have so far					
j. I am/ my partner is too old					
k. My partner does not want a(nother) child					

Source: https://www.bib.bund.de/EN/Research/Surveys/PPAS/Questionnaires/PPA2-Original-Questionnaire.pdf?__blob=publicationFile&v=3

Japan national fertility survey

Table: III-3: Reasons why couples do not realize their ideal number of children, by age of wife: 15th Survey (2015)

Age of wife (Number of cases)	Reasons why couples do not realize their ideal number of children											
	Economic reasons			Age/physical reasons			Burden of child rearing	Reasons related to husbands			Other	
	It costs too much to raise and educate children	Interference with one's job or business	House is too small	Hate to bear children at older age	Want to have a child but can't conceive one	Health reasons	Can't bear mentally/ physically the burden of childrearing anymore	Can't gain husband's cooperation with household chores and childrearing	Want the last child to grow up before the husband retires	Husband does not want it	Social environment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to grow up without worry	Want to cherish the life of couple or oneself
<30 (51)	76.5%	17.6	17.6	5.9	5.9	5.9	15.7	11.8	2.0	7.8	3.9	9.8
30-34 (132)	81.1	24.2	18.2	18.2	10.6	15.2	22.7	12.1	7.6	9.1	9.1	12.1
35-39 (282)	64.9	20.2	15.2	35.5	19.1	16.0	24.5	8.5	6.0	9.9	7.4	8.9
40-49 (788)	47.7	11.8	8.2	47.2	28.4	17.5	14.3	10.0	8.0	7.4	5.1	3.6
Total (1,253)	56.3	15.2	11.3	39.8	23.5	16.4	17.6	10.0	7.3	8.1	6.0	5.9
14th Survey (1,835)	60.4	16.8	13.2	35.1	19.3	18.6	17.4	10.9	8.3	7.4	7.2	5.6
13th Survey (1,825)	65.9	17.5	15.0	38.0	16.3	16.9	21.6	13.8	8.5	8.3	13.6	8.1

Note: The figures shown are for first-marriage couples whose intended number of children is less than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The percentage of couples whose intended number of children is less than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is 30.3% (except for "not stated").

Source: http://www.ipss.go.jp/ps-doukou/e/doukou15/Nfs15R_points_eng.pdf

Value of children survey

Nauck and Klaus *The Varying Value of Children*

Table 1 Factorial Structure and Equivalence of the VOC Measurement

Items	Factor loadings ^c		
	Comfort	Affect	Esteem
Child can help when you are old	.82	.08	.06
To carry on the family name	.85	.12	.09
To help your family economically	.80	-.05	-.09
Child helps around the house	.72	-.11	.24
Pleasure watching children grow	-.06	.84	-.01
Fun to have young children around	.16	.78	-.01
Joy to have a small baby ^a	.15	.78	-.01
Feeling of love between parent and child	-.14	.75	-.05
Makes family more important	-.01	.09	.78
Increases responsibility, development	-.14	-.00	.86
Brings parents closer together ^b	.29	.04	.64
More contacts with kin ^b	.30	.07	.64
Explained variance		67%	

Source: <https://student.cc.uoc.gr/uploadFiles/1110-AE09K/Nauck%20The%20varying%20value%20of%20children.pdf>

제 4 장

연구 논문

제1절 도움 없이 불가능한 추가 자녀 출산:
대만 가정의 노동 분담 및 출산 의향

제2절 동아시아의 자녀 양육비와 저출산:
한국, 일본, 대만 및 EU 25개국 비교 연구

제3절 동아시아의 저출산과 인구정책

제4절 아시아의 가족계획사업 및 출산 선호도

제5절 유럽의 출산 의향 실현 격차: 거시사회적 환경의 역할

제6절 주택 및 출산: 거시적 차원의 다국적 조사, 1982-2016년

제7절 육아에 대한 한국,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의
가족 의식 및 근로 환경

부록

제1절 도움 없이 불가능한 추가 자녀 출산: 대만 가정의 노동 분담 및 출산 의향

Yen-hsin Alice Cheng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Chen-Hao Hsu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1. 서론

20 세기 후반 대다수 선진국의 기간 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은 역대 최저인 1.3명 이하로 떨어졌다(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 이처럼 이례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여성의 교육 및 사회진출의 증가에 따른 출산 연기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많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 템포 효과의 약화로 출산율이 역전되었지만, 이외 많은 국가들의 경우, 출산율 역전을 경험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선진국과 남유럽 국가들을 꼽을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들 국가에서 출산율 역전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로 양성 평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2000)는 초저출산율이 가족 중심적인 제도 내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McDonald 2000). 즉, 고등 교육을 받고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등, 가정 밖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가사일을 하거나, 자녀 혹은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여성만의 책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고수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율은 배우자 사이의 가사 노동을 불균등하게 분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Anderson and Kohler 2015; Esping-Andersen 2009; McDonald 2000). 인구 통계 학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지체된 성평등 혁명”이라고 묘사하면서, 북유럽 국가들 (Goldscheider, Bernhardt and Lappegård 2015)에서 볼 수 있듯이, 배우자 간에 가사노동을 좀더 평등하게 나눌 경우, 인구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

으로 출산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최근 한 연구는 가족 내 가사 노동 분담이 여성의 추가 출산의향 및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주로 서구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져왔다(Kan and Hertog 2017).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출산율이 배우자 관계의 특성 및 가사 분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대만 남성의 가사 노동(육아 및 가사 노동 포함)과 부부 관계의 특성 (예를 들어, 연령 및 교육 정도 비교, 가구 총소득에서 아내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및 노동 시간)이 여성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젠더역할과 관련해 좀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저출산율의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대만의 사회적 분위기

대만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교육기회의 확대로 이어졌다. 15세-49세 대만인 중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1980년 남성이 9%, 여성은 5%였으나, 2016년 남성은 43.8%, 여성은 48.1%로 급격히 증가했다. 해당 연령 그룹의 여성은 연령이 더 높은 그룹의 여성은 물론 남성들에 비해서도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게 됐다. 1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년 77.1%와 39.3%에서 2016년 67.1%와 50.8%로 각각 증가해, 지난 40년 간 남녀의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는 38%에서 16%로 좁혀졌다. 여성의 월평균소득은 1980년 남성 소득의 71.2%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남성 소득의 83.6%를 벌어들여,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 모든 지표들은 최근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가정 내에서의 여성 지위의 상승 속도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더딘 것으로 보인다.

3. 성평등, 가사노동분담, 및 출산의사

많은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최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적인 태도와 행동이 중요한 연구과제들로 부상하고 있다. Aassve 외. (2015)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일치와 배우자간 가사노동의 균등한 분배가 출산의사를 확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둘째 아이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변화하면서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가사 노동의 분업 문제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로 부상했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는 가정 내 남편과 아내 간의 가사노동의 불균등한 분업이 추가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Anderson and Kholeer 2015, 에스핑 앤더슨 2009, 맥도널드 2000). 아이가 태어나면서 여성(아내)이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투입하는 시간의 총합이 현저히 증가한 반면, 남성(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Geerdingen과 Center 2005; Kim and Chung 2018). 이와 같은 가정 내 가사 노동의 분업 불균형 확대는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중소득 가정에서 아내는 “2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Yavorsky, Kamp Dush, Schope-Sullivan 2015). 결국, 남성들이 변화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가사일과 직장 생활 둘 다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관찰된 가사노동 분담의 다양한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반된 이론들이 개발되어 왔다. 한편으로 경제적 의존성과 상대적 자원 관점은 가구 내 총소득에서 여성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더 오랜 시간 노동을 할 경우, 해당 여성의 가사노동이 전체노동시간에서 비중이 비교적 작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이 가사 노동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가정한다(Aassve, Fuochi and Mencarini 2014; Bavel, Schwartz and Esteve 2018). 미국의 경우, 아내가 밖에서 더 오랜 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 남편들의 육아 참여도도 더 증가한다(Raley, Bianchi and Wang 2012). 반면에, 남편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에는 아내의 가계 소득 기여도는 가사노동에 반비례한다. 아내의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여성의 역할과 다른 수입능력에 대한 보상으로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Bittman 외 2003, Brines 1994, Greenstein 2000, Schneider 2011).

이제까지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젠더일탈/중립화”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소득 순위가 가장 낮은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통계수치 조작의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Bavel, Schwartz and Esteve 2018).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어떤 이론이 2016년 대만 부부의 역학에 관련된 것인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가사노동 분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가사 노동의 동등한 분담을 실천하고 있는 부부일수록 둘째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assve et al. 2015).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Torr and Short(2004)는 평등주의적 태도에서 가장 최상위와 최하위 집단의 부부들이 둘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U 자형 패턴을 보였고 보고했다. 둘째 아이 출산 가능성과 관련해 U자형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평등주의적 태도와 관련해 중간 그룹에 속한 부부들의 경우, 결혼생활의 질을 악화시키고 출산 의사에 부정적 역할을 미치는 젠더 역할의 불일치를 조정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의향에 좀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yer, Lappegård and Vignoli 2013).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에서는 남편의 육아 참여가 둘째 아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됐다(Cooke 2004; Cooke 2009; Dommermuth, Hohmann-Marriott and Lappegård 2017; Miettinen, Lainiala and Rotkirch 2015; Oláh 2003; Pinnelli and Fiori 2008).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남편이 육아가 아닌 다른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경우, 아내의 둘째 아이 출산의향은 높아지지 않았다(Miettinen, Lainiala and Rotkirch 2015; Schober 2013).

부부 간 가사노동 분담이 향후 출산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의 다수의 데이터세트들은 근본적으로 단면적인 정보인 경우가 많으며, 다수의 여성 혹은 부부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의 출산의사는 향후 출산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됐다. 실제로 출산율 관련 연구에서 출산의사를 연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Ajzen and Fishbein (1980)가 제안한 합리적 행위 이론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산의사는 개인의 실제 행위를 예측해볼 수 있는 상당히

믿을 만한 지표로 간주된다(Rindfuss, Morgan and Swicegood 1988; Schoen et al. 1999; Westoff and Ryder 1977). 이는 여성의 임신이 합리적이며 의도된 결정인 경우가 많고, 출산의사가 확고할수록 향후 실제로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Schoen et al. 1999).

가. 동아시아 사례

유럽과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의 경우,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해서 진행된 기존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 직장생활을 하는 아시아 여성들은 선진국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2교대 근무”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한 패턴이 시간 추이에 따라 얼마나 변화를 겪었는지 혹은 과거와 비교해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는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Tsuya 외(2000)는 1990년대 중반 일본과 한국의 기혼 여성들 중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첫 아이의 출산 이후 한국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현저히 늘어났지만,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and Cheung 2018).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하는 아내를 둔 일본남성과 한국남성의 경우, 가사노동에 기여하는 시간이 더 길며, 특히, 아내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50시간을 상회할 경우, 가사노동 분담시간이 다른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Tsuya, Bumpass and Choe 2000).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여성들은 여전히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들보다 주당 평균 13배와 4배에 달하는 시간을 가사노동에 더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Tsuya, Bumpass and Choe 2000). 중국의 경우, 일일 가사노동에 투입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기혼 여성들은 기혼남성들에 비해 2.7배 이상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17).

대만의 경우, “대만 시간사용 설문 조사 (Taiwan Time Use Survey 1987, 1990, 1994)”와 “대만 사회동향 조사 (2000)”에 따르면, 1987년 기혼 여성과 이성 동거인과 거주 중인 여성이 가사노동에 투입한 총시간은 그들의 남편 혹은 남성 동거인에 비해 약 13배 이상 더 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00년 5.5배로 하락했다(Hsiao 2005). 또한 1990년대 중반에 실시된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한 데에는 여성의 고등교육 능력, 소득능력 (Hsiao 2005), 직장에서의 직위 (Hu and Kamo 2007)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 정도가 높고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게 비해 가사노동에 기여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가정 내에서 상대적 소득 우위를 가진 남성은 소득이 낮은 남성들에 비해 가사노동 기여 정도가 낮다(Hsiao 2005, Hu and Kamo 2007).

남편의 가사노동 기여 정도와 아내의 출산의향 간의 관계를 분석한 동아시아 연구에서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됐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남편의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기여 정도가 아내의 추가 출산 의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해당 모델에 중요 공변인으로 기출생아수(parity status)를 누락한 결과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Yang 2017). 반면 한국의 경우, 남편의 가사 지원이 아내의 출산의향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7).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맞벌이 부부(Nagase and Brinton 2017)의 경우,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가 아내의 추가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일부 연구 결과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가사 노동과 육아에 투입한 시간을 따로 분리해서 조사하지 않았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여성의 추가출산 의사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육아 참여가 여성의 출산 의사에 각각 어떻게 달리 작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공변량

여성의 출산 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사회/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부부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없는 부부는 상속자를 갖기 위해 추가 출산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대만, 중국, 홍콩, 베트남, 한국(Guilmoto 2012; Jiang, Li and Sánchez-Barricarte 2016; Lin 2009)과 같은 유교문화의 영향권에 속한 아시아 국가나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Khan and Sirageldin 1977; Lin and Adserà 2013)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대만 부모 코호트의 경우, 자녀의 성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Lin 2009). 그러나 이와 달리, 최근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적어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Cheng and Yang 2016). 따라서 무남독녀를 둔 대만 부부들이 아들을 둔 부부보다 추가 출산을 희망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 혹은 출산과 관련해서 배우자의 연령 패턴에 대한 연구는 부부의 다른 특성들에 관한 연구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아왔다. 과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환경이 다른 다수의 국가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부부가 동갑이나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부부에 비해 다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았다(Bereczkei, Csanaky 1996, Fieder and Huber 2007). 스웨덴에서는 6살 어린 여성과 사는 남성과 자신보다 4살정도 많은 남성과 사는 여성들이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Fieder and Huber 2007). 헝가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어린 부부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은 경향이 있었다(Bereczkei and Csanaky 1996).

연령 이외에도 교육정도가 유사한 부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20-30년 간, 교육수준이 비슷한 부부가 증가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ber and Fieder 2016). 뿐만 아니라, 부부의 교육수준이 비슷한 경우, 부부 간 학력 차이가 있는 부부(남편의 학력이 더 높거나, 반대로 아내의 학력이 남편보다 높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경향이 있다(Krzyżanowska and Mascie-Taylor 2014, Nitsche et al., 2018, Tsou, Liu and Hammitt 2011).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수준이 비슷한 부부의 경우, 교육 정도에 격차가 있는 부부들에 비해,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고 출산에 대한 생각도 비슷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유럽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고등 교육을 받은 부부들이 교육수준이 다른 부부들과 비교했을 때(남편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아내의 교육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경우에 비해) 가장 많은 자녀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itsche et al., 2018).

마지막으로, 부부 간의 가사노동 분담 여부가 출산아동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가사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기여도와 경제활동 참여의 적극성 정도 또한 여성이 가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가사노동의 분량과 비중에 영향을 미친다(Brines 1994, Gupta 2006, Schneider 2011). 대체적으로 상기 언급한 선행 연구들은 남아선호, 연령, 부부의 교육정도 차이, 더불어 가계총소득에서 부인의 소득

이 차지하는 비중 및 직장생활에 투입되는 시간 등이 출산의향을 조사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5. 연구설계

가. 데이터

본 연구는 “2016 년 여성 결혼, 출산 및 고용 (WMFE)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WMFE 데이터는 대만의 15세 이상 여성의 전국 대표표본을 수집하여 실시한 횡단면 조사이다. 1979 년 처음 실시된 이래 이 WMFE 조사는 매년 (1979 년-1988 년 1년 주기) 또는 불규칙한 간격으로 (1990 년 이후 대체로 3 년 또는 4 년 주기) 실시돼, 총 18회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6 년의 전체 표본 크기는 27,634명이며, 조사 응답자 중 14,788명이 기혼 여성이다.

1993년 조사부터 설문에 참여한 여성들은 3-4 가지 유형의 가사(보육, 가사일, 노인 간병, 다른 가족을 돌보기 등) 노동에 투입한 총 시간을 묻는 질문에 답변했다. 2016년 설문조사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이 답변한 각각의 가사노동 항목에 대한 남편의 답변도 포함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연구는 부부의 가사 노동 분담과 출산 의향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16년에 아내가 재생산 연령(15세-49세)에 해당하는 기혼부부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6,037건의 관찰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남편의 가사 및 양육 분담이 아내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표본의 범위를 18세 미만의 자녀 한 명 이상 또는 자녀를 최소 한 명을 둔 부부로 제한했다. 그 결과 최종 분석 표본의 크기는 총 4,641건이다. 이 중 남편의 인구학적 특징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382건), 육아와 관련한 부부의 노동분담에 대한 유효한 정보가 없는 경우(695건)가 제외되어 최종 분석 표본은 총 3,564쌍으로 이루어진다. 추가 분석에 따르면 표본에서 제외된 부부들은 최종 분석 표본에 포함된 부부들보다 교육수준이 낮거나 나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나. 변수 및 측정

여성의 출산의사에 관해서는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둘 계획이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모든 피면담자(interviewee)는 본인 혹은 남편이 더 낳기를 원하는 딸이나 아들의 수를 답변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낳은 출산아수와 무관하게,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출산의사를 갖게 하는 동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소 한 자녀 이상을 원하는 경우와 그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출산을 할 것인지에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여성의 의도 뒤에 있는 원동력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을 더 낳고 싶은 경우(1로 코드화)와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경우(0으로 코드화)로 이루어진 이분변수를 생성했다.

주요 설명 변수와 관련하여, 아내의 일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한 응답자가 제시한 질문 한 세트에 이루어져 있다. 질문 한 세트는 총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1) 총 육아시간 (2) 총 가사노동 시간 (3) 노인 봉양 (4) 다른 친척 돌봄. 남편 가사노동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육아에서 남편이 부담하는 몫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했다. 이를 위해, 남편이 보고한 육아시간을 부부의 총 육아시간 합으로 나누었다.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과 나머지 두 가지 돌봄 업무에 투입된 시간과 관련해 동일한 산출방식을 나머지 두개의 변수에 적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여러 공변인을 사용했다. 첫째, 부부의 출산아수를 1명부터 4명 이상까지로 특정했다. 둘째, 연령은 15-24, 25-29, 30-34, 35-39, 40-44, and 45-49와 같이 5살 간격으로 통제했다. 여성의 최종교육과정이 고등교육(제3차 교육)인 경우 (1로 코드화)와 그렇지 않은 경우(0으로 코드화)를 의미하는 이분변수도 생성했다.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부의 연령 차이와 교육 격차에 관한 두 가지의 추가 변수도 포함시켰다. 배우자의 연령 차이에 대한 정보는 1년 이내, 남편이 2세-5세 많은 경우, 남편이 6세 이상 많은 경우, 또는 부인이 2세 이상 많은 경우,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부부의 교육수준 차이 역시 4개 범주로 분류했다. 배우자의 교육 정도가 같은 경우, 남편이 부인보다 교육 정도가 1레벨 위인 경우, 남편이 부인보다 최소 2레벨 이상 높은 경우, 그리고 부인이 남편보다 교육 정도가 1레벨 위인 경우, 부인이 남편보다 최소 2레벨 이상 높은 경우 등으로 분류했다. 유교문화나 부계문화에서 지배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요인

으로 작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현재 자녀의 성별을 가리키는 변수도 포함시켰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남아선호 사상이 여성의 추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Basten and Verropoulou 2015, Thornton and Lin 1994). 마지막으로, 가족 내 여성의 상대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통제변수를 추가시켰다. (1) 부부의 월 총소득에서 아내 기여도(백분율로 표기), (2) 부부의 주간 총 노동시간 중 아내의 비중을 포함시켰다.⁴²⁾ 두 변수 모두 0에서 100사이의 값을 갖는다.

다. 분석전략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를 제시하고,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부부의 특성과 가사노동 분담을 분석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출산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성향 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기법에 기초한 반사실적 분석을 활용해서 가사노동 비중이 낮고, 육아부분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는 아내의 경우, 출산의사가 더 높은지 여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횡단면분석에서는 두 가지 편향요인이 회귀추정치를 왜곡시키고,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PSM 기법을 활용했다. 첫 번째 편향요인은 횡단면 인과관계 분석의 자기선택 편향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1단계 모델에서 아내가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길거나 부부의 총소득에서 여성의 소득 비중이 더 클 경우, 남편이 가사일 분담에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변수들은 가사 노동에 적극적인 남편을 둔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에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변수들과 정확히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두 번째 편향요인은 바로 “차원의 저주”로, 다차원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다차원성의 문제는 조건부 독립가정(conditional

42) 연구자들은 당초 시험모델에서 여성의 고용 상태를 통제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출산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모델에 이와 같은 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중공선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가계소득 ($\rho X, Y=0.86$)중 여성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총 노동시간에서 아내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변수 ($\rho X, Y=0.69$)와 관련이 있다. 또한 우도비 검정의 결과는 변수를 예측 변수로 추가해도 모델 적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음을 보여준다(카이 제곱과 관련된 p- 값은 0.80 이상으로 높았다). 가족 내에서 여성의 상대적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두 변수가 이론적으로 더 유의하다는 판단 하에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 모형에서 여성의 고용 상태를 제외시켰다.

independence assumption)에 회귀추정에 동시에 많은 변수를 포함시킬 때 발생한다. 이러한 차원의 저주는 본 연구에 제시된 모형 속에 포함된 연구대상들 간 빈약하고 상이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남편의 가사일 분담이 아내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반사실적 분석의 틀에서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활용했다. Rosenbaum and Rubin(1983)에 따르면 1 차원 성향점수는 개인이 “처치”에 관여할 확률을 예측하는 일련의 관찰된 공변인에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추정값을 적용해 의사무작위 실험데이터 세트를 수립한다. 이 데이터세트 내에서 처치가 된 모든 사례들과 처치 전 성격이 유사한 하나의 통제된 사례(혹은 하나의 사례 집단)를 매칭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매칭과정을 적용하여 “처치” 효과를 추정할 경우, 대체적으로 자기선택 편향과 최소자승의 추정값에서 파생된 다차원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McKenzie et al. 2010).

6. 분석결과

[표 1]은 부부 3,564 쌍으로 이루어진 표본의 특성을 개괄하여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이미 최소 한 자녀를 둔 부부 중 약 13%가 향후 자녀를 더 출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출생아수 1인 부부로 표본을 더욱 제한해보면, 약 37%가 최소 한 명의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결과는 표시되지 않음). 가사 노동, 육아, 노인 봉양 및 기타 가족 구성원 돌보는 일을 포함하여 기혼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6.2 시간이었다. 가사일과 육아에 투입한 총시간 중에서 기혼남성의 비중은 평균 21.7%이며, 가사일의 비중(21.8%)이 육아의 비중(20.9%)보다 다소 높다. 이들 기혼 남녀 중 84%가 출산아수가 한 명 혹은 두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40세 미만이었으며, 48.5%는 고등 교육을 받았다. 이들 중에서 부부 약 3분의 1이 동갑이었으며, 여성의 나이가 더 많은 부부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5.9%). 조사에 참여한 부부 중 3분의 4가 이미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다. 교육정도와 관련해서는 부부의 절반 이상이 교육수준이 동등했으며, 남편이 아내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26.3%로 그 반대의 경우(21.5%)보다 다소 많았다. 이들 부부의 평균총소득에서 여성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7.8%였다. 이 여성들의 노동시간은 남편이 직장에서 보내는 총

근로시간의 약 35%를 차지했다.

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2]에서 기본 모델 (모델1, 모델3, 모델5)의 결과는 다자녀 출산과 두 가지 유형의 가사노동에서 남편이 차지하는 비중 간에는 부정적인 연관성이 나타났다. 반면에 아내의 나이는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에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의 경우, 30세—34세 여성들에 비해 남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도움을 덜 받았다. 부부의 나이 차이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단 한가지 예외는 아내에 비해 남편의 나이가 훨씬 많은 경우, 남편이 육아를 담당하는 시간이 동갑내기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나. 가사노동의 균등한 분배와 출산의사

[표 3]은 남편의 가사노동 기여도와 여성 출산의사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일련의 로짓회귀모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아내의 가사 노동량과 남편의 가사분담이 출산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부부의 기본 특성(출산아수, 자녀의 성별, 아내의 연령 및 교육정도, 부부의 나이 차이 및 교육 정도, 아내의 소득 및 총노동시간)을 통제된 모델 1의 결과는 아내의 총가사노동 시간과 출산의사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43)

다음으로는 부부의 총 가사노동 시간에서 남편이 차지하는 비중(가사일과 보육 시간의 합)이 여성의 출산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모델 1).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교육수준, 소득기여, 노동시간 분담) 통제한 후,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으로 유의미해졌다. 반면 아내의 교육 정도는 추가출산을 가늠할

43) 교란효과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단계별 강건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출산아수 및 연령, 모든 기본 제어 변수 (모델 미장착) 만 통제된 검정모델의 적합성을 평가다. 우도비 (likelihood-ratio) 검정의 결과는 각 후속 모델 (평가 모델에서 모델 1, 모델 2 및 모델 3)이 이전 모델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모든 모델에서 여성의 총노동시간과 출산의사 간의 관계는 상당히 긍정적이며, 교차비는 1.07에서 1.14 사이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대만 여성들이 추가로 자녀를 원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 있는 중요한 예측인자였다(모델2). 이러한 변화는 아내의 사회경제적 지위, 특히 교육 수준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아내의 추가 출산의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2]의 이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3차 교육(고등교육) 여부가 가사노동에서의 남편의 상대적 기여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남편과 관련해 사전 예측에 기반한 선택을 남편의 가사일 분담의 특정한 패턴에 포함시키면 가사노동 분담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미치는 영향이 고등교육을 받은 아내가 있는 부부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부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모델3에는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이 포함되어 있다.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관찰되어 고등 교육을 받은 아내의 경우 남편의 가사지원이 늘어나면서 향후 추가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교육을 덜 받은 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가사일 기여도 증가가 추가출산에 미치는 최종결과는 부정적이었다.

가사일의 균등한 분담이 출산의사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가사노동 항목에 따라 다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모델 4-6)과 양육분담(모델 7-9)을 기반으로 여성의 추가출산 의향을 소급해서 추론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육아 보조는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모델 7-9), 추가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델9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아내의 추가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일의 분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이외에도, 본 연구에 제시된 모델들을 통해 검증된 기타 공변인들도 여성의 추가출산 의향에 몇 가지 흥미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발견됐다. 첫째, 대만여성의 출산 결정에 남아선호 사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 3]의 모든 모델에서, 아들이 없는 여성들 사이에서 추가 출산을 바라는 상대적 가능성은 이미 아들을 둔 여성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다. 둘째, 출산아수를 통제했을 때, 여성의 나이가 많이 질수록 추가출산 의향이 더 낮았다. 30세 미만 여성들이 30세-34세 연령대의 여성들보다 추가 출산의향이 세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우자의 연령차이는 여성의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동갑 부부와 비교했을 때,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경우 추가 출산에 대한 의향이 더 낮았다. 반면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 추가 출산 의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넷째, 교육수준에 차이가 나는 부부, 특히 남편의 교육정도가 아내에 비해 2 단계 이상 높은 경우, 추가 출산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총 노동시간에서 여성의 노동시간 비중이 더 큰 경우, 추가 출산의향이 더 높았다. 예를 들어, 총노동시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추가 출산을 원하는 상대적 가능성은 0.9%씩 증가했다.

다. 남편의 도움이 그래도 중요하다

부부 특성과 가족 내에서 여성의 상대적 경제적 지위를 비롯한 교란변수를 통제한 후, 2단계 모델에서 도출한 결과는 남편의 가사일 기여도, 특히 양육항목에서의 남편의 기여 정도가 여성의 추가 출산의사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횡단면분석으로 인한 편향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이용해 추가분석을 수행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의사무작위 실험 데이터 세트를 수립하기 위해, “양육에 투입된 총시간 중 5분의 1(20%이상) 이상을 부담하는 남편”을 처리로 개념화하고, 여성의 추가 출산 의사 제고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다. 여성의 출산의사 제고는 이러한 처치와 가사일에 도움을 주는 남편을 둔 여성의 특징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 임계값은 20%로 설정했는데, 이는 표본 중 절반(50.7%)정도가 남편들이 집에서 육아에 투입하는 시간이 임계값 이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표3]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는 주로 다른 가사일 보다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남편의 도움에서 주로 기인하기 때문이다.

[표 2]의 모형에 사용된 틀과 유사한 틀에 기반해 본 연구의 성향점수 분석은 가사노동의 공평한 분담을 촉진할 수 있는 특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여성의 연령대, 배우자와 연령 차이, 교육수준, 배우자와 교육수준 격차, 부부의 총노동시간에 대한 상대적 비중, 총 부부소득의 상대적 비중을 중심으로 여성 응답자들을 비교 분석했다. [표3]의 결과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들 사이에서 남편의 가사일 분담에 대한 출산의향에 대한 응답에서 상이한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사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남편이라는 처치효과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에게 각

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했다. 초저출산율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자녀 출산에 대한 여성의 출산의향 감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출산아수별로도 그 영향을 평가했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 과정에서 커널매칭 기법을 적용했다.⁴⁴⁾ 이 섹션의 모든 계산과 균형시험은 Stata 13에서 Leuven and Sianesi(2003)이 사용한 “psmatch2”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행됐다. 처치된(ATT)의 평균 처치효과는 [표 4]에 제시되어있다. 모든 패리티 그룹의 여성들을 고려한 첫 번째 패널(부부 전원)을 분석한 결과는 남편의 도움이 아내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ATT=0.0133, S.E. =0.0123). 그러나 각기 다른 응답자들에게 남편의 도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을 때, 출산아수가 1명인 여성들에게는 남편의 가사일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ATT=0.0493, S.E.=0.0345), 출산아수가 2명 이상인 여성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ATT= -0.0049, S.E.=0.0071). 이는 남편의 육아보조가 둘째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아내의 출산의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사를 자극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패널의 결과는 남편의 육아 보조 여부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의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우, 남편의 육아보조가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단, 기출산아수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기출산아수가 1명인 여성에 한해서만 그러한 영향이 확인됐다. 이러한 성향점수매칭 기법의 결과는 [표 3]의 로짓회귀 모델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남편의 육아지원이 아내의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여성의 기존 출산아수와 교육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7. 결론 및 논의

다수의 연구가 가정과 일을 둘 다 잘 할 수 없는 여성의 역할 문제를 다수의 초저출

44) 커널매칭 기법을 사용하여 모든 처치된 모든 관측치를 처치된 관측치와 대조군의 성향 점수 간 거리에 반비례한 가중치를 가진 모든 대조군의 가중 평균과 일치시켰다. 예비 시험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 일치, 반지름 일치,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한 캘리퍼 일치를 포함한 다른 일치 방법과의 일치 프로세스도 실시했다(NN-1, NN-5, NN-10). 예비 밸런스 테스트에 따르면 커널 매칭 방법은 각 사양 블록에서 가장 낮은 편향을 가지고 있었으며(표준편차는 공변인 전체에 걸쳐 0.9-2.3 범위) 발생 추정치의 표준 오차는 다른 일치 절차에서 발생한 것보다 유의하게 높지는 않았다.

산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이 어려운 중요 요인 중 하나로 다뤄왔다 (Brewster and Rindfuss 2000). 그러나 가사노동의 분담 관련해 이러한 문제를 연구 주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본 연구는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을 늘리는 요인들과 남성의 늘어난 가사노동 참여가 각기 다른 패리티에 속한 여성들의 추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사회/인구 통계적 특성에서 배우자의 특성 및 가사노동 분담을 고찰할 경우, 서로 다른 출산 결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부부 간의 역할을 어렵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가사일과 육아 모두에서 남편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총소득이나 총노동 시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면,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상대적 시간은 줄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경향은 75% 임계값에 도달한 후 다소 증가한다. 그러한 상관관계 연계가 “젠더일탈 중립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수준별로 그러한 패턴을 면밀히 살펴보면 또 다른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다. 다시 말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대신, 가족 내에서 여성의 소득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의 소득비중이 증가하면서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한편,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 증가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미미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교환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경제교환이론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대적 향상은 대체적으로 가사노동의 보다 균등한 분담으로 이어진다(Brines 1994, Greenstein 000, Gupta 2006, Schneider 2011).

출산의사와 관련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의 분담이 여성의 출산의사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가사일이 아닌 육아에서 남편의 참여율이 높은 경우에만 국한한다. 이는 집중 케어가 필요한 신생아를 둔 부부의 경우, 육아를 부부가 공평하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좀 더 전통적인 성역할이 존재하는 유럽에서 수행된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Cooke 2004, Cooke 2009). 또한, 남편의 육아 지원은 일과 가정에서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육아가 혼자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추가 출산할 의향이 높아지고, 나아가 다자녀가구가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이 결과는 남편의 높은 육아 참여가 직업여성의

출산의사 제고에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Miettinen, Lainiala and Rotkirch 2015, Pinnelli and Fiori 2008).

마지막으로, 반사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육아보조는 아내의 출산의사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출산아수가 1명인 부부에게만 국한해서 나타나며,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핀란드와 이탈리아 (Miettinen, Lainiala and Rotkirch 2015, Pinnelli and Fiori 2008)와 같은 대다수 저출산국가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더불어 대만의 경우, 남편의 육아 참여가 아내의 출산의사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특히 남편과 공동육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 사이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의 출산의사 제고에는 가사노동 분담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교육 정도가 낮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 상황에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과 재정지원이 결합된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들의 기타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일부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추가출산 의사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식을 덜 낳은 이유가 남편의 나이가 많다(Tsou, Liu and Hammitt 2011)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고 밝힌 Tsou 외(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것은 남성의 나이가 여성보다 많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여성이 내국인(대만인)인 부부보다는 외국인인 부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Yang et al., 2012). 실제로 (논문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분석에 따르면, 남편의 나이가 6세 이상 많은 부부들 중 아내가 외국인인 부부의 비중이 25%인데 반해, 나이가 동갑이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아내가 외국인인 부부의 비중은 불과 1%에서 3%에 불과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나이가 훨씬 많은 대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또래 연령의 대만남성과 결혼한 여성에 비해 출산의향이 훨씬 낮았다.⁴⁵⁾ 이와는 반대

45) 외국인 배우자의 생활 조건 조사(Survey of Life Conditions among Foreign Spouses)에 따르면 대만인과 결혼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의 대다수의 외국인 아내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갖고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성들과 결혼했다. 이후 결혼 생활은 차별과 가정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추가 출산의사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만여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추가 출산의사도 낮았다.

로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대만인 부부의 경우, 출산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유럽에서 실시된 Nitsche외(201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다. 2018년 유럽연구는 고등 교육을 받은 남성과 교육 수준이 낮은 아내가 결혼한 경우, 둘째를 출산한 경우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와 유럽의 연구 결과가 상반된 이유는 대만에서는 남성의 나이가 여성의 나이보다 더 많은 부부가 여전히 일반적인 결혼의 연령 매칭 패턴이며, 아내에 비해 남편의 교육수준이 더 높을 경우, 수입도 더 많고 집안일을 분담하는 경우도 더 많기 때문이다. 남편의 수입이 많고 집안일 기여도가 높은 경우 여성의 출산의사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변수는 출산을 제고로 이어지는 여성의 추가 출산의사이며, 이들의 답변은 여성 본인들의 바람일뿐 아니라 남편의 태도를 지켜본 후 타협차원에서 내린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즉, 자녀 출산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여성의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결과 추가 출산과 관련해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이 훨씬 강화가 되고, 반대로 부부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여성의 추가 출산의사는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들 사이에서 관찰된 높은 추가 출산의사는 남편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러한 여성들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평등주의적 성역할에 대한 사고를 갖고 있는 남성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평등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남성들이 다자녀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Puur 외 2008).

본 연구는 여러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WMFE 조사의 횡단면 실험설계를 고려할 때, 가사노동의 분업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만을 조사할 수 있다. 좀 더 이상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가족수의 반복적 측정과 부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포함된 패널연구를 통해 실제 출산아수를 분석하는 것이 좋다. 횡단면 자료 활용이 갖는 또 다른 한계점은 본 연구의 모델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아내의 추가출산의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데에 있다. PSM으로 준실험적 설계를 수행하여 관찰된 편향의 자료를 찾아냈지만, 본 연구의 결과들로는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분명한 인과관계의 추론을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종적연구 데이터를 통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아내의 추가출산을 제고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가사노동에 투입된 시간이 설문항목에 포함되지

시작한 것은 2016 년의 WMFE 조사부터였다. 이러한 자료가 과거설문의 분석에 포함 이 되었다면, 현재의 데이터만으로는 불가능한, 시간 경과에 따른 행동변화 고찰이 또 다른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최근 연구들의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 예상보다는 좀 더 낙관적인 인구 통계적 미래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하나 인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추가출산의사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보다 더 강하 며,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가사일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추가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 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내무부 1975-1616),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여 성들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Cheng 2014)을 감안할 때, 향후 결혼과 출산 을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적 역할 이 변화하면서 사회와 남성들의 태도도 그에 따라 변화할 때,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상 승할 수 있을 것이다(Esping-Andersen 2016).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선진국에서 도 이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assve, A., G. Fuochi and L. Mencarini. 2014. "Desperate Housework: Relative Resources, Time Availability, Economic Dependency, and Gender Ideology across Europe." *Journal of Family Issues* 35(8):1000-22.
- Aassve, Arnstein, Giulia Fuochi, Letizia Mencarini and Daria Mendola. 2015. "What Is Your Couple Type? Gender Ideology, Housework-Sharing, and Babies." *Demographic Research* 32:835-58.
- Ajzen, Icek and Martin Fishbein.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ur."
- Anderson, Thomas and Hans-Peter Kohler. 2015. "Low Fertility,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Gender Equ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3): 381-407.
- Basten, Stuart and Georgia Verropoulou. 2015. "A Re-Interpretation of the 'Two-Child Norm' in Post-Transitional Demographic Systems: Fertility Intentions

- in Taiwan.” PloS one 10(8):e0135105.
- Bavel, Jan Van, Christine R. Schwartz and Albert Esteve. 2018. “The Reversal of the Gender Gap in Education and Its Consequences for Family Life.” *Annual Review of Sociology* 44(1):341-60.
- Berezkei, Tamas and Andras Csanaky. 1996. “Mate Choice, Marital Success, and Reproduction in a Modern Society.”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17(1): 17-35.
- Bittman, Michael, Paula England, Liana Sayer, Nancy Folbre and George Matheson.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186-214.
- Brewster, Karin L and Ronald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271-96.
- Brines, Julie. 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652-88.
- Cheng, Yen-hsin Alice. 2014. “Changing Partner Choice and Marriage Propensities by Education in Post-Industrial Taiwan, 2000-2010.” *Demographic research* 31:1007-42.
- Cheng, Yen-hsin Alice and Chih-Lan Winnie Yang. 2016. “Continuity and Changes in Attitudes toward Marriage in Taiwan, 1985-2015.” Paper presented at the Taiwan Social Change Survey 30th Anniversary Meeting, Nov. 3-4, 2016, Taipei, Taiwan.
- Cooke, Lynn Prince. 2004.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and Family Outcomes in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1246-59.
- Cooke, Lynn Prince. 2009. “Gender Equity and Fertility in Italy and Spain.” *Journal of Social Policy* 38(1):123-40.
- Dommermuth, Lars, Bryndl Hohmann-Marriott and Trude Lappegård. 2017.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and Childbearing.” *Journal of Family Issues* 38(13):1803-24.
- Esping-Andersen, G østa. 2016. *Families in the 21st Century*. Stockholm, Sweden: SNS förlag.
- Esping-Andersen, Gosta.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Polity*.

- Fieder, Martin and Susanne Huber. 2007. "Parental Age Difference and Offspring Count in Humans." *Biology letters* 3(6):689-91.
- Gjerdingen, Dwenda K and Bruce A Center. 2005. "First-Time Parents' Postpartum Changes in Employment, Childcare, and Housework Responsibil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34(1):103-16.
- Goldscheider, Frances, Eva Bernhardt and Trude Lappegård.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207-39.
- Greenstein, Theodore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322-35. doi: 10.1111/j.1741-3737.2000.00322.x.
- Guilmoto, Christophe Z. 2012. "Son Preference, Sex Selection, and Kinship in Vietnam."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1):31-54.
- Gupta, Sanjiv. 2006. "Her Money, Her Time: Women's Earnings and Their Housework Hours." *Social Science Research* 35(4):975-99. doi: 10.1016/j.ssresearch.2005.07.003.
- Hochschild, Arlie and Anne Machung. 1989. *The Second Shift: Working Families and the Revolution at Home*. London, England: Penguin Books.
- Hsiao, Ying-Ling. 2005.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aiwan: Economic Dependence and Gender." *Taiwanese Journal of Sociology* 34:115-45.
- Hu, Chiung-Yin and Yoshinori Kamo. 2007.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aiwa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8(1):105-24.
- Huber, Susanne and Martin Fieder. 2016. "Worldwide Census Data Reveal Prevalence of Educational Homogamy and Its Effect on Childlessness." *Frontiers in Sociology* 1(10).
- Jiang, Quanbao, Ying Li and Jesús J. Sánchez-Barricarte. 2016. "Fertility Intention, Son Preference, and Second Childbirth: Survey Findings from Shaanxi Province of Chin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5(3):935-53.
- Kan, Man-Yee and Ekaterina Hertog. 2017. "Domestic Division of Labour and Fertility Preference in China,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Demographic Research* 36:557-88.
- Khan, M Ali and Ismail Sirageldin. 1977. "Son Preference and the Demand for

- Additional Children in Pakistan.” *Demography* 14(4):481-95.
- Kim, Erin Hye-Won. 2017. “Division of Domestic Labour and Lowest-Low Fertility in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37:743-68.
- Kim, Erin Hye-Won and Adam Ka-Lok Cheung. 2018. “The Gendered Division of Household Labor over Parenthood Transitions: A Longitudinal Study in South Korea.”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 Kohler, Hans-Peter, Francesco C Billari and José Antonio Orteg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641-80.
- Krzyżanowska, Monika and Nick Mascie-Taylor. 2014. “Educational and Social Class Assortative Mating in Fertile British Couples.” *Annals of human biology* 41(6): 561-67.
- Leuven, Edwin and B Sianesi. 2003. “Psmatch2: Stata Module to Perform Full Mahalanobis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Common Support Graphing, and Covariate Imbalance Testing.” *Statistical Software Components S 432001*.
- Lin, Tin-chi. 2009. “The Decline of Son Preference and Rise of Gender Indifference in Taiwan since 1990.” *Demographic Research* 20:377.
- Lin, Tin-chi and Alicia Adserà. 2013. “Son Preference and Children’s Housework: The Case of India.”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2(4):553-84.
- McDonald, Peter.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427-39.
- Miettinen, Anneli, Lassi Lainiala and Anna Rotkirch. 2015. “Women’s Housework Decreases Fertility: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among Finnish Couples.” *Acta Sociologica* 58(2):139-54.
- Ministry of the Interior. 1975-2016.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1975-2016.” Vol. Taipei, Taiwan: Ministry of the Interior.
- Nagase, Nobuko and Mary C. Brinton. 2017.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and Second Births: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Fertility in Japan.” *Demographic Research* 36:339-70.
- Neyer, Gerda, Trude Lappegård and Daniele Vignoli. 2013.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Which Equality Matter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29(3):245-72.

- Nitsche, Natalie, Anna Matysiak, Jan Van Bavel and Daniele Vignoli. 2018. "Partners' Educational Pairings and Fertility across Europe." *Demography* 55(4):1195-232.
- Oláh, Livia Sz. 2003. "Gendering Fertility: Second Births in Sweden and Hungar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2):171-200. doi: 10.1023/A:1025089031871.
- Pinnelli, Antonella and Francesca Fiori. 2008. "The Influence of Partner Involvement in Fatherhood and Domestic Tasks on Mothers' Fertility Expectations in Italy."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6(2).
- Puur, Allan, Livia Sz. Oláh, Mariam Irene Tazi-Preve and Jürgen Dorbritz. 2008. "Men's Childbearing Desires and Views of the Male Role in Europe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Demographic Research* 19(56):1883-912.
- Raley, Sara, Suzanne M Bianchi and Wendy Wang. 2012. "When Do Fathers Care? Mothers' Economic Contribution and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5):1422-59.
- Rindfuss, Ronald R., S. Philip. Morgan and Gray Swicegood. 1988. *First Births in America: Changes in the Timing of Parenthood*.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neider, Daniel. 2011. "Market Earnings and Household Work: New Tests of Gender Performance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4):845-60. doi: 10.1111/j.1741-3737.2011.00851.x.
- Schober, Pia S. 2013. "Gender Equality and Outsourcing of Domestic Work, Childbearing, and Relationship Stability among British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34(1):25-52.
- Schoen, Robert, Nan Marie Astone, Young J. Kim, Constance A. Nathanson and Jason M. Fields.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3):790-99. doi: 10.2307/353578.
- Thornton, Arland and Hui-Sheng Lin. 1994. *Social Change and the Family in Taiwan*. Chicago,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orr, Berna Miller and Susan E. Short.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109-30.

Tsou, Meng-Wen, Jin-Tan Liu and James K Hammitt. 2011. "Parental Age Difference, Educationally Assortative Mating and Offspring Count: Evidence from a Contemporary Population in Taiwan." *Biology letters* 7:562-66.

Tsuya, Noriko O, Larry L Bumpass and Minja Kim Choe. 2000. "Gender, Employment, and Housework in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9:195-220.

Westoff, Charles F and Norman B Ryder. 1977. "The Predictive Validity of Reproductive Intentions." *Demography* 14(4):431-53.

Yang, Ching-li, I-chi Huang, Hung-jeng Tsai and Hsiang-ping Wang. 2012. "Comparisons of Fertility Rate and Birth Quality between Native and Foreign-Born Women in Taiwan (in Chinese)."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Philosophy* 24(1):83 - 120.

Yang, Juhua. 2017. "Gendered Division of Domestic Work and Willingness to Have More Children in China." *Demographic Research* 37:1949-74.

Yavorsky, Jill E., Claire M. Kamp Dush and Sarah J. Schoppe-Sullivan. 2015. "The Production of Inequality: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3):662-79.

〈표 4-1〉 3.564 부부의 성격에 관한 통계요약

변수		
주요변수		
출산의사 (향후 1자녀 이상을 낳기를 원함)	0.13	(0.33)
아내의 총 가사노동 시간	6.21	(3.59)
남편의 가사일 및 육아 참여	21.68	(14.36)
남편의 가사일 참여	21.78	(18.05)
남편의 육아 참여	20.93	(18.73)
사회/인구학적 공변인		
출산아수		
패리티 1	29.01	
패리티 2	54.52	
패리티 3	14.39	
패리티 4 이상	2.08	

변수		
여성의 나이		
15-24	1.54	
25-29	5.92	
30-34	19.64	
35-39	31.48	
40-44	26.52	
45-49	14.90	
배우자의 나이차이		
1살 미만	32.10	
남편>아내(2~5 살)	38.22	
남편>아내 (6 살 이상)	23.79	
아내>남편(2 살 이상)	5.89	
자녀의 성별		
아들 최소 1명	73.77	
아들 없음	26.23	
아내의 교육수준		
고등교육 받지 않음	51.52	
고등교육	48.48	
배우자의 교육수준 격차		
동일	52.10	
남편>아내 (1 레벨)	20.17	
남편>아내 (2레벨 이상)	6.17	
아내>남편 (1 레벨)	15.54	
아내>남편 (2레벨 이상)	6.00	
아내의 소득 비중	27.82	(26.04)
노동시간 중 아내의 비중	34.66	(27.24)

〈표 4-2〉 가사노동시간 중 남편의 비중에 대한 OLS 회귀모델

	가사일+양육에서 남편의 비중		가사일에서 남편의 비중		양육에서 남편의 비중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출산아수 (준거집단: 패리티1)						
패리티 2	-1.988*** (0.559)	-1.349** (0.511)	-3.180*** (0.704)	-2.555*** (0.676)	-1.423+ (0.729)	-0.804 (0.701)
패리티 3	-3.843*** (0.788)	-1.832* (0.729)	-4.567*** (0.992)	-2.558** (0.964)	-3.556*** (1.028)	-1.531 (1.000)
패리티 4 이상	-4.587** (1.727)	-0.808 (1.585)	-6.645** (2.174)	-3.010 (2.098)	-3.540 (2.252)	0.114 (2.175)

	가사일+양육에서 남편의 비중		가사일에서 남편의 비중		양육에서 남편의 비중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아내의 연령집단 (준거집단: 30-34살)						
15-24	-2.203 (2.006)	0.113 (1.834)	-2.726 (2.525)	-0.533 (2.426)	-2.534 (2.616)	-0.140 (2.515)
25-29	-1.831 (1.127)	-0.468 (1.028)	0.333 (1.419)	1.579 (1.360)	-2.136 (1.470)	-0.801 (1.410)
35-39	0.775 (0.693)	0.335 (0.631)	0.246 (0.872)	-0.129 (0.835)	0.965 (0.903)	0.550 (0.865)
40-44	-0.527 (0.720)	-1.402* (0.658)	-0.423 (0.906)	-1.208 (0.870)	-1.630+ (0.939)	-2.428** (0.902)
45-49	-0.988 (0.833)	-2.408** (0.762)	0.915 (1.048)	-0.253 (1.009)	-3.217** (1.086)	-4.497*** (1.046)
배우자의 나이차이 (준거집단: 1살 미만)						
남편>아내 2-5살 차이	-0.476 (0.575)	0.295 (0.526)	-0.295 (0.724)	0.482 (0.696)	-0.877 (0.750)	-0.122 (0.721)
남편>아내 6살 차이	-0.706 (0.652)	0.818 (0.611)	0.198 (0.820)	1.866* (0.809)	-1.811* (0.850)	-0.217 (0.838)
아내>남편(2살차이)	0.568 (1.077)	1.657+ (0.981)	0.457 (1.355)	1.435 (1.297)	0.899 (1.404)	1.903 (1.345)
고등교육을 받은 아내 (준거집단: 비고등교육 졸업자)		3.575*** (0.487)		4.295*** (0.644)		4.106*** (0.667)
배우자의 교육수준 격차 (준거집단: 동등)						
남편>아내(1 레벨)		-0.374 (0.575)		-0.617 (0.760)		-0.051 (0.788)
남편>아내(2레벨 이상)		1.383 (0.936)		2.253+ (1.238)		2.390+ (1.284)
아내>남편(1 레벨)		-0.896 (0.640)		-0.624 (0.847)		-1.577+ (0.878)
아내>남편(2레벨 이상)		-0.277 (0.981)		-1.245 (1.298)		-0.973 (1.346)
아내의 소득 비중		0.145*** (0.013)		0.128*** (0.018)		0.123*** (0.018)
노동시간 중 아내의 비중		0.081*** (0.013)		0.065*** (0.017)		0.080*** (0.018)
Constant	23.921*** (0.729)	14.510*** (0.800)	24.271*** (0.918)	15.451*** (1.059)	23.781*** (0.951)	14.763*** (1.098)
N	3564	3564	3564	3564	3564	3564
R ²	0.0123	0.184	0.0102	0.0967	0.0130	0.0981

〈표 4-3〉 페리티 1 이상인 여성들의 추가출산사를 예측하는 로지 회귀분석모델의 오즈비

	모델 1	모델 2	모델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8	모델9
아내가 가사일에 투입하는 총시간 (가사+육아+노인봉양 +기타)	1.090*** (0.019)	1.101*** (0.022)	1.102*** (0.022)	1.077*** (0.018)	1.095*** (0.022)	1.094*** (0.022)	1.085*** (0.019)	1.099*** (0.022)	1.102*** (0.022)
(1) 가사+육아 총시간에서 남편의 비중	1.012** (0.005)	1.009+ (0.005)	0.995 (0.008)						
고등교육 졸업자 아내	1.023 (0.009)								
(2) 가사에서 남편의 비중				1.006+ (0.003)	1.003 (0.004)	0.999 (0.006)	1.008* (0.004)	1.005 (0.004)	0.993 (0.006)
(2)* 고등교육 졸업자 아내						1.006 (0.007)			1.021** (0.008)
(3) 육아에서 남편의 비중									
(3)* 고등교육 졸업자 아내									
출산아수(준거집단:페리티 1)									
페리티 2	0.056*** (0.009)	0.056*** (0.009)	0.055*** (0.009)	0.056*** (0.009)	0.056*** (0.009)	0.056*** (0.009)	0.056*** (0.009)	0.055*** (0.009)	0.055*** (0.009)
페리티3	0.036*** (0.014)	0.039*** (0.016)	0.039*** (0.015)	0.036*** (0.014)	0.039*** (0.016)	0.039*** (0.015)	0.036*** (0.014)	0.039*** (0.015)	0.038*** (0.015)
페리티 4이상	0.025*** (0.026)	0.029*** (0.030)	0.027*** (0.028)	0.026*** (0.026)	0.029*** (0.030)	0.028*** (0.029)	0.025*** (0.026)	0.028*** (0.029)	0.027*** (0.028)
아내의 연령집단 (준거집단:30-34세)									
15-24	3.123** (1.135)	3.778*** (1.402)	3.701*** (1.370)	3.189** (1.156)	3.816*** (1.415)	3.793*** (1.408)	3.123** (1.138)	3.774*** (1.403)	3.730*** (1.384)
25-29	3.206*** (0.703)	3.337*** (0.740)	3.299*** (0.732)	3.170*** (0.694)	3.324*** (0.736)	3.323*** (0.737)	3.200*** (0.701)	3.339*** (0.740)	3.296*** (0.731)
35-39	0.550*** (0.086)	0.552*** (0.087)	0.542*** (0.086)	0.551*** (0.086)	0.554*** (0.087)	0.553*** (0.087)	0.549*** (0.086)	0.552*** (0.087)	0.541*** (0.085)
40-44	0.156***	0.152***	0.147***	0.153***	0.150***	0.149***	0.155***	0.152***	0.148***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모델 9
45-49	(0.033) 0.053***	(0.033) 0.052***	(0.032) 0.049***	(0.033) 0.052***	(0.032) 0.051***	(0.032) 0.050***	(0.033) 0.054***	(0.033) 0.052***	(0.032) 0.051***
배우자의 나이 차이 (준거집단: 1살미만)									
남편>아내_2~5살	0.752+ (0.116)	0.781 (0.122)	0.771+ (0.120)	0.757+ (0.117)	0.786 (0.122)	0.785 (0.122)	0.745+ (0.115)	0.779 (0.121)	0.774 (0.121)
남편>아내_6살 이상	0.495*** (0.089)	0.557** (0.103)	0.559*** (0.103)	0.486*** (0.087)	0.554** (0.102)	0.556** (0.103)	0.495*** (0.089)	0.558** (0.103)	0.559** (0.103)
아내>남편_2살 이상	1.265 (0.319)	1.281 (0.325)	1.282 (0.327)	1.269 (0.320)	1.291 (0.328)	1.281 (0.326)	1.266 (0.319)	1.286 (0.326)	1.303 (0.332)
아들 없음Never had a son (준거집단=최소 아들 1명)	2.101*** (0.277)	2.056*** (0.273)	2.079*** (0.277)	2.094*** (0.276)	2.052*** (0.272)	2.060*** (0.274)	2.110*** (0.278)	2.062*** (0.274)	2.083*** (0.277)
고등교육 졸업자 아내 (준거집단:비고등교육자 아내)	1.613*** (0.236)	1.613** (0.236)	0.962 (0.242)	1.640*** (0.240)	1.640*** (0.240)	1.434+ (0.314)	1.631*** (0.238)	1.631*** (0.238)	1.051 (0.231)
배우자 교육수준 격차(준거집단: 동등)	1.613*** (0.236)	1.613** (0.236)	0.962 (0.242)	1.640*** (0.240)	1.640*** (0.240)	1.434+ (0.314)	1.631*** (0.238)	1.631*** (0.238)	1.051 (0.231)
남편>아내 (1 레벨)	1.050 (0.181)	1.050 (0.181)	1.054 (0.182)	1.045 (0.180)	1.045 (0.180)	1.045 (0.180)	1.043 (0.179)	1.043 (0.179)	1.043 (0.180)
남편>아내 (2레벨 이상)	1.692+ (0.476)	1.692+ (0.476)	1.734* (0.487)	1.693+ (0.475)	1.693+ (0.475)	1.705+ (0.479)	1.705+ (0.478)	1.705+ (0.478)	1.739* (0.486)
아내>남편 (1 레벨)	0.895 (0.174)	0.895 (0.174)	0.881 (0.172)	0.881 (0.172)	0.890 (0.172)	0.887 (0.172)	0.894 (0.173)	0.894 (0.173)	0.880 (0.171)
아내>남편 (2레벨 이상)	0.852 (0.220)	0.852 (0.220)	0.867 (0.224)	0.846 (0.218)	0.846 (0.218)	0.854 (0.221)	0.843 (0.218)	0.843 (0.218)	0.852 (0.220)
아내의 소득비중	0.996 (0.004)	0.996 (0.004)	0.995 (0.004)	0.997 (0.004)	0.997 (0.004)	0.997 (0.004)	0.996 (0.004)	0.996 (0.004)	0.996 (0.004)
아내의 노동시간 비중	1.008* (0.004)	1.008* (0.004)	1.009* (0.004)	1.008* (0.004)	1.008* (0.004)	1.008* (0.004)	1.008* (0.004)	1.008* (0.004)	1.009* (0.004)
N	3,564	3,564	3,564	3,564	3,564	3,564	3,564	3,564	3,564
의사 R ²	0.412	0.418	0.420	0.410	0.417	0.418	0.411	0.418	0.420
카이제곱	1132.469	1149.514	1155.917	1128.509	1147.299	1147.979	1130.056	1148.420	1155.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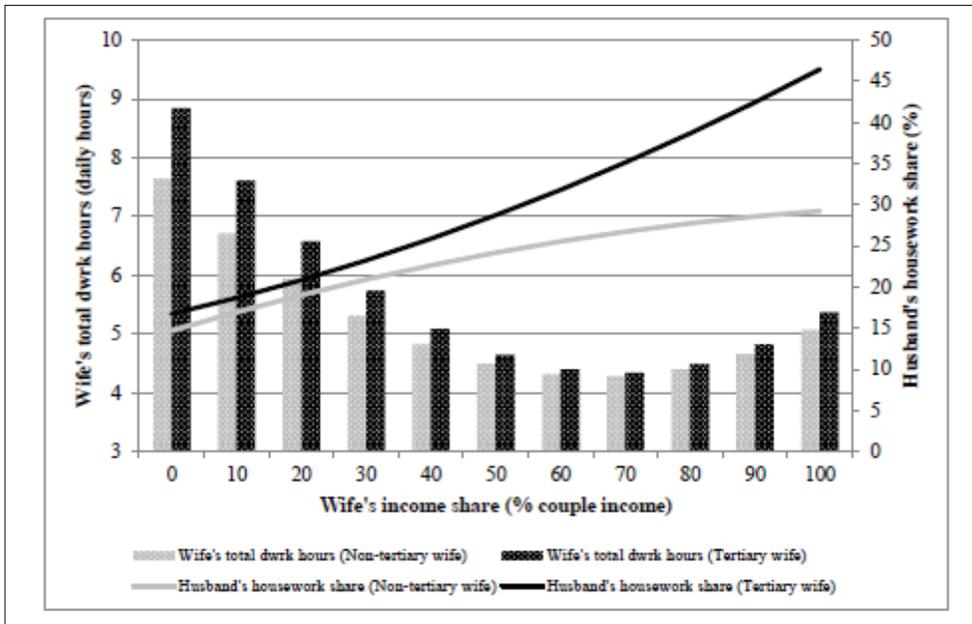
주: 괄호 안 표준오차. 18세 미만의 자녀를 최소 1명 낳고 아내의 연령이 15-49세인 2016 기혼자(누락 데이터가 있는 1,077 사례 제외)

〈표 4-4〉 여성의 자녀출산의사를 결과변수로 처리한 성향점수매칭 모델의 추정치

	관찰됨 (처치됨)	반사실적 (통제)	평균처치효과 (ATT)	표준오차.	Nt/Nc
처치: 육아에 투입된 총시간 중 남편의 비중이 20% 이상					
부부 전체					
패리티 전체	0.1327	0.1194	0.0133	(0.0123)	1,726/1,825
패리티 1	0.3854	0.3361	0.0493*	(0.0345)	519/505
패리티 2 이상	0.0242	0.0291	-0.0049	(0.0071)	1,200/1,321
비고등교육 아내					
패리티 전체	0.0924	0.0878	0.0046	(0.0144)	779/1,046
패리티 1	0.2990	0.2735	0.0255	(0.0479)	194/245
패리티 2 이상	0.0241	0.0239	0.0001	(0.0090)	587/803
고등교육 받은 아내					
패리티 전체	0.1681	0.1522	0.0159	(0.0205)	946/770
패리티 1	0.4424	0.3740	0.0684*	(0.0497)	321/258
패리티 2 이상	0.0245	0.0378	-0.0133	(0.0116)	613/512

주: *p < 0.10; Nt = 처치된 수, Nc = 통제 수치. 결과는 커널 매칭 기법에서 도출된 추정값을 의미한다. 처치된 평균 처치효과(ATT)는 처치군과 대조군의 출산의사를 퍼센티지 포인트로 측정한다.

〔그림 4-1〕 2016 대만 여성의 소득 및 가사노동비중과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



제2절 동아시아의 자녀 양육비와 저출산: 한국, 일본, 대만 및 EU 25개국 비교 연구

Setsuya Fukuda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1. 서론

본 보고서는 국가이전계정(NTA: National Transfer Accounts)의 틀을 사용해 한국, 일본, 대만과 EU 25개국의 자녀양육비를 비교 분석했다. 동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및 대만)는 1980년대 저출산 단계에 도달한 후 2000년대 초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s)이 1.3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아시아는 또한 학력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남녀 모두 3차 교육 등록률이 급증했다(Tan, Morgan, & Zagheni 2016). OECD 교육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자녀 사교육비와 3차 교육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OECD 2018). 출산에 대한 경제이론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원량은 자녀 수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Becker 1960).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자녀양육비, 특히 높은 교육비는 자녀 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⁴⁶⁾ 본 보고서는 NTA의 틀에서 고도로 표준화된 양육비 측도를 사용해 동아시아와 유럽 주요 국가의 직접 양육비 구성요소와 수준을 비교하고 이들 비용과 출산의 국가 간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아래에서는 NTA와 양육비 산출 방법을 설명하고 추정 결과를 소개한다.

2. NTA의 직접 양육비

가. NTA

NTA는 국민들의 연령 그룹별 소득 창출, 소득 재분배, 소비 및 저축 방법을 측정하는 연령별 국가계정시스템이다. NTA 프로젝트는 미국 인구경제학자 로날드 리(Ronald

46) 특히 동아시아는 혼외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3차 교육 확대와 동반자 관계는 이들 지역의 초저출산 원인에 관해 논의할 때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교육과 결혼에 대한 보고서는 Cheng(2014) Fukuda & Raymo(2018). Park 외 (2013)를 참조한다.

Lee)와 앤드류 메이슨(Andrew Mason)이 2004년 경에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세계 94개국 연구원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자국의 NTA를 산출하고 있다.⁴⁷⁾ NTA는 연령별 추정치 집계 시 국가계정시스템(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으로 산출한 기타 흐름값과 국가소득생산계정(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을 일관되게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NTA는 SNA로 측정된 연령별 국가경제분배를 제공하는 SNA의 위성계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NTA의 이러한 특징은 인구연령구조와 거시경제의 연계성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NTA 시스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국가별 및 시간별 데이터 비교가능성이다. 모든 참여 국가는 유엔이 제공한 표준 NTA 방법(유엔 2013)을 사용해 각 NTA 변수를 구성한다. 국가마다 원본 데이터 가용성과 사후 추정 결과를 위한 수정치가 약간 다르지만, NTA 변수 추정치는 국가 간 비교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간주된다. 본 연구는 교육, 의료 및 NTA로 측정된 기타 소비 형태에 대한 연령별 사적 및 공적 지출을 사용해 동아시아와 유럽 주요 국가의 직접 양육비를 계산하고 결과를 비교했다.

NTA 시스템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3년 유엔인구국(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에서 발간한 NTA 매뉴얼(유엔 2013) 또는 AGENTA 프로젝트에서 발간한 유럽국가이전계정(European National Transfer Accounts)(Isteneič et al. 2017)을 참조한다. NTA 연구에 대한 개요는 Lee & Mason (2011) 또는 D'Albis & Moosa (2015)를 참조한다.

나. NTA 데이터

일본 NTA 데이터는 필자를 포함한 NTA 국가팀이 계산했다. 현재 분석에 사용된 일본 NTA 데이터는 아직 수집 중이며 따라서 향후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팀 구성원은 결과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변함없다고 가정한다. 한국과 대만의 NTA는 NTA 글로벌 네트워크 웹사이트(www.ntaccounts.org, accessed 8 October 2018)에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했다. EU 25개국의 NTA 데이터 역시 AGENTA 프로젝트 웹사이트(<http://www.agenta-project.eu/en/dataexplorer.htm>, 2015년 10월 15일 확

47) 이중 한국이 가장 먼저 NTA를 공식 통계로 발표했다. 한국 통계청은 2019년부터 매년 NTA를 업데이트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인합)에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했다. 한국, 일본, 대만의 경우 여러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EU 국가의 AGENTA 데이터는 현재 2010년 자료만 공개되어 있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국가와 기간 목록은 표 3-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5〉 분석 데이터의 국가 및 기간

국가	연도
일본	1999, 2004, 2009, 2014
한국	2000, 2010, 2011, 2012
대만	1993, 1998, 2015
EU 25개국	2010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	

다. 자녀 양육비 측정

이번 장에서는 NTA 접근법에 사용된 양육비를 간략히 정의한다. 아래 설명은 주로 Ogawa 외. (2009) 및 Ogawa, Matsukura, & Lee (2016)의 논문을 참조했다. 첫째, 양육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지만, NTA는 직접 양육비만으로 양육비를 추정한다. 양육 기회비용 및 무급 양육 시간 등과 같은 간접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보고서 결과는 이러한 간접비 누락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

청소년 그리고 특히 미취학 및 학령기 아동은 근로소득을 거의 창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사용하는 소비액은 기본적으로 직접 양육비와 동일하다. 생산가능연령 인구집단의 경우 소비와 근로소득 차이는 연령별 1인당 “적자”이다. NTA에서는 이 연령별 적자를 생애적자(LCD: Life-cycle Deficit)라고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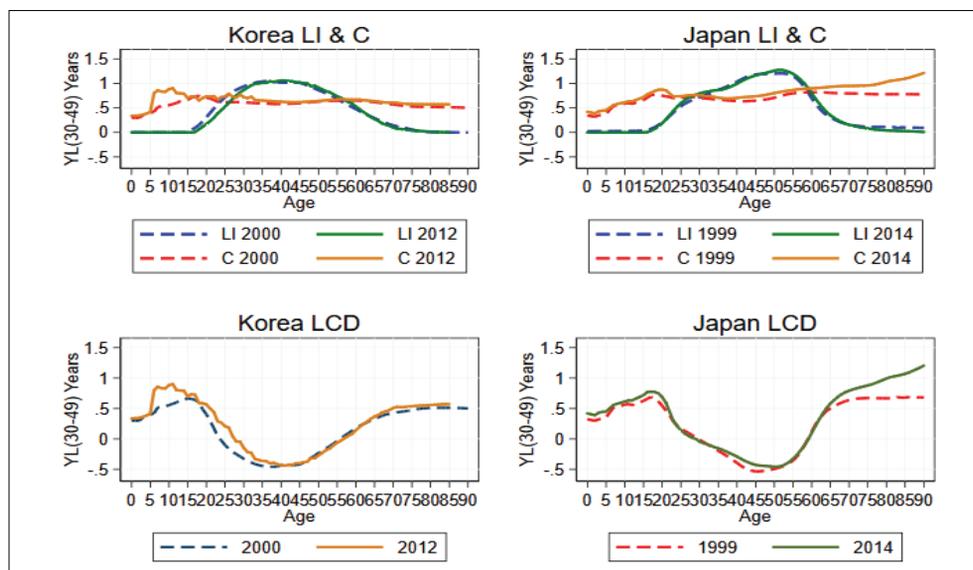
그림 1은 지정된 기간 동안 한국 및 일본의 1인당 근로소득, 소비 및 LCD에 대한 연령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여기서 1인당 근로소득, 소비 및 LCD 값은 핵심생산인구(30-49세)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으로 나눠 정규화한 것이다. 이는 NTA가 소비 및 기타 금전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는 소득 수준을 통제해 국가는 물론 기간별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전통적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산출된 값은 지정된 연령의 소비에 사용된 핵심생산인구의 근로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24에 따르면 2000-2014년 한국의 자녀 1인당 소비지출은 크게 증가했지

만 일본(1999-2014년)은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을 뿐이다. 한국은 6-18세 자녀의 1인당 소비지출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따라서 한국의 자녀 1인당 소비지출 급증은 1인당 교육비 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일본은 노령층의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Ogawa, Matsukura, & Lee (2016)의 NTA 분석에 따르면 노령층의 이러한 소비 증가는 연금, 의료, 장기 요양 등과 같은 공공이전(public transfer)은 물론 자산 배분 또는 자산소득 증가에 기인했다.

적자에 있는 모든 청소년에 대해 연령별 적자를 합산할 경우, 합산 결과는 전체 직접 양육비의 측도이고 NTA는 이를 자녀 LCD라 칭한다. 그러나 여기서 자녀 LCD는 유년기 동안 지정된 해에 각 연령의 연령별 1인당 적자를 경험한 가상 자녀의 전체 직접 양육비를 말한다. 또한 출생 이후부터 경제적 독립 시까지 자녀 양육에 사용된 핵심생산인구의 근로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자녀 LCD를 정규화했다.⁴⁸⁾

[그림 4-2] 연령별로 정규화된 한국(2000년과 2012년)과 일본(1999년과 2014년)의 1인당 근로소득(LI), 소비(C) 및 생애적자(LCD)



자료: 필자 제공

48) Ogawa, Matsukura & Lee (2015)는 이전 연구에서 자녀 LCD 산출 시 유년기의 국가별 사망위험을 고려하기 위해 기간생명표를 사용하여 아동 생존율을 계산했다. 이번 연구는 국가별 사망률 차이를 무시할 수 있는 고소득 국가만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아동 생존율은 관리하지 않았다.

NTA 시스템에서 소비는 사적 및 공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령 그룹의 사적 및 공적 소비는 (1) 교육, (2) 의료, (3) 잔차 등 3개 구성요소로 세분화될 수 있다. 사적 소비는 개인 지출로, 공적 소비는 현금 또는 현물 급여의 정부 지출로 정의된다. 사적 소비의 잔차 요소는 식품, 의류, 주택, 내구소비재, 여가 및 다양한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로, 공적 소비의 잔차 요소는 공무원 임금, 도로 유지보수 및 국방 등에 대한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 소비를 계산할 때는 각 개인의 소비 지분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교육, 의료 및 기타 항목에 대한 연령별 1인당 사적 소비 프로파일은 가계 소득 및 지출을 측정하는 미시적 차원의 국가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추정하고, 1인당 공적 소비에 대한 연령별 프로파일은 교육, 의료, 장기 요양 등에 대해 공개된 정부 데이터를 사용해 추정한다. 모든 연령 프로파일은 각 연령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추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gawa 외(2009) 또는 UN(2013)을 참조한다.

이들 소비 구성요소를 사용해 국가별로 아동 1인당 각 소비 구성요소 비중을 계산할 수 있다. NTA 연구는 벡커(Becker)의 출산 모델(Becker 1960, 1981)에 정의된 대로 자녀 교육 및 의료 지출을 자녀의 질과 관련된 인적자본투자로 간주한다. 벡커의 출산 모델은 자녀의 수와 질 사이에 균형점이 있고 사적 양육비 부담이 높을 경우 부모는 양을 질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연구는 0-24세 자녀 1명당 구성요소별 소비를 사용해 직접 양육비와 출산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러나 여기서 산출한 자녀지출은 구성요소별 자녀 LCD와 거의 일치한다. 자녀 LCD의 각 구성요소는 자녀의 자체 소득과 가계와 정부의 구성요소별 이전(component-specific transfer)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구성요소별 이전을 측정하는 NTA 변수는 일본 데이터와 AGENTA 데이터 계산에서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자녀 교육, 건강 및 기타 항목에 대한 소비를 구성요소별 자녀 LCD의 대용물로 사용했다.

NTA 추정치를 사용한 국가 간 증거는 자녀에 대한 1인당 LCD와 TFR 간은 물론 자녀에 대한 1인당 인적자본지출과 TFR 간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Lee and Mason 2010; Ogawa et al. 2009, Ogawa, Matsukura and Lee 2016). Ogawa, Matsukura, and Lee (2016)는 아시아 7개국(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인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후자의 관계가 전자보다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또한 아시아의 자녀 교육에 사용하는 1인당 사적 지출 수준이 유럽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본에 대한 사적 지출과 TFR은 이들 아시

아 국가에서 음의 관계지만(Ogawa, Matsukura, and Lee 2016) 유럽과 남미 국가에서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Lee and Mason 2010).

라. 출산력 측정

출산력 측정에 대한 이전 연구는 대부분 양육비 상관관계 분석에서 해당 연도 NTA 데이터에 대한 전통적 기간 TFR을 사용했다(Lee and Mason 2011; Ogawa et al. 2009, Ogawa, Matsukura, and Lee 2016). 그러나 양육비에 대한 국가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전통적 TFR을 사용해 출산력을 측정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TFR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기간출산수준에 대한 값이 왜곡된다. 일반적으로 TFR은 출산 시기 변화 또는 일명 속도 효과(Tempo Effect)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된다(e.g., Ryder 1964; Bongaarts and Feeny 1998). TFR은 출산 시기를 연기하는 동안 감소하고 출산 연기 추세가 끝나거나 역전되면 안정화되거나 심지어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속도 효과에 의해 값이 크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NTA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특정 연도의 TFR을 기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부정절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인구통계학자들이 유럽과 동아시아 TFR의 상당 부분이 출산 시기 연기로 인해 감소했다고 확인했다(Frejka, Jones and Sardon 2010; Sobotka 2004).

둘째, 베커의 출산력 모델(결과 해석 시 자주 언급됨)은 양육비와 자녀 수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므로 TFR 사용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된다. TFR은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합계를 나타내므로 연령별 출산율 노출은 생식 관계에 있지 않거나 출산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여성까지 포함한다.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동거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해 속도 조절된 출산율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특히 대규모 국가간 분석의 경우 이들 척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통적 TFR로 인한 편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번 연구는 국가별로 Bongaarts-Feeney의 속도 조절된 TFR(Bongaarts and Feeney 1998)을 사용했다. Bongaarts-Feeney의 틀에서 관찰됐으나 왜곡된 특정 해의 TFR는 동년의 왜곡되지 않은 TFR*과 다음과 같이 관련되어 있다.

$$TFR = (1-r) TFR^* \quad (1)$$

여기서 r 은 해당 연도 기간 평균출산연령의 연간변화율을 나타낸다. TFR^* 은 속도 조정된 합계출산율이다. 즉, t 연도에 평균출산연령이 일정했다면 TFR 이 관찰되었을 것이다. TFR^* 은 TFR 을 $(1-r)$ 로 나눠서 산출한다. 실제로 위 방정식은 출생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출생순서별 TFR^* 을 합산해 모든 출생의 TFR^* 을 산출한다.

전통적 TFR 과 비교해 아직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TFR^* 은 속도 왜곡의 영향이 줄고 특정 기간 핵심가임기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Bongaarts and Sobotka (2012) 참조). 따라서 가능한 경우 이번 연구는 출산력과 양육비의 상관관계 분석 시 해당 연도 NTA 데이터에 대해 국가별로 TFR 의 3년 이동평균 값을 사용했다. 그러나 데이터 가용성 문제로 인해 일부 국가의 경우 대체 척도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유럽국가의 경우 2009-2011년 TFR^* 값을 사용했고 그리스와 불가리아는 2008년 TFR^* 값을 사용한 반면, 독일은 2010-2012년 TFR^* 의 3년 이동평균 값을 사용했다. 또한 벨기에, 키프로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또는 영국은 TFR^* 정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 각 국가에 대해 전통적 TFR 의 3년 이동평균 값을 사용했다.

다음 장에서는 전통적 NTA 접근법으로 산출한 국가별 양육비 결과를 설명하고, 주요 동아시아 및 유럽 국가의 기간 출산 양과 비교해 검토했다.

3. 분석결과

가. 1인당 직접양육비 및 구성요소

첫째, 표 3-19는 국가별 생애잉여(LCS: life-cycle surplus) 단계 진입 및 종료 연령 및 잉여 기간(년)을 보여준다. 생애잉여는 LCD의 반대 개념이다. 따라서 LCS 진입 연령은 생애주기 최초로 지정된 연령에 연령별 근로소득 평균이 연령별 소비 평균을 초과한 시점을 가리킨다. LCS 평균 진입 연령은 3차 교육등록 수준, 청년 실업률, 임금 프로파일은 물론 남녀의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율 차이 등 교육 및 노동 시장 환경에 따라 국가/지역마다 다르다.⁴⁹⁾

49) LCD 계산에 사용된 연령별 근로소득과 소비는 특정 연령의 성별 및 기타 인구 이질성 평균 값이다. 따라서 연령별 인구 구성요소는 각 NTA 변수의 연령 프로파일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21세기 초 한국과 대만의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1998년과 2015년 사이에 2세, 한국의 경우 2000년과 2012년 사이에 4세까지 독립 연령이 높아졌다. 이러한 청년들의 독립 연령 변화는 양국에서 3차 교육이 급격히 증가한 결과로 간주된다. 1999년과 2014년 일본 청년은 평균 30세가 되어야 순생산자로 전환됐다.⁵⁰⁾ 반면 일본은 한국과 대만보다 훨씬 늦게 LCS 단계가 종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CS 단계가 끝나는 연령 간 차이는 각 사회의 퇴직 연령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LCS 단계 기간(년)은 한국 또는 대만보다 일본이 길게 나타났다.

〈표 4-6〉 국가별 생애잉여 단계 진입 및 종료 연령 및 잉여 기간

Country/region		Year	Entry	Exit	Span
Japan	JP	1999	30	59	29
Japan		2014	29	59	30
Korea	KR	2000	24	55	31
Korea		2012	28	56	28
Taiwan	TW	1998	24	54	30
Taiwan		2015	26	55	29
Austria	AT	2010	25	58	33
Belgium	BE	2010	24	58	34
Bulgaria	BG	2010	26	55	29
Cyprus	CY	2010	30	59	29
Czech Republic	CZ	2010	26	56	30
Germany	DE	2010	27	59	32
Denmark	DK	2010	26	61	35
Estonia	EE	2010	25	58	33
Greece	EL	2010	32	54	22
Spain	ES	2010	27	59	32
Finland	FI	2010	27	59	32
France	FR	2010	24	58	34
Hungary	HU	2010	25	57	32
Ireland	IE	2010	28	58	30
Italy	IT	2010	27	58	31
Latvia	LT	2010	29	55	26
Lithuania	LU	2010	25	58	33
Luxembourg	LV	2010	26	57	31
Poland	PL	2010	26	55	29
Portugal	PT	2010	27	57	30
Romania	RO	2010	26	53	27
Sweden	SE	2010	27	63	36
Slovakia	SI	2010	26	57	31
Slovenia	SK	2010	26	55	29
United Kingdom	UK	2010	26	57	31
EU25 Country Avg	EU	2010	27	5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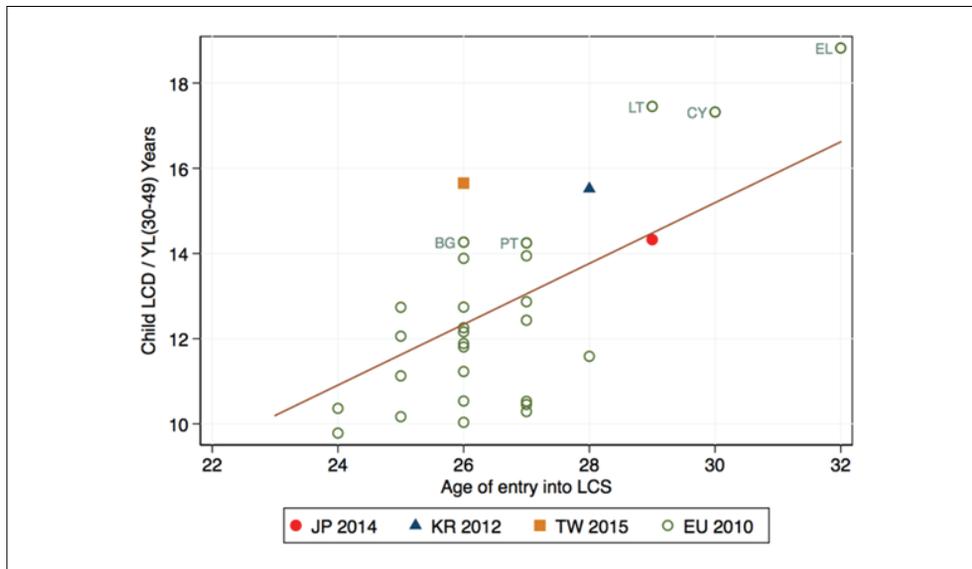
자료: 필자 제공

50) Ogawa, Matsukura, and Lee (2015)의 연구에서 일본의 LCS 진입 연령은 1984년 23세에서 1994년 25세, 2009년 29세로 높아졌다. NTA 데이터 계산에 사용된 SNA 데이터의 버전 차이로 본 연구 데이터와 일부 차이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이들의 연구는 SNA1993을, 본 연구 데이터는 SNA2008을 사용했다. 한국 NTA와 AGENTA NTA 모두 SNA2008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본 데이터를 사용한 전체 분석 결과를 확인했다.

EU 25개국의 생애잉여 단계 진입 및 종료 연령에서는 유의미한 변동이 확인됐다(표 2). EU 국가의 LCS 진입 연령은 벨기에와 프랑스의 24세부터 그리스의 32세까지, LCS 종료 연령은 루마니아 53세부터 스웨덴 63세까지 다양했다. 결과적으로 LCS 기간은 라트비아의 26년부터 스웨덴의 36년까지로 나타났다. 이들 수치는 일반적으로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D'albis and Moosa 2015).

LCS 단계 진입 연령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연수와 같으므로, LCS 단계 진입 연령은 LCS로 측정된 자녀 당 직접비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25는 동아시아 3개국과 EU 25개국별로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의 28개 데이터 포인트를 각 국가/지역의 LCS 단계 진입 연령에 맞춰 표시한 도표이다. 예상했듯이 두 측정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과 대만은 자녀 1인당 LCD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그리스, 리투아니아, 키프로스 등 같은 일부 유럽 국가도 자녀 LCD가 매우 높다.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불가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는 일본만큼 자녀 LCD가 높지만 청년들의 LCD 진입 시기는 일본보다 빠르다.

[그림 4-3] LCS 진입 연령과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의 국가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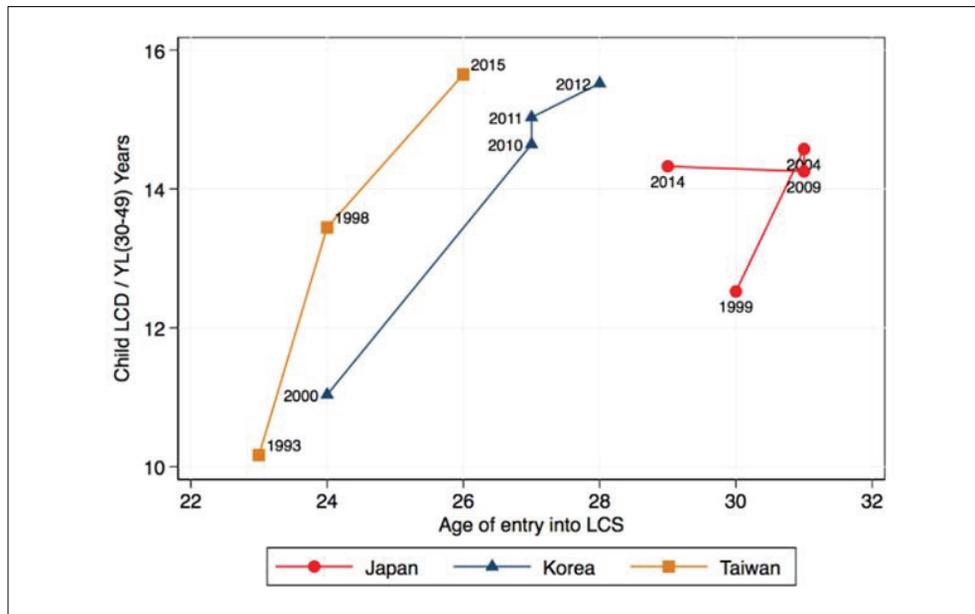


자료: 필자 제공

그림 3-26은 동아시아 3개국의 LCS 단계 진입 연령과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 간 시계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과 대만은 LCS 단계 진입 연령이 높아진 만큼 자녀 LCD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핵심성인 근로소득의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의 경우 대만(1993-2015년)은 5.5년, 한국(2000-2012년)은 4.5년 증가했다. 반면 일본은 1999년-2004년 2.1년 증가한 후 14.3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LCS 단계 진입 평균 연령은 2009년-2014년 사이에 2년 증가한 반면 자녀 LCD는 변함없이 유지됐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남성보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20대 중반과 후반 여성의 근로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음 분석에서는 0-24세 자녀에 대한 연령별 1인당 지출에서 사적 지출과 공적 지출의 구성을 살펴보고 양육비 지출 분배 방식을 조사했다.

[그림 4-4] 동아시아의 LCS 진입 연령과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의 시계열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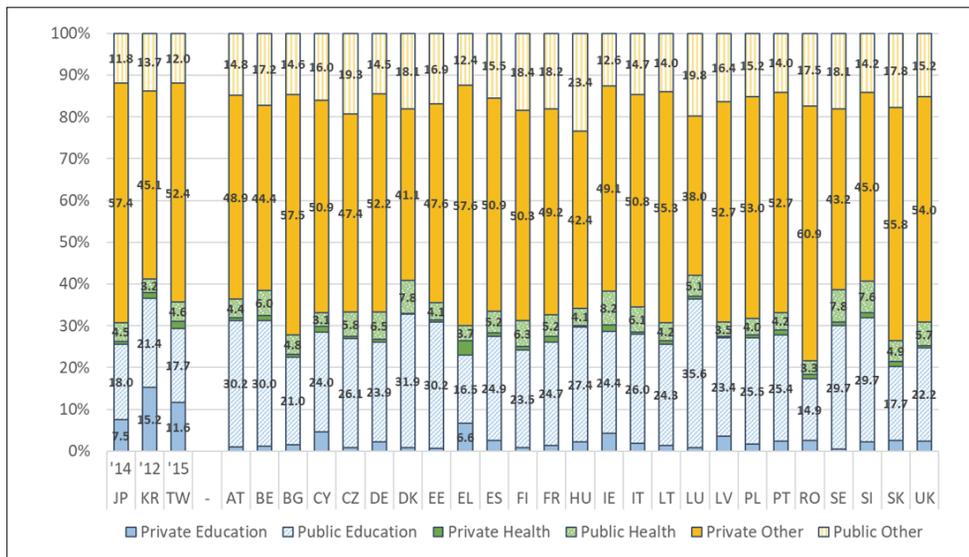


자료: 필자 제공

첫째, 그림 3-27은 0-24세 자녀 양육비의 항목별 구성비를 국가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그래프에 따르면 모든 나라교육과 건강이 아닌 기타 항목의 사적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적 지출의 비중은 38%(룩셈부르크)부터

61%(루마니아)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이론상 인적자본 지출 또는 1인당 교육 및 의료비 지출은 자녀 양육비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사적 및 공적 부분 모두의 인적자본 지출 비중은 동아시아 35.9%, EU 33.6%였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사적 및 공적 지출을 통합할 경우, 교육비가 1인당 인적자본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대상국가 중 한국과 룩셈부르크는 교육비 비중이 각각 36.6%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본과 대만의 교육비 비중은 유럽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단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슬로바키아는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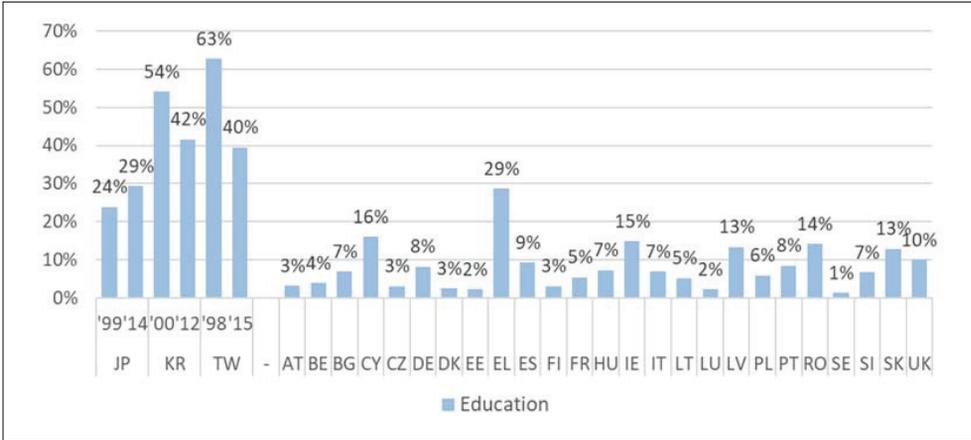
[그림 4-5] 0-24세 자녀의 1인당 양육비 구성



자료: 필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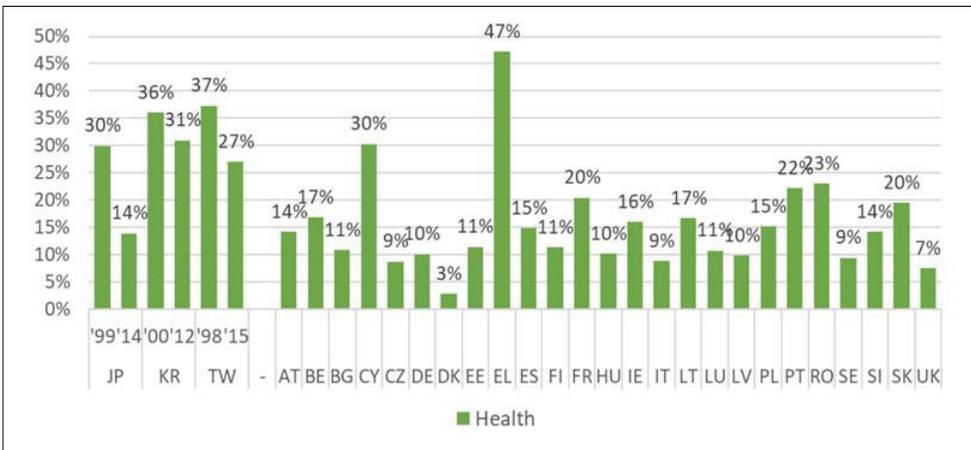
그러나 동아시아와 유럽의 가장 큰 차이는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 비중이었다. 그림 3-28은 0-24세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 비중을 보여준다. 그래프에 따르면 유럽보다 동아시아 지역의 자녀 교육비 비중이 훨씬 높다. 이는 유럽 정부의 교육비 지원율이 동아시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대만 모두 지난 10년간 교육비의 사적 지출 비중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들 두 국가 그룹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주변국과 달리 지난 10년간 자녀 교육비의 사적 지출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여성의 4년제 대학 진학을 증가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4-6] 0-24세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 비중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 지출 비중은 교육비처럼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유럽보다 아시아가 높게 나타났다. 단 그리스와 키프로스는 유럽 국가 중 예외적으로 사적 지출 비중이 높았다. 아시아 국가는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자녀 의료비의 사적 지출 비중이 감소했다. 특히 일본은 15년간 자녀 의료비의 사적 지출 비중이 16%p까지 줄어 유럽 복지국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 4-7] 0-24세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 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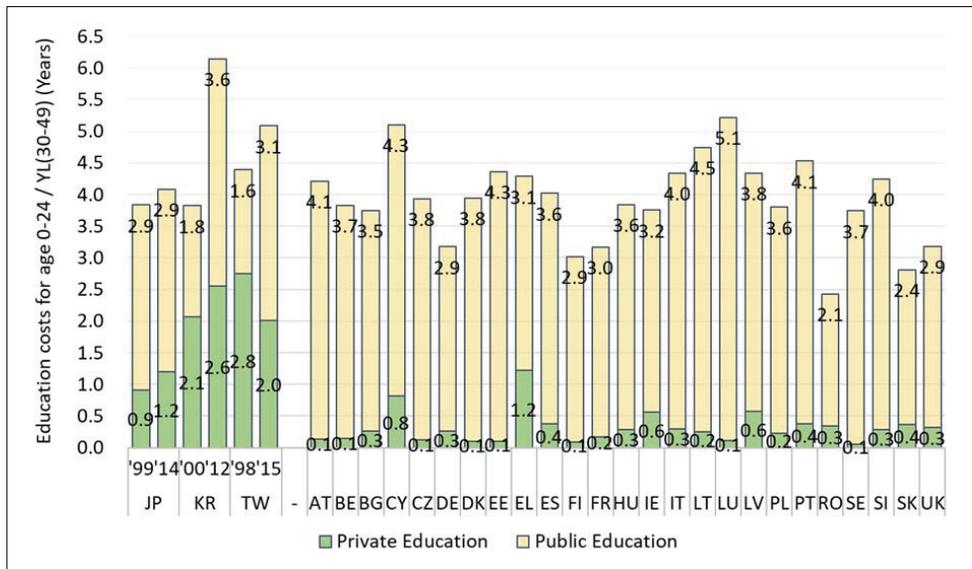


자료: 필자 제공

마지막으로 그림 3-30과 3-31에서는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와 의료비를 확인 할 수 있다. 사적 교육비는 한국과 대만이 유럽과 일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그림 3-30). 사적 교육비와 공적 교육비를 합산한 총 교육비의 경우 일본과 대만은 유럽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12년 한국의 1인당 교육비는 핵심성인의 6년간 근로 소득에 해당해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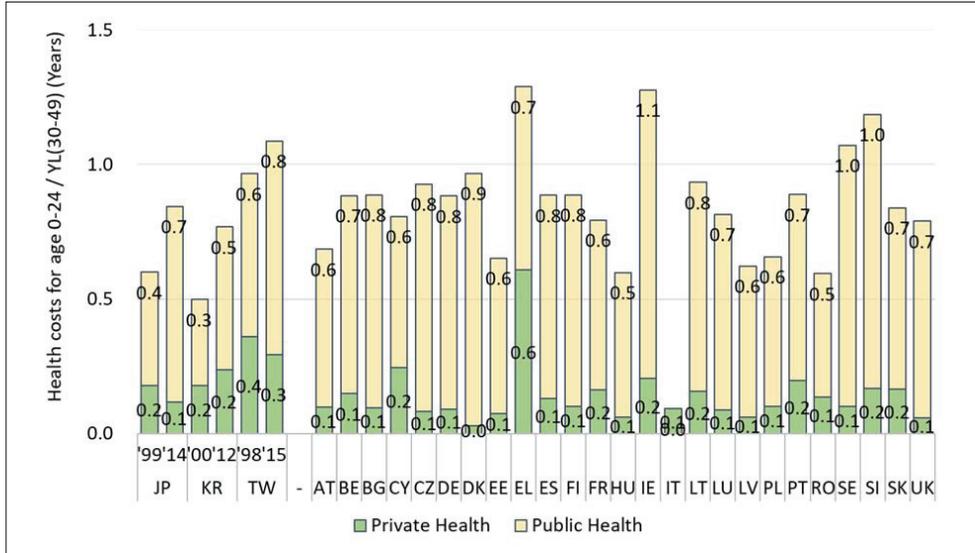
그림 3-31은 정규화된 자녀 1인당 의료비를 보여준다. 총의료비는 동아시아와 유럽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만과 그리스, 아일랜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는 1인당 자녀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3-29와 같이 자녀 의료비의 1인당 사적 지출은 동아시아, 특히 대만이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교육비



자료: 필자 제공

[그림 4-9]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의료비



* 이탈리아의 공공 의료비 데이터는 AGENTA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자료: 필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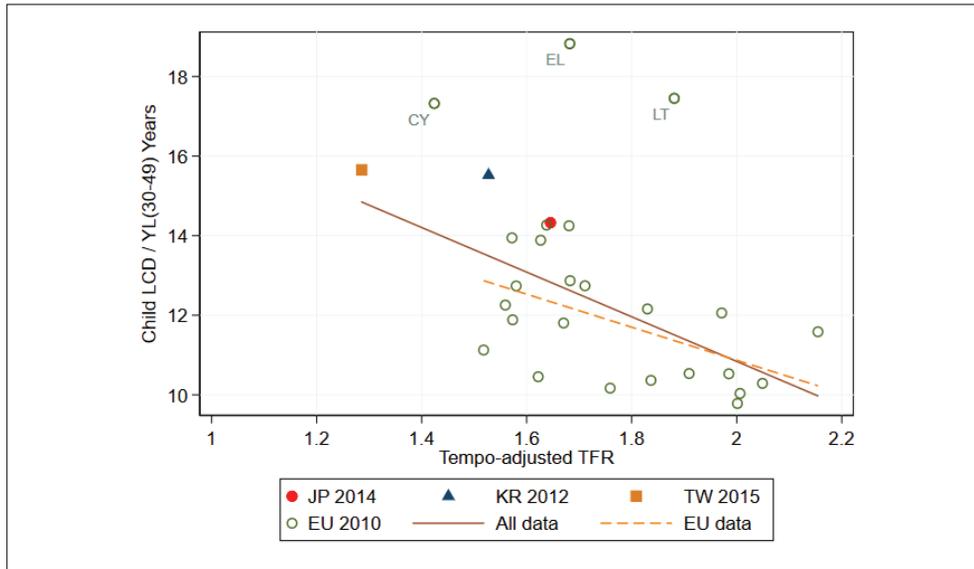
나. 자녀 양육비와 출산의 상관관계 분석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NTA 척도로 측정한 양육비와 출산의 국가 간 이변량 관계를 조사했다. 측정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전통적 기간 TFR 대신 Bongaarts-Feeney 방법으로 속도 조정된 TFR의 3년 이동평균 값을 국가/지역별 기간출산량 측정치로 사용했다. 분석에서 TFR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이 출산력 척도를 의미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인과관계 입증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와 TFR의 국가 간 상관관계는 [그림 4-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에서 관계의 강도를 검토하기 위해 플롯의 선형 선을 맞췄다. 동아시아를 추가할 경우 유럽에서 관측된 국가 간 관계가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포인트에 실선을 맞추고 유럽 국가에 점선을 맞췄다. 그러나 선을 맞출 때 특이점은 제외했다. 이들 특이점은 국가 코드 레이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에서는 키프로스(CY), 그리스(EL), 라트비아(LT)의 자녀 LCD가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 출산율 측정 시 무의미하다. 이후 그래프에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했다.

그림 3-32의 적합선에서 볼 수 있듯이,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와 TFR은 음의

관계를 갖고, 3개 아시아 국가를 추가하면 EU 유럽국가만 분석할 때보다 적합선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졌다. 이는 이론적으로 가정한 양육비와 출산 간 음의 관계가 유럽보다 동아시아에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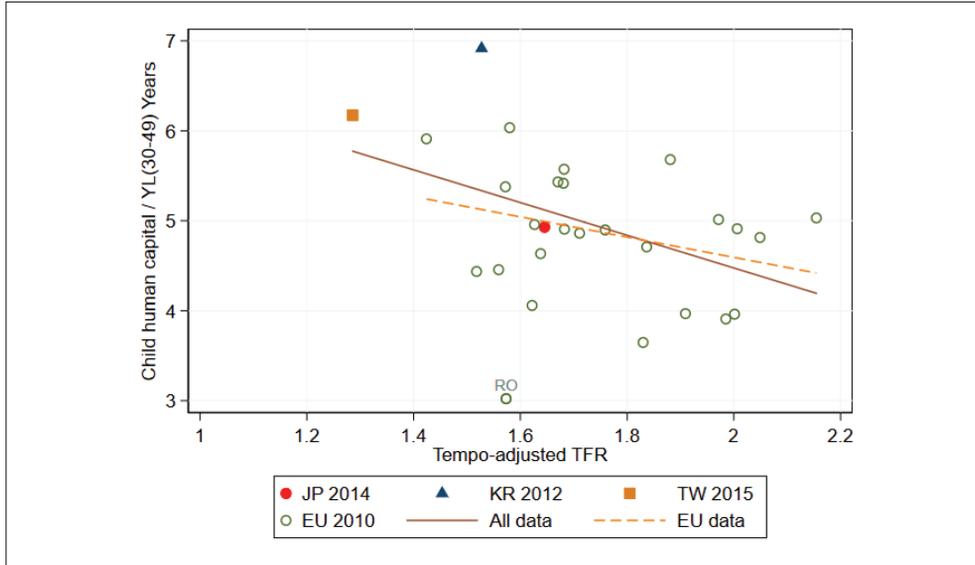
[그림 4-10] 속도 조정된 TFR과 정규화된 자녀 1인당 LCD의 국가 간 상관관계



자료: 필자 제공

그림 3-33은 TFR과 정규화된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 간 이변량 관계를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루마니아(RO)는 특이점으로 분류돼 분석에서 제외됐다. 여기서도 자녀 LCD를 사용한 이전 그래프와 유사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Ogawa, Matsukura, and Lee (2016)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8개국에 대한 연구에서 그림 3-31와 3-32에 제시된 이번 분석 결과와 달리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이 자녀 1인당 LCD보다 TFR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인적자본에 대한 공적 지출과 출산율 모두 동아시아보다 훨씬 높은 유럽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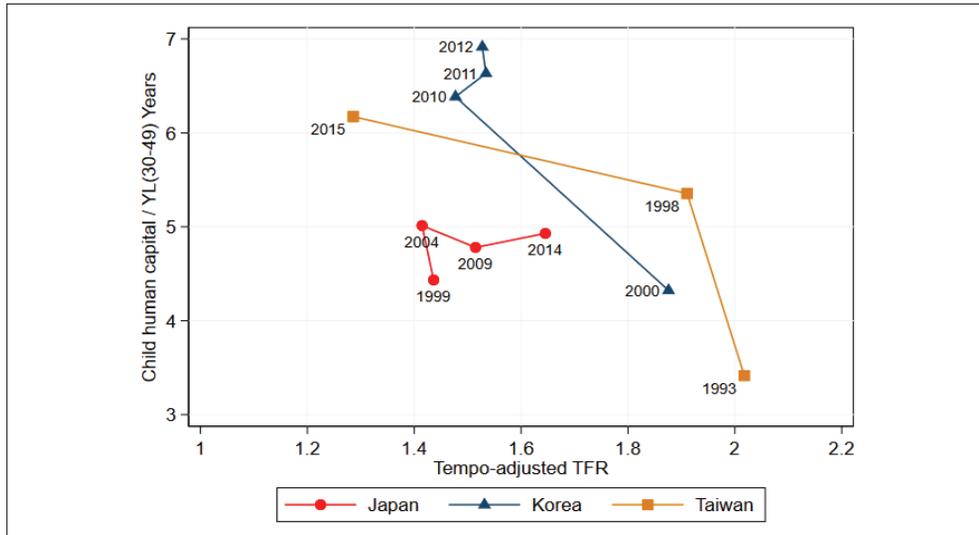
[그림 4-11]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인적자본과 속도 조정된 TFR의 국가 간 상관관계



자료: 필자 제공

종적 데이터를 사용해 한국, 일본 대만의 정규화된 자녀 1인당 인적자본과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를 산출했다. 이들 상관관계는 그림 3-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과 TFR 간 명확한 상충관계가 확인됐다. 1993년-2015년 사이에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은 핵심연령 근로소득의 2.8년까지 증가한 반면 TFR는 0.7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한국은 2000년-2010년 사이 정규화된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이 2년 증가하고 TFR가 0.4포인트 감소해 이러한 상충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두 변수 간 관계가 일부만 확인됐고 한국과 대만보다 상관관계가 훨씬 약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1999년-2009년 사이에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과 TFR 간 상충관계가 확인되었으나 한국과 대만보다는 훨씬 약했다. 또한 2009년-2014년까지 일본은 1인당 인적자본 지출과 TFR 모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일본의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은 EU 평균 수준인 핵심연령 근로소득 4.8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2012년 한국의 6.9년 또는 2015년 대만의 6.2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림 4-12] 정규화된 0-24세 자녀 1인당 인적자본과 속도 조정된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 한국, 일본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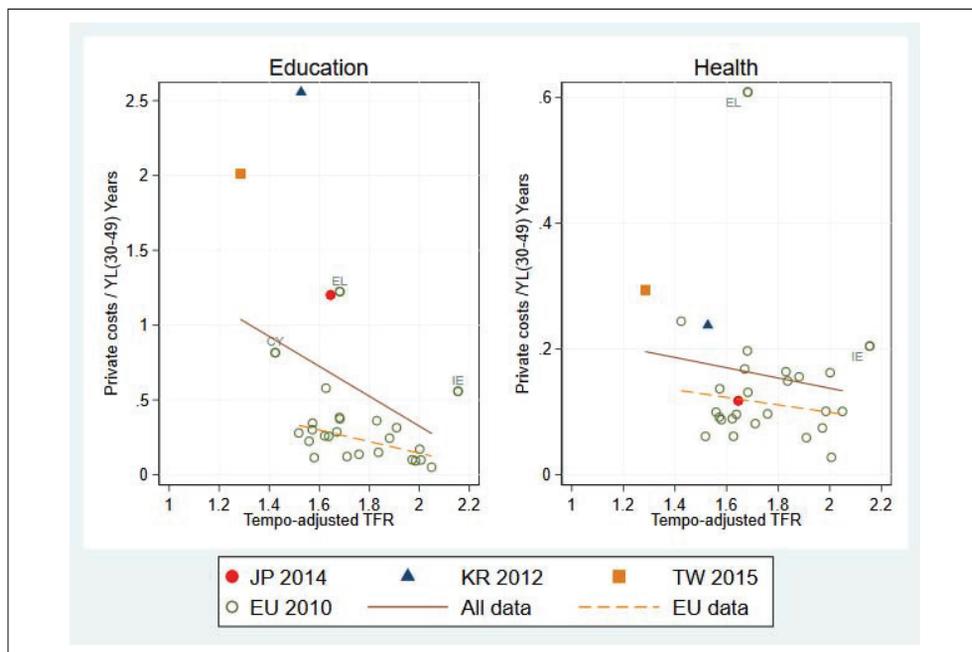
자료: 필자 제공

요약하면 위 결과는 일반적으로 이전 연구(Ogawa 외. 2009, Lee & Mason 2011, Ogawa, Matsukura & Lee 2016) 결과와 일치했고 국가 간 거시적 수준에서 출산의 양과 질의 상충관계를 확인했다. 다음 그래프에서는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을 더욱 세분화해 자녀양육의 다양한 인적자본 측면과 출산의 관계를 살펴본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지출 패턴 중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자녀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사적지출 규모와 비중이었다. 여기서는 자녀 1인당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사적 및 공적 지출을 분류하고 TFR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림 3-35는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사적지출과 TFR의 국가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사적 지출 모두 TFR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비가 의료비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사적 교육비와 출산 간 상충관계는 유럽 데이터포인트에도 나타났지만, 동아시아 3개국을 추가하자 국가 간 수준의 상충관계가 더욱 뚜렷해졌다.

반면, 의료비가 높다고 자녀의 질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 의료비의 사적지출은 교육비처럼 단순 해석할 수 없다. 대신 지출 수준은 국가의료제도의 본인 부담금 수준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1인당 의료비 사적 지출은 교육비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림 4-13]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와 의료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국가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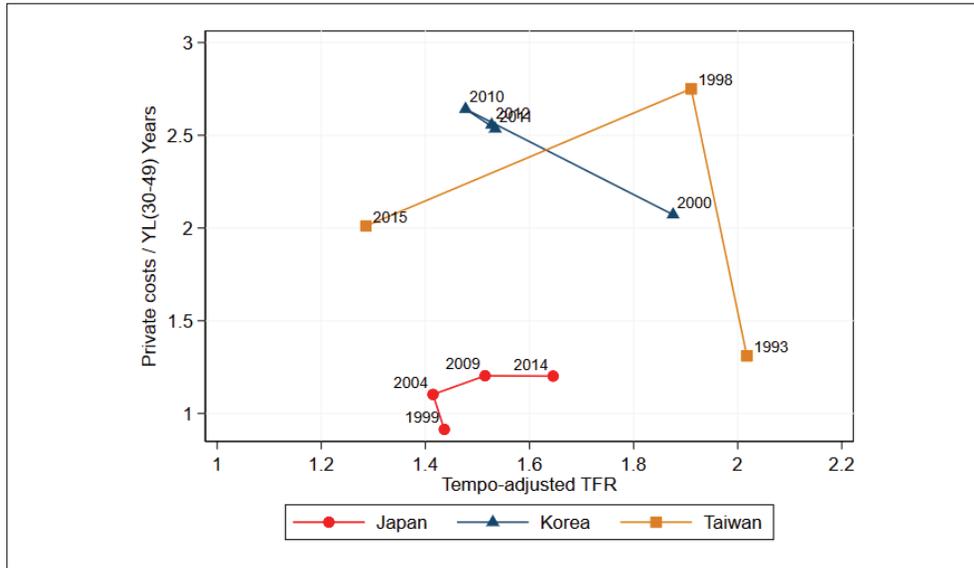
자료: 필자 제공

자녀 교육비 그래프를 보면 한국과 대만의 사적 지출 수준이 매우 높고 출산율이 매우 낮고 일본도 이들 두 국가보다는 약하지만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 전체 국가의 적합선이 유럽 국가만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비에 대한 사적 지출이 높고 출산율이 낮은 동아시아 국가의 두 가지 특징을 뚜렷이 보여준다. 반면, 한국과 대만이 일본이나 기타 EU 국가보다 자녀 의료비의 사적 지출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이들 국가의 의료제도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3-36은 동아시아 국가의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한국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TFR 간 음의 관계가 매우 뚜렷이 나타났다. 한국은 자녀 교육비의 사적 지출 수준도 가장 높았다. 대만과 일본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보다 약하게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1998년-2015년 1인당 사적 교육비는 크게 감소했지만 동기간 TFR 또한 2.02명에서 1.29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비 자체보다는 비혼과 같은 다른 원인이 이 기간 대만의 출산율 감소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본은 한국과 대만과 비교해 자녀 교육

비의 사적 지출이 훨씬 적고 변화도 적었다. 일본의 TFR 증가는 2004년부터 다소 증가세를 보인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무관해 보인다.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 증가는 해당 기간 여성의 고등교육 등록률 증가가 반영됐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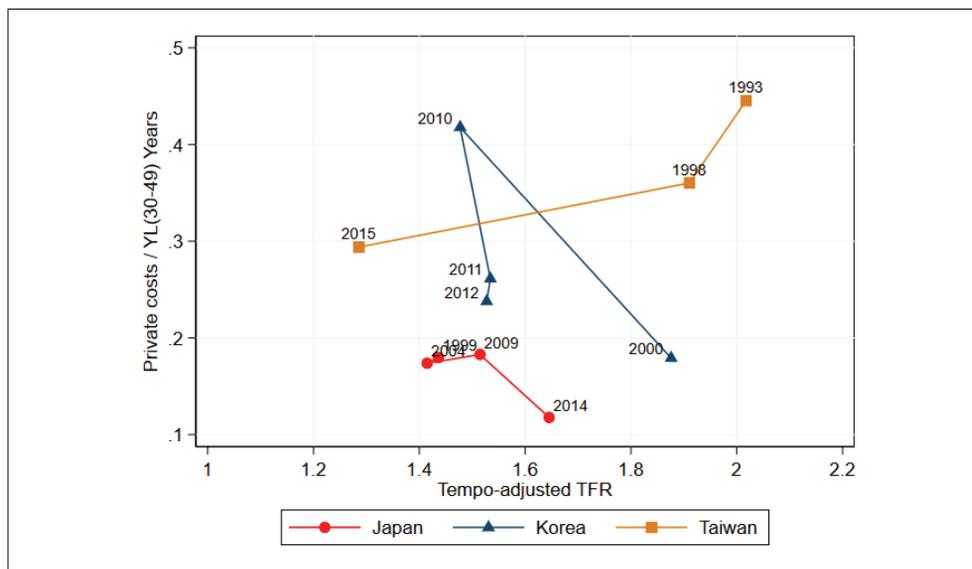
[그림 4-14]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 한국, 일본 대만



자료: 필자 제공

마찬가지로,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지출과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는 그림 3-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5] 0-24세 정규화된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 지출과 속도 조정된 TFR의 시계열 상관관계, 한국, 일본 대만



자료: 필자 제공

대만은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 지출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TFR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 또한 양육비보다 결혼 연기와 같은 다른 요소가 연구 기간 대만의 출산율 감소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지출과 TFR 또한 2000년-2010년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지출 감소는 2010년 이후 출산율 증가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은 2009년-2014년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지출 급감에 맞춰 TFR이 증가했다. 일본은 2000년대 중반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 의료비 지원 제도를 크게 확대했다(Takaku 2015). 따라서 현재 일본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자녀 1인당 의료비에 대한 사적지출 감소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육비의 사적지출 비중은 교육비보다 의료비가 훨씬 낮다. 따라서 자녀 1인당 의료비의 사적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뚜렷하지 않고 제한적이다.

4. 결론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3개국과 EU 25개국의 NTA 데이터로 산출한 양육비를 비교하고 출산과 이들 비용의 국가 간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또한 상관분석에 일본의 최신 데이터포인트를 추가하고 속도 조정된 TFR을 사용해 이전 연구 결과를 재정의했다(Lee and Mason 2010; Ogawa et al. 2009; Ogawa, Matsukura, and Lee 2016).

동아시아와 EU 국가를 비교한 결과 자녀 양육비 비중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와 EU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사적지출 비중이었다. 교육비는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럽은 동아시아보다 국가 부담률이 훨씬 컸다.

출산과 자녀 양육비에 대한 국가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지출과 국가 출산율 간 뚜렷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Lee and Mason 2010; Ogawa et al. 2009; Ogawa, Matsukura, and Lee 2016). 이러한 관계는 유럽 데이터에서도 나타났지만 동아시아 3개국을 추가하자 더욱 뚜렷해졌다.

동아시아의 종적 NTA 데이터를 사용해 시계열 상관관계를 산출했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출산율은 최저수준이고 사적 교육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사적 교육비와 기간출산율의 시계열 관계는 다른 경로를 따랐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사적지출이 가장 높았고, 출산율과의 상충관계도 뚜렷했다. 따라서 높은 자녀 교육비는 최근 한국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대만의 경우 이들 두 변수 간 시계열 관계에서는 뚜렷한 상충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대만은 직접 양육비보다 결혼 연기 또는 비혼과 같은 기타 요소가 최근 출산율 하락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만의 이러한 결과는 그림 12의 국가간 분석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거 NTA 데이터를 사용한 국가간 분석에서는 자녀 1인당 인적자본 지출과 TFR이 일관되게 음의 관계를 보였다(Lee and Mason 2010; Ogawa et al. 2009; Ogawa, Matsukura, and Lee 2016). 그러나 이번 시계열 분석 결과 이들 국가간 상관관계를 더욱 신중히 추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국 및 대만과 비교해 일본은 자녀 1인당 교육비와 의료비의 사적 지출이 적은 편이다. 또한 일본의 출산율은 전통적 TFR과 속도 조정된 TFR로 측정한 결과 모두에서

지난 10년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고 현재 한국과 대만보다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사적 인적자본 지출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일본은 다른 동아시아와 유럽 복지 국가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인적자본의 사적지출 추세는 일본의 최근 출산율 회복세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직접 양육비만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을 사용하면 간접 양육비도 측정할 수 있다. 향후 간접 양육비를 추가하면 자녀 양육비와 출산의 관계를 더욱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별로는 이러한 시도가 이미 있었으며(예: Gustafsson and Kjulin 1994) NTA와 NTTA 데이터를 사용한 대규모 비교 연구도 가능하다.

감사의 글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일본 NTA 데이터는 일본 NTA 국가팀이 추정하고 편집했다. NTA 데이터 구성은 JSPS Grant-in-Aid for Specially promoted Research (No. 15H05692), “Construction of Policy-Evaluation-Oriented and Heterogeneity-Sensitive National Transfer Accounts and their Application to Policies for Coping with Declining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P.I. Prof. Hidehiko Ichimura)의 지원을 받았다.

2015-2016년 대만과 2014-2015년 일본의 Bongaarts-Feeney 속도 조정된 TFR 데이터를 제공한 Yen-hsin Alice Cheng 박사와 Motomi Beppu 박사에게 각각 감사를 표한다. 한국의 Bongaarts-Feeney 속도 조정된 TFR은 Yoo and Sobotka (2018)가 실시한 연구의 보충 파일을 참조했다(<https://www.demographicresearch.org/volumes/vol38/22/default.htm>). 나머지 국가의 속도 조정된 TFR은 Human Fertility Database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독일)) 및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오스트리아)의 지원받았다.

데이터는 www.humanfertility.org(2018년 10월 5일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Becker, G.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Special Conference Series 11,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209-231.
- Bongaarts, J. and Feeney, G. (1998)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271-291.
- Bongaarts, J. and Sobotka, T. (2012). A demographic explanation for the recent rise in European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1): 83-120.
- Cheng, Y.-H. A. (2014). Changing partner choice and marriage propensities by education in post-industrial Taiwan, 2000-2010. *Demographic Research*, 31, 1007-1042.
- D'albis, H., & Moosa, D. (2015). Generational Economics and the National Transfer Accounts. *Journal of Demographic Economics*, 81(4), 409-441.
- Frejka, T., Jones, G.W., and Sardón, J.-P. (2010). East Asian childbearing patterns and policy developmen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3): 579-606.
- Fukuda, S. and Raymo, J. M. (2018). "Gender Revolution," Globalization, and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New Evidence from Japan. *CDE Working Papers*, 2018-6: URL: <https://www.ssc.wisc.edu/cde/cdewp/2018-06.pdf>
- Gustafsson, B. & U. Kjulin (1994). Time use in child care and housework and the total cost of childre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7(3): 287-306.
- Istenič, T., Hammer, B., Šeme, A., Lotrič Dolinar, A., & Sambt, J. (2017). European National Transfer Accounts. Available at: <http://www.wittgensteincentre.org/ntadata>.
- Jones, G.W. (2007). Delayed marriage and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3): 453-478.
- Lee R. and M. Andrew (2010). Fertility,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over the demographic transitio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6(2): 159-182.
- Lee R. and M. Andrew (Eds) (2011). *Population Aging and the Generational Economy: A Global Perspective*. Cheltenham, Northampton, Ottawa: Edward Elgar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ag-2018-en>.
- Ogawa N., M. Andrew, C. Amonthep, R. Matsukura and T. An-Chi (2009). Declining fertility and the rising cost of children: What can NTA say about low fertility in Japan and other Asian countries? *Asian Population Studies*, 5(3): 289-307.
- Ogawa, N., R. Matsukura and S-H. Lee (2016). Declining fertility and the rising costs of children and the elderly in Japan and other selected Asian countries: An analysis based upon the NTA approach. Edited by Hal Kendig, Peter McDonald, John Piggott, *Population Ageing and Australia's Future*, ANU Press, Australia.
- Park, H., Lee, J. K., & Jo, I. (2013).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 and marriage among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 51-76.
- Sobotka, T. (2004). "Is lowest-low fertility explained by the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2): 195-220.
- Takaku, R. (2016). Effects of Reduced Cost-Sharing on Children's Health: Evidence from Japan. *Social Science & Medicine*. 151, 46-55.
- Tan, P. L., Morgan, S. P., & Zagheni, E. (2016). A Case for "Reverse One-Child" Policies in Japan and South Korea? Examining the Link Between Education Costs and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5(3), 327-350.
- United Nations (2013) *National Transfer Accounts Manual: Measuring and Analysing the Generational Economy*. United Nations Publication, New York.
- Yoo, S. H. and T. Sobotka (2018) Ultra-low fertility in South Korea: The role of the tempo effect. *Demographic Research*: 38(22): 549-576.

제3절 동아시아의 저출산과 인구정책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서론

최근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한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증가율 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인구배당 사례의 원형으로 자주 언급되지만,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는 이들 국가의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현상은 전체적인 인구전환의 추세와 더불어 각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왕성한 경제성장기에 시작된 제2차 인구전환 과정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출산율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태어나 고등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들은 어머니 세대에 비해 아이를 덜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대 최저출산율은 1960~70년대 시행된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0년대부터 다수 국가들이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 국가 중 다수가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자녀양육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두드러진 회복세가 감지되지 않고 있어 가족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널리 추진되고 있는 가족정책들은 관련 복지비용은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정책들은 정부차원의 보육 혹은 다른 형태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육아의 책임이 지워지면서 성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책입안자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을 상기하면서 가족계획정책으로 출산율 회복이 쉽게 달성되리라 낙관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간 인구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한다면, 출산율이 오랫동안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있는 이유와 가족정책이 출산율 회복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출산율이 반등했다. 이러한 현상은 재생산 기간(reproductive period) 초기에 출산을 기피했던 많은 유럽 여성들이 나중에 결국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출산율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되고 있다 (Sobotka 2017). 유럽에서 행해진 다수의 연구들은 코호트 출산지표(fertility measures)를 이용해 출산 연기 및 출산율 회복을 분석했다(Frejka and Calot, 2001; Frejka and Sardon 2004). 유럽의 연구들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코호트 지표보다는 기간 지표로 출산율을 분석했다(Rindfuss and Kim Choe, 2015, 2016). 코호트 출산율을 조사한 소수의 연구에서는 생식연령기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고, 점점 더 적은 수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 연구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 4개국의 출산율 추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 국가의 저출산 현상을 초래한 인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먼저 코호트 출산율과 기간출산율의 전반적 추이를 살펴보고, 동아시아 여성의 출산 지연과 출산율 회복 추이를 고찰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본과 대만의 인간출산율 데이터베이스(HFD, Human Fertility Database)를 활용했다. 한국의 출산동향 자료는 대한민국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에 기반한다. 싱가포르 자료는 Koh(2010) 외에 싱가포르 통계부가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 보고서에서 추출했다. 한국의 경우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코호트 출산율 변화를 Zeman 외 (2018)의 방법론에 따라 출산 진도비변화로 분해하여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동아시아 4국의 인구정책의 역사적 뿌리와 발전상을 자세히 고찰한다. 정책의 유사성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이전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국가간 인구정책의 상이성에 초점을 맞춰봄으로써 동아시아의 저출산 위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가.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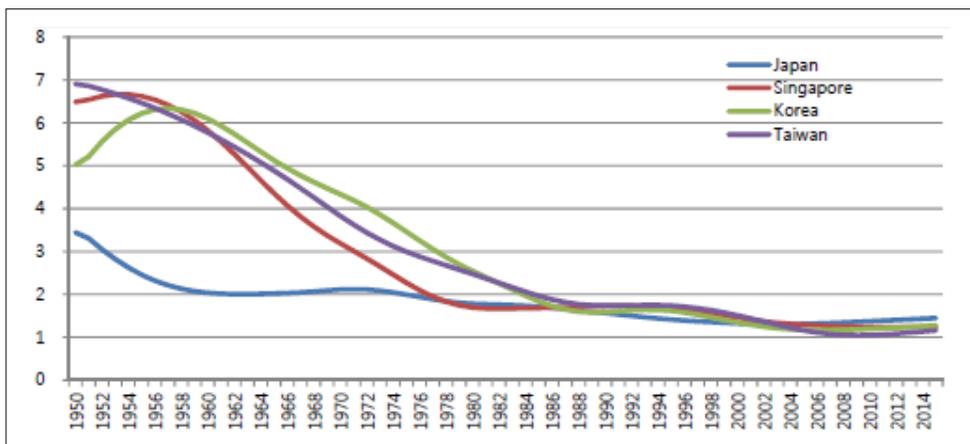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1950년부터 2015년 사이에 급감했다. 가장 최근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약 1.3명으로 사상 최저수준이다. 4국의 출산율은 모두 뚜렷한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가별로 두드러진 특징들을 갖고 있다. 4국의 각기 다른 출산율 추이는 각국이 실행해온 인구정책 전략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좀더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1920년대 이후 출산율 하락을 경험했으며, 1950년에 이르러 기간 합계출산율이 3.4명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시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인구학적 과도기의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출산율을 기록했다. 1960년부터 1975년까지 거의 15년 간 일본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나머지 3국은 인구학적 과도기에 그러한 안정적인 출산율을 경험하지 못했다. 싱가포르, 대만, 한국은 1950년대 말까지 여성 1인당 거의 6명의 아이를 출산하며 거의 유사한 수준의 기간 합계출산율을 보였다. 그 후, 이들 국가의 출산율이 하락하기는 시작했지만, 그 추이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대만이나 한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락했다. 한국과 대만이 여전히 여성 1명당 3명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던 1977년,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을 하회했다. 한국과 대만, 양국의 출산율 추이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 두 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에 도달했다. 1990년대 일본의 출산율은 나머지 아시아 3국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4개국 모두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약 1.3명으로 떨어졌다. 일본의 경우,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대 들어 여성 1인당 약 1.4명의 아이를 출산하며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일본과 달리, 싱가포르, 대만, 한국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하락 기초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말 여성 1인당 1.3명 이하로 떨어졌다.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코호트 출산율의 시대별 추이를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입증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코호트의 출산율을 일본, 대만, 한국의 40세 여성과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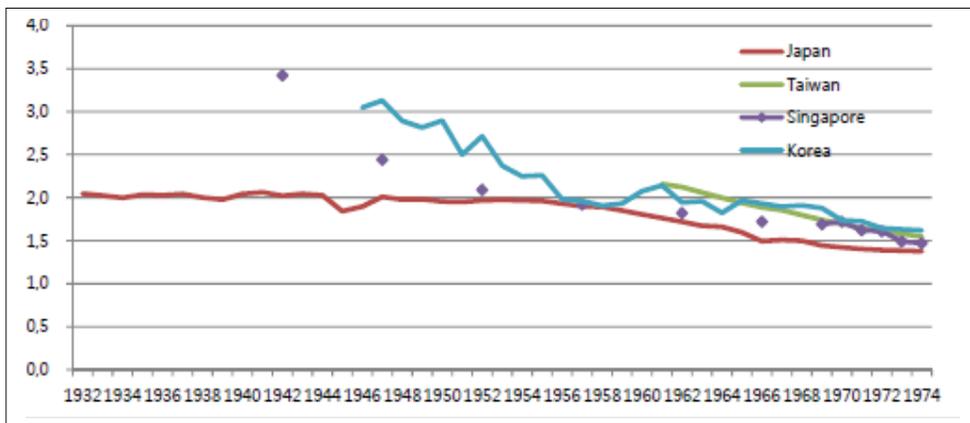
르의 44세 여성의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s)로 정의했다. 코호트 출산율의 추이는 기간 합계출산율 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일본의 코호트 출산율은 1950년대 중반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체 수준을 유지한 반면, 나머지 3국의 코호트 출산율은 계속 감소했다. 일본의 코호트 출산율은 다른 3국보다 낮았지만, 4국의 1974년 코호트의 경우, 여성 1인당 1.4명에서 1.6명 사이의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이는 싱가포르, 대만, 한국의 코호트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림 4-16] 1950 to 2015 동아시아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1950년-2015년)



자료: 2017년 유엔 세계인구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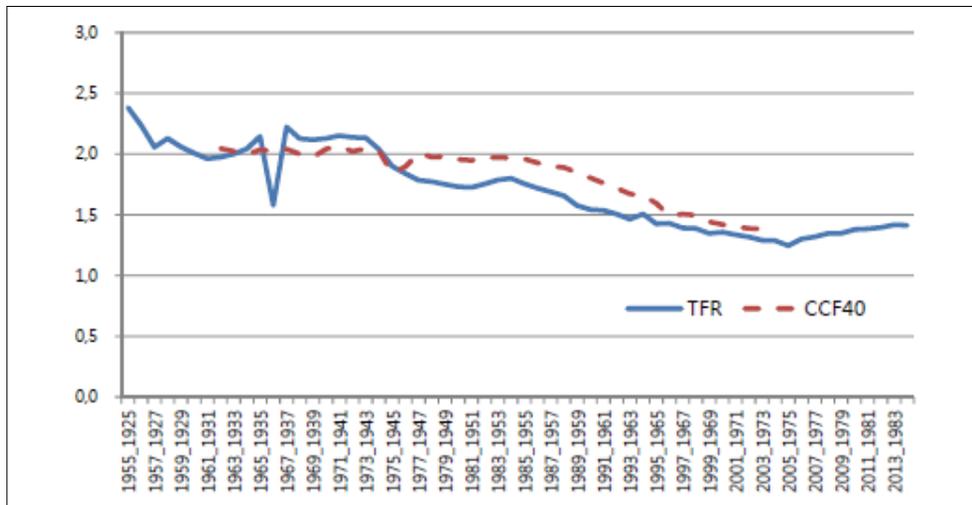
[그림 4-17] 동아시아 국가의 코호트 출산율(1932년 코호트-1974년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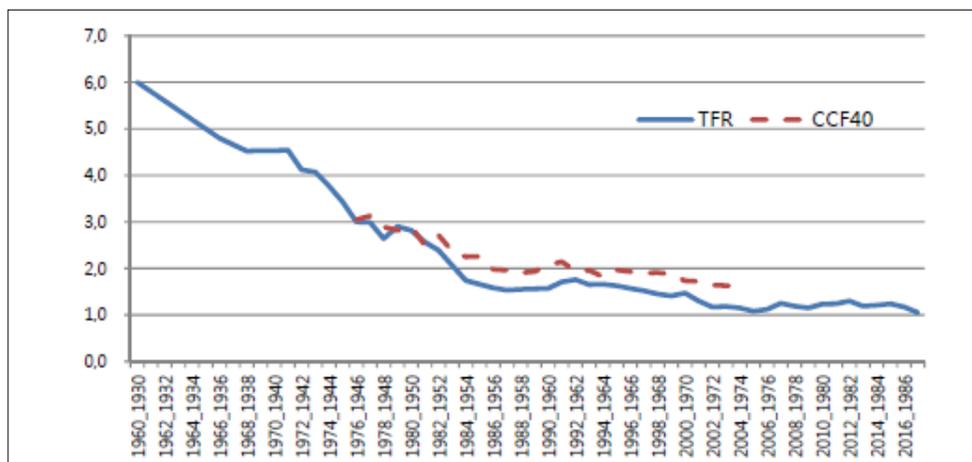
자료: 한국-대한민국 통계청(2018), 일본과 대만-인간출산율 데이터베이스, 싱가포르- Koh Eng Chuan(2010)

[그림 4-18]과 [그림 4-19]는 동일한 그래프 상에서 일본과 한국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출산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합계출산율은 그 해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코호트 출산율은 특정 여성이 해당 년에 40세가 되었을 시점의 완결출산율을 나타낸다. 일본과 한국 모두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세 전후였다. 일본의 경우, 1946년 이후 코호트 출산율이 기간 합계출산율보다 높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출산율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출산연기에 따른 기간 합계출산율의 감소가 다소 안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출산율 추이는 일본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한국의 경우, 기간 합계출산율은 물론 코호트 출산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기간 합계출산율의 반등이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여성들은 계속해서 출산을 연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 기간 합계출산율의 “뎀포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코호트 출산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 수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림 4-18] 일본의 기간 합계출산율 및 코호트 총출산율(1955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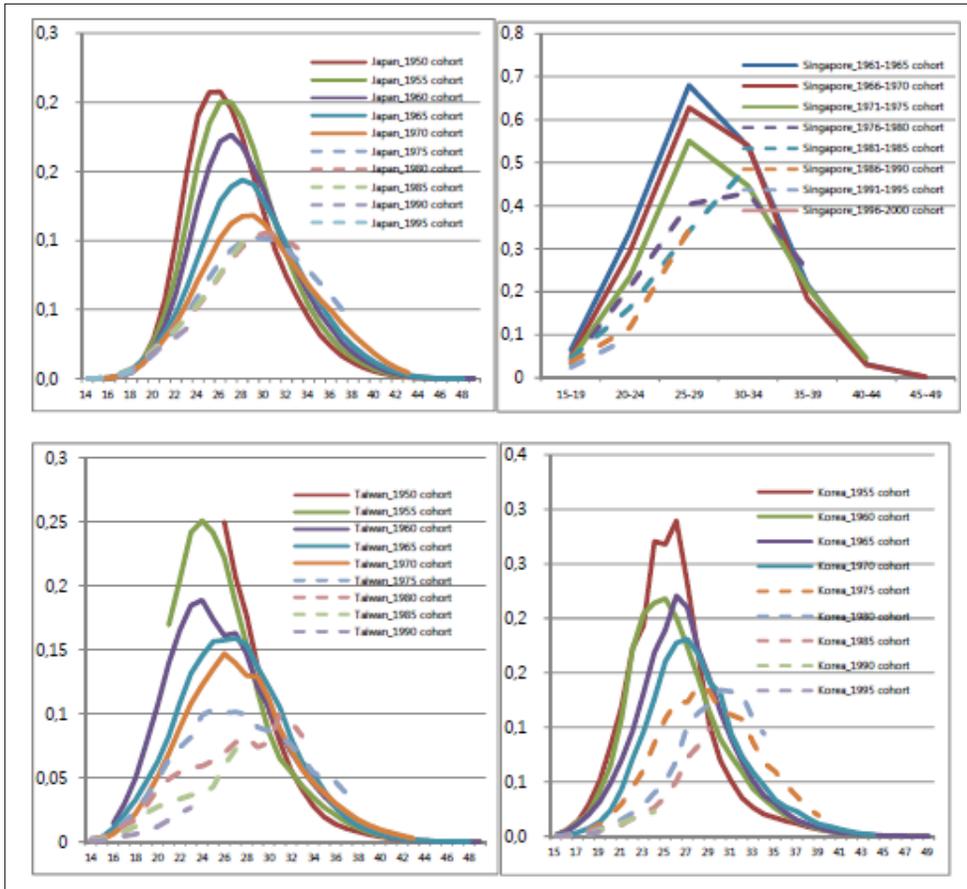


[그림 4-19]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 및 코호트 총출산율(196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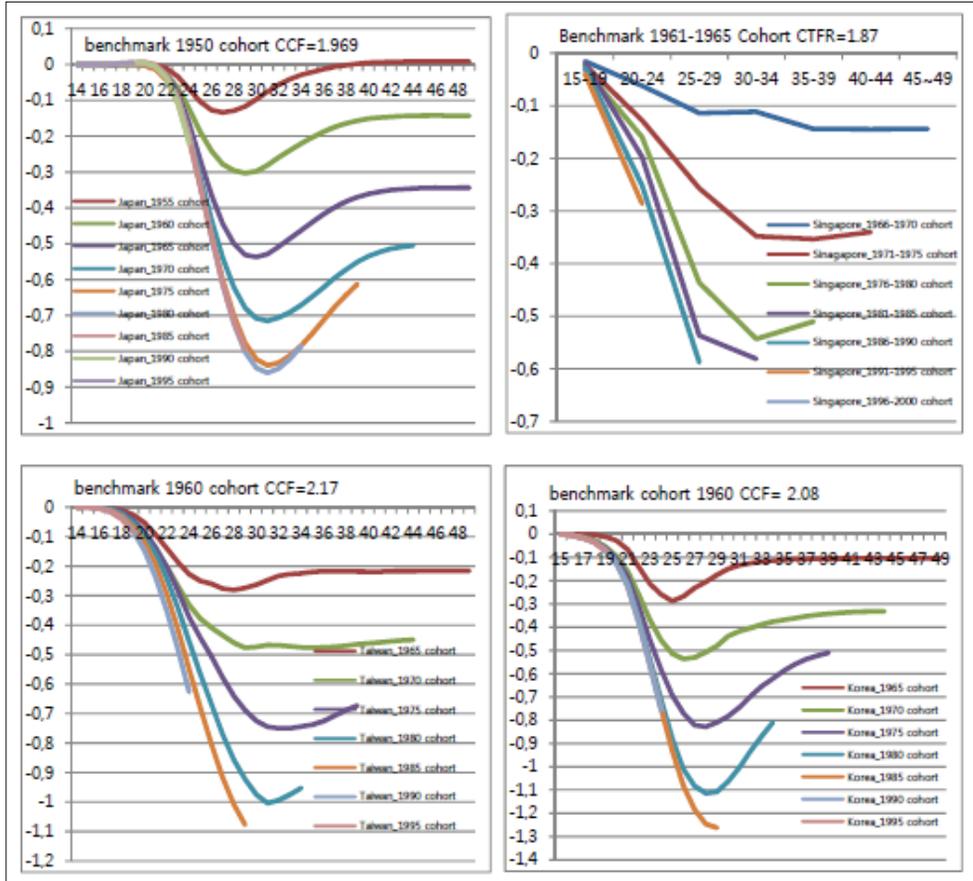


동아시아 4개국의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은 여성들이 재생산연령 후반기까지 얼마나 출산을 늦췄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3-50). 4개국 모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뿐 아니라, 그래프의 높이도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 연기 및 출산의향 회복을 조사하기 위해 출산율이 대체 수준에 있던 기준 코호트(1950년에서 1960년까지)의 연령별 코호트 누적 출산율을 1960년부터 1995년까지 후속 코호트의 연령별 코호트 누적 출산율과 비교하여, Frejka 외 (2010)의 연구를 확장했다(그림 3-51).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여성들은 늦은 나이까지 출산을 미룰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과거에 비해 아이를 덜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이나 대만의 젊은 여성들이 여전히 출산을 미루고 있는 반면, 일본 코호트 여성들은 더 이상은 출산을 미루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1980년 코호트와 1985년 코호트는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이는 1980년대 일본 여성 코호트는 1975년 코호트에 비해 출산을 미루지 않고, 아이를 덜 낳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만과 한국의 경우, 1985년 코호트의 그래프 위치가 1980년 코호트보다 아래에 있다. 이는 양국 모두 1980년 코호트보다 1985년 코호트가 출산을 좀 더 미루는 경향이 있고, 1980년 코호트에 비해 출산율이 더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1인당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대만과 한국에서 출산율이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20]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령별 코호트 출산율



[그림 4-21] 동아시아 국가의 기준 코호트와 후속 코호트 사이의 연령별 코호트 누적 출산율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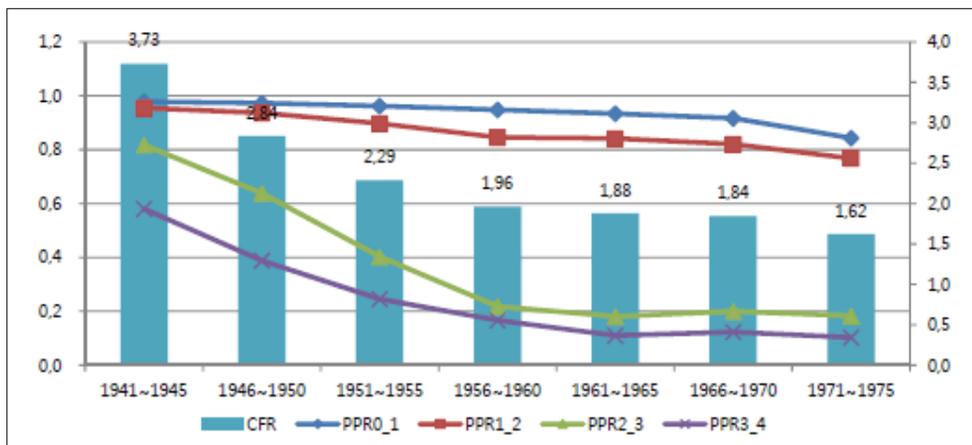
나. 코호트 출산율의 분해 분석: 한국의 사례

과거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자녀의 수가 셋 이상인 가정들이 많은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가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저하는 출산을 중요한 일생 의례의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1946~1950년 출산 코호트부터 1971~1975 출산 코호트까지의 출산율 변화를 출산 진도비의 변화로 분해했다. 그 결과는 어떤 패리티 진행의 변화가 한국에서 코호트 출산율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분석에는 1985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센서스 데이터가 활용됐다.

한국의 코호트 출산율은 1941년-1945년 코호트를 시작으로 1971년-1975년 코호트까지 계속 감소했다. 1941년-1945년 코호트 출산율은 여성 1인당 3.42명이지만, 1946년-1950년 코호트의 경우, 2.80명으로 감소했고, 그 후 1951년-1955년 코호트의 경우, 2.29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1956-1960년 코호트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96명으로 하락했으며, 이후 1961년-1965년 코호트는 1.88명, 1966년-1970년 코호트는 1.84명, 1971년-1975년 코호트는 1.62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 출산에 대한 진행률은 1941년-1945년 코호트와 1961년-1965년 코호트 사이에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그 후 1971년-1975년 코호트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둘째와 첫째 아이 출산의 진행률은 1950년대 코호트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감소폭은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 출산에 대한 진행률의 감소폭보다는 크지 않았다. 이전 코호트들과 비교했을 때 1966년-1970년 코호트와 1971년-1975년 코호트 사이에 둘째 아이 출산과 첫째 아이 출산의 진행률 감소폭은 다소 커졌다.

[그림 4-22] 1941년-1945년 코호트와 1971년-1975년 코호트 사이의 코호트 출생률과 출생아수 진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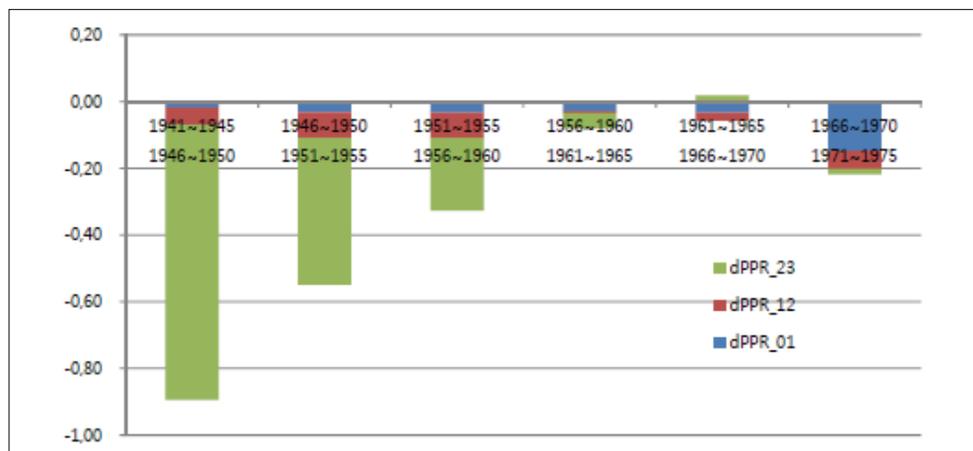


코호트 출산율 변화에 대한 분해 분석 결과는 Zeman 외(2018)의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패리티 진행률 변화가 코호트 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코호트들 전체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아이 이상 출생에 대한 진행률 감소는 1941년-1945년 코호트와 1946년-1950년 코호트 사이, 그리고 1946년-1950년 코호트와

1951년-1955년 코호트 사이에서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모든 코호트들의 출산율은 대체 수준을 상회했다. 둘째 아이 출산의 진행률 감소는 출산율이 대체 수준에 근접한 1960년대 코호트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단 코호트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 영향력도 감소했다. 코호트들의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1961년-1965년 코호트와 1966년-1970년 코호트 사이, 그리고 1966년-1970년 코호트와 1971년-1975년 코호트 사이의 두드러진 출산율 감소는 첫째 아이 출산율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분석 결과는 한국의 코호트 출산율 변화에 두 가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집단의 경우,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주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아 제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세 자녀 이상 출산 감소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최근 코호트의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무자녀 가정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출산은 합법적 결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 출산율 하락은 젊은 비혼 가정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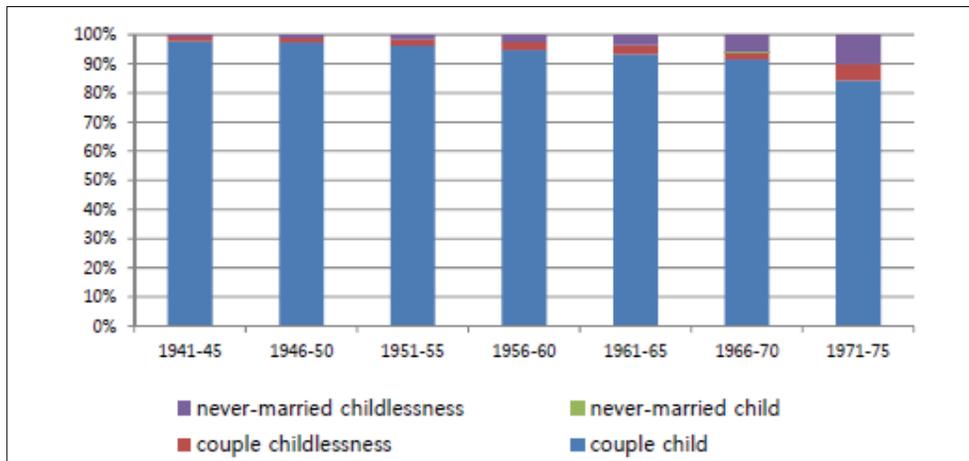
[그림 4-23]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출산 진행률 변화가 1941년-1945년에서 1966년-1970년 코호트의 출산율 감소에 미친 영향



한국에서는 출산과 합법적 결혼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 각 집단별로 40세-44세의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출산을 구분해서 분석했다. 40세-44세 까지 미혼인 여성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낮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40세-44

세 미혼 여성의 비율은 1941년-1944년 코호트는 0.75%, 1951년-1955년 코호트는 1.6%, 1961년-1965년 코호트는 3.5%, 1971년-1975년 코호트는 10.1%였다. 미혼 여성 대부분은 출산을 하지 않았다.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이었다.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보통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다. 한국의 기혼 여성들 중 자녀를 낳지 않은 여성 비율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41년-1945년 코호트의 무자녀 비중은 1.5%, 1951년-1955년 코호트는 2.2%, 1961년-1965년 코호트는 3.2%, 1971년-1975년 코호트는 6.2%였다. 이는 합법적 기혼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규범이 한국의 저출산 기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전통적 규범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4-24] 결혼 여부 및 출산 코호트별 40세-44세 유자녀 여성의 율



3. 동아시아국가의 인구정책

본 절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및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 정책을 살펴 본다. 기존의 저출산 관련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문제를 야기한 사회적/경제적인 공통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및 한국은 복지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경제개발 과정에서 저출산국이 된 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개발국이자 성불평등 국가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유사성에 주로 초점을 맞

춘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인구 정책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위기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일본은 ‘인구전환’을 경험한 최초의 동아시아 국가다. 일본은 2 차 세계 대전 이후, 1947년과 1949년 사이 베이비 붐을 경험했으며, 급속한 인구증가의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안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후 베이비 붐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1950년대 후반 일본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으로 떨어졌다. 1957년 합계 출산율은 여성 1 명당 2.058 명으로 감소했다(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일본은 1950 년대 중반 전후 재건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달성했으며, 197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으로 안정됐다. 일본 정부가 인구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Inoue, 2001). 그러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비슷한 시기에 일본 정부는 독특한 인구학적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없었다.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일본은 저출산국이 됐다. 일본의 저출산 추이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그것과는 극명히 다르다. 일본의 저출산 국가로의 전환은 이미 1920 년경에 시작되었으며, 출산 장려를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은 194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 1950년대 초반 일본 정부는 산아제한(가족 계획)사업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가족계획사업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민간단체들이었다. 사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출산은 지극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1948년 일본은 인공유산(낙태)을 합법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인구 급증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초반에만 일시적으로 피임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피임에 실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그렇게 임신한 여성들 중 일부는 인공 임신중절을 선택했다(Inoue, 2001). 전반적으로, 아래에 언급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인구전환에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다.

1970년대 초반 석유파동 이후 1970년대 중반 일본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출산율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여성 1 인당 출생아수는 1985년 1.757 명, 1993 년 1.464 명으로 각각 감소했다(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이 무렵 일본 정부는 “엔젤 플랜 (Angel Plan, 1994)” 및 “뉴 엔젤 플랜 (New Angel Plan, 1999)”을 비롯해 일련의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출산율이 대체 수준으로 떨어진 지

이미 2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1987년 무렵 싱가포르 정부가 이미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전략 개발에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간접적이고 더딘 대응 방식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의 유산이자 자유방임적 인구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인구정책은 더디고 간접적인 조치들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동아시아 국가를 대표하는 경제개발 모델을 갖고 있는 일본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대부분의 자원을 집중시킨 반면, 출산을 제고에 필요한 사회비용은 최소화해왔다. 일본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기업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조치를 취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일본 정부는 성평등을 증진하고 직장가 가정생활의 균형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경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 결과,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 선진국들이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May 2012). 이를 고려할 때 일본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확실한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인구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비교하면 싱가포르, 한국, 대만의 산아제한 정책은 비슷한 동기와 정책개발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 국가 차원에서 인구증가율을 낮추고 산아제한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국가별 상이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초중반 도입된 산아제한정책은 1980년대 중반까지 존속됐다. 이들 국가는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을 이유로 종합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정책측면에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1959년 영국 영연방 자치주가 되었으며,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완전히 독립했다. 풍부하지 못한 천연 자원을 보유한 싱가포르 정부는 독립 직후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으며, 1970년대 중반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87년,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먼저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의 정책적 전환은 비교적 예상 가능한 선택이었지만, 싱가포르가 안고 있는 인종 및 민족 간 균형이나 우생학적

이유 등으로 인해 인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었다 (Kramer, 2014; Yap, 2001).

싱가포르 정치의 특징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데에 있다. 1959년 총선 이후, 국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이 정치권을 장악했다. 사실 PAP는 싱가포르가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정체성으로 여겨졌다. 이는 2009년 일본에서 집권기간이 짧고(2009~2012년)과 실효성 없는 인구정책을 펼친,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Japan)이 막강한 자민당(Liberal Democratic Party)을 누르고 집권당이 된 것과 비교된다. 싱가포르가 생산적인 시민(Sun, 2012년)을 강조하는 점이나 새로운 개발모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구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고려할 때 싱가포르의 사례는 인구정책을 수립 이행하는데 있어서 정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싱가포르의 경우, 톱다운식 접근법이 과거와 현재의 인구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배해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차원의 노력은 싱가포르의 인구전환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실패하면서 싱가포르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ramer(2014)는 일본의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정책적 실패를 분석했다. 일본 여성들은 정치권 내에서 활동하는 대신 정치권 밖을 활동/투쟁의 장으로 선택하면서, 인구정책을 오롯이 관료들의 손에만 맡겨 놓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정책에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싱가포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만과 한국은 매우 유사한 출산율 변화 패턴을 보였다.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이 두 국가의 인구정책과 경제개발 전략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Kwon 2001; Liu 2001).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이행하면서 1980년대 초반 두 국가의 출산율은 인구 대체수준으로 떨어졌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 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출산장려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과거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에 개입해온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표면화되고 20년이나 지나서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실행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구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방임주의를 고수해온 일본과 비슷하다. 대만과 한국은 뒤늦게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복지 지출을 확대해왔으며, 이러한 행보는 1997년 동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 첫째,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군사정부는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후에도 강력한 산아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했다. 게다가, 한국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대만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다. 전반적으로 대만은 인구정책의 변화를 꾀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의 권고를 따랐다. 실제로 한국에 비해 대만의 출산율은 1990년대 말까지 여성 1인당 1.71.8명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정책 실행을 하려던 대만정부는 페미니스트와 환경주의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Chen 2012; Lee 2009),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반대의사를 표한 집단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구 정책을 본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2006년 인구정책지침(2006 Population Policy Guidelines)은 과거 사용된 양적지표(합계출산율)들 대신, 생태적 균형이나 성평등 등과 같은 질적 목표를 강조했다. 대만 정부는 2008년 정책방향(Lee and Lin 2016)을 마련하면서 “2006년 인구정책지침”에 기초해 백서 초안을 발표했다. 이런 점에서 대만의 경우, 출산율 관련 정책 논의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때 대만은 인구정책의 전면적인 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지만, 최근 상황은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08년 국방백서에서 출산율 제고가 여전히 대만 사회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합계출산율 등과 같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양적 목표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발표된 백서에서 양적 목표를 강조했다. 향후 10년간 자연인구 감소를 피하기 위해 목표 출생아 수(연간 18만 명)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이·린·2016). 이러한 인구정책의 충돌은 대만의 정치적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2008년판 인구정책백서는 현재 여당인 민진당(DPP)이 작성했고, 2013년판 백서는 이전 여당인 국민당(KMT)이 작성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만의 사례는 인구정책이 정치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 정부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진보와 보수 정치진영의 폭넓은 공감대가 없이는 인구정책의 변화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이 가까운 미래에 상승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출산율이 낮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장려 정책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유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인구정책을 국가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했다. 이는 개발모델 내에서 경제정책의 하나로 복지정책을 수립해왔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포괄적인 복지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동아시아의 복지시스템은 빈약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지는 않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삶의 많은 부분, 특히 육아와 같은 가족 생활에서는 성불평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대부분의 동아시아 정부들은 공공정책이 출산장려 쪽으로 바뀌었다. 과거의 경제개발 논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며,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 가족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출산과 육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Chen, Y.-H. (2012). Trends in low fertility and polity responses in Taiwan.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10(1), pp.78-88.
-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7). Population trends 2017.
- Frejka, T. (2017) The Fertility Transition Revisited: A Cohort Perspectives,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Vol. 42: 89~116
- Frejka T., Jones G. W., and Sardon J. P. (2010) East Asian Childbearing Patterns and Policy Developmen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3): 579~606.
- Frejka T. and J. P. Sardon (2004) Childbearing Trends and Prospects in Low-Fertility Countries: A Cohort Analysis, *European Studies of Population*, European Association for Population Studi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Frejka T. and Calot, G. (2001) Cohort Reproductive Patterns in Low 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103~132.
- Holliday, I. (2005). East Asian social policy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Farewell to productivism?. *Policy and Politics*, 33(1), pp.145-162.
- Human Fertility Database (HFD). (2018). Available at <https://www.humanfertility.org/>.
- Inoue, S. (2001).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Japan, in Mason, A. (ed.).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East Asia*. East-West Center Occasion Paper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No. 123. East-West Center, pp.23-37.
- Kramer, S. P. (2014). *The Other Population Crisis: What Governments Can Do about Falling Birth Rate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oh Eng Chuan. (2010). WILL SINGAPORE'S FERTILITY RISE IN THE NEAR FUTURE? A cohort analysis of fertility. *Asian Population Studies*, 6(1), 69-82.
- Kwon, T.-W. (2001).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and fer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 in Mason, A. (ed.).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East Asia*. East-West Center Occasion Paper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No. 123. East-West Center, pp.39- 64.
- Lee, M. (2009). Transition to below replacement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 in Taiwan.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7(1), pp.71-86.
- Lee, M., Lin, Y.-H. (2016). Transition from anti-natalist to pro-nalist policies in

- Taiwan, in Rindfuss, R. R., Choe, M. K. (eds.).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Switzerland, 259-281.
- Liu, P. K. C. (2001). Population policy and programs in Taiwan, in Mason, A. (ed.).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East Asia*. East-West Center Occasion Paper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No. 123. East-West Center, pp. 65-87.
- May, J. F. (2012). *World Population Policies: Their Origin, Evolution, and Impact*. Washington, DC: Springer.
- Ronald R. Rindfuss, Minja Kim Choe. (Edit). (2015). *Low and lower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pringer.
- Ronald R. Rindfuss, Minja Kim Choe. (Edit). (2016).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pringer.
- Sobotka, T. (2017) Post-transitional fertility: The role of childbearing postponement in fuelling the shift to low and unstable fertility levels. *J. Biosoc. Sci.*, 49, S20~S45.
- Sun, S. H. (2012). *Population Policy and Reproduction in Singapore: Making Future Citizens*. New York: Routledge.
- Tsuya, N. O. (2015).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Japan: Patterns, factors, and policy implications, in Rindfuss, R. R., Choe, M. K. (eds.). *Low and Low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Switzerland, 87-106.
- Yap, M. T. (2001).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Singapore, in Mason, A. (ed.).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East Asia*. East-West Center Occasion Paper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No. 123. East-West Center, pp. 89-113.
- Zeman, K., Beaujouan E., Brzozowska, Z., Sobotka, S. (2018) Cohort fertility decline in low fertility countries: Decomposition using parity progression ratios, *Demographic Research* 38 (5): 651~690.

제4절 아시아의 가족계획사업 및 출산 선호도

Stuart Gietel-Basten (홍콩과학기술대학교)

1. 서론

가. 출산 선호도 구성

출산 선호도는 출산 패턴 분석의 중요한 특징이다⁵¹⁾. 일반적으로 실제 출산율보다 출산선호도가 낮은 고출산 환경에서 이는 미충족 가족계획 수요를 측정하는 핵심 척도로 간주된다. 반면 출산선호도보다 실제 출산율이 낮은 전환 후 출산 환경에서 이들 격차는 출산장려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Bongaarts 2001).

유럽은 두 자녀 규범이 장기간 매우 확고히 자리잡았다(Sobotka & Beaujouan 2014a, 2014b).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선호도 관점에서 다른 강력한 패턴이 확인된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초저출산 국가는 출산 의향(intentions)이 두 자녀 이하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두 자녀 또는 두 자녀 이상을 이상적으로 간주한다(Fukuda & Saotome 2018, Yap & Gee 2018, Choe & Park 2018, Gietel-Basten 2018).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는 아시아 지역 정치권에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다(Casterline & Gietel-Basten 2018, Philipov et al. 2009).

그러나 정책의 동기로서 이들 선호도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면, 저출산 국가의 ‘미충족 출산 욕구’를 더욱 심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두 자녀 규범’이 진화적 인간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천성임을 시사하는 증거가 상대적으로 적다(Basten 2009). 사망자 수가 0이거나 무시할만한 수준이고 양과 질이 상충하는 시나리오(quantity-quality trade-off scenario)에서는 1명이 가장 이상적이다. 반면 개인의 경제적 성공을 최우선시하는 시나리오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녀 수는 0명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선천적 자녀 수’는 규정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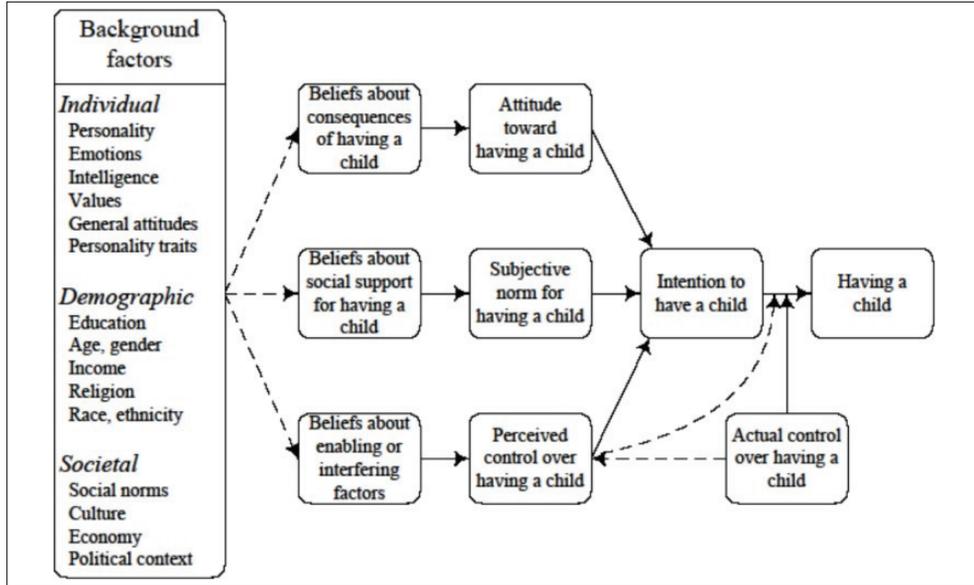
51) 출산 선호도의 이론에 대한 주요 문헌 자료 개요는 Casterline & Gietel-Basten (2018), Philipov et al. (2009) 및 van de Kaa (2001)를 참조하였다.

그러면 이들 선호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우선 이들 선호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들 규범이 최저출산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매우 강력한 두 자녀 규범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율 또는 경제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많은 아시아 지역이 두 자녀를 이상자녀수로 간주하고 있다(Gietel-Basten, Casterline & Choe 2018, Gietel-Basten & Rajbhar 2018 참조). 반면 파키스탄은 네 자녀 규범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영아 사망률, 남아 선호사상 및 낮은 경제 발전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Wazir 2018). 인도의 많은 무자녀 여성은 한 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Gietel-Basten & Rajbhar 2018).

이러한 선호도를 설명하기 위해 문헌 자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출산과 출산 포부(fertility aspirations)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이상자녀수로 정의되는 출산 선호도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이론적 틀은 영향력 높은 저출산함정 가설(LFTH: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이다(Lutz, Skirbekk & Testa 2006). LFTH의 틀에서 이상자녀수는 코호트 출산율을 낮추는 저출산율의 자기강화 주기에 속하며 주로 어린 자녀를 둔 사람 수로 형성된다. 즉, 자녀수가 바뀌면 선호도도 바뀔 수 있다. 출산 변천(fertility transition)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율 변화는 개인의 이상자녀수 감소와 분명히 관련되어 있지만 관련성의 정확한 특징과 인과기제는 분명하지 않다. 관련성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 TPB)의 틀에 기반한 접근법은 더욱 포괄적이다(Ajzen 1991, Ajzen & Klobas 2013). 그림 3-38과 같이 출산 의향은 여러 경로에서 파생된다. 출산 의향은 개인적 및 사회적 수준에서 역량 및 실제(또는 인지된) 규범 또는 제약으로 기능하는 다양한 결정요인과 변수의 결과이다. 이러한 더욱 전체론적 접근법을 통해 출산 선호도를 다양한 수준에서 많은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개인의 심리와 선택에 의해 변화하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4-25] 출산 선호도와 의사결정에 적용된 계획된 행동 이론



자료: (Ajzen and Klobas 2013).

나. 중국은 예외인가? 단서인가?

저출산 국가의 두 자녀 규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예외는 중국이다. 실제로 중국은 두 자녀 이하를 이상자녀수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 (Zheng, Gu & Gietel-Basten 2018, Basten & Gu 2013, Hou 외 2014). 이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지난 30년 동안 중국 국민들이 산아제한정책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출산 선호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는 청중들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접근법은 ‘타고난’ 정서보다 출산 선호도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법이 우수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지난 30년간 산아제한 정책이 중국에서만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금지적 특성이 이들 선호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30년간 실시된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실제 출산 선호도가 형성됐지만 현재 추가 출산을 허용 또는 나아가 장려하는 흐름은 부모 세대(또는 잠재 부모)의 인식에 반해 동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의 사례가 LFTH에 어떻게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자녀수 제한은 많은 이들이 ‘한 자녀’를 이상자녀수로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과기제 확인 시

LFTH는 금지적 정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론적 방식으로 이러한 선호도 구성을 조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단, TPB를 사용하면 가족계획 제한이 이러한 출산 선호도 구성 틀에 적합한 경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녀 수가 제한된 커플의 경우, '출산에 대한 실제 통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선호도 형성과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최근 가족계획제한이 두 자녀를 출산할 자격을 갖춘 가정의 출산 선호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역에서 강력한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하고 소가족(및 특히 한자녀 가족)의 장점을 알려왔다(Basten and Jiang, 2014). 이를 위해 정부는 익숙한 선전 포스터를 제작하고 교육 및 고용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소가족/한 자녀 가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러한 중국 상황에서 출산 선호도 형성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순진해 보일 수 있다.

TPB로 다시 돌아가서 수십 년간의 산아제한 정책이 '한 자녀 출산 결과에 대한 신뢰', '한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신뢰', 및 '가능 및 간섭 요인에 대한 신뢰' (후자의 경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포함)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자. 이들 신뢰가 정부의 중재를 통해 주관적 규범과 인식으로 바뀌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정부의 최근 가족계획정책이 중국의 이러한 신뢰 형성(최소한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출산 선호도 형성 시 사회경제적 요소의 역할과 관련하여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 간 공통점에 몰두하면 가족계획사업의 잠재적 역할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중국의 가족계획사업이 특히 유명하지만(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고 제한적임), 유일하지는 않다. 실제로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가족계획사업이 (중국처럼 기타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출산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Cleland et al. 2006). 초기 출산율 변화(및 출산율이 높은 환경 검토)의 이론적 틀에서 '자녀 수요'는 가족계획사업과 기타 정부 정책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이와 같이 국가 주도형 가족계획정책이 중국의 출산 선호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환경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의 또 다른 목표는 출산 선호도와 결과의 관점에서 '아시아 예외주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들 아시아 국가와 일부 유럽/미국/오스트랄라시아 국가의 가장 큰 차이는 지난 수십 년간 대대적으로 시행된 산아제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피임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정보,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IEC: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활동

을 수행했다. (즉, 중국의 IEC 프로그램은 '선진'으로 간주되어 아시아의 다른 가족계획사업과는 별도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Miro and Potter (1980, 63)는 70년대 후반 가족계획을 관찰하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일부 산아제한 정책은... 특히 장려책과 억제책의 관점에서 다소 강제성이 있고 이는 지역에서 논쟁의 빌미가 되었다."라고 기록했다. 즉, 강압적 관행은 중국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출산 선호도와 출산 관련 규범 형성에 있어 이들 IEC 사업(및 기타 강압적 요소)의 가능한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유럽 저출산 지역과는 다소 다른 아시아의 출산 패턴 형성에 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실제로 '저출산함정 (Low Fertility Trap)' 가설은 이들 가족계획사업이 사회적 및 문화적 규범을 통해 출산 선호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무시한다.

2. 아시아 '저출산' 지역의 가족계획사업 및 출산 선호도 구성

가. 산아제한 정책

교육, 여성해방, 도시화, 성장, 건강 증진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가족계획사업이 아시아 지역 출산율 저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많은 문헌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IEC 캠페인과 활동 범위 모두에서 중국의 가족계획이 가장 유명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나라가 가족계획제도에 집중 투자했다. 중국이 뚜렷한 저출산 기조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다른 아시아태평양 저출산 지역에서 산아제한 정책이 모두 과거의 유물만은 아니다. 표 3-20은 각국의 대체 출산율 도달 시점과 산아제한 정책이 바뀐 시점 간 시간차를 보여 준다. Jones, Chan and Straughan(2009)은 정책 전환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를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후에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인구통계학적 모멘텀, 산아제한 정책 담당 기관의 타성과 관료적 태도, 및 인구변천이론 결핍 등 세 가지로 요약했다(p. 6). 실제로 Jones 외(2009)는 대체 출산율 회복에 대한 UN의 가정은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분명히 덧붙였다(p.7). 결과적으로 이유가 무엇이든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시

점에도 출산을 제한하는 IEC 계획이 계속 시행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증거는 과거 세대에서 찾을 수 있다.

〈표 4-7〉 산아제한 정책 전환까지 지연된 기간, 주요 아시아태평양 국가

국가	대체 출산율 도달 연도	산아제한 정책 역전/중단 연도	산아제한 정책 역전/중단 시 TFR	경과 햇수	전환 시 대체 출산율 이하 %	비고
싱가포르	1975	1987	1.62	12	20.98	
한국	1984	1996	1.59	12	22.44	매우 온건한 출산장려 정책
		2004	1.14	20	44.39	매우 심각한 출산장려 조치
대만	1984	1992	1.73	8	15.61	출산장려 성명, 조치 없음
		2006	1.12	2	45.37	구체적인 출산장려 조치 검토 중
일본	1973*	1990	1.54	17	24.88	가벼운 출산장려 조치
홍콩						“기존 정책이 출산을 저해하는지 검토”**
SAR	1980	2003	0.93	23	54.63	
태국	1991	2002	1.59	11	22.44	“대체 출산율 유지가 목표”***
베트남	1999	2015?	1.77	16?	13.66	“두 자녀 정책 검토 중: 2012년 TFR”
중국	1992	No reversal		23+		

주: *일본 TFR은 20세기 중반 오랫동안 대체 출산율을 유지했으나 1973년 대체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 홍콩 가족 계획협회의(Family Planning Association of Hong Kong) 성명서, [2] 참조. ***[3]

자료: 세계은행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표 1.2 참조 및 확대(New York, NY, 2014),

[1]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cid=GPD_WDI:NationalDevelopmentCouncil\(R.O.C.\)](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cid=GPD_WDI:NationalDevelopmentCouncil(R.O.C.)), “Population Projections for R.O.C. (Taiwan): 2012~2060,”

[2] Kwok-him Ip, “LCQ5: Hong Kong’s Fertility Rate,” 2013, <http://www.info.gov.hk/gia/general/201306/05/P201306050610.htm>.

[3] UNFPA,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in Thailand (태국 방콕: UNFPA, 2011), 9. 참조

물론 여기서는 전체 제도는 고사하고 이들 각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IEC 구성요소도 모두 정리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상적’ 또는 ‘최적’의 자녀 수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몇몇 IEC 제도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할 수는 있다. 이러한 연구가 처음임을 고려해, 언론, 모토, 및 이미지는 물론 공식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다. 이를 통해 이들 정책 메시지가 자녀 수에 대한 (지역적) 사회문화적 규범 형성의 한 가지 구성요소로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나. 한국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 수 구성

1962년 한국은 기본적인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가족계획 공급 및 서비스 제공 및 원치 않는 출산을 줄이기 위한 ICE 캠페인 등을 토대로 가족계획사업을 출범했다(Haub 2010).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PPFK: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가 관장했다(한국 가족계획사업의 초기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ang 1977; Yang et al. 1965, 더욱 최근 조사는 DiMoia 2009 참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활동 초기 이상자녀수의 관점에서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를 모토로 내세웠다(Yang 1977, 68). 3년 후 이 구호는 ‘세 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라는 일명 3335 운동으로 바뀌었다. 그 외 IEC 사업에는 신문에 시리즈로 발표되어 서울의 인구압박을 환기시킨 ‘서울은 만원이다’가 있다(DiMoia 2009, 367). 이 시기 가족계획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DiMoia(2009)는 “예상과 달리 새로운 산아제한 기술은...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단을 찾고 있던 농촌 여성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고했다(p.367). 1970년이 되자 남아선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가 등장했다(Yang 1977, 68). 당시 많은 유자녀 여성들이 두자녀회와 어머니회에 가입해 전국을 순회하며 가족계획사업 참여를 장려했다. 1970년대 말 한국은 전체 보건 예산의 거의 절반을 가족계획사업에 투입했다(Miro and Potter 1980, 62). Miro and Potter(1980)는 1970년대 말 대만을 산아제한 정책 시행국가에 추가했다(p.63).

1980년대에도 IEC 캠페인은 계속되었지만 변화가 나타났다. 아들과 딸이 다르지 않다고 설득하는 포스트가 넘쳐났고 이를 인구과잉 문제와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에는 빨간 고추(정력과 남성성 상징) 안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집어 넣고 “아들 하나 때문에...인구 문제는 네 문제 또는 내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등장하기도 했다(Koreabridge 2011). 이 외에도 이 시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DiMoia(2009, p.376)는 이를 “국가가... 이상자녀수를 1명이라고 권장했다”고 설명한다(Kim & Ross 2007; Nikolaevich 2007 참조). Suh(2005)가 관찰한대로, 1980년대를 대표하는 구호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그림 4-26]은 당시 사용된 몇 가지 IEC 포스터를 보여준다. 시계 방향으로 “한 가정 사랑 가득, 한 아이 건강 가득”;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

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하나면 족합니다.”라는 구호가 적혀져 있다. 오른쪽 아래 포스터에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증가에 의한 주택문제, 식량문제, 실업문제 등이 선진조국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짐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인간이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는 적정의 인구가 모여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라고 적혀있다.

[그림 4-26] 한 자녀를 장려하는 가족계획 포스터, 한국, 1980년대



자료: Koreabridge.net의 허가 하의 복제물

1980년대에는 이처럼 공식적으로 한 자녀를 장려했지만 Clark(2000, 157)에 따르면 가족계획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아들 딸 구별 없이 둘이 이상적”이라고 교육 받았다고 한다. 즉, 1980년대는 한 자녀와 두 자녀 메시지가 공존하면서 지속적으로 충돌하던 시대였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이러한 가족계획 활동과 메시지를 양날의 검이라고 평가했다 (DiMoia 2009; Bae 2003). 가족계획이 여성들에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성은 동시에 두자녀회 등을 통해 자녀수에 대한 사고를 바꾸기 위한 국가의 주체이자 대리인이기도 했다.

다. 대만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 수 구성

대만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성공적인 가족계획을 시행해왔다(Freedman 외 1974). 대만은 1960년대 중반 가족계획사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가족계획이 없었더라도 계속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McGuire 2010, 190). 그러나 Freedman, Chang, and Sun(1994)은 가족계획사업이 없었더라면 “출산율이 더욱 느리고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국민들의 많은 희생이 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iro & Potter(1980, 63)는 1970년대 말 대만을 산아제한 정책 시행국가에 추가했다. 이상자녀수에 대한 IEC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Sun(2001)은 다단계 과정에 주목했다. 1967년 대만 정부는 ‘결혼 3년 후부터 3년 터울로 자녀를 낳아 35세 이전에 단산하자’라는 일명 ‘53’ 운동을 실시했다(p.69). 1969년에는 ‘자녀 수가 적을수록 행복하다’를 모토로 채택했고 1970년대에는 “두 자녀가 좋다”라는 구호 아래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Peng 2003). 1980년대가 되자 “둘이 좋지만 하나도 적지 않다”로 바뀌었다(Peng 2003). Marc L. Moskowitz (2001, 17)는 대만의 성생활에 대한 그의 저서에서 1990년대 대만 극장에서는 영화를 상영하기 전 어린이들이 부르는 대만 국가를 배경으로 어린 여자아이 한 명과 행복한 부모, 조부모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들 구호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다. Moskowitz (2001, p.17)는 이를 “한 자녀, 특히 딸을 가족의 화합과 행복뿐 아니라 국력의 기반으로 제시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1990년대 대만 내무부는 “둘도 좋고 셋도 많지 않다”라고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구호를 다시 바꾸었다(M. Peng 2003). 이후 “두 자녀는 행복, 세 자녀는 생존”이 새 구호로 등장했다(대만 교육부 2015).

라. 싱가포르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 수 구성

가족계획은 싱가포르의 출산을 감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싱가포르는 1965년 가족계획 5개년사업을 출범하고 1966년 1월 가족계획인구위원회(FPPB: Family Planning and Population Board)를 설립했다⁵²⁾. Miro and Potter(1980)는 1970년대 말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한국, 홍콩, 대만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했다”라고 평가했다(p. 63). FPPB는 1986-87년 산아제한 의제를 제안했다(표 1 참조). 그리고 1972년 ‘두 자녀 규범’(Teng 2007, 205)을 공식 채택하고 1970-1986년까지 ‘둘만 낳자(Stop at two)’을 공식 구호로 사용했다(싱가포르 국가기록보관소 2015). 그 외에도 “아들이든 딸이든 둘이면 충분하다(Girl or boy, two is enough)”, “하나, 둘이 최고다(One, two...and that’s ideal)”, “두 자녀 가족 계획(Plan a two-child family),” “소가족, 밝은 미래: 둘이면 충분하다(Small families, bright future: Two is enough)”, “둘째는 기다릴 수 있다. 아들이든 딸이든 둘이면 충분하다(The second can wait: Girl or boy, two is enough)”, “천천히 결혼하고 첫째, 둘째를 낳자(Take your time to say ‘yes’ to marriage, having your first child, and your second)” 등과 같은 구호를 사용했다(Times of My Life. 2014, 싱가포르 국가기록보관소 2015 참조). 두 자녀 가정의 경우 딸만 둘인 경우도 증가했다(싱가포르 국가기록보관소 2015).

싱가포르 가족계획제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Sun 2012; Song, Chang & Sylvian 2013). 정책의 우생학성과 강압성에 특히 비판이 집중됐다. 예를 들어 ‘둘이면 충분하다’ 캠페인은 주택 배정 시대 가족에 별점 부여, 다산 자녀의 학교 배정 제한, 병원비 인상 등 빈민층에게 불공평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패널티와 억제책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가난한 가정을 대상으로 했다는 비판이 있다(Remember Singapore 2013). Miro and Potter(1980)는 이를 토대로 1980년대까지 싱가포르 가족계획 정책의 강압적 요소에 주목했다. 1980년대 중반 Wee(1995)는 싱가포르의 가족계획 정책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에서 ‘차등 계층별 출산장려 정책’으로 바뀌었다(p.201)고 평가했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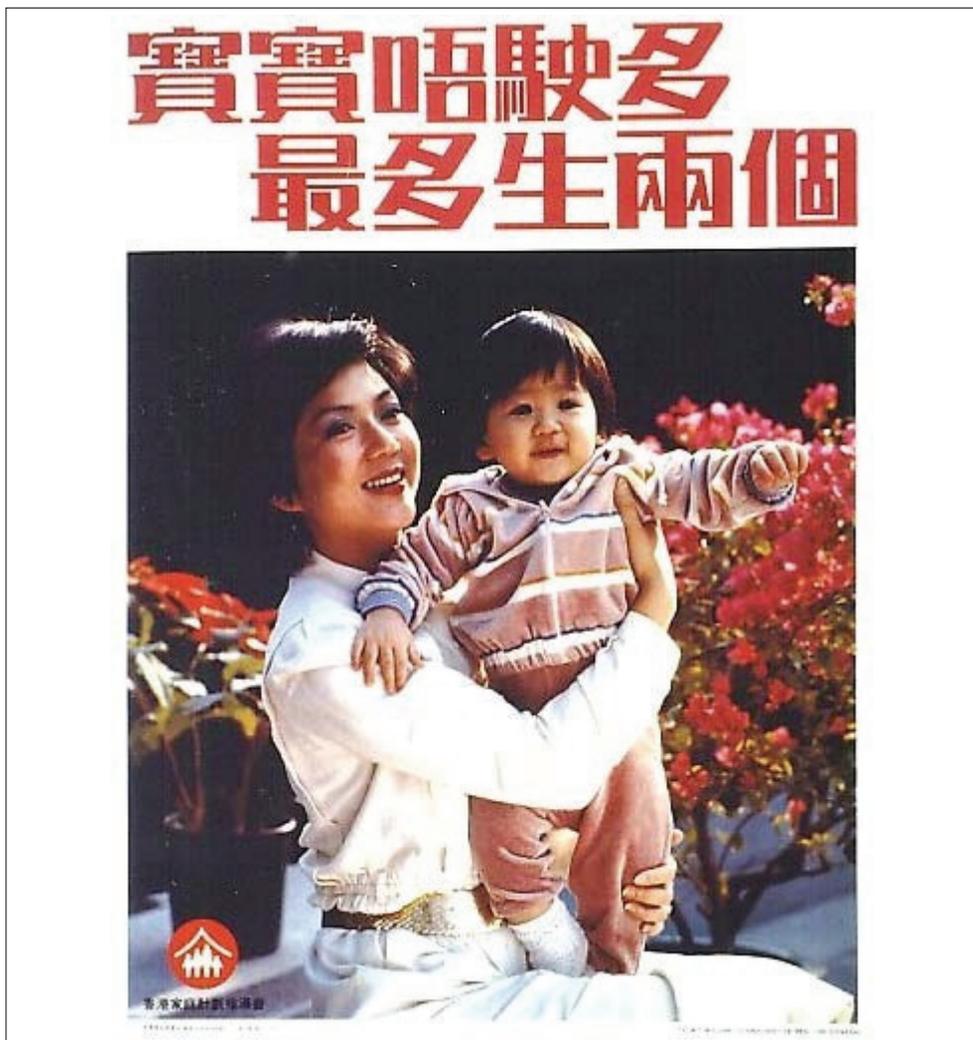
52) 싱가포르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 역사에 대한 개요는 Teng (2007) 및 Thomson & Smith (1973)의 초기 역사 참조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고 교육받지 못한 빈민층 부모의 자발적 불임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대졸 유자녀여성 우선지원제도 (*Graduate Mother Priority Scheme* which)를 도입했다(Palen 1986, 3). 그러나 이 제도는 곧 폐지되었고 1987년 “키울 수 있으면 셋 이상 낳자”라는 새로운 IEC 제도가 도입됐다. Sun(2012, 30)은 이를 “부모의 교육 수준보다 경제적 자원의 적합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Drakakis-Smith and Graham(1996, 69)은 1990년대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국가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를 주로 계급 이익[월가계소득으로 측정]을 통해 실현했다”고 결론지었다. 최근 싱가포르의 출산장려 개혁은 Jones (2012), Sun (2012), Song, Chang, and Sylvian (2013)을 참조한다.

마. 홍콩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 수 구성

홍콩의 가족계획사업은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제도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홍콩은 정부기관을 결성되기보다는 1936년 설립된 우생학리그(Eugenics League)를 통해 1950년 가족계획협회(Family Planning Association)를 설립했다. 가족계획협회는 1960년대 크게 성장했고 1970년대 “둘이면 충분하다”라는 구호 아래 매우 효과적인 IEC 캠페인을 개발했다(홍콩 가족계획사업의 역사는 FPAHK(2015)와 Fan(2007) 참조). 1950년대와 1960년대 IEC 포스터에서는 “적을수록 좋다”라는 메시지를 홍보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가 되자 “둘이 최고다(Two babies is the best)”라는 포스터를 사용한 두 자녀 메시지가 더욱 뚜렷해졌다. 1982년에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둘이 최고다”라는 포스터가 제작됐다(그림 3-40 참조). 이러한 암묵적인 수용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달리 한 자녀 가정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림 4-27] 홍콩의 가족계획 포스터, 1982년. '자녀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둘도 많다.'



자료: 홍콩 가족계획협회, “1982년 가족계획포스터,” 2015년
<http://www.famplan.org.hk/fpahk/en/template1.asp?style=template1.asp&content=info/poster/show.asp&year=1982&poster=pic1982.jpg>.

바. 일본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 수 구성

일본의 가족계획은 1920년대 산아제한의 필요성과 “자녀 수 제한 또는 규제”를 시작으로 길고 복잡한 역사를 형성했다(JICA 연구소 2005, 80). 일본 가족계획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mura(1984), Koya(1957), Muramatsu 외(1985)를 참조

한다. 일본의 출산율은 1950년대 이미 거의 대체 수준에 도달했다. 일본의 가족계획사업은 1952년 시작됐지만 이전에도 우생학 운동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활동이 이뤄졌다(일본 국제협력기구 2005).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이케다 내각이 제정한 일명 국민소득배증정책(National Income Doubling Policy)에 따라 정부가 수출 관련 산업에 집중하면서 가족계획 문제에는 소홀하게 되었다. 1965년 청년 노동자가 부족해지자 기업과 시장은 '인구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가족계획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1970년대에는 '저출산이 문제다'라는 이유로 낙태 규정을 강화한 우생학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따라서 1990년대 초까지 출산장려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번 장에서 살펴보는 다른 나라가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이상자녀수에 대한 IEC 메시지를 홍보하는 동안 일본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사. 태국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 수 구성

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다른 나라보다 다소 늦게 시작됐다(태국 가족계획사업의 개요는 Rosenfield & Min(2007), Knodel, Chamrathitrong and Debavalya (1987, 9장) 참조). 태국은 1968-70년 가족건강프로젝트(*Family Health Project*)를 설립했고 1970-80년 이를 이어받아 국가가족계획사업(NFPP: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을 시행했다. 가족건강프로젝트 초기에는 IEC 활동이 금지됐었다. Rosenfield and Min(2007)에 따르면 1980년대 NFPP는 태국 여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지원해 가족계획 참여자가 1972년 22만 5천명에서 1980년 112만명으로 급증했다(p.229).

태국의 이러한 성공은 정부의 지원 또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이 부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오히려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여성의 높은 지위, 태국 불교 문화의 자유주의, 개인의 자율성과 사생활 존중, 개인 행동에 대한 대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영향 부족 및 불교의 실용주의 등과 같은 태국 문화가 가족계획 보급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되었다(Rosenfield et al. 1982; Knodel & Debavalya 1978).

명시적 IEC 활동과 관련하여 Knodel, Chamrathitrong, and Debavalya(1987)는 "[NFPP]는 산아제한 선호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다"고 기록했다(p.187). 1980년대 후반 Knodel과 공동 저자들이 개최한 포커스그룹 회의에서 응답자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Knodel et al.는 "포커스그룹 회의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부 구세대를 포함한 불교신자들이 대체로 소가족 규범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계획사업의 활동이 부여한 정당성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p.187)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EC 활동은 태국의 주목할만한 출산 선호도 형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오히려 가족계획사업의 성공과 발전의 밑거름인 태국 문화가 이들 선호도를 이해하는데 더욱 중요할 수 있다.

3. 기타 아시아 지역의 가족계획사업과 출산 선호도 구성

앞선 장에서는 현재 저출산 지역에서 지난 수십 년간 가족계획정책이 두 자녀 출산 그리고 경우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한 자녀 출산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Gietel-Basten, Casterline and Choe(2018)는 한국, 일본, 대만 정도는 아니지만 출산율이 감소하는 다른 아시아 지역의 출산 선호도 패턴을 설명했다. 일부 예외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특히 인도와 네팔의 다양한 환경에서 두 자녀 규범을 확인하고 한 자녀 개념에 대한 놀라운 사례를 소개했다(Shekher 외 2018, Channon & Karki 2018). 이번 장에서는 국가별 가족계획 정책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가족계획사업이 특정 자녀수를 장려함으로써 출산 선호도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 사업을 통해 특정 자녀수를 장려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가. 남아시아와 서아시아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수 구성

먼저 인도를 살펴보자.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인도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서는 두 자녀 개념이 널리 퍼져 있다(Gietel-Basten & Rajhbar(2018), Shekher 외(2018) 참조). 인도가족계획기구는 199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대체 출산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 자녀 이상(‘추가’ 자녀) 출산을 강력히 저지하는 일명 두 자녀 규범이 탄생했다. 정부는 부모와 자녀 둘로 구성된 가족 계획 포스터와 이미지를 널리 배포했다(그림 3-41의 1990년대 우표 참조). 실제로 출산율이 높은 일부 주는 불임 수술 시 의료보험 혜택 제공, 정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결혼 연령 제정, 셋째부터 무료 교육과 급식 제한 등과 같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마하라시트라와 라자스탄 주는 자녀가 둘 이상인 여성에게 공공배급을 통한 음식 지원을 제한했다(“두 자녀 규범”에 대한 9가지 사실 2013).

[그림 4-28] 가족계획을 선전하는 우표



자료: “인도가족계획우표,” 2015년 1월 25일 접속, <http://www.somestamps.com/pages-articles/301-350/article342-200812-india-family-planning.html>.

“인도가족계획우표.” 허가번호 230114 Depositphotos에서도 이용 가능, “Stock Photos, Royalty Free Photography, High Resolution Pictures,” 2015, <http://depositphotos.com/stock-photography.html>.

그 외에도 지역 공공기관인 판차야트 라지(*panchayat ra*)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일명 판차야트의 두 자녀 규범을 제정했다(Buch 2005). 중국의 가족계획 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은 이 두 자녀 규범은 첫째 지역 대표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고, 둘째 가족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역의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Bhat 2003). 두 자녀 규범은 안드라 프라데시, 비하르(도시 지역기구), 차티스가르, 구자라트, 하리아나, 히마찰 프라데시, 마디야 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오디샤, 라자스탄 등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이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Rao(2003) 참조). 예를 들어 판차야트의 두 자녀 규범은 생식권을 침해하는 강압적 가족계획 조치이고(Bhat 2003) 유권자의 의지를 기술적으로 무효화하고 빈곤층, 청년 및 여성의 정치 활동을 불균형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반민주적이라는(Buch 2005)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티스가르(2000), 하리아나(2005), 히마찰 프라

데시(2005), 마디아 프라데시(2000) 등 4개 주는 판차야트 규범을 폐지했다.

앞서 논의한 제한과 선전에 표현된 가족의 관점에서 가족계획의 상당 부분이 두 자녀 규범을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Gietel-Basten and Rajhbar(2018)에 언급된 한 자녀 가정 이상화와 증가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잠깐 검토해보자. 첫째, 많은 가족계획이 부모에게 “둘째를 갖기 전에 3년을 기다리라”라고 말한다(그림 5 참조)(Krock 2004). 이들 메시지가 효과가 있었다면 터울이 길어지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도의 가족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가족’과 ‘행복’ 및 ‘개인 성공’을 연계시킨 경우가 많다. 가족계획 포스터(그림 5)는 물론 우표(그림 6)에서도 한 자녀 가족을 모델로 사용했다. (성별 선택적 낙태를 줄이기 위해 항상 딸을 자녀로 등장시켰다. [그림 4-29]은 사춘기 자녀가 등장해 이들이 확실히 한 자녀 가족임을 보여준다).

[그림 4-29] 날짜를 표시하지 않은 인도 가족계획포스터 번역: 건강한 가정을 위해, 둘째를 갖기 전에 3년을 기다리세요. 정부 보건종사자, 병원 및 보건소에서 이러한 가족계획방법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 존스 홉킨스 대학 블룸버그 공중보건학교/커뮤니케이션센터의 재료용품 클리어링 하우스의 무료 제공 <http://www.pbs.org/wgbh/nova/earth/population-campaign.html>

[그림 4-30] 한 자녀 가정 이미지로 소가족을 장려하는 우표 2개



자료: <http://iic.ac.in/projects/nic/Contrivers/1999.html>의 복제 허가

마지막으로 역설적이게도 인도의 가족계획사업은 한 자녀 가정 확대를 저해했을 수도 있다. Gietel- Basten and Rajhbar(2018)는 한 자녀 가정이 실제 수보다 훨씬 이상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격차는 피임과 가족계획에 대한 ‘미충족 욕구’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실제로 도시 여성의 약 10%가 계획되지 않은 또는 우발적 임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Khanna 2009).

물론 남성 또는 여성이 우표에 등장하는 가족을 보고 출산 선호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에서 한 자녀 가정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인도의 두 자녀 규범 정책과 판차야트 제도가 국가의 출산 선호도 형성에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한 자녀 가정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04년 방글라데시 보건복지부는 국가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둘 보다는 하나, 셋은 안돼(Not more than two children, one is better)”라는 구호를 사용했다(GOB 2004). 당시 중국 언론은 Mohammed Abdul Qayyum 가족계획부 국장이 “중국처럼 가족계획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가족계획부가 “한 자녀 가정”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People’s Daily Online 2009). 또한, “한 자녀 가정은 주립 시설 이용 시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보도했다(People’s

Daily Online 2009).

2014년에도 Ehsan-e-Elahi 가족계획부 부국장이 “‘둘 보다는 하나, 셋은 안돼’라는 구호 아래 인구폭발을 막는 사회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전국민의 참여를 호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National News Agency of Bangladesh 2014). 그러나 같은 해 말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구호에 불만을 표시하고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됐다. 언론은 “구호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 자녀를 강조하는 부분을 삭제했으면 한다”라는 총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Bdnews24.com 2014). 그리고 “과거 ‘한 자녀 정책’을 실시했던 많은 국가가 현재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 나라에는 청년이 없다”라는 총리의 과거 발언도 함께 보도됐다(National News Agency of Bangladesh 2014). 결과적으로 하시나 총리는 두 자녀 가정을 지지했다.

방글라데시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있었으나(개요는 National News Agency of Bangladesh 2014 참조), 이 구호 및 국민들의 수용과 내면화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최근 방글라데시 두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성 연구에 따르면 쿨나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여성은 정부의 한 자녀 가정 정책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 양육 시 친척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한 자녀가 최선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남아선호사상, 유아 사망 가능성, 형제자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둘째 출산의 압박을 받고 있다(Khatun 2011). 한편 실헛(Sylhet) 지역에서 열린 포커스그룹 토론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한 자녀 정책을 지지했지만 나중에 아들로부터 부양을 받으려면 두 자녀 이상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학계는 중국의 경우처럼 (여성의 교육 확대로 인한) 결혼 연령 증가는 물론 기타 사회문화적 규범 변화에 초점을 맞춰 가족계획사업이 이란의 출산율 감소에 미친 영향을 재평가하려고 노력했다(Karamouzian and Haghdoost 2015; Abbasi-Shavazi, McDonald, and Hosseini-Chavoshi 2009).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1989년 12월 출범한 최초 가족계획사업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여성들에게 자녀 수를 셋으로 줄이도록 장려하는 것이다(Roudi-Fahimi 2002). 그러나 1970년대 초반해도 ‘둘이면 충분하다’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전국에 내걸렸다(Karamouzian, Sharifi & Haghdoost 2014). 실제로 Roudi-Fahimi(2002, 5)가 언급했듯이 1990년대 가족계획은 “자녀가 적을수록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인

구가 적을수록 기회가 늘어나고 번영한다”, “자녀가 적으면 삶이 풍족해진다. 딸이든 아들이든 둘이면 충분하다” 등과 같은 구호 아래 “가정과 사회 모두의 이익을 강조하고 소가족을 권장”했다. 그러나 Roudi-Fahimi (2002)가 관찰한대로, “하나면 좋고, 둘이면 충분하다”라는 다소 이질적 가족계획포스터도 함께 사용됐다. 이는 1970년대 중국에서 사용된 “하나는 적당하고 둘은 충분하고 셋은 많고 넷은 과하다”(Madsen 1991, 674)라는 구호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된다.

터키에서도 자녀수에 관해 “하나는 적당하고, 둘은 충분하고, 셋은 문제고 넷은 집시들만 좋아한다”(Kaplan 2006, 138)라는 비슷하지만 다소 차별적 구호가 사용됐다. 즉, Mahmoodi, Mohammadpur, and Rezaei(2014)가 이란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소가족의 개인과 사회적 이익 개념과 인구 증가 속도 감소는 1990년대 ‘이슬람 현실주의’ 담론 안에서 이뤄졌다.

최근 가족계획사업 변경안과 개혁으로 메시지 문제가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Amuzegar 2013).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2005-2013년까지 일반적 관점과 더욱 명시적으로 특정 자녀수 장려 측면 모두에서 인구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2011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나는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두 자녀 정책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오늘날 이란의 가구당 평균 자녀 수는 2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서구 사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오늘날 서구 사회는 이렇게 잘못된 정책의 결과에 직면해 있으며 자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정책을 따라야 하는가?” (Mahmoodi, Mohammadpur, and Rezaei 2014에서 인용함).

2012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하 사에드 아일 카메네이(Ayatollah Syed Ali Khamenei)는 “인구억제 정책과 가족계획은 수정되어야 하고 당국은 현재 한 자녀, 두 자녀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M. Roberts 2015). 앞서 밝혔듯이 자녀수에 관한 가족계획 메시지가 두 자녀 또는 한 자녀 정책 측면에서 이란의 출산 선호도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계속된 한 자녀 메시지가 출산 선호도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 또한 정책의 메시지가 효과가 없었다면 최근 개혁에서 이들을 포괄적 목표를 삼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이란은 “최소한 두 자녀 이상이 적당하다”를 새로운 가족계획 구호로 채택하고(Karamouzian, Sharifi and

Haghdooost 2014) 테헤란에 “한 송이 꽃이 봄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옥외광고를 게시했다(Tait 2013). 본 보고서 후반부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Djavad Salehi- Isfahani가 지적한 대로 “[이전까지] 여성들의 바람 [즉, 소가족과 일과 육아의 병행]이 옳았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틀렸다고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De Bode 2015).

기타 남아시아 국가를 살펴보면, 파키스탄과 몰디브는 일반적으로 ‘소가족’과 출산 터울을 권장하지만 한 자녀 또는 두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Niraula 2010, Hardee and Leahy, 2008). 파키스탄 인구위원회의 지부장인 Zeba Sathar 박사는 2012년 UNFPA 보고서에 “두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언급했지만(Zeba Sathar and Zaidi 2012, 18), 이는 개인적 이견일 뿐 가족계획 메시지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물론 이들 두 나라는 한 자녀 개념에 대한 인식 또는 수용 정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네팔은 어떠한가?

네팔은 3차 5개년개발계획(1965-70)에서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한 이래(Zaman, Masnin, and Loftus 2012, 173) 매우 포괄적인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해왔다(USAID 2008).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행동 변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한 소가족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USAID 2008). 예를 들어 “두 자녀는 하늘의 축복(*Dui Santan—Ishwor ko Bardan*)” 및 “둘째는 언제? 첫째 입학 후에(네팔어: *Doshro bachha kahile? Pahile school janchha jahile*)” 등과 같은 자녀 수에 관한 다양한 구호 또는 노래를 제작해 배포했다.⁵³⁾ 그러나 ‘성공적인’ 한 자녀 가정(왼쪽)과 고생하는 다자녀 가족(오른쪽)을 비교한 그림 3-44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자녀 가정이 가족계획 메시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53) Pers. Comm. Samir KC, 2015년 8월 21일자 이메일

[그림 4-31] 소가족을 장려하는 네팔 랄리투르 지역의 벽화 광고



자료: 저자의 사진

나. 동남아시아의 가족계획사업과 이상자녀 수 구성

이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부터 살펴보자. 많은 연구 결과 인도네시아의 가족계획사업은 두 자녀 규범 홍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말에는 자녀가 너무 많으면 엄마와 다른 자녀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는 메시지가 사용됐다(Hull 2007, 253). 인도네시아의 가족계획사업은 1967-68년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1989년 수하르토 대통령은 가족계획사업 지원과 출산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유엔인구상을 수상했다. Piet (2003)는 인도네시아의 가족계획사업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으로 인정 받았다(p.83)”고 기록했다. 그러나 Hull(2007, 240)이 언급했듯이 “많은 인구통계학자들은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율 변화의 주요 원인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촉매제로 보았다.”

1990년대 말, 국가가족계획조정위원회(BKKBN: National Family Planning Coordination Board)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소가족 장려”에서 “2010-15년까지 두 자녀 규범 적극 장려”로 일반 목표를 수정했다(Permana & Westoff 1999). 실제로 인도네시아 가족계획사업은 대체로 두 자녀 규범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Permana and Westoff 1999; Melissa Withers and Browner 2011;

Schoemaker 2005). Nurmila and Bennett (2014)에 따르면, 수하르토 대통령과 영부인은 “일부다처제와 이혼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대신 두 자녀 가정을 국가가족계획 제도의 기반으로 삼고 풍요로운 이상적인 소가족으로 제시했다.”(p.71).

또한 최근에는 중국과 대조적으로 더욱 강력한 인구증가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 대가족(네 자녀 이상) 이념이 다시 부상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BKKBN 중앙 자바 지부의 Sri Wahono 지부장은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자녀를 원한다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우려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publika_online 2014). 최근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두 자녀의 이점을 알리기 위해서는 두 자녀의 필요성 대한 사회화를 기초부터 이해해야 한다. 국민들이 예전처럼 많은 자녀를 바라는 것은 (정부의) 캠페인 부족과 가족 계획에 대한 사회화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Inayah 2014).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및 인구통계학적 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몇몇 연구에서 전화(電化)의 잠재 역할은(Grimm, Sparrow, and Tasciotti 2015) 물론 텔레비전 신호 접근이 출산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Dewi, Suryadarma, and Suryahadi 2014) 일부 문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최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BKKBN을 강화하고 “의료카드시스템”을 토대로 두 자녀 규범을 개정하는 방안을 지지했다(Inayah 2014). 실제로 이러한 개념은 소가족을 장려하는 가족계획제도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언론에 강력한 서사를 제시한다(Bugis Pos 2015 참조, 사우스 술라웨시 지역 온라인 신문에서 사우스 술라웨시 지역 온라인 신문 사례 발췌). 마지막으로 Hull이 관찰한 대로 “여성 출산 연령 증가는 교육 수준 향상, 공식 및 비공식 노동 시장 참여 증가 및 출산을 제어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보여준다”(Hull, 2002, p.409).

그러나 마지막으로 수하르토의 신질서 독재 정부의 맥락에서 이처럼 강력한 두 자녀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Hayes (2012a)는 “매우 중앙집권적 국가기구를 설립해 마을에 명령을 내리고 조직의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이를 설명했다. Hayes는 Hull & Hull 1997; Hayes 2012a)와 같은 다른 연구를 참조해 “이러한 광범위한 정치행정제도가 없었더라면 [국가 가족계획사업]을 이처럼 효과적으로 보급 및 조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p.227).

기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최근 출범한 동티모르-레스테(Timor-Leste) 가족계획사업의 주요 IEC 메시지는 최적의 자녀 수보다 3년 이상의 터울에 집중하고 있다(간략한 개요는 Hayes 2012b 참조). 필리핀의 가족계획정책은 엄격하게 산아를 제한하고 무계획적으로 시행되었다가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일정기간 사실상 중단되었다(Herrin 2007 참조). Herrin (2007)이 관찰한 대로 가족복지와 인구에 관한 포괄적 정책 하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적의 자녀 수에 대한 IEC 캠페인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캄보디아(2003년 보건부)는 아시아에서 피임율이 가장 낮고 이상자녀수에 대한 IEC 캠페인도 다소 미약하다(가족계획사업의 개요는 Samandari, Speizer, O'Connell 2010, 보건부 2004 참조).

베트남은 '두 자녀 정책' 또는 '한두 자녀 정책' 등으로 유명하다. 이는 Daniel Goodkind(1995)의 논문은 최근 회의 보고서(Pham 외 2012)에서도 자세히 다뤄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히 검토한다. 베트남은 1960년대 초 인구정책을 도입한 후 1961년 보건부 산하에 인구산하제한기구(Population and Birth Control Unit)를 설치하고 1964년 베트남 북부지역에 IEC 캠페인을 집중하면서 두세 자녀 정책을 홍보했다(Vu 1994). 베트남의 인구정책은 세 자녀 가정을 장려했지만(일부 기본 가족계획서비스로 보완) 이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Goodkind(1995)가 관찰한대로 "북부 지역은 홍수, 제방 붕괴, 댐서스 트랩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1950년대 말 연간 4%에 달하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했다"(p. 87).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 북부 사회주의 정권은 1970년대 중반 중국의 "늦게, 길게, 적게" 캠페인의 전신이 된 인구정책을 시행했다.

1965-1975년까지 지속된 갈등의 시대에는 가족계획사업에 거의 투자를 하지 못해 갈등의 시대 말 베트남의 출산율은 6.0명을 기록했다(세계은행 2014c). 1979년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인구급증 징조가 감지됐고 이로부터 6년 후인 1984년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National Council of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이 설립됐다.

1980년대 일부 지역에서 한두 자녀 장려 정책이 시행되긴 했지만 1980년대 중반 베트남의 출산율은 여전히 4.2명으로 높았고 1988년이 되어서야 국가사업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결혼 연령을 높여 출산을 22세 이후로 미루고 첫째 출산 후 3-5년의 터울을 두고 둘째를 낳아 두 자녀를 유지하도록 장려했다. 정부는 사업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장려책, 억제책 및 '부드러운 설득책'을 종합적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공산당에서 자동 출당되고(공무원, 교사 및 기타 국영기업 취업 시 불리함), 셋째 이상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출생증명서 발부를 거부당하거나 경우에 따라 토지를 몰수당하고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다(Bennett-Jones 2000, Wilson 201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oodkind의 논문(Goodkind 1995, 90-91)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odkind(1995)에 따르면 일부 국영기업은 직원들에게 출산이 가능한 기간을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불이익(예: 임금삭감, 퇴사)을 주는 티켓 두 장을 제공한다(p.91). 또한 여성들에게 둘째 출산 후 자궁절제술을 장려했다(경우에 따라 현금 지급). 그 외에도 다양한 장려책을 계획했으나 실행이 가능하지 않아 보류됐다(Goodkind 1995, 91).

그러나 Goodkind(1995, 90)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IEC 캠페인이 “베트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소가족 규범 장려 전략이고 실제로 1990년대 중반 베트남 대부분 지역에 한두 자녀 정책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현수막은 주로 딸을 하나 둔 한 자녀 가족의 이미지를 사용해 한두자녀 가족을 홍보했다. 현수막에는 이러한 소가족이 국가발전, “가족의 행복” 및 “여성 해방”에 기여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Goodkind p90). Goodkind는 심지어 가족계획 브로셔에 “그대가 외동딸이길 바라(*Hope You Are Like a One-Child Woman*)”라는 노래 가사가 적혀 있었다고 회상했다.

누군가 당신을 외동딸이라고 부르면 내 눈은 기다림으로 지친다네. 내 사랑
그러나 당신이 책임지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누군가 마르고 쇠약해진 당신을
부르면,

비오는 날과 맑은 날이 모두 짐이 되고 젊음은 순식간에 지난다네. 내 사랑

(Goodkind 1995 p.91).

Goodkind는 “베트남 정치권의 입장에서 한두 자녀 정책은 가장 이상적인 타협안이다.... 이는 한 자녀 출산 방안을 정당화하고, 둘째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한 이들에게 불이익 가능성을 경고했다”라고 결론지었다(106 쪽). Goodkind는 중국의 가족계획제한과 비교해 베트남 정책은 일반적으로 “더욱 간단하고 덜 엄격”하며 “시민들이 출산 규칙 준수에 서약할 필요가 없고, 여성의 임신 상태를

감시하지 않고, 규칙 준수에 참견하는 ‘할머니 부대’에 대한 증거가 적다... 재정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결론지었다(p.107).

2000년대 초 정부는 ‘부부는 자녀 수, 출산 시기 및 터울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라며 처음으로 생식권을 공식 인정했다 (Pham et al, 2012, 8). 그러나 2000년대를 걸쳐, 심지어 대체 출산율 2.1명에 도달한 후에도 인구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 상충되는 메시지가 제시됐다. 실제로 2009년 정부는 생식권을 “(i) 출산 시기 및 터울 결정 및 (ii) 정부가 인정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부부와 개인은 한두 자녀 정책 등 인구 및 가족계획 캠페인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해 과거로 회귀한 것처럼 보였다(Pham 외. 2012, 9). 그리고 2015년이 되어서야 ‘두 자녀 정책’ 완전 폐지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Thanh Nien Daily 2015).

4. 결론: 가족계획제도가 아시아 지역의 출산 선호도 형성에 미친 영향

본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 가족계획사업에서 제시된 특정 가족 유형, 특히 자녀 수에 관해 간략히 소개했다. 그러나 출산 선호도 형성 시 이들이 미친 영향과 역할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실제로 복합적인 사회경제 변화로부터 이들의 효과를 구별해내기 거의 불가능하므로 1960년대부터 출산 감소 패턴 형성 시 가족계획사업의 역할을 정량화하는데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최적의 자녀 수를 제시하는 IEC 캠페인이 출산 선호도 형성에 미친 영향과 역할을 조사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더욱 어려웠다.

먼저 도입부에서 논의한 두 가지 이론의 틀, 즉 계획된 행동 이론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저출산함정 가설 [LFTH: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로 되돌아가보자. 두 이론 모두 일부 문화적 선호도 구성이 사회적 규범의 중재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LFTH는 ‘평균 이상자녀수’로 측정한 이들 선호도가 주로 어린 자녀를 둔 사람 수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간접적으로 사회가 언론 등을 통해 이렇게 변화하는 인구통계학적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 요약하자면, TPB는 한 자녀에 대한 인식과 한 자녀에 대한 주관적 규범, 한 자녀에 대한 인지된 제한 각각이 한 자녀에 대한 출산의향을 중재하고 결국 한 자녀 출산 결과에 대한 신뢰, 한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기타 가능 또는 간접 요인으로 이들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이들 신뢰는 결국 개인적,

인구통계적 및 사회적 배경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

TPB와 LFTH에 기반한 저출산 논의는 오히려 출산 선호도의 기능적, 주로 경제적 동인의 잠재적 역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주로 노동시장, 성별에 따른 가사 및 육아 분배, 안전망 부족으로 인한 위험도 등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새로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서 자녀의 성공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모의 열의에 관해 논의할 수도 있다. 이들 특징은 모두 출산율과 선호도 측면에서 잠재 '아시아 예외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TPB는 성격, 감정, 가치, 일반적인 태도, 사회 규범, 문화와 같은 여러 가지 배경 요인을 고려한다. 개별화와 위험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들 구조적 변수를 연결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TPB 맥락에서 이들 배경 요소 형성 시 또는 LFTH 맥락에서 규범 형성 시 가족계획 메시지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가장 극단적인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많은 학자들이 엄격한 규제 없이도 출산율이 낮아졌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Wang et al. 2018 참조), 이들 규제가 출산율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독재 정부가 수십 년간 시행한 다양한 장려책과 억제책, 한 자녀 가정의 장점을 홍보한 가족계획 활동이 이상자녀수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오늘날 중국에서 보고되는 출산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02년 이상자녀수를 묻는 설문조사에 70.5%가 두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DHS 데이터세트의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그렇다면 자녀를 둘로 제한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시행되었던 가족계획제도가 이러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또한 자녀가 둘인 베트남 여성의 91%가 셋째 출산이 허용되더라도 출산할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물론 이러한 출산 선호도 형성 과정에서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의 역할도 부인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인도에 대한 Shekher et al. (2018), Gietel-Basten and Rajhbar (2018)의 연구와 네팔에 대한 Channon and Karki (2018)의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의 압도적 다수가 두 자녀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강압적 요소 여부에 관계 없이 가족계획사업에서 선전한 두 자녀 규범이 이러한 여론 형성에 기여했을 수 있다.

요컨대 가족계획사업에서 실시하는 IEC 캠페인의 핵심은 출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바꾸는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이상자녀수를 선전하는 가족계획사업과 IEC 캠페인의 맥락에서 불완전한 출산 변천이 진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방글라데시의 사

례에서 이러한 흐름을 확인했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이들 캠페인이 집중 시행됐고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기간에도 캠페인이 계속된 기타 지역의 경우 IEC 캠페인이 현재 출산 선호도 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한 자녀 규범을 수용하고 최대 둘로 자녀 수를 한정하는 지역에 아시아의 잠재 '예외주의'가 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확실하지 않다. “둘만 낳자”는 중국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IEC 캠페인이다. 이는 소가족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대가족(세 자녀 이상)의 정당성을 약화시킨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실제로 출산 선호도가 세 자녀 이상으로 가장 높은 일본은 유일하게 지난 1-2 세대 동안 ‘두 자녀 규범’ 메시지 패러다임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한 자녀 가정의 장점을 선전하는 IEC 활동(예: 한국, 대만,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은 이러한 새로운 가정 형태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IEC를 사용해 한 자녀 가정의 대체 관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동아시아는 한 자녀 가정을 행복한 가정과 부유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 자녀 가정의 부모는 이기적이고 자녀는 버릇없고 이기적이고 건방지고 응석받이라고 간주하는 21세기 유럽/미국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그러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IEC 캠페인의 ‘활성화’ 기능뿐 아니라(또는 최소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예방) 이들 캠페인이 작동하는 정치적 제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을 독재 정권으로 간주하고 독재 정권이 가족계획캠페인 유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결론짓기 쉽다. 그러나 지난 60년간 중국만 독재정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만, 싱가포르, 한국(인도네시아, 베트남)도 민주적 자유가 제한된 독재정치 하에서 가족계획활동이 집중 추진됐다. 예를 들어, 한국은 새로운 ‘현대적’ 한국과 각 가정의 복지와 국가의 관계 측면에서 가족계획을 실시했다(DiMoia 2009). 이러한 사회 ‘현대화’는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인당 GDP의 분모로서) 인구의 원시 수를 제한하고 우생학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다. 다소 냉소적 방식으로 바라보면, 남아선호 사상을 다룬 IEC 캠페인은 딸이 안 좋다는 차별보다는 아들을 통해 대를 이어가려는 대가족 관습에 도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최적의 자녀수’를 선전한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시행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족계획 메시지는 돌봄국가의 일반적인 조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

침'에 가깝다.

가족계획사업(및 최적의 자녀수에 대한 IEC)은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출산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출산을 감소와 가족계획은 국가건설사업의 일부였고 여성의 몸은 이를 위한 증재의 역할을 했다. 정부는 강압적 및 비강압적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개인과 (발전) 국가 모두를 위한 '이상적' 가족 형태에 대한 여성(그리고 남성)의 신체적 및 심리적 관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만약 이러한 활동이 의식에 침투하고 규범에 영향을 미쳤다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관된 메시지는 TPB 또는 LFTH의 틀에서 선호도 형성에 추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두 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두 자녀 규범은 오랫동안 대부분 가족계획사업의 초석이었다. 실제로 인도와 베트남 등에서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특히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선천적 선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회 규범과 선호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는 세 자녀 (또는 이상) 가정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선호도가 실현되었다면 다산 가족 부재(세 자녀 이상)로 무자녀와 한 자녀 가정의 증가 추세를 상쇄할 수 없고 따라서 향후 대체 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즉, 대체 출산율을 국가 목표로 설정한 경우 이러한 가족계획제도가 (역설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정책 밖에서 정의되고 형성된 광범위한 문화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추가 연구 없이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상관관계 수준에서만 살펴보면 태국의 선호도는 앞서 설명한대로 소가족 규범과 공존할 수 있는 태국 문화의 특성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설, 즉 IEC 캠페인이 현재 아시아의 출산 선호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설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연관성은 간접적이고 정량화되지 않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여전히 상관관계의 사례와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최소한 출산 선호도에 '아시아 예외주의'가 실제하는지 여부와 가족계획사업의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의 형성적 역할을 조사하는 추가 연구를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림 4-32]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 생산성센터 포스터, '하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입을 시사할 수도 있다. 이들 개입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아시아 지역의 가족계획캠페인 역사를 살펴보면 출산 감소의 주요 동인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신뢰 수준은 놀라울 정도이다. 그러나 대부분 인구통계학자들은 정부 활동을 이미 진행 중인 출산 저하 및 기타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보완하고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보는 것 같다. 도시화, 여성 해방, 교육 및 경제발전 등과 같은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출산 감소의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계획사업은 보완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저출산 환경에서 현대 사회가 대가족, 이른 결혼, 결혼 확대 추세로 회귀할 수 있다는 증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출산 장려 메시지의 잠재력을 검토할 때 이를 염두 해야 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생산성센터에서 제작한 포스터를 예로 들 수 있다(중앙일보 2015년). 그림 9는 2013년 출산율 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의 후원 아래 열린 대회에서 우승한 포스터이다. 포스터는 시든 외떡잎과 건강한 쌍떡잎 이미지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는 부족합니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제목 아래에는

“외동아에게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인간적 발달이 느리고 가정에서는 무엇 이든지 마음대로 이루어 보았으므로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초 기 포스터와 달리 이러한 공격적 이미지는 대중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오늘날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 정책(싱가포르의 매우 관대한 정책 과 일본의 포괄적 정책 조차도) 또한 정서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들 정책의 견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저출산 환경에서도 계속되는 산아 제한 정책은 (주로 관료주의적 관성으로 인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더욱 일반적 관점에서 과거 성공적이었던 가족계획사업의 역사가 가족 형성 결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거짓된 낙관주의를 심어준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 Abbasi-Shavazi, M. J., P. McDonald, and M. Hosseini-Chavoshi. 2003. “Changes in Family, Fertility Behavior and Attitudes in Iran.” Working Papers in Demography Number 88.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jzen, I., and J. Klobas.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Demographic Research* 29 (8): 203-232.
- Amuzegar, J. 2013. “Ahmadinejad’s Legacy.” *Middle East Policy* 20 (4) (December 10): 124-132. doi:10.1111/mepo.12051.
- Bae, E.K. 2003. “Social History of Korean Women’s Birth Control, 1950’s-1970’s (in Korean).”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Basten, S. 2009. “The Socioanthropology of Human Reproduction.” Working Paper. 43. Department of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University of Oxford, Oxford.
- Basten, S. and Gu, B. 2013. Childbearing p참고문헌, reform of family planning restrictions and the Low Fertility Trap in China. Oxford Centre for Population Research: Working Paper
- Basten, S., and Q. Jiang. 2014. “China’s Family Planning Policies: Recent Reforms and Future Prospects.” *Studies in Family Planning* 45 (4): 493-509.
- Bdnews24.com. 2014. “Family Planning Slogan to Be Changed.” <http://bdnews24.com/>

- bangladesh/2014/11/06/family-planning-slogan-to-be-changed.
- Bennett-Jones, O. 2000. "Vietnam's Two-Child Policy." *BBC News Online*. November 8th 2000. <http://news.bbc.co.uk/1/hi/world/asia-pacific/1011799.stm>.
- Bhat, P. N. M. 1996. 2003. "Two-Child Norm: In Defence of Supreme Court Judgment."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38 (44): 4714-4716.
- Bongaarts, J. 2001. "Fertility and Reproductive P참고문헌 in Post-Transitional Socie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260-281. doi:10.2307/3115260.
- Buch, N. 2005. "Law of Two-Child Norm in Panehayats: Implications, Consequences, and Experience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40 (24): 2421-2429.
- Bugispos. 2015. "Banyak Anak Banyak Rezeki (The Ideology of 'lots of Children, Lots of Fortune')." <http://bugisposonline.com/banyak-anak-banyak-rezeki.htm>.
- Channon, M. and Karki, Y. 2018. Fertility P참고문헌 in Nepal. in Gietel-Basten, S.A., Casterline, J. and Choe, M. (eds.)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P참고문헌*. Cheltenham: Edward Elgar
- Choe, M.K. and Park, K.T. 2018. How is the decline of fertility related to fertility preference in South Korea?. in Gietel-Basten, S.A., Casterline, J. and Choe, M. (eds.)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P참고문헌*. Cheltenham: Edward Elgar
- Clark, D. N. 2000. *Culture and Customs of Korea*. Westport, USA: Greenwood Press.
- De Bode, L. 2015. "Amnesty Decries Iran Draft Law to Boost Population." *Al Jazeera America*. <http://america.aljazeera.com/articles/2015/3/11/amnesty-decries-iran-draft-law-to-boost-population.html>.
- Dewi, R. K., D. Suryadarma, and A. Suryahadi. 2014. "The Impact of the Expansion of Commercial Television Coverage on Fertility: Evidence from Indonesia." SMERU Working Papers. Jakarta, Indonesia.
- DiMoia, J. P. 2009.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Let's Have the Proper Number of Children and Raise Them Well!): Family Planning and Nation-Building in South Korea, 1961-1968."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2 (3): 361-379. doi:10.1007/s12280-008-9054-5.
- Drakakis-Smith, D., and E. Graham. 1996. "Shaping the Nation State: Ethnicity, Class and the New Population Policy in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 Population Geography* 2 (1): 69-89. doi:10.1002/(SICI)1099-1220(199603)2:1<69::AID-IJPG18>3.0.CO;2-K.
- Fan, S. 2007. "Hong Kong: Evolution of the Family Planning Program." In *The Global Family Planning Revolution: The Decades of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edited by Robinson, W. C. and J. A. Ross, 193-200. Washington, DC: World Bank
- Freedman, R., Lolagene C. Coombs, M-C. Chang, and T-H. Sun. 1974. "Trends in Fertility, Family Size P참고문헌, and Practice of Fmaily Planning: Taiwan, 1965-1973." *Studies in Family Planning* 5 (9): 270-288.
- Freedman, R., M. C. Chang, and T. H. Sun. 1994. "Taiwan's Transition from High Fertility to below Replacement Levels." *Studies in Family Planning* 25 (6): 317-331.
- Fukuda, N. and Saotome, T. 2018. Fertility p참고문헌 in Japan. in Gietel-Basten, S.A., Casterline, J. and Choe, M. (eds.)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p참고문헌*. Cheltenham: Edward Elgar
- Casterline, J., and Gietel-Basten, S.A. (2018) Fertility p참고문헌 in Asia: An overview. in Gietel-Basten, S.A., Casterline, J. and Choe, M. (eds.)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p참고문헌*. Cheltenham: Edward Elgar
- Gietel-Basten, S.A. 2018. Fertility p참고문헌 in Taiwan. in Gietel-Basten, S.A., Casterline, J. and Choe, M. (eds.)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p참고문헌*. Cheltenham: Edward Elgar
- Gietel-Basten, S. and Rajbhar, M. 2018. One-child ideation in India. *SocArXiv*, February 27. osf.io/preprints/socarxiv/mtd7x.
- GOB. 2004. "Bangladesh Population Policy." Dhaka: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 Goodkind, D. M. 1995. "Vietnam's One-or-Two-Child Policy in Action." *Population & Development Review* 21 (1): 85-111.
- Grimm, M., R. A. Sparrow, and L. Tasciotti. 2015. "Does Electrification Spur the Fertility Transition? Evidence from Indonesia." *Demography* 52 (5): 1773-1796.
- Haub, C. 2010. "Did South Korea's Population Policy Work Too Well?" *Population*

- Reference Bureau. <http://www.prb.org/Publications/Articles/2010/koreafertility.aspx>.
- Hardee, K., and E. Leahy. 2008. "Population ,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in Pakistan: A Program in Stagnation."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3 (3): 1-12.
- Hayes, A. C. 2012a. "The Status of Family Planning and Reproductive Health in Indonesia: A Story of Success and Fragmentation." In *Family Planning in Asia & The Pacific: Addressing the Challenges*, edited by W. Zaman, H. Masnin, and J. Loftus, 225-241. International Council on Management and Population Problems.
- . 2012b. "The Status of Family Planning and Reproductive Health in Timor-Leste: An ICPD Success Story in the Making." In *Family Planning in Asia & The Pacific: Addressing the Challenges*, edited by W. Zaman, H. Masnin, and J. Loftus, 335-344. International Council on Management and Population Problems.
- Herrin, A. N. 2007. "Development of the Philippines' Family Planning Program: The Early Years, 1967-80." In *The Global Family Planning Revolution: The Decades of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edited by W. C. Robinson and J. A. Ross, 277-299. Washington DC: World Bank Publications.
- Hou, J., S. Huang, Z. Xin, L. Sun, H. Zhang, and D. Donghui. 2014. "Transition of Chinese Fertility Intention: 1980-2011 [in Chinese]." *Social Sciences in China* 35 (4): 78-97.
- Hull, T. H. 2002. "Caught in Transit: Questions about the Future of Indonesian Fertility." In *Completing the Fertility Transition*, 409-424. New York: UNDESA.
- Hull, T. H. 2007. "Formative Years of Family Planning in Indonesia." In *The Global Family Planning Revolution: The Decades of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edited by W.C. Robinson and J. A. Ross, 235-257. Washington: The World Bank.
- Inayah, H. 2014. "Banyak Anak, Jokowi Salahkan BKKBN (PRESIDENTIAL CANDIDATE DEBATE Lots of Children: Jokowi Blames the Family Planning Agency (BKKBN))." *RMOL*. http://www.rmol.co/read/2014/06/15/159615/1/Banyak-Anak,-Jokowi-Salahkan-BKKBN?utm_source=dlvr.it&utm_medium=facebook.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05.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Measures." *Handbook of Environmental Economics* 1: 249-303. doi:10.1016/S1574-0099(03)01011-8.
- JICA Research Institute. 2005. "Japan's Experiences in Public Health and Medical Systems." JICA Study Reports. http://jica-ri.jica.go.jp/IFIC_and_JBICI-Studies/english/publications/reports/study/topical/health/.
- Jones, G. W. 2012.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in Singapore: The Limits of Policy."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10 (1): 89-101.
- Jones, G. W., A. Chan, and P. Straughan. 2009.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n Countries." In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Dilemmas*, edited by P. Straughan, A. Chan and G. W. Jones, 1-22. Abingdon, UK: Routledge.
- JoongAng Daily. 2015. "Poster Offends Families That Have a Single Child." *JoongAng Daily*, January 10.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99494>.
- Kaplan, S. 2006. *The Pedagogical State: Education and the Politics of National Culture in Post-1980 Turke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Karamouzian, M., and A. A. Haghdoost. 2015. "Population Control Policies in Iran." *Lancet (London, England)* 385 (9973): 1071. doi:10.1016/S0140-6736(15)60596-7.
- Karamouzian, M., H. Sharifi, and A. A. Haghdoost. 2014. "Iran's Shift in Family Planning Policies: Concern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3 (5) (October): 231-3. doi:10.15171/ijhpm.2014.81.
- Khanna, P. 2009. "Why Are Indian Families Shrinking?" *Hindustan Times*, October 31st 2009. <http://www.hindustantimes.com/sexandrelationships/why-are-indian-families-shrinking/article1-471292.aspx>.
- Khatun, T. 2011. "Desired and Actual Fertility in Bangladesh: The Role of Mass Media and Social Interactions." Masters Thesis presented to Erasmus University.
- Kim, T. I., and J. A. Ross. 2007. "The Korean Breakthrough." In *The Global Family Planning Revolution: Three Decades of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edited by W.C. Robinson and J. A. Ross, 177-192. Washington DC.
- Kimura, R. 1984. "The Roots of Family Planning and Its Perspectives in Japan."

Japan Journal of Nursing 48 (11): 1301-1304.

Knodel, J., A. Chamrathritrong, and N. Debavalya. 1987. *Thailand's Reproductive Revolution: Rapid Fertility Decline in a Third-World Setting*.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Knodel, J., and N. Debavalya. 1978. "Thailand's Reproductive Revolution."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4 (2): 34-49.

Koreabridge. 2011. "An Illustrated History of Family Planning in Korea." *Koreabridge*. <http://koreabridge.net/post/illustrated-history-family-planning-korea-intraman>.

Koya, Y. 1957. "Population Problems and Family Planning in Japan." *Eugenics Quarterly* 4 (3): 157-161.

Krock, L. 2004. "NOVA: Population Campaigns." <http://www.pbs.org/wgbh/nova/earth/population-campaign.html>.

Lutz, W., Skirbekk, V. and Testa, M.R. 2006. "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06: 167-192. doi:10.1553/populationyearbook2006s167.

Madsen, R. 1991. "The Countryside Under Communism"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5 The People's Republic Part 2: Revolutions Within the Chinese Revolution 1966-1982* edited by R. MacFarquhar and J.K. Fairbank, 619-682.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hmoodi, K., A. Mohammadpur, and M. Rezaei. 2014. "A Discourse Analysis of Population Policies in the Context of Politics in Iran." *Quality & Quantity* 49 (5) (July 26): 1883-1895. doi:10.1007/s11135-014-0080-1.

McGuire, J. 2010. *Wealth, Health, and Democracy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inistry of Education [Taiwan]. 2015. "Give Birth to the Child's Sweet Face." *Family Education Column*, April 23. <http://moe.familyedu.moe.gov.tw/HouseEDU/Detail.aspx?nodeid=202&pageid=15>.

Ministry of Health. 2003. "Recent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Trends in Cambodia." *Population Reference Bureau Website*. <http://www.prb.org/Publications/Articles/2003/RecentFertilityandFamilyPlanningTrendsInCambodia.aspx>.

- . 2004. *Family Planning and Safe Motherhood: Saving Lives and Meeting Development Goals in Cambodia*.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Miro, C. A., and J. E. Potter. 1980. *Population Policy. Research Priorities in the Developing World. Report of the International Review Group of Social Science Research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London: Frances Pinter.
- Mockowitz, M. L. 2001. *The Haunting Fetus: Abortion, Sexuality, and the Spirit World in Taiwan*.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Muramatsu, M. and T. Katagiri. 1985. *Basic Readings on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in Japan*. Tokyo: Japanese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amily Planning.
- 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2015. "Family Planning." *Archives Online*. Date of access. <http://www.nas.gov.sg/archivesonline/article/family-planning>.
- National News Agency of Bangladesh. 2014. "Family Planning Service Week Begins in Gaibandha." *Bangladesh Sangbad Sangstha*. November 7th2014. <http://www.bssnews.net/newsDetails.php?cat=4&id=414519&date=2014-06-04>.
- Nikolaevich, A. 2007. *The Dawn of Modern Korea: The Transformation in Life and Cityscape*. Seoul: EunHaeng NaMu.
- Niraula, B. B. 2010. "The Bangladesh Family Planning Programme. International" In *Family Planning in Asia and the Pacific Addressing the Challenges*. Bangkok, Thailand: International Council on Management of Population Programmes
- Nurmila, N., and L. R. Bennett. 2014. "The Sexual Politics of Polygamy in Indonesian Marriages." In *Sex and Sexualities in Contemporary Indonesia: Sexual Politics, Health, Diversity and Representations*, edited by L. R. Bennett and S. G. Davies, 69-88. Abingdon, UK: Routledge.
- Pham, B. N., P. S. Hill, W. Hall, and C. Rao. 2012. "The Evolution of Population Policy in Vietnam." In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2012, Stockholm, Sweden, June 13-16.
- Palen, J. J. 1986. "Fertility and Eugenics: Singapore's Population Policie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5 (1): 3-14.
- Peng, M. 2003. "Taiwan Today - Wrinkling Population Challenges Planners." *Taiwan Journal*, December 19. <http://www.taiwantoday.tw/ct.asp?xItem=20422&CtNode=451>.

- People's Daily Online. 2009. "Bangladesh to Introduce Family Planning Policy." *People's Daily Online*, December 23. <http://en.people.cn/90001/90777/90851/6850595.html>.
- Permana, I. B., and C. Westoff. 1999. "The Two-Child Norm in Indonesia." DHS Further Analysis Reports No. 28. Calverton, Maryland. <http://dhsprogram.com/pubs/pdf/FA28/FA28.pdf>
- Pham, B. N., P. S. Hill, W. Hall, and C. Rao. 2012. "The Evolution of Population Policy in Vietnam." In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2012, Stockholm, Sweden, June 13-16.
- Philipov, D., O. Thévenon, J. Klobas, L. Bernardi, and A. Liefbroer. 2009.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REPRO) State-of-the-Art Review." European Demographic Research Papers 2009-1. Austrian Academy of Sciences/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 Piet, D. L. 2003. "The Significance of Foreign Assistance to the Indonesian Family Planning Program." In *Two Is Enough: Family Planning in Indonesia under the New Order*, edited by A. Niehof and F. Lubis, page numbers. Leiden: Brill Academic.
- Remember Singapore. 2013. "Singapore Campaigns of the 70s/80s." <http://remember-singapore.org/2013/01/18/singapore-campaigns-of-the-past/>.
- Republika_online. 2014. "Warga Jateng Mulai Senang Banyak Anak, BKKBN Langsung Mulai Ketar Ketir." *Republika Online*. <http://www.republika.co.id/berita/nasional/jawa-tengah-diy-nasional/14/03/07/n20z9y-warga-jateng-mulai-senang-banyak-anak-bkkbn-langsung-mulai-ketar-ketir>.
- Roberts, M. 2015. "Iran's Push for More Children." <http://www.mercatornet.com/Demography/view/irans-push-for-more-children/15900>.
- Rosenfield, A. G., and C. J. Min. 2007. "The Emergence of Thailand's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In *The Global Family Planning Revolution: The Decades of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edited by W. C. Robinson and J. A. Ross, 221-234.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Roudi-Fahimi, F. 2002. "Iran's Family Planning Program: Responding To a Nation's Needs." *Population Reference Bureau*. <http://www.prb.org/Publications/Reports/2002/IransFamilyPlanningProgram.aspx>

- Samandari, G., I. S. Speizer, and K. O'Connell. 2010.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Parity in Contraceptive Use in Cambodi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6 (3): 122-31.
- Sathar, Z., and B. Zaidi. 2012. "Status of Family Planning in Pakistan." In *Family Planning in Asia and the Pacific Addressing the Challenges*. Bangkok, Thailand: International Council on Management of Population Programmes
- Shekher, C. et al. 2018. Fertility 참고문헌 in India. in Gietel-Basten, S.A., Casterline, J. and Choe, M. (eds.)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참고문헌*. Cheltenham: Edward Elgar
- Sobotka, T., and E. Beaujouan. 2014a. "Two Is Best? The Persistence of a Two-Child Family Ideal in Europe." *Population & Development Review* 40 (3): 391-419.
- . 2014b. "Two Is Best? The Persistence of a Two-Child Family Ideal in Europe."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Working Papers, 3/2014. Vienna.
- Song, Y-J., K-S. Chang, and G. Sylvian. 2013. "Why Are Developmental Citizens Reluctant to Procreate? Analytical Insights from Shirley Sun's Population Policy and Reproduction in Singapore and Takeda Hiroko's The Political Economy of Reproduction in Japan." *Inter-Asia Cultural Studies* (June 27): 1-12. doi:10.1080/14649373.2013.801624.
- Suh, H.J. 2005. "Policy Response to Low Birth and Aging Society in South Korea." Kitakyushu Forum on Asian Women Report. <http://www.kfaw.or.jp/report/pdf/CSW%20Suh.pdf>
- Sun, S. H-Li. 2012. *Population Policy and Reproduction in Singapore: Making Future Citizens*. Abingdon, UK: Routledge.
- Sun, T-H. 2001. "The Impacts of a Family Planning Program on Contraceptive/Fertility Behavior in Taiw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Dec (23): 49-92.
- Tait, R. 2013. "Iranian Roadside Billboards Promote Large Families." *The Telegraph (UK)*, December 6.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middleeast/iran/10500450/Iranian-roadside-billboards-promote-large-families.html>.
- Thanh Nien Daily. 2015. "Vietnam Rethinks Two-Child Policy amid Declining Birth Rate." *Thanh Nien Daily*, June 9. <http://www.thanhniennews.com/society/vietnam-rethinks-twochild-policy-amid-declining-birth-rate-46409.html>.
- Teng, Y. M. 2007. "Singapore: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The Global*

- Family Planning Revolution: The Decades of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edited by W.C. Robinson and J.A. Ross. 201-220. Washington DC: World Bank.
- The Family Planning Association of Hong Kong. 2015. "About FPA." <http://www.famplan.org.hk/fpahk/en/template1.asp?style=template1.asp&content=about/history.asp>.
- The Hunger Project. 2013. "Nine Facts about 'Two Child Norm.'" www.thp.org/files/Coalition%20fact%20sheet-%20final.pdf *Previously listed without author so check manuscript*.
- Thomson, G. G., and T. E. Smith. 1973. "Singapore: Family Planning in an Urban Environment." In *The Politics of Family Planning in the Third World*, edited by T. E. Smith, 217-255. London: George Allen & Unwin.
- Times of My Life. 2014. "From 2 Is Enough To 3 Or More." Last Modified April 21. <https://timesofmylife.wordpress.com/2008/04/21/from-2-is-enough-to-3-or-more/>.
- USAID. 2008. "Strengthening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Nepal Family Health Program Technical Brief 8 http://www.jsi.com/JSIInternet/Inc/Common/_download_pub.cfm?id=12147&lid=3
- van de Kaa, D. J. 2001. "Postmodern Fertility P참고문헌: From Changing Value Orientation to New Behavior." *Population & Development Review* 27. Supplement: Global Fertility Transition, 290-331
- Visaria, Leela, Akash Acharya, and Francis Raj. 2006. "Two-Child Norm: Victimising the Vulnerabl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41 (1): 41-48.
- Vu, Q. N. 1994. "Family Planning Programme in Vietnam." *Vietnam Social Sciences* 39: 3- 20.
- Wang, F., Cai, Y, Shen, K. and Gietel-Basten, S.A. (2018) Is Demography Just a Numerical Exercise? Numbers, Politics, and Legacies of China's One-Child Policy. *Demography* 55(2):693-71.
- Wazir, M. A. 2018. Fertility p참고문헌 in Pakistan. in Gietel-Basten, S.A., Casterline, J. and Choe, M. (eds.)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p참고문헌*. Cheltenham: Edward Elgar
- Wee, V. 1995. "Children, Population Policy, and the State in Singapore." *Academia*.

- https://www.academia.edu/1063966/Children_population_policy_and_the_state_in_Singapore.
- Wilson, P. 2011. "Vietnam Poised to End Two-Child Policy."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https://www.pop.org/content/vietnam-poised-end-two-child-policy>.
- Withers, M., and C. H. Browner. 2011. "The Changing Contexts of Fertility Outcomes: Case Studies from a Remote Village in Bali, Indonesia." *Culture, Health & Sexuality* 14 (3): 347-360.
- World Bank. 201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
- Yang, J. M., S. Bang, M. H. Kim, and M. G. Lee. 1965.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in Rural Korea." *Population Studies* 18 (3). 237-250.
- Yang, J-M. 1977. "Family Planning Program in Korea." *Yonsei Medical Journal* 18 (1): 76- 85.
- Yap, M.T. and Gee, C. 2018. 2018. Fertility 참고문헌 in Singapore. in Gietel-Basten, S.A., Casterline, J. and Choe, M. (eds.)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참고문헌*. Cheltenham: Edward Elgar
- Zaman, W., H. Masnin, and J. Loftus. 2012. "Family Planning in Asia & The Pacific: Addressing the Challenges." Selangor, Malaysia.
- Zheng, Z., Gu, B. and Gietel-Basten, S.A. 2018. 2018. Fertility 참고문헌 in China. in Gietel-Basten, S.A., Casterline, J. and Choe, M. (eds.) *Family demography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 참고문헌*. Cheltenham: Edward Elgar

제5절 유럽의 출산 의향 실현 격차: 거시사회적 환경의 역할

Zsolt Spéder (헝가리 인구연구소)

1. 서론

가. 국가별 차이

본 연구는 초기 분석에서 출산 의향 실현 시 국가별 차이를 확인했다. 연구 초기 네덜란드, 스위스, 헝가리, 불가리아 등 4개 국가를 대상으로 2년 내에 출산할 의향을 가진 이들 중 3년 후 실제 자녀를 출산한 비중을 조사했다(Kapitány and Spéder 2012).⁵⁴⁾ 초기 연구에서 네덜란드의 출산 의향 실현율은 75%였던 반면 불가리아의 출산율은 38%에 머물렀다.⁵⁵⁾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네덜란드(15%)와 비교해 불가리아(26%) 의향자 중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출산 의향자들에게 확실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들 국가들은 출산 의향의 실현율이 서로 다른 것 외에 거시적 조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분석에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불가리아 및 그루지아 등 5 개국의 세대 및 성별 설문조사 데이터를 비교했다(Spéder and Kapitány, 2015). 설문조사는 3년 내에 출산할 의향을 가진 이들과 동기간 이를 실현한 이들을 비교했다. 여기서도 조사 대상 국가 간 근본적 차이가 나타났다. 프랑스는 출산 의향자의 42%, 헝가리는 32%, 그루지아는 29%가 출산을 실현했다. 출산 실현자의 비율은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이들만 고려할 경우 프랑스 57%, 헝가리 41%, 그루지아 33%로 높아졌다. 따라서 구성요소로 인해 일부 국가 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들 요소를 제외한 후에도 차이는 여전했다. 이후 분석은 서유럽 국가와 탈사회주의 국가 간 차이에 집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논의한다.

이번 연구와 유사한 분석 결과를 보인 세 가지 연구를 확인했다. Régnier-Loilier

54) 여기서 출산 의향과 실제 출산 간 간격은 3년 내 출산과 비교한 2년 내 출산 의향으로 정의한다. 다른 곳에서는 기간의 역할, 출산 실현의 경과된 시간 의존성을 표현했다. 기본적으로 단일 출산 의향 기간과 단일 실현 기간과 관련된 모든 국가의 수치를 비교했다. 이를 위해 원래 다른 용도로 컴파일된 4개 데이터 시스템을 조정해야 했다. (Kapitány and Spéder, 2014 참조)

55) 기본 자료 구성은 보고서를 참조한다.

and Vignoli 2011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교한 후 출산 실현 정도에 근본적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 이는 서유럽 국가의 연구 결과가 서로 유사하다는 본 연구의 가정에 부합한다. Bradurashvili et al (2011)는 프랑스와 그루지야를 비교한 후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의 차이를 확인했다(프랑스보다 그루지야의 실현율이 낮았다.⁵⁶)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비교한 최근 연구에서는 출산 실현율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Rieder and Buber-Ennsner 2016), 즉, 각국 표본의 약 3분 1이 출산 의향을 실현했다. 본 연구는 세대 및 성별 설문조사를 통해 11개국 관련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기존보다 비교 대상국을 확대했다. 분석 대상 국가의 기본 매크로 변수를 사용해 일반 현황을 살펴본다.

나. 11개 조사 대상국의 특징

자세한 국가 분석은 이번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11개 조사대상국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지수(GDP, TFR, 종교)를 살펴보았다. 물론 남유럽 국가 1-2개를 추가하면 상황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서유럽과 동유럽, 탈사회주의 국가는 1인당 GDP 또는 동거율과 같은 기본 지표부터 상당히 이질적인 차이를 보일 정도로 차이가 많다. 그러나 TFR은 탈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 성과(1인당 GDP) 측면에서 서유럽 4개국은 서로 유사하지만 탈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높은 복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루지야의 경제 성과는 헝가리의 4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해 탈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매력(2000-2005년)은 선진 서유럽국가보다 그루지야보다 10배 가량 높은 편이다.

출산력의 핵심 측도인 TFR의 경우 출산 연기와 가족 모델 변화로 인해 2005년 프랑스와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설문조사 대상국이 약 1.3명의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TFR은 이후 모든 국가에서 다소 상승했다. 서유럽 국가 중 프랑스와 스웨덴은 출산 특성이 단순하고 출산율이 비슷하다. 독일어권 국가는 출산 모델 변화 등의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낮은 출산율을 유지했다. 일부 연구는 분기 시나리오(Rindfuss 외 2014)를

56) 연구는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설명했고 일부는 오스트리아와 체코 간의 유사성을 강조했다(Sobotka 2016 등)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높은 무자녀율은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종교성은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문화적 조건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했다. 유럽가치관조사 (European Values Survey)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은 이러한 관점에서 상당히 이질적이다. 즉, 폴란드와 그루지야는 종교성이 매우 높은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폴란드와 그루지야는 국민의 상당수가 스스로를 종교적이라고 밝혔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절반 정도만 종교적이라고 응답했다.

여기서 목표는 각국 상황을 포괄하거나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계정은 유럽의 경제 성과, 제도 시스템 및 문화 풍토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번 분석에 언급된 인구통계적 및 사회적 조건도 설명할 수 있다.

〈표 4-8〉 2005년 조사대상국의 특징

	1인당 GDP(PPP)	TFR	MAFB	혼외출산율	종교성(%)
오스트리아	35013.7	1.408	27.26	36.5	63.9
불가리아	10275.0	1.314	24.64	49.0	63.6
체코	21956.4	1.275	26.62	31.7	43.3
프랑스	30603.5	1.920	(29.9)	48.4	46.9
그루지야	4364.8	1.4	(24.0)		96.6
폴란드	13895.9	1.232	25.73	18.5	94.6
리투아니아	14526.1	1.294	24.80	28.0	64.3
헝가리	17081.8	1.307	26.63	35.0	47.7
독일	31968.5	1.364	(27.9)	29.2	42.9
러시아	11822.4	1.294	24.11		73.6
스웨덴	33967.2	1.787	28.66	55.4	33.4

자료: 세계은행, Human Fertility Database, European Value Survey

다. 일반적 분포

비교 분석의 1단계로 1차년도 시점의 출산 의향(출산 원함/원치 않음)을 실현한 수준을 설명한다. 동 분석에서는 출산 의향 실현 기간을 1차년도 이후의 3년으로 한정했다. 기간을 한정할 자세한 이유는 아래 설명한다.

① 최초 조사 시 출산 의향을 표시한 응답자

[그림 4-33]은 3년 내에 출산할 의향을 가진 모든 21-44세 남녀와 모든 21-44세 여성과 동거인이 있는 모든 21-44세 남성(기본 표본)의 실현율 등 2개 데이터세트에 따른 분포를 보여준다. 국가별 실현율이 다르고 평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측정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정 기간의 실현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를 통해 출산 의향과 실현(출산) 변수를 측정해야 한다. 1차 설문 조사의 내용은 11개 국가에서 일치했지만,⁵⁷⁾ 2차 설문 조사는 여러 나라에서 연장되어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실현(출산) 변수의 시간 요인을 개선해야 했다.⁵⁸⁾ (1차 설문조사 후 4년 후에 실시된 2차 설문조사에서는 3년의 실현 기간에 대해 1년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1차 설문조사 후 7-36개월 사이에 발생한 출생을 검토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출산 의향 변수가 필요했다. 1차 조사 당시 임신 상태였던 이들을 무시한 것을 고려해 추가 제한을 적용했다. 또한 실현율에 특히 영향을 미친 연령과 출산 의향 응답자의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는 연령층에 따라 표본을 표준화해야 한다. 따라서 초기 표본은 자녀를 기대하지 않는 21-44세 여성과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21-44세 남성을 포함했다. 이 절차를 통해서만 여성의 연령과 경제 상태를 분석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출산 의향 실현은 1차 조사의 7-36개월 내 발생한 출산 횟수를 “측정”했다.

이전 연구는 수많은 요인이 비율(속도) 수준에 미친 영향과 지금까지 출산 의향 실현율이 100%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했다. 여기서는 출산 의향 표시 후 시간과 출산 의향의 시간 요인에 따라 실현율이 크게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현 변수 비교를 위한 표준화는 수정을 위한 과정적 행동 기간을 1차 조사 이후 27개월(2.5세 이하)로 제한해 7-36개월 내 발생한 출산만 고려함을 의미한다. (7-45개월의 시간 간격으로 실현율이 분명히 높아질 수 있다). 출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예: 독신) 3년 내에 자녀 출산을 계획한 응답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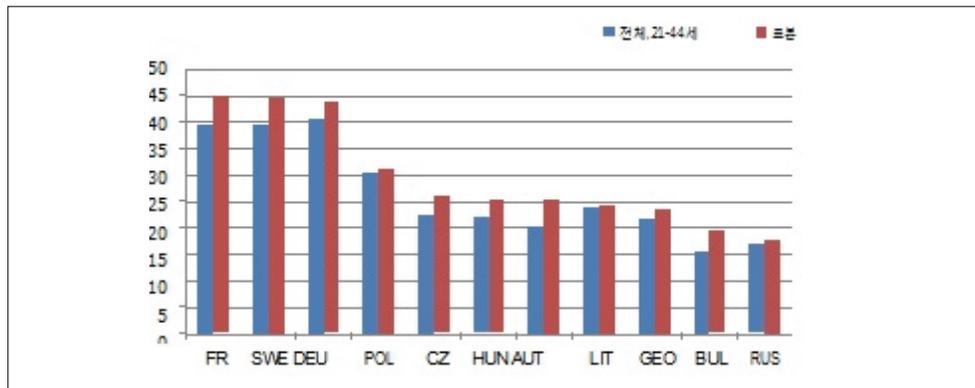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단기 출산 의향은 5분의 2가 실현된 반면(39-40%), 불가리아와 러시아의 실현율은 5분에 1에 불과했다(각각 15.7과 17%). 1차 설문조사 시 동거인의 경우 결합 형태에 관계 없이 실현율이 높아졌지만 국가별

57) 한 개 국가에 차이가 있었다.

58) 국가별 현장조사는 부록을 참조한다.

차이는 여전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출산 의향의 거의 절반 가량(49.7-49.4%)이 실현됐지만, 러시아(18.9%)는 5분의 1 불가리아(23.3%)는 4분의 1에 그쳤다. 헝가리의 출산 의향 실현율은 전체 표본의 22.0%, 동거인 표본의 29.1%로 중간 수준에 위치했다. (각 국가의 실현율은 <표 4-9>를 참조한다.) 국가별 차이는 이번 분석의 핵심으로 모든 요소에서 확인됐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추정한다.

[그림 4-33] 3년 내 출산할 의향을 가진 비율, 유럽 11개국, 전체 및 활성 표본 중(21-44세 모든 여성 +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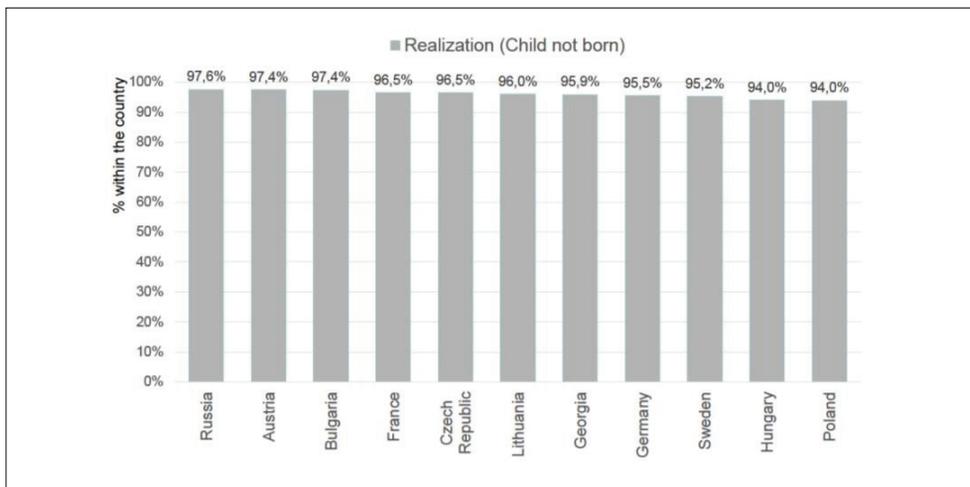


자료: 자체 계산, 세대 및 성별 설문조사, 1차 및 2차 설문조사 데이터 사용

② 3년 내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

3년 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없는 이들은 실현율이 훨씬 높고 국가 간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실현율은 98-94%였으며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각각 97.6%와 97.5%로 가장 높게, 폴란드와 헝가리가 각각 94.1%와 94.6%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물론 전체 표본에는 자녀를 갖기 어려운 여성과 남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예 배우자 부재). 그러나 출산을 원치 않는 이들의 부정적 실현율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동거인 파트너의 실현율은 94%-98%였으며 헝가리가 94.0%로 최저치를 러시아가 97.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자녀를 계획한 이들은 거의 완전한 실현율을 보여준다. 이는 출산 의향이 없는 이들의 거의 전부가 실제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던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Toulemon and Testa 2006 참조). 출산 의향이 없는 표본은 실현율이 높고 국가간 차이가 없이 더 이상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

[그림 4-34] 3년 내 출산할 의향이 없는 이들의 7-36개월 내 비출산율, 유럽 11개국, (여러 해, 2004-2015년)



자료: 자체 계산, 세대 및 성별 설문조사, 1차 및 2차 설문조사 데이터 사용

주: 21-44세 모든 여성,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21-44세 모든 남성, 동거 중인 모든 여성과 남성 포함

다. 표본 통계를 사용한 국가 간 차이

Régnier-Loilier, Vignoli (2011), Dommermuth et al. (2014), Spéder, Kapitány (2012) 등 일부 논문에서는 인구통계적 및 사회적 상태가 출산 의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따라서 이들 비율 차이도 국가 간 차이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구성 효과). 또한 이들 변수를 확인하고 이들 그룹과 함께 국가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효과가 사라지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일부 요인은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순수한” 국가 효과는 다변량 분석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본 연구의 초기 분석에서 사용한 각 실행 가능 기준에 따라 실현 변수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는 <표 4-9> 동거 상태에 대해 개별 값을 적용한다.

주요 기준의 특징은 무엇인가(<표 4-9>)? 첫째, 동반자관계 상태와 자녀 수(한 자녀 상태)가 실현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초기 예상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동거인 표본의 49.6%, 한 자녀를 둔 표본의 거의 절반이 계획을 실현한 반면 21-44세 전체 표본의 실현율은 39.3%로 이보다 낮았다. 그루지야의 실현율은 각각 27.7%, 34.3%, 21.6%를 기록했다. (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한 자녀를 둔 동거인의 출산 의향을 고려하면 실현율은 더욱 높아진다) 동거인 표본과 한 자녀를 둔 표본은 실현율

이 매우 높다. 그러나 폴란드와 러시아는 이들 그룹 간 실현율 차이가 거의 없이 이러한 가정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실제로 폴란드의 경우 21-44세 표본의 출산 실현율은 30.2%, 동거인 표본의 실현율은 33.1%, 한 자녀 표본의 실현율은 30.2%였다. 이들 세 가지 실현율은 일반적 경향이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너무 작아 차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통계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는 다변량 모델이 확인하거나 거의 사라질 수 있는 이변량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든, 다양한 사회 그룹 간 출산 의향 실현 시 큰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무자녀 그룹도 검토해야 한다. 이들은 실현율 차이가 가장 근소했다. 실제로 불가리아가 18.0%로 가장 낮았고 스웨덴이 36.3%로 가장 높아 18.3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헝가리의 24.2% 무자녀율은 앞 장에서 자세히 연구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무자녀 표본의 상대적으로 낮은 실현율과 근소한 국가 간 차이는 출산(무자녀에서 한 자녀 가정으로 전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임을 시사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이론적 접근(Hobcraft and Kiernan 1995) 및 무자녀 그룹에서 출산 연기가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는 이번 연구의 가정과 관련되어 있다.

출산 의향 실현율은 또한 이번 모델에 도입된 기타 변수에 의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검토했다. 즉 일반적으로 기혼 그룹이 동거 그룹보다는 실현율이 높지만(모든 국가에서 차이는 크지 않음), 한 자녀 그룹보다는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단 프랑스는 기혼 그룹의 출산 의향 실현율이 57.3%, 한 자녀 그룹의 실현율이 49.8%로 예외를 보였다(〈표 4-9〉 참조).

〈표 4-9〉 다양한 사회 그룹별, 3년 내 출산 의향 실현율(7-36개월 내 출산), 유럽 11개국

	21-44세 전체 그룹	기본 표본 (21-44세 모든 여성+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있는 동일 연령의 모든 남성)	동반자와 동거하는 모든 남녀	무자녀	한 자녀	표본 수 N= (기본 표본, 가중)
오스트리아	20.1	25.3	29.5	20.8	32.6	688
불가리아	15.5	19.6	23.0	18.0	20.9	648
체코	22.5	25.8	27.8	25.0	30.7	229
프랑스	39.3	44.9	49.6	44.1	49.8	680
그루지야	21.6	23.4	27.7	21.0	34.3	917
폴란드	30.2	31.1	33.1	31.4	34.0	1069
리투아니아	23.8	24.0	25.6	30.5	21.2	208
헝가리	22.0	25.4	29.2	24.2	32.0	1175
독일	40.6	43.6	45.7	(33.7)	54.8	1888
러시아	17.0	17.7	18.9	19.5	20.2	572
스웨덴	39.6	44.4	50.1	36.3	63.2	926

주: () = 80 이하

- = 40 이하

자료: 자체 계산, 세대 및 성별 설문조사, 1차 및 2차 설문조사 데이터 사용

2. 국가 간 차이의 원인

국가 간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요인을 검토했다. 첫째, 국가 간 제도와 문화적 풍토가 달라 출산 의향 실현에 대한 거시 사회적 요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 둘째, 국가마다 출산 계획과 의향의 철저함이 다를 수 있다. 이는 사회 활동에서 “합리성 정도”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출산 의향 또는 출산 연령에 대한 사회적 구성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예: 파트너 없음) 단기간에 출산할 의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구성 효과는 다변량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사회 변화의 두 가지 속도 범위 및 이에 대한 해석 방법: 서유럽국가와 탈사회주의 국가의 차이(가설)

지금까지 서유럽국가와 전 사회주의, 탈사회주의 국가 간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인했다(Spéder and Kapitány 2015, 23x.ff). 실제로 탈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적 수준

에서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출산 의향 실현을 방해하거나 이전 출산 의향을 바꿀 수 있는 메커니즘과 이론적 시작점을 모색했다. 본 연구의 설명은 사회 변화 정도(속도)가 달라 인생의 목표와 기회가 계속 어긋날 수 있다는데 의존한다. 이는 출산 의향을 갖고 이들 의향을 실현하는데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Zapf (2006)는 사회 변화의 일반적인 이론적 틀에서 탈사회주의 사회의 “전환”을 확인했다. 그는 서구 사회의 변화와 재생 과정을 통해 지속성과 경제적 및 사회적 혁신이 이러한 재생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틀은 시장 메커니즘과 경쟁 민주주의의 제도로 만들어진다. 제도 변화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는 지속적인 “관습적” 변화 과정과 달리 매우 급진적이고 포괄적이며 현대 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보다 훨씬 빠르다(Zapf 1996, Habich and Spéder 2000). Zapf가 근대화 이론의 지지자로서 동유럽과 서유럽을 비교할 때 두 가지 변화 속도 (“zwei Geschwindigkeiten”)를 고려한 것은 부수적 차원이 아니다(Zapf 1996). 이는 모두 “사회 전환” 국가의 출산 의향 실현율을 서유럽 국가보다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다.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출산 의향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는가?

우선 본 연구의 목표는 출산율을 낮추는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출산 의향을 실현하지 못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관계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모색했다. 예시를 통해 차이점을 살펴보자. 자녀 양육에는 비용이 필요하고 탈사회주의 국가는 제도 변화로 인해 정부 지원이 크게 줄면서 이들 양육비가 급증했다. Billingsley(2004)는 이를 포함한 경제 상황 변화를 정확히 제시해 출산 행동 변화와 출산력 감소 분석에 기여했다. 따라서 사람들이 출산 의향을 결정할 때 양육비를 고려하고, 양육비 추세에 대한 인식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예상되는 비용 증가를 예견할 수 있다면 이는 출산 의향 실현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양육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거나 가족 소득이 변하면 의향된 행동이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출산 의향 변화는 “명백”하고 실현율은 낮아진다.

본 연구는 꾸준히 변화하는 서유럽 시장보다 탈사회주의 국가가 시장 경제 발전과 관련 노동 시장 변화로 인해 더욱 빠르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요인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탈사회주의 국가는 생산 능력이 평가 절하되어 있고 안정적인 서유럽 경제와 연계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 시장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경제는 안정적인 유럽 시장에 통합되는 동시에 세계화 과정에서 시장경제 제도와 부딪혔다(Mills and Blossfeld 2005). 이러한 통합은 탈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새로운 참가국에 “주변적” 성격을 부여했다. 전환 초기에는 문제점에 많이 부딪치고 시장우위는 후기에 결실을 맺는다. 이 과정으로 인해 평소보다 시장 변화의 폭이 커졌고 여전히 이러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의 목적이 아니지만 노동 시장은 소득 창출의 중심이고 출산의 재정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 시장 조건이 이미 널리 알려졌어도 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업률 증가는 출산의 재정 기반을 크게 위축시켰다(Macura et al. 2000, Bahumik and Nugent 2002). 그러나 이는 질적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또한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니다(Spéder 2003, Frejka 2008). Kornai(1980)에 따르면 노동 시장의 균형이 초과 수요에서 초과 공급으로 바뀌었다. 노동 시장의 과잉 공급은 판매자(종업원) 간 치열한 일자리 경쟁을 야기한다. 따라서 경제 전환은 일자리 수 감소뿐 아니라 실직 위험도 불러왔다. 시장 변동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때까지 실직 계산을 “관습적”으로 보고, 이에 따라 출산 의향이 형성되지만 시장 변동으로 출산 의향이 바뀔 수 있다. 물론 서유럽 시장에도 변동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제 불황 시 출산이 감소할 수 있다(Goldstein et al. 2013). 그럼에도 탈사회주의 전환 및 이후보다 서유럽 시장은 변동이 덜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가정 정책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일반적으로 복제 제도 변화는 서비스 가치 감소, 시설(예: 보육원) 감소, 장막 가용성 원칙에 대한 의문 제기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양육비 증가를 불러온다. 둘째, 같은 탈사회주의 국가라도 가족 지원 제도를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고(Szeleva and Polakowski 2007, Frejka 2008), 일부 가족 정책 제도는 계속 변화해왔다. 제도적 변화 과정 후반기에 저출산 문제로 인해 세금 공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출산 보너스 등 새로운 수당과 급여가 신설됐다(Ignits, Kapitány 2005, Potančoková 외 2008, Philipov et al 2008, Spéder 2016). 첫 번째 방법 즉, 가족 지원 가치하락은 양육비 증가를 불러오고, 두 번째 방법, 즉 가족지원 변화와 불안정은 지속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정치적 개념으로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으로 인해 가족 정책 예산은 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정부 변화는 제도적 변화의 신호가 되었다(Ignits and Kapitány 2005). 실제로 그렇다면, 탈사회주의 국가

의 복지 제도는 시장 변동을 안정화시키는 요소로서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대신 계속되는 변화로 인해 불안정의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출산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반응할지에 관해 두 가지 이론적 관점을 고안했다. 위험한 상황에서의 의사 결정에 관한 문헌 자료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정을 연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Robin 2010). 머튼(Merton)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사회의 구조적 관계와 가치 시스템이 불일치할 경우 이들이 목적을 준수하는 정도 또는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는 방법 등에 따라 동조형, 의례형, 철회형 및 혁신형 등 4가지 종류의 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Merton 1980). 본 연구는 두 자녀 양육을 동조형, 혼외 양육을 혁신형, 출산 의향 포기 또는 무자녀를 철회형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역학, 즉 사회 변화 속도의 차이로 인해 서유럽과 탈사회주의 국가의 출산 계획 실현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가정했다. 동유럽의 더욱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는 출산 의향 실현 또는 포기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다섯 번째 유형, 즉 가치에 따른 관리 및 조건에 대한 적응을 거부하는 혁신형은 무시했다.

나. 국가별 상황

서유럽과 탈사회주의 국가 간 실현 의향이 일치할 수 있고(Riederer and Bubner-Ennsner 2016) 서유럽(예: 스위스와 네덜란드)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의 후속 조치로 동유럽과 서유럽의 차이를 더욱 심도 깊게 검토하고 다른 각도를 형성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국가별 차이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출산 결정은 많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세 가지 거시 사회적 조건을 강조하고 본 연구의 모델에 이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한다.

① 시장 및 사회 역학

앞 장에서 논의한 가정, 즉 서유럽 시장과 탈사회주의 국가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가정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 시장 경제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 즉, 기업 설립, 분리 매각, 폐쇄는 상당한 소득 변화는 물론 노동 시장 변동성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는 기타 여러 요인들과 더불어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높여 출산 의도 변화 또는 변경을 야기할 수 있다. 서유럽 국가는 시장 구조와 특히 노동 시장 규제에 의해 차이를 보

일 수 있다 (Soskic, 1999). 거시-사회적 및 경제적 역학을 측정하는 지표(국가의 전 형)는 주로 정적 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 적절 한 경제 지수는 인플레이션 지수이고, 본 연구는 이를 적절한 불확실성 측도로 간주했 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우, 생활이 불확실해지고 따라서 단기간에 출산 의향을 수정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② 포괄적 사회 보호 또는 가족 정책

시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 방지는 복지 제도의 핵심 기능이다(Leisering 2003). 따라서 복지 제도가 포괄적일수록 복지망이 촘촘해져 경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 려가 감소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 복지가 확대되면 불확실성이 감소하 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및 요구에 직면할 때 의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다. 이 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복지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출산 의향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지국가개입 규모에 대한 적절한 측도로서 지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출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 복지 공약, 복지 개입의 종류와 주류(보편적, 보험 기반, 및 소득 조사 기반) 또는 가족 지원 제공 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가족 지원 제도는 국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의미한다.

③ 문화 “풍토”: 전통적인 가족관 또는 유연성

계획된 행동 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ur)에 따르면 신념은 인식, 규범 및 통제 그리고 이에 기반한 출산 의향 형성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Ajzen 1988 참조). 이러한 신념은 가족에 대한 지배적 개념, 출산의 장점과 단점 및 모성과 부성 등 관련 국가의 문화 “풍토”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자녀 수에 대한 보편적 규범 및 이러한 기대의 가치 정도 또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규범은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으면 본 연구 가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 가족관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나라에서는 출산 의향에 대한 주장도 강력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통제된 경우 즉, 사회 역학의 차이를 고려할 때 보편적인 문 화 풍토가 출산을 촉진해 출산 의향 실현율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전통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사회는 출산 의향에 대한 동기가 또

는 압력이 더욱 강력할 수 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서 출산 의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면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전통적 가족의 역할을 선호하는 국가는 출산 의향을 바꾸고 이들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을 검토하려면 가족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가 필요하다(Inglehart, 1977).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주요 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거시 수준의 실험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분석에 적용했다. 예를 들어 출산이 사적 또는 공적 문제인지 여부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후자는 사회의 실제 가족관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는 커플의 출산 의향과 자녀가 단순히 개인 및 커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보여줌으로써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에 선을 긋는다.⁵⁹⁾

3. 분석

본 연구는 거시사회적 영향을 보여주는 모델링을 모색했다. 앞의 이론 섹션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의 모델링 논리를 사용해 두 단계로 진행했다. 두 경우 모두 1차와 2차 GGS를 사용한 통합 데이터 시스템에서 분석했다. 전체 표본 수는 6,453명이며 1차 조사 자료에서 3년 내 출산할 의향을 가진 22~44세 여성 또는 동거인이 있는 21~44세 남성이다. 첫째, 2.2장과 같이 서유럽과 탈사회주의 국가 간 차이가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를 위해 통합 데이터 모델링에 유럽 지역으로 알려진 서-동유럽(각각 4개 및 7개 국가) 변수를 추가했다. 그런 다음 알려진 개별 변수와 개별 지역 간 영향을 검토했다. 두 번째 단계로, 2.2장의 국가별 지표를 사용해 계층적 논리(다중 레벨)를 분석하고 2.1장에 제시된 차이 검토했다. 방법은 분석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초기 모델링에서 사용된 주요 개별 요소를 여기 소개한다.

각 명목 변수의 경우 참조 카테고리 값을 명시했다. 변수와 이들의 카테고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지만 두 경우는 부칙이 필요하다. 소득 변수는 소득 액수가 아닌 소득 부족 시 해결 방안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변수의 값은 i) 예산 충족 문제 없음, ii) 그 과정에서 다소 문제 있음 또는 iii) 심각한 문제를 의미할 수 있다. 주관적 변수 중 출산 의향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수는 세 개 질문에 대한 응답을

59) 본 연구는 그 외에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인생에서 자녀가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변수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인식 변수와 강력한 관계를 보여준다.

토대로 생성된 연속 변수이다. 이는 자녀 양육 시 주변인, 즉 부모,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편적 규범이다.

〈표 4-10〉 모델의 개별 변수

성별	남성 여성
연령대(여성)	24세 이하 25-28세 29-33세 34-45세
동반자 관계	남편 또는 파트너와 동거 방문하는 관계(LAT) 독거
자녀 수	무자녀 한 자녀 두 자녀 이상
여성의 노동 상태	임금 노동자/노동자 실업자 육아 휴직 중 또는 주부 기타 비활동 상태 등
교육 수준	초등, ISCED 0-2 중등, ISCED 3-4 고등, ISCED 5-6
소득 부족 시 해결 방안	어려움이 큼 어려움이 다소 있음 별 어려움 없음
주관적 규범	연속 변수는 기대치가 높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가. 서유럽국가와 탈사회주의 국가의 차이

통합 데이터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의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의 결과를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Spéder, Kapitány 2015 참조), 구성효과를 배제한 후에도 탈사회주의 국가를 특징짓는 맥락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했다. 개별 기준의 경우 이들은 파트너로 동거 중, 무자녀 또는 한 자녀, 무직 및 출산 수당 수급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중년과 젊은 여성들의 출산 의도를 높였다. 사회적으로 출산에 대한 기대가 높고 재정 상황이 좋은 이들도 마찬가지다.⁶⁰⁾

60) 마지막 장에 설명한 헝가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이 항상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구통계적 기준이 동일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분석 방법으로 통합 데이터 시스템에 로지스틱 회귀를 적용했다. 서유럽과 탈사회주의(동유럽) 국가의 차이를 표면화하기 위해, 서유럽과 동유럽의 더미 변수를 사용해 응답자가 해당 탈사회주의 국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절차는 유사한 분석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됐다(Alesina and Fuchs-Schündeln 2006). 마지막으로 한 지역(서유럽)의 개별 변수를 모델에 도입했다. 상호 작용의 경우, 서유럽/동유럽 및 주관적 소득(소득의 여유가 없음) 등으로 몇 가지 솔루션을 실험했다.

탈사회주의 국가는 11개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동시에 개별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탈사회주의 국가의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은 서유럽의 절반 수준(승산비 0.487)이다(〈표 4-11〉). 즉, 3년 내에 출산 의향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서유럽의 두 배이다.

본 연구는 소득 및 주관적 규범 수준에서 가능한 효과를 가정하고 모델에 상호작용을 구축함으로써 탈사회주의 국가의 특수성을 구체화하려고 했다. 즉 이를 통해 일반적인 효과와는 다른 “동유럽”의 특정 효과를 모색했다. 특정 규범이 탈사회주의 국가에서 서유럽국가와 다르게 작동하는 사례를 찾지 못했다 (이들 결과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작용을 추가하면 서유럽과 탈사회주의 국가에서 주관적 규범의 역할이 유사하다는 점이 유의미해진다. 소득 관계의 경우 특정 효과를 확인했다(〈표 4-11〉).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유럽인과 본인 소득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운 이들에 대해 모델에 두 가지가 더미 변수를 추가했다. 본인 소득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서유럽) 및 본인 소득으로 생활이 넉넉한 이들에 대해 유리한 소득 지위(수입이 넉넉함)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 변수를 고려해도 동유럽과 서유럽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할 경우, 탈사회주의 국가에서 출산 의향자의 실현율은 서유럽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0.554). 모델에서 현재 소득 효과와 더불어 탈사회주의의 기본 소득 변수를 측정했다. 이 거시사회적 환경(서유럽 대 탈사회주의)과 현재 재정 상태의 결합 효과는 3개 변수를 함께 곱해 얻은 값에 나타난다. 탈사회주의 국가의 소득 조건이 매우 어려운 그룹(0.683)과 서유럽 국가의 소득 조건이 어려운 그룹(1.923)은 출산 의향 실현율 차이가 가장 컸다.

이들의 출산 의향 실현율 간 차이는 거의 3배(2.82)에 달했다. 동거인이 있는 그룹으로 분석을 한정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서유럽 대 탈사회주의의 효과 및 소

득 - 서/동 상호작용 효과는 유지됐다. 여기서 단순 동거보다 결혼한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초기 연구 결과를 다시 확인했다(Spéder, Kapitány 2015). 첫째, 탈사회주의 국가 그룹의 출산 의향 실현율은 서유럽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둘째, 탈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실제 소득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관적 소득 지위가 출산 실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고소득 계층은 단기 출산 의향의 실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1〉 새 천년 전환기의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승산비)(7-36월 내 출산, 11개 유럽 국가)

Exp(B)		Sig.	Exp(B)	Sig.	Exp(B)	Sig.	
성별	남성	,919	,174	,944	,364	,947	,392
연령층	여성		,000		,000		,000
	21-24	1042	,634	1,124	,180	1,122	,186
	25-28	1065	,383	1,115	,138	1,111	,150
	35-44	,494	,000	,471	,000	,471	,000
파트너			,000		,000		,000
	동거 파트너	4029	,000	3,487	,000	3,486	,000
	LAT	2191	,000	1,834	,000	1,806	,000
출산력			,000		,000		,000
	무자녀	1013	,864	,924	,289	,928	,320
	두 자녀 이상	,686	,000	,649	,000	,643	,000
노동력 상태			,002		,000		,000
여성	노동시장 참여	,850	,113	,792	,025	,781	,018
	자녀양육	1125	,297	1,068	,562	1,061	,603
	기타 비활동	,770	,085	,681	,012	,666	,008
교육 수준			,086		,032		,035
	중등	1040	,736	1,002	,984	1,005	,968
	고등	1146	,027	1,175	,009	1,173	,011
주관적 규범		,960	,000	,947	,000	,947	,000
재정 상태			,000		,003		,000
(소득 관리)	좋음	,631	,000	,772	,002	,683	,000
	어려움	,708	,000	,843	,015	,764	,002
서/동	동			,487	,000	,554	,000
서/동*							,026
주관적 소득	W * 매우 어려움					1,559	,016
	W * 어려움					1,302	,077
상수		0,252	,000				
Nagelkerke R ²		0,1		0,124		0,126	
접수(%)		71,5		72,1		72,3	

참고: 여성, 29-34세, 미혼(=파트너 없음), 한 자녀, 실직, 초등 교육, 재정 어려움 없음

나. 국가별 효과: 거시사회적 맥락의 정밀성 향상

뒤이은 계층 모델은 특정 국가를 특징 짓는 거시사회적 조건이 출산 의향 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됐다. 2.2장의 국가 지표에 대한 접근법에 맞춰 이들을 사회 역학, 복지국가개입 및 지배적 규범 등 3개 그룹으로 이들을 분류했다. 먼저 모델 내에서 개별 효과를 살펴보고(1단계), 단계별로 각 거시적 변수를 적용해(2단계) 이들이 출산 의향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와 정도를 확인했다.

본 분석에서는 다단계 이진 로지스틱 회귀 모델과 통합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 11개 유럽 국가의 출산 의향 실현율을 모델링했다. 국가별 개인 수준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맥락 효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특정 국가 내에서 서로 관련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단계 구조를 갖는다. 기존의 단일단계 로지스틱 회귀에서 가정한대로 관찰된 결과가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모델은 클러스터 내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데이터의 다단계 구조를 무시하면 매개변수 추정치와 이들의 표준오차가 편향될 수 있다. 클러스터 상관관계 내에서의 해석을 통해 해당 현상을 적절히 추정할 수 있다. 클러스터 도입으로 인해 국가 간 절편이 무작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조사는 무작위 절편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사용했다(즉, 국가별 임의효과). 특정 국가의 피험자 유사 정도를 추정함으로써 그룹 수준에서 개별 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조사의 주요 관심사에 맞춰, 다양한 구조 조건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국가별 태도를 추가해 모델을 확장했다.

본 연구는 통계적 관점에서 단일 국가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들이 국가 간 분산 또는 ICC(계급간 상관계수)를 얼마나 줄이는지 조사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사회적 조건 지수 중 이들을 포괄하는 지수를 확인했다. 그런 다음 두 나라의 변수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델을 통해 다른 특성의 거시적 조건을 비교했다. 물론 조사대상국 수가 적어 이들 거시적 변수 표현이 크게 줄어들었다. 다양한 거시적 조건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지표를 상정했다. 경제사회적 환경 변수는 최초 데이터 수집까지 3년간 인플레이션 정도(자료 EUROSTAT)를 사용하였다. 지 국가의 발달 정도는 2005년 GDP(%) 대비 가족지원 총지출(자료: ILO)를 활용하였다. 문화 “풍토” 변수는 “스스로 출산을 결정해야 한다”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개인 자율성 결정 정도 정보를 활용하였다 (자료: European Value- Survey, 국가 분포)

현재 및 미래 개별 제어 변수인 성별, 여성 연령대, 동반관계 형태, 자녀 수, 응답자의 교육 수준, 여성의 노동 상태, 주관적 규범의 연속 변수, 주관적 소득 상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정의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모델링에서 이들 개별사회기준의 효과는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결과에 부합한다. 즉 35세 이상의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은 29-33세의 절반 수준이다. 기혼 및 비혼 커플, 무자녀 및 한 자녀 그룹 또한 기준 그룹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았다. 소득 수준이 높거나 사회적 기대에 민감하지 않는 그룹도 마찬가지였다.

거시적 지수는 출산 의향 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거시적 변수에서 계급간 상관계수(ICC)와 국가 간 분산이 크게 감소했다. 일부 조사대상국으로 인해 통계의 신뢰를 하락했지만 출산 의향 측정 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델 1).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간 분산은 22.1%에서 11.7%로, ICC는 0.063에서 0.034로 각각 감소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본 분석 결과는 불확실성이 커지면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지원에 대한 지출은 출산 의향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모델 2). 총 지출은 ICC와 국가 간 분산(14.4%)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문화적 영향의 경우(모델 3) 출산은 전적으로 개인의 결정이라는 관점이 보편화되고 공동의 문제라는 관점이 약한 국가에서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또 다른 논쟁이 제기된다. 자녀와 관련된 기대가 적은 사회 환경이 자녀 관련 의향 형성에 영향을 덜 미치는가(출산 계획은 보다 개인적인 문제다)? 다시 말해, 기대가 적은 지역사회에서는 출산 의향이 “과열될”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거시사회적 환경의 특정 기능이 출산 의향 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1개 조사대상국의 인플레이션(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모델과 각국의 보편적인 개념(자율성)을 포함한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가 최종 결과는 아니다. 향후 조사대상국을 확대하고 국가 조건의 이질성을 줄여 설명 요인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일부 변수의 태도 지수를 개발하고 적용해 개별 국가의 일반적 조건을 연구할 수 있다.

<표 4-12> 3년 내 출산 의향과 3년 내 실현 가능성에 기여하는 거시경제적 요인(개별 및 국가 효과)

	모델 0	모델 1	모델 2	모델 3		
	절편만	인플레이션	Fam Pol	값		
거시 수준 변수						
성별						
여성		1.0382	1.0395		1.0390	
연령대, 여성						
-24		1.1512	1.1458		1.1453	
25-28		1.1388	1.1355	.	1.1351	
35-		3.2899	***	0.4634	***	0.4633

동반관계 상태						
동거		0.4649	***	3.3150	***	3.2890
LAT		1.8281	***	1.8482	***	1.8298

자녀 수						
0		1.1353		1.1386	.	1.1359
2+		0.7046	***	0.7015	***	0.7018

노동시장 지위, 여성						
노동		0.8057	*	0.8093	*	0.8034
출산		1.1005		1.1019		1.1025

비활동		0.6412	**	0.6425	**	0.6405
교육 수준, 여성						
초등		1.0283		1.027		1.023
고등		1.1134	.	1.1117	.	1.111
주관적 규범						
		0.9431	***	0.9436	***	0.9429

주관적 소득						
매우 어려움		0.8303	*	0.8228	*	0.8217
어려움		0.8639	*	0.8573	*	0.8552
*						
거시적 수준 변수						
t0년도 인플레이션		0.8828	***			
가족 정책 비율				1.5083	**	
자녀에 대한 결정권자						
					1.0260	

통계						
AIC	7530	7106.3	7108.1		7105.5	
국가간						
분산	0.2213	0.1173	0.1441		0.1106	
계급간상관						
(ICC)	0.0630	0.0344	0.0420		0.0325	
BIC	7544.0	7235.0	7236.8		7234.1	

4. 요약, 해석 및 추가 연구의 필요성

계획된 행동 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ur)을 개발한 Iczek Ajzen은 저서에서 의향은 행동의 중요한 전조라고 했다. 즉 의향은 “거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출산 행동 분야는 출산 의향이 가장 정확한 출산 예측 요소인지 확인하기 위해 많은 경

험적 분석을 실시했다(Schoen et al., 1999, Domermuth et al., 2015).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들의 실현율은 별도의 통계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다(Toulemon, Testa, 2006 참조). Ajzen가 제시한 핵심 요소는 (i) 태도, (ii) 개별적으로 인식되고 내부화된 규범적 시스템 및 (iii) 개별적으로 감지된 방해 조건 만으로도 출산 의향을 형성하는 숨은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문화적,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기준과 특성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만 배타적으로 출산 의향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행동의 실현에는 의향보다 중요한 요인은 없다. 유의미한 방식으로 의향 이외에 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특정 사회적 지위가 출산 의향 실현에 얼마나 유리한지 설명한다. 이는 외부 환경 요인을 더욱 강력히 통제하거나 출산 의향 수정 동기가 약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들 질문은 이전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었다(Spéder, Kapitány 2014).

이번 분석에서는 단기 출산 의향 실현 시 유의미한 국가별 차이의 원인을 조사했다. 본 연구는 출산 의향 실현에 도움이 되는 거시사회적 조건과 이에 반하는 경향이 있는 기타 조건이 있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이론적 기반에서 이러한 거시사회적 조건을 파악하려고 했다. 서유럽과 탈사회주의 국가 간 눈에 띄는 차이점을 바탕으로 두 그룹 간 정량적 차이보다 정성적 차이에 초점을 맞췄다(서유럽의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두 가지 종류의 사회 변화 속도 개념을 도출하고(Zapf 2006), 탈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변화(생활 조건 변화)로 인해 출산 의향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나아가 탈사회주의 국가와 서유럽 국가 간 차이로 인해 동서간 차이를 뛰어넘어 출산 의향 실현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 개념을 개선하고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다. 이전 개념을 바탕으로 두 국가 그룹 간 경제적 및 사회적 역학으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청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과정의 차이 검토는 초기 개념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지국가개입의 규모와 유형을 분석에 새로 반영하고 사회에서 지배적인 견해(문화 조건)를 도입했다.

분석 결과는 경제적 역학과 불확실성이 경제적 역학과 국가간 차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플레이션 변동 또는 실업률이 높으면 출산 의향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출산 의향이 변경되거나 연기

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복지국가개입은 출산 의향 실현과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복지국가개입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낮춰 안정감을 높여준다고 결론지었다.⁶¹⁾ 마지막으로 출산 의향이 사적 문제로 인식되는 사회의 실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대가 강한 사회 및 사회 집단은 출산 의향이 과장되어 실제 실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 거시사회적 조건 파악에 도움이 되는 이론적 접근법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확대되면 분석 결과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Alesina, A. & Fuchs-Schündeln, N. (2007). Good bye Lenin (or not?): The effect of Communism on people's ^p참고문헌. *American Economic Review*, 97(4), 1507-1528.
- Bhaumik, S. K. & Nugent, J. B. (2005). Does Economic Uncertainty Affect Decision to Bear Children? Evidence from East and West Germany. *William Davidson Institute Working Paper*, Number 788. p. 23.
- Billingsley, S. (2010). The Post-Communist Fertility Puzzl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9(2), 193-231.
- Bradurashvili, I., Kapanadze, E. & Tsiklauri, S. (2011). *Generation and Gender Survey in Georgia, II. Wave*. Georgian Centre of Population Research and UNFPA, Tbilisi, p. 75.
- Dommermuth, L., Klobas, J., Lappagards, T(2014): Now or later?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iming of fertility intention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Vol. 16. Issue 1., p. 42-53
- Frejka, T. (2008). Determinants of family formation and childbearing during the societal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61) 앞서 언급했듯이 복지국가개입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Volume 19, Article 7, 139-170.
- Goldstein, J.R., Kreyenfeld, M., Jasilioniene, A and D. K. Örsal, (2013). Fertility reactions to the 'Great Recession' in Europe: Recent evidence from order-specific data. *Demographic Research*, vol. 29. Article 4. p. 85-104.
- Habich, R. & Spéder, Zs. (2000). Continuous changes - different variations. Income distribution and dynamics in three societies. *Sociological Review Special Issues* 2000. 1-26.
- Heaton, T.B., Jacobson, C.K. and Holland, K., 1999..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2): 531-539.
- Inglehart, R.1977. *The Silent Revolu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pitány, B. & Spéder, Zs. (2012). Success and failure in the realisation of childbearing intentions. Comparing influencing factors in four European countries. *Population-E*, 67(4), 599-630.
- Kornai, J. (1980). *Economics of Shortage*, Amsterdam: North Holland Press.
- Kotowska, I., Józwiack, J., Matysiak, A. & Baranowska, A. (2008). Poland: Fertility decline as response to profound societal and labor market changes? *Demographic Research*, Volume 19, Article 22, 795-853.
- Merton, R. (1966 [1980]).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1980. (in Hungarian)]
- Miller, W.B., (1986). Proception: An Important Fertility Behavior. *Demography*, Vol. 23, No. 4, pp. 579-594.
- Monier, A. (1989). Fertility Intentions and Actual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1974, 1976, 1979. *Population: An English Selection*, 44(1), 237-259.
- Morgan, S. P. & Rackin, H. (2010). The Correspondence Between Fertility Intentions and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 91-118.
- Philipov, D. (2009). The Effect of Competing Intentions and Behaviour on Short-Term Childbearing Intentions and Subsequent Childbearing.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5: 525-548.
- Philipov, D., Spéder, Zs. & Billari, F.C. (2006). Soon, later or ever: The impact of anomie and social capital on fertility intentions in Bulgaria (2002) and Hungary (2001). *Population Studies*, 60(3), 289-308.

- Régnier-Loilier, A. & Vignoli, D. (2011). Fertility Intentions and Obstacles to Their Realization in France and Italy. *Population-E*. 66(2), 361-390.
- Riederer, B.; Buber-Ennsner, I., 2016. Realisation of fertility intentions in Austria and Hungary: Are capitals different?,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Working Papers*, No. 08/2016,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ÖAW),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VID), Vienna
- Rindfuss, R.R., Morgan, S.P. and Swicegood, G., 1988: *First births in America: Changes in the timing of parenthoo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oen, R., Astone, N.M., Kim, Y.J., Nathanson, C.A. and Fields, J.M.,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790-799.
- Sobotka, T. (2002). *Ten years of rapid fertility changes in the European post-communist countries. Evidence and interpretation*. University of Groningen, Population Research Centre, Working Paper Series 02-1, p. 53.
- Sobotka, T. (2016). The European Middle Way? Low Fertility, Family Change and Gradual Policy Adjustments in Austria and the Czech Republic. In: Rindfuss, R., Choe, M., eds., Springer, p. 113-163.
- Spéder, Zs. & Kapitány, B. (2009). How are Time-Dependent Childbearing Intentions Realized? Realization, Postponement, Abandonment, Bringing Forward.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5(4), 503-523.
- Spéder, Zs., Kapitány, B., 2014. Failure to Realize Fertility Intentions: A Key Aspect of the Post-communist Fertility Transition. P;vol.33, June, pages 393-418, June, doi: 10.1007/s11113-013-9313-6
- Szeleva, D. & Polakowski, M. P. (2008), Who cares? Changing patterns of childcare in Central Eastern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18. May, 115-131.
- Testa, M. R. & Toulemon, L. (2006). Family Formation in France: Individual P참고문헌 and Subsequent Outcome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41-75.
- Thornton, A & Philipov, D. (2009) Sweeping Changes in Marriage, Cohabitation and Childbear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New Insights from the Developmental Idealism Framework.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5(2), 123-156.

- Vikat, A., Spéder, Zs., Beets, G., Billari, F.C., Bühler, C., Désesquelles, A., Fokkema, T., Hoem, J.M., MacDonald, A., Neyer, G., Pailhé, A. Pinnelli, A. and A. Solaz, 2007.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S):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s and Processes in the Life Course. *Demographic Research* Volume 17, Article 14. 389-440. www.demographic-research.org
- Westoff, Ch. and N. Ryder, 1977. The Predictive Validity of Reproductive Intentions. *Demography* (4): 431-453.
- Zapf, W. (1995). Zwei Geschwindigkeiten in Ost- und Westdeutschland. In E. Holtman & H. Sahner (Hrsg), *Aufhebung der Bipolarität* (pp. 69-81). Opladen: Laske+ Budrich.
- Zapf, W. (1996). Die Modernisierungstheorie und die unterschiedlichen Pfade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Leviathan*, 24(1), 63-77.

제6절 주택 및 출산: 거시적 차원의 다국적 조사, 1982-2016년

Sarah Brauner-Otto (캐나다 맥길 대학교)

1. 서론

1900년대 중반부터 전세계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고 특히 대부분 경제 선진국의 출산율이 저출산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척도인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을 살펴보자. 2016년 합계출산율이 2.10명 이하인 저출산 국가는 거의 100개국에 달했고 유엔은 2025년까지 이러한 저출산 국가가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PBR 2014; 세계은행 데이터 2018). 이러한 저출산 영역에서도 국가 간 출산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호주와 미국의 TFR은 2명 이상이지만 독일과 한국은 1.3명 이하이며 많은 나라가 그 사이에 위치한다(PRB 2010).

중요한 것은 저출산은 개인과 인구 차원 모두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 여성은 실제보다 많은 자녀를 원하지만(Edmonston et al. 2010; Régnier-Loilier and Vignoli 2011, Spéeder and Kapitány 2014) 여성들이 원하는 만큼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인구 차원에서 저출산은 극단적이민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TFR 2.0명과 1.3명의 차이는 국가의 연령구조와 관련되어 있고 이는 사회보장제도, 의료제도 및 노동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ngaarts 2004; Gruber and Wise 1999; Lee et al. 2003; McDonald 2006). 예를 들어 TFR이 2.0명인 경우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는 530년이 걸리지만 1.3명이면 44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Toulemon 2011). 그리고 TFR이 1.3명인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해 생산성, 수입 및 저축이 감소할 수 있다(Bloom et al. 2010; Lee and Mason 2014; Lindh and Malmberg 2009). 그리고 이는 복지 제도, 특히 부과식(pay-as-you-go) 연금 제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Bongaarts 2004; Lindh et al. 2005). 저출산은 이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이들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중요한 문

제로 떠올랐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 간 차이를 고려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차이를 TFR 차이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한다(Harknett et al. 2014; Luci and Thevenon 2011; McDonald 2000; Toulemon 2011). 선행 연구에서는 교육, 젠더 규범과 평등, 주택, 가족정책 및 노동시장 등 5개 제도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했다(Rindfuss and Brauner-Otto 2009; Rindfuss and Choe 2015, 2016). 본 논문은 (인구통계학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받지 못했던) 주택 제도에 집중해 36개국의 34년 동안 주택 및 출산 제도 간 관계를 조사했다. 출산은 양(Quantum, 기간 TFR로 측정)과 시기(기간평균 초산연령으로 측정) 등 두 가지 측면을 검토했다. 또한 출산과 관련된 다차원적 주택 상황이 있는지 여부와 시간 경과에 따른 이들 관계의 변화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집을 찾는 자(임차인 또는 구매자)와 소유자(임대주 또는 판매자) 모두의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주택 상황을 검토했다. 본 보고서는 주택 상황(Housing Context), 주택(Housing), 주택 제도(Institution of Housing)라는 용어를 호환적으로 사용해 청년들의 주택 선택권을 형성하는 거시적 차원의 특성을 표현했다. 예를 들어 임대 시장이 크거나 주택담보대출 가능성이 높으면 청년들이 (임대 또는 구입을 통해) 주택을 더욱 쉽게 구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주택과 출산의 관계는 많은 출산 문헌 자료에서 오랫동안 논의됐고(Castiglioni and Dalla Zuanna 1994; Goldstein and Mayer 1965; Grabil et al. 1958; Mayer and Klapprodt 1955; Pinelli 1995; Westoff et al. 1963)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다(유럽위원회 2005). 이러한 오랜 역사와 주택 상황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주택 시장의 다양한 측면 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경험적 기반은 아직 확고하지 못하다. 국가별 차이에 관한 최근 논문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주택 시장의 특징과 출산 선택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경험적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Mulder and Billari 2010)라고 지적했고 이는 지방(Sub-national) 차원의 주택과 출산 차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Kulu and Boyle 2009). 본 보고서는 문헌 자료의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들에게 본가를 떠나 자신만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독립은 매우 중요한 생애전환이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은 산업국가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성인이 되면 자녀를 갖기 전에 본가를 떠나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임대 또는 구매를 통해 자신만의 거주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출산이 연기된다. 이들 국가에서 자녀가 있는데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주요 국가의 가구 구조에 대한 UN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 다세대 또는 복합가구(단일 핵가족과 다른 인물로 정의됨) 비중은 2% 이하(노르웨이)부터 10%(루마니아)까지 다양하다(UN 데이터 2018). 또한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가구 구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아일랜드의 경우 2002-2010년 사이에 25% 이상 감소한 반면(각각 13.99%에서 10.31%로, 6.28%에서 4.25%로 감소), 헝가리는 거의 같은 기간에 5% 감소에 그쳤다(2001년 6.34%에서 2011년 6%로 감소). 이러한 구조의 가구가 증가한 나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복합 가구 비율이 19%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UN 데이터 2018). 혼외출산은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보다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에서 일반적이다. 아시아 국가의 비교 데이터는 많지 않지만 고령화에 대한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다세대 가구 비중은 1986년 47%에서 2010년 17.5%로 크게 감소했다(IILC Global Alliance 2012).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주택을 임대 또는 구매하기 쉬울수록 초산 연령이 빨라지고 출산이 늘어난다고 가정한다.

개인 차원의 문헌 자료는 일반적으로 주택, 분가, 출산 및 가족 형성의 관계에 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결정적이지는 못하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는 임차인보다 자가 소유자의 출생아 수가 많다고 보고한 반면 일부 연구는 자가 소유와 출산 모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둘이 경쟁한다고 주장했다(Calvert 2010, Clark 2012, Feijten and Mulder 2002, Lauster 2006, 2008, Mulder and Wagner 1998, Mulder 2013, Vignoli et al., 2013).

시간 경과에 따른 주택과 출산 간 관계에 관해서는 기대가 분명하지 않다. 한편으로 여성의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들 여성 또는 커플이 주택 시장의 장애물을 극복하기가 더욱 쉬워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다세대 가정이 감소하고 출산 전 독립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했다. 또한 취업을 한 경우 본가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특히 가계 지출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경우 더욱 오

랫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분소득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장애 물을 증폭시킬 수 있다.

주택 상황과 출산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토할 주택의 관련 차원을 확인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주택 상황의 3차원 내에서 여러 개별 요소에 대해 살펴본다.

가. 임대

임차인과 관련된 주택 상황의 기본 차원은 임대 시장 규모이다. 청년들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주택을 구매하기보다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대 주택이 많으면 청년들이 더욱 일찍 독립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시장에서 임대 주택의 비중이 높아지면 청년들이 더욱 쉽게 독립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은 임차인이 주택 임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이다. 많은 나라가 임차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는 체계적인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또는 직접 임대 보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Sobotka 2016, Vestergaard 2002). 항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 마련에 도움이 된다.

나. 주택 구매

물론 임대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개인 차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가소유는 출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예: Lauster and Fransson 2006; Mulder and Wagner 2001). 예를 들어, 자가는 일반적으로 더욱 넓고 상태 및 위치가 좋은 경향이 있어 출산에 유리하다고 간주되고 소유권 행사는 생애전환의 또 다른 신호가 될 수 있다(Hoekstra 2005; Megbolugbe and Linneman 1993; Mulder and Wagner 1998). 이를 바탕으로 자가 점유자들의 출생아 수가 많기 때문에 주택 구매가 쉬울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이 일찍 집을 구매할 수 있으면 출산 연령도 낮아질 수 있다.

주택 구매의 용이성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실제 주택 가격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및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자체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매 시 많은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택 가격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 또는 저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청년들의 주택 구매 능력을 크게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공식 주택담보대출 보급률과 사용은 나라마다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남유럽 국가에서 세대 간 생전 이전은 공식 담보대출의 중요한 대체재이다(Mulder and Billari 2010). 금리는 이 신용의 장기 가격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높으면 주택 구매 시 월간 지불액이 높아진다.

이들 주택 상황 차원은 개인 또는 커플의 주택 소유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가격이 낮을수록 주택담보대출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청년들의 쉽게 주거지를 찾을 수 있어 출산이 쉬워지고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 공급 측면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만이 주택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은행 또한 청년들이 독립해서 가정을 시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대출기관의 대출의사에 영향을 받는다. 대출 기관의 대출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신용정보 수집 능력이다. 신용 정보가 많고 정확할수록 은행의 대출 의사가 높아진다(Jappelli and Pagano 2002). 대출 기관이 신용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계약금이 높아지고 부모가 주택담보대출의 보증을 서야 할 수도 있다. 공적 또는 사적 신용조사기관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이들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 기관이 포함하는 인구 비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890년부터 민간 신용평가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아직 없다(Jappelli and Pagano 2002). 프랑스에서 주택을 임대 또는 구매하려면 일반적으로 지정된 기간(예: 임대 기간) 급여 정보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신청인이 없으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프랑스 은행 계좌에 1년 임대료를 입금해야 할 수 있

다. 신용평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

물론 모든 투자 또는 임대 계약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압류 및 퇴거 등과 같은 문제 해결과 관련된 조건 또한 강력한 방식으로 주택 상황을 형성할 수 있다(Mandič 2008; Mulder 2006; Stephens 2000, 2003).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관료주의적 절차로 인해 시간 및/또는 비용 측면에서 압류 및 퇴거 부담이 높아져 임대 또는 판매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대출기관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효율적인 사법제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이들의 대출 및 임대 위험이 낮아져 청년들이 더욱 쉽게 집을 구하고 가정을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Chiuri and Jappelli 2003)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효율성이 낮은 국가는 금융 기관이 대출을 꺼려 청년들이 주택을 얻기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출산 연령이 높아질 수 있다.

라. 차원 결합: 지수 및 제도

지금까지 출산과 주택 상황의 각 차원 간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차원은 임차인 지원, 주택담보대출 지원, 공급 측면 요인 등 3개 클러스터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차원은 각 영역 내에서 서로를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 시장이 크면 임차료가 낮아져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시장 규모가 작더라도 실제 비용이 낮아져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차원 중 하나만 가능한 경우보다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보급되고 금리가 낮은 경우 청년들이 집을 더욱 쉽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차원 또한 가법적이 될 수 있다.

임대 및 주택 구매 차원의 출산장려 요소가 반드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대규모 임대 주택과 임대 보조금을 통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보 공유 수준이 높은 금융 제도 내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에게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 및 구매 기회 접근성 및 공급 측면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출산과 관련하여 두 번의 눈에 띄는 주택 제도 분류 시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들 모두의 영향을 받았다. Mulder and Billari (2010)는 주택담보대출의 접근 용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1인당 주택담보대출 부채와 임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유자가 점유한 주택 비중을 사용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가소유제도를 확인했다. “복잡(Difficult)” 제도는 자가 점유율이 높아 임대 시장이 작고 자가 소유가 일반적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 구매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막대한 주택 구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간편(Easy)” 제도는 자가 점유율이 높고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보급되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금융권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커리어(Career)” 제도는 자가 점유율이 낮고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보급되어 자가 소유가 보편적이지 않지만 주택을 구매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엘리트(Elite)” 제도는 자가 점유율이 낮고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부유한 계층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1년 간의 데이터를 사용해 이들 제도와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을 연계한 결과 커리어 제도와 비교해 간편 제도는 TRF가 훨씬 높게, 복잡 제도는 TRF가 낮게 나타났다. 동유럽 국가는 이들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보고서는 이들의 유형분류체계를 종단 조사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Mandič(2008)은 더욱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해 일반적인 독립의 특징을 규정하고 제도 정의에 출산을 통합하고 임대 시장에 초점을 맞춘 다음 평방피트 단위로 물리적 공간을 추가했다. 또한 동유럽 국가를 추가하고 북서부, 남서부 및 북동부 등 지리 클러스터의 독립 제도를 도출했다.

마. 지역별 차이

앞서 논의에 대부분 이론과 연구 동기는 서유럽 주택 시장과 가족 형성 개념에 기반한다(Mandič 2008, 2010은 주목할만한 예외). 그러나,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 또한 출산율이 낮아 이들 문헌 자료도 고려해야 한다. 2017년 군소도서국가를 제외하고 TFR이 2.1명 이하인 국가의 45% 이상이 동유럽 또는 아시아 국가였다(세계은행 데이터 2018).

역사적으로 동유럽 국가는 계획경제 하에서 주택을 사회적 편익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출산과 주택의 관계에 대해 복잡한 사례를 제시한다(Mandič 2010). 고급 임대 주택은 당원과 당원 가족에게 주로 공급됐고 공식주택정책은 다산과 연계된 경우가 많았

다(Mandič 2010, Speder 2016). 예를 들어 헝가리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 주택을 우선 공급했고 신혼부부에게 저금리 대출이 제공됐다(Speder 2016). 시장경제로 전환된 후 주택공급 방식도 크게 변화하여 일부 국가는 1990년대 중반 “슈퍼 자가 소유권”이 80%가 넘기도 했다.

그러나 서유럽과의 이러한 역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주택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Mandič(2010)은 동유럽과 남유럽에서 주택의 역할이 상당히 유사하고 지역 내에서 상당한 변동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독립 제도에 따라 동유럽 국가를 분류하고 다른 유럽 국가에 이를 통합한 연구도 있었다(Mandič 2008). 본 연구는 동유럽과 비동유럽에서 주택 상황과 출산의 관계가 유사한지 경험적으로 조사했다.

아시아 국가는 예전부터 서유럽보다 다세대가족 전통과 부양 의무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다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저출산 국가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젊은 부부가 점점 늘고 있으며 주택은 가족 형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물로 확인됐다(Fukuda 2009, Lee and Choi 2015). 일본 청년의 3분의 1 정도가 혼자 살고 젊은 부부의 70-80%가 분가해서 살고 있다(Fukuda 2009). 또한 높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주택 시장 구조가 청년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대료의 경우에도 6개월 임대료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Fukuda 2009, Lee and Choi 2015).

물론 복지 국가에 대한 언급 없이 유럽국가 클러스터를 논할 수는 없다(Esping-Anderson 1999). 실제로 Mandič(2008)의 독립 제도는 일반적인 복지 국가 구분과 유사하지만, 기존 복지 국가의 틀에 통합되지 않은 동유럽 국가의 북동부 클러스터 제도를 추가했다. 국가 차원의 다른 분석과 마찬가지로 정책에서 “효과”를 분리하거나 광범위한 국가 맥락 또는 복지 패키지에서 사회적 제도를 분리하기는 어렵다. 복지국가 유형 내에서도 국가와 시대에 따라 주택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복지 국가의 다른 구성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상황과 출산 간 광범위한 관계에 대한 증거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들 유형분류체계 내에서 국가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일반적인 복지 국가 “효과”와 주택 “효과”를 구별하기 위해 시간 경과에 따른 주택과 출산의 관계 변화를 조사했다.

3. 분석자료

본 연구는 36개 저출산 국가를 대상으로 주택 제도와 출산 간의 관계를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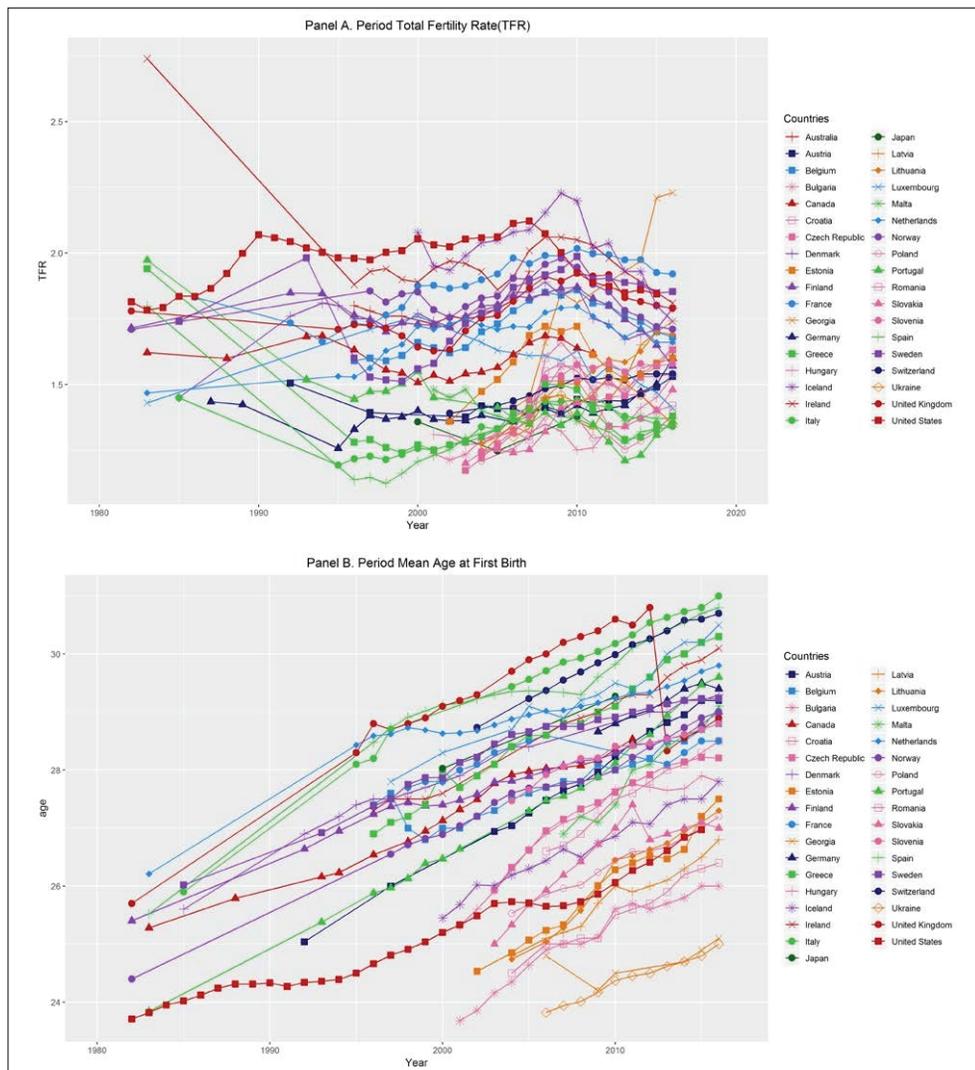
- 비동유럽: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동유럽: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조지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안타깝게도 데이터 가용성 문제로 인해 일본 데이터만 이번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82-2016년 기간 동안 다양한 데이터의 연간 시계열을 작성해 625개 국가-년 데이터를 산출했으나 영역, 국가 및 연도마다 가용성이 크게 달랐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가. 출산지표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 양과 속도 차원을 모두 분석한다. 출산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 지정된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 합계)을 사용했다. 본 연구는 특정 기간의 주택 상황이 해당 기간 출산 의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간 효과와 관련된 가설에 기반하기 때문에 TFR을 사용해 분석했다. 데이터는 인간출산데이터베이스(Human Fertility Database)에서 주로 수집하고 누락된 정보는 Frejka and Sardon 2008과 유럽 연합통계청(Eurostat) 자료를 참조했다. 또한 출산 시기와 관련된 연구에 기반하므로 출산 시점 또는 속도 차원도 조사했다. 이를 위해 기간평균 초산연령(Period mean age at first birth)을 사용했다. 데이터는 인간출산데이터베이스(2018)에서 수집했다. TFR보다 이들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년 수가 적었다. [그림 4-36]은 이들 분석에 사용된 국가-년의 TFR(패널 A)과 평균 초산연령(패널 B)을 보여준다.

[그림 4-36] 출산율, 1982-2016년, 주요 국가



나. 주택 상황 지표

주택 상황 지표에 관한 데이터는 OECD, 세계은행, 발표논문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에서 집계했다. 데이터는 대부분 유럽모기지협회(European Mortgage Federation)에서 발간한 연례 하이포스탯(Hypostat)보고서에서 수집했으며 공개 데이터를 병합, 정리하였다 데이터 소스, 가용성 및 병합 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프로젝트 웹사이트

(블라인드 검토를 위해 제외된 웹사이트 및 참조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개 데이터 소스만 사용한 경우, 아래에서 이를 확인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웹사이트와 보충 문서를 참조한다.

본 연구는 4개 종합지수로 분류되는 10개 지표를 사용해 주택 상황의 여러 차원을 조사했다. 지표는 문헌에 사용된 이들의 용도와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선택했다. 이들 지표 중 일부는 이상적 측도가 아닐 수 있고 일부 핵심 지표는 이번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34년의 기간 동안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본 보고서가 향후 데이터 수집, 조정 및 분석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사용 가능한 모든 국가-년 데이터 분포를 검토해 대부분 지표를 “높음” 또는 “낮음”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절사점(Cut-off point)은 실질적 이유 및/또는 측도 분포를 사용하고 최저 분위수 또는 중간점을 검토해 결정했다. 또한 지표를 기간에 대한 단순한 대용물 이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들 이산지표 구성 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아래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국가-년 표본의 몇 가지 기술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 표본에 포함된 지수에 따라 다르지만 지수에 사용된 모든 측도에 대해 유용한 데이터를 가진 국가-년만 분석 표본에 추가됐다.

임차인 지원. 임차인이 당면한 주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 시장 규모와 임대 보조금 등 두 가지 측도를 추가했다.

자가점유. 자가점유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비율로 측정하는 임대시장 규모 측도이다. 부록 그림 A1은 시간 경과에 따른 국가별 모든 주택 변수와 자가점유의 분포를, 패널 A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각 국의 자가점유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자가점유율의 연속 측도와 해당 국가-년의 자가소유율이 낮는지 보여주는 지표를 모두 조사했다. 그리고 Mulder and Billari 2010을 따라 자가점유율이 75% 이하이면 국가-년을 자가점유율이 낮음으로 처리했다. 국가-년의 62%는 자가점유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3-8은 이에 대한 모든 국가-년의 기술 통계와 분석에 사용된 모든 주택 측도를 보여준다.

〈표 4-13〉 주택 상황 측도에 대한 기술통계

	N	MIN	MAX	MEAN	STD
임차인 지원 지수	438	0	2	1.24	0.78
자가점유율	471	34.6	98	72.53	12.44
자가점유율 낮음(<=75%)	471	0	1	0.62	0.49
주택에 대한 GDP 비율	562	0	1.8	0.33	0.35
주택에 대한 정부 지출 높음(>0.1%)	562	0	1	0.61	0.49
주택구매지수	295	0	4	1.87	0.98
2000년도 가격 대비 주택 가격	489	0.16	4.27	1.38	0.63
주택가격 낮음(<1.05)	489	0	1	0.36	0.48
1인당 주택담보대출 부채(1,000유로)	523	0	71.77	14.43	15.81
1인당 주택담보대출 부채 높음(>=10,000유로)	523	0	1	0.46	0.50
주택담보대출 부채 비율	523	0.3	116.60	37.67	26.48
주택담보대출 부채 비율 높음(>=90)	523	0	1	0.84	0.36
금리	461	0.5	35.43	8.49	4.62
금리 낮음(<=5%)	461	0	1	0.20	0.40
공급 측면 지수	349	0	4	1.83	0.89
민간신용평가기관이 취급하는 인구 비율	349	0	100	44.58	39.91
민간신용평가기관: 취급 범위 높음(45%)	349	0	1	0.44	0.50
공공신용평가기관이 취급하는 인구 비율 %	349	0	100	10.90	22.21
공공신용평가기관: 취급 범위 높음(12%)	349	0	1	0.22	0.41
사법 효율성: 법적권리지수	359	2	11	6.63	2.08
법적권리지수 높음(>5)	359	0	1	0.70	0.46
관료적 효율성	372	2	15	6.23	2.75
관료주의 낮음(<=6)	372	0	1	0.47	0.50
종합지수					
결합 지수	97	1	8	4.69	1.86
자가소유 제도(Mulder and Billari 2010)	385	1	4	2.40	1.33
커리어	385	0	1	0.41	0.49
엘리트	385	0	1	0.12	0.33
간편	385	0	1	0.11	0.32
복잡	385	0	1	0.35	0.48

다. 주택에 대한 정부 지출

일부 정부는 청년들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 주택 보조금에 대한 데이터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주택에 대한 정부의 총지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있었다. 주택에 대한 정보 보조금 또는 지출은 “개인의 주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임

대 보조금 및 기타 현금 혜택”에 대한 GDP 비중을 사용해 확인했다(Adema, Fron and Ladaique 2011). 노인, 장애인, 긴급급여, 담보대출구제 또는 암시적 보조금과 같은 다른 형태의 보조금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록 그림 A1의 패널 B는 시간 경과에 따른 이 측도를 보여준다. 국가-년의 61%가 GDP의 0.1% 이상을 주택에 사용하는 고지출에 해당했다.

임대 지수 주거 상황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를 생성하기 위해 이들 두 개 차원의 이산지표를 합산했다. 지수의 범위는 0-2이며 모든 국가-년의 평균은 1.24였다. 국가-년의 20%는 0 점을, 46%는 2 점을 받았다. 모든 지표에 대해 유효한 데이터를 가진 국가-년만 지수에 포함했기 때문에 지수의 N(438)이 각 지표의 N보다 작았다.

주택 구매 주택은 고가이고 개인이 구매하려면 일종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측도를 사용해 자가소유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확인했다.

주택 가격 주택 비용에 대한 가장 명확한 측도는 주택 가격 자체이다. 주택 가격은 2000년 가격에 비례하며 유럽모기지협회(European Mortgage Federation)에서 발행한 연례 하이포스탯(Hypostat) 보고서를 참조했다. 본 연구는 2000년 가치의 105%를 저가로 간주했고 이는 주택 가격의 36%를 차지했다(부록 그림 A1, 패널 C).

1인당 주택담보대출 1인당 주택담보대출은 국가의 주택담보대출 보급 정도를 측정하는 측도이다. 값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보급되었거나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미지급된 1인당 주택담보대출 부채로 산출하고 유럽모기지협회(European Mortgage Federation)에서 발행한 연례 하이포스탯(Hypostat) 보고서를 참조했다. 이번에도 Mulder and Billari (2010)를 따라 1인당 주택담보대출 부채가 10,000유로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했다. 국가-년의 46%는 대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그림 A1, 패널 D).

주택담보대출 부채비율 주택담보대출 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보급 정도에 대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당 주택담보대출 부채와 유사하다. 이는 미지급된 1인당 주택대출부채를 국가 GDP 비율로 산출하고 유럽모기지협회(European Mortgage Federation)에서 발행한 연례 하이포스탯(Hypostat) 보고서를 참조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채 비율이 90보다 크면 높음으로 간주했다(국가-년의 84%)(부록 그림 A1, 패널 E). 주택담보대출 가능성의 두 가지 측도는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호 관계되어

있다(피어슨 상관계수=0.873, $p < 0.0001$).

금리 잠재 구매자의 주택 비용을 추가로 평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대출 금리를 조사했다. 금리를 “일반적으로 민간 부문의 단기 및 중기 재정 요구를 충족하는 은행 금리”로 정의하고 세계은행, 세계개발지수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대출금리가 5% 이하이면 금리가 낮은 것으로 간주했고 이는 국가-년의 20%를 차지했다(부도 1, 패널 F).

주택 구매 지수 본 연구는 4가지 이산지표를 합산해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요인 지수를 작성했다. 지수의 범위는 0-4이며 모든 국가-년의 평균은 1.87이었다.

공급 측면 요인 구매와 임차인이 주택 제도의 유일한 관계자는 아니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유자 및 주택담보대출 기관의 관점에서 주택 구매를 확인하고자 했다.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은 대출자의 대출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이들 정보를 사용해 대출 위험을 줄여 표면상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가의 신용평가기관 범위는 민간신용평가기관이 취급하는 성인인구 비율과 공공신용평가기관이 취급하는 비율 등 두 가지로 측정했고 두 가지 모두 세계은행 데이터를 참조했다. 민간 또는 공공 신용평가기관의 취급 범위가 성인인구의 45% 또는 12% 이상이면 높은 것으로 간주했다(부록 그림 A1, 패널 G 및 H). 민간신용평가기관은 국가-년의 44%, 공공신용평가기관은 22%를 차지했다.

사법 효율성 사법 효율성은 한 나라의 법적권리보호 정도를 가리키며 세계은행 사업환경조사 프로젝트(World Bank Doing Business Project)를 참조했다. 법적권리지수는 담보, 도산에 관한 법률이 채권·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해 대출을 촉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의 범위는 0-12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들 법률이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세계은행, 사업환경조사 프로젝트 2018)(부록 그림 A1, 패널 I). 5점 이상이면 효율성이 높다고 간주했고 이는 전체 국가-년의 70%를 차지했다.

관료적 효율성 마지막 지표는 사업 시작 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측정하고 국가의 일반적 관료주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데이터는 세계은행 사업환경조사 프로젝트에서 수집했다. 지수의 범위는 2-15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료적이다. 0-6점을 관료적이지 않은 국가로 간주했고 이는 전체 국가-년의 47%를 차지했다(부록 그림 A1, 패널 J).

은행/관료 지수 이들 지표의 이산변수를 은행 또는 관료적 지수로 합산했고 효율성

이 높을수록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지를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수의 범위는 0-4이며 전체 국가-년의 평균은 1.83였다.

주택상황 복잡측도 마지막으로 주택 상황의 다양한 차원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복잡측도를 작성했다.

결합 지수. 먼저 임차인 지원 지수, 주택 구매 지수 및 공급 측면 지수 등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지수를 합산한 지수를 작성했다. 지수의 범위는 1-8이고 평균은 4.7이었다. 그러나 데이터 가용성 변화로 인해 97개 국가-연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었다(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및 영국 2006-2015).

자가소유 제도 Mulder and Billari(2010)의 자가소유 제도를 따랐다. 커리어(국가-년의 41%), 엘리트(12%), 간편(11%), 및 복잡(35%) 등 네 가지 제도는 1인당 주택당 보대출 부채가 높고 자가점유율이 낮은 이산지표에 기초한다(부도 2).

4. 분석방법

주택 상황과 출산의 전반적인 연관성과 시간 경과에 따른 연관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횡단면 분석을 반복하고 각 연도별 OLS 회귀 분석과 국가를 분석 단위로 갖는 지표를 사용해 출산과 각 주택 상황 지표 간 관계를 추정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이들 연관성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각 지표의 별도 차트에 대한 효과 추정치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들 관계의 상당 부분이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고정 효과와 연중 연속 통제를 사용해 통합 모형을 추정했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각 주택 지수별로 별도로 이를 수행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고정효과 통합 분석이라 칭한다. 각 연도별 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모형을 조사했고 선형 제어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셋째, 시간 경과에 따른 관계 변화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주택 상황 측도와 고정효과 통합 모형 간 상호작용 항을 추가했다.

동유럽 국가는 역사적으로 주택 상황이 매우 다르고, 기존 문헌 자료에 동유럽 국가가 항상 포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유럽과 비동유럽 국가로 나눠서 이들 관계를 추

정했다.

주택 상황 지표와 2년 후에 발생하는 출산을 연결하기 위해 모든 분석에서 2년의 시차를 두었다(예: 1994년 임차인 지원은 1996년 TFR과 관련되어 있음). 이 시차를 사용해 인과 관계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연도의 출산에 대한 개념,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과 행동은 주택 지표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해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이번 연구의 경험적 목표는 주택 상황과 출산 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연관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효과”는 인과 관계가 아닌 회귀 모형의 효과 추정치를 칭한다.

최대한 많은 가용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특정 지표와 분석 단계에 따라 다른 분석 표본을 사용했다.

5. 분석결과

가. 합계출산율

임차인 지원. 먼저 임대 시장 규모와 정부의 임대 보조금으로 측정한 임대 상황을 검토했다. 그림 3-18의 패널 A는 반복적 횡단면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임차인 조건이 좋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효과 추정치 감소를 바탕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약해진 관계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확인했다. 표 3-9는 주택 상황과 연도 간 상호관계 항을 추가한 모형 2의 통합모형 결과를 보여준다. 고정된 국가 차원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임대 환경과 기간 TFR 간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상호작용 항을 이해하기 위해, 모형 2를 사용해 각 연도별 임차인 지원으로 TFR을 예측했다. 이는 그림 3-19의 패널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구매 지수 주택 구매의 경우 예상한대로 지수 값이 높은 국가일수록(예: 저렴한 주택, 주택담보대출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저렴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3-18의 패널 B). 그러나 통합모형의 국가별 특성을 통제하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표 3-90의 모형 4는 주택 구매 지수와 연도에 대해 큰 양의 계수를, 상호관계에 대해 음의 계수를 보여준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그림 3-19 패널 B의 TFR 추정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기간 초기(1996년-2000년대 초)에는 주택을 구매하기 쉬운 국가에서

TFR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또한 2010년부터 주택 구매가 가장 쉬운 나라(지수=4)보다 주택 구매가 가장 어려운 나라(지수=0)의 출산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공급 측면 요인 지수. 다음으로 주택 상황의 공급 측면 차원을 검토하고 임대주, 주택 판매자 및 은행의 관점에서 주택을 파악하는 측도를 사용했다. 그림 3-18의 패널 C는 TFR과 양의 관계를 갖는 반복적 횡단면을 보여준다. 대출자, 임대주, 주택 판매자의 위험성이 낮고 간편한 나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관계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와의 상호작용 항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표 3-11의 모형 5와 6은 국가 효과를 처리한 후에도 이 양의 관계가 유지됨을 보여준다. 그림 3-19의 패널 C는 선형 예측을 보여 주고 주택 공급업체를 많이 지원하는 나라(예: 잠재 대출자 또는 임차인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압류 또는 퇴거가 용이한 효율적 관료주의)의 TRF가 지원이 적은 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도 상호작용 항에 따르면 시간 경과에 따라 이 효과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결합 지수. 다음으로 임차인 지원, 주택 구매 및 공급 측면 지수가 결합된 지수를 살펴 보았다. 예상대로 횡단면 분석에서 주택과 TFR 간 양의 관계가 유지됐다(그림 3-18의 패널 D). 그러나 국가별 특성을 통제하자 결합 지수 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출산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8의 모형 7 및 8, 그림 3-19의 패널 E). 또한 세 가지 개별 지수를 다른 변수로 추가하고 모형을 추정할 결과 공급 측면 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자가소유 제도. 복잡, 간편, 커리어 및 엘리트 제도 마지막으로 Mulder and Billari (2010)가 확인한 자가소유 제도의 복합측도를 검토했다. 그림 2의 패널 E는 반복적 횡단면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매년 커리어 및 간편 제도로 분류된 국가보다 복잡 제도 국가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분석에서는 커리어와 간편 제도가 엘리트 제도보다 출산율이 상당히 높고 복잡과 엘리트 제도의 출산율이 서로 다르지 않게 나타나기도 했다. 커리어 대 복잡 제도의 연구 결과는 Mulder와 Billari의 2004년 데이터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이들은 엘리트와 커리어 제도 간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표 3은 국가별 고정 효과가 포함된 통합모형의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과 2는 커리

어와 복잡 제도를 참조 카테고리 각각 사용했다. 모형 3과 4는 연도와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했다. 표는 연도와 상호작용한 경우 자가소유 제도별 출산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3-19의 패널 E는 커리어, 간편 및 복잡 제도에 대해 모형 3에 기반한 TFR 추정치를 보여준다. 엘리트 제도는 복잡 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여기서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간편 제도(제도 3)의 TFR이 가장 높았으나 2002년까지 커리어 제도(제도 1)와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4년까지 커리어와 간편 제도의 출산율이 복잡 제도(제도 4)보다 낮았다. 연구 기간 말까지 자가점유율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부채 비율(복잡 및 엘리트 제도와 커리어 및 간편 제도를 구별하는 변수)의 유일한 차이는 출산율 차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 상황과 출산 간 관계가 상당히 변했고, 특히 자가점유의 영향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① 동유럽 대 비동유럽 국가

다음으로 동유럽과 비동유럽 국가의 출산율 및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택 상황과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자. 모든 동유럽 국가는 엘리트 또는 복잡 제도로 분류되므로 Mulder and Billari (2010)가 확인한 자가소유제도에 대해 지역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표 4의 고정효과 통합 모형의 결과를 집중 논의한다.

임차인 지원 표 3-11의 모형 1과 2는 모든 나라에서 임대 상황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비동유럽에서는 출산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림 3-20 패널 A의 TFR 추정치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동유럽 국가는 19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2014년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예상대로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유럽 국가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높을수록 TFR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Mulder and Billari (2010)의 자가소유 제도 분석에서는 자가소유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석은 일반적으로 비동유럽 국가의 임차인 지원이 출산과 더욱 관련성이 높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주택 구매 지수 동유럽 국가와 비동유럽 국가를 별도로 살펴보면 주택 구매 지수와 TFR 간의 관계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표 4의 모형 3과 4, 그림 4의 패

널 B). TFR 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동유럽과 비동유럽 국가 모두 주택 구매의 지원 조건이 좋을수록(예: 저렴한 가격, 낮은 금리, 광범위한 주택담보대출 보급)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는 낮아졌다. 그러나 극단값에서도 신뢰 구간이 중첩된다.

공급 측면 요인 모형 5와 6은 그림 3-20 패널 C의 TFR 추정치와 공급 측면 요인과 TFR 간 관계를 보여준다. 동유럽과 비동유럽 국가 모두 공급측면 요인과 출산이 양의 관계를 보여 공급 측면을 많이 지원하는 국가-년의 TFR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동유럽 국가는 시간 경과에 따라 관계가 약화되었고 2008년까지 공급 측면 요인 지수별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난 10년간 이들 관계에 변화가 없었다.

결합 지수. 그림 3-20의 패널 D에서 분기점의 증거를 확인했지만 결합주택지수별 (표 4의 모델 7과 8)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기간 TFR로 측정된 출산과 주택 상황 간 관계가 변화했으며 이들 변화는 동유럽과 비동유럽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동유럽 국가의 경우 공급 측면 요인과 출산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했다. 2000년대 초 이전까지 임차인과 주택 구매 지원은 TFR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비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본 연구의 임대 환경 측도는 출산과 양의 관계를 보였고 2000년대 초 공급 측면 요인 또한 예상대로 TFR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 임차인 지원은 TFR과 음의 관계를 보였고 연구 기간 동안 주택구매 지원별로 TFR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나. 평균 초산연령

이제 평균 초산연령을 출산 지표로 사용해 주택 상황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횡단면 분석 결과, 최근 몇 년간 예상대로 공급 측면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평균 초산연령이 낮았다(그림 5의 패널 C). 그러나 다른 측도는 초산 시기와 양의 관계를 보여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수록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 통합모형의 경우 모든 측도(결합 지수 포함)에서 연구 기간 초기에는 지원을 많이 할수록 출산 연령이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출산 연령이 낮아졌다(표 3-12 및 그림 3-22). 임차인 지원, 주택 구매 및 결합 지수의 경우, 모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최근 몇 년간 공급 측면 지수의 차이는 평균 초 연령의 차이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Mulder and Billari (2010)의 자가소유 제도의 경우(표 3-13 그림 3-22 패널 E), 연구 기간 초기에는 간편 또는 복잡 제도보다 커리어 제도의 출산 연령이 낮았으나 연구 기간 말에는 자가소유 제도 간 평균 출산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① 동유럽 대 비동유럽 국가

동유럽과 비동유럽 표본의 회귀 분석 결과는 표 7의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상황의 세 가지 차원 모두 결과는 비동유럽 국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동유럽 국가는 주택 상황에 따라 평균 초산연령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비동유럽 국가에서는 주택 상황이 초산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다. 2005년경부터 임차인 지원 점수와 주택담보대출 지수가 높을수록 평균 초산연령이 빨라졌으며 이들 차이는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전에는 임차인, 주택 구매 및 공급 측면 지수가 높을수록 초산 연령이 높았으며 이러한 관계는 주로 비동유럽 국가가 주도했다.

6. 결론

사회 제도로서의 주택은 이론적으로 중요하지만 저출산 환경의 출산과 사회적 맥락 간 관계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기존 문헌 자료는 주택과 출산의 거시적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강조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본 연구는 임차 및 자가소유와 관련된 요인을 통합한 체계적 주택 개념(Mulder and Billari 2004)에 기반하고 이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확장했다. 첫째, 세 번째 차원 즉 공급 측면 요인을 추가했다. 둘째, 오늘날 저출산 국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앙 및 동유럽 국가를 추가했다. 셋째, 거시적 차원에서 주택과 출산의 관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 경과에 따라 이들 관계를 조사했다. 넷째 출산의 양(TFR) 및 시기(평균 초산연령)와 주택의 관계를 조사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주택을 특히 출산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잠재 요인으로 꼽은 이론적 틀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 관계는 지역과 시간에 따라 변

화했다. 한 때 고출산에 도움이 되었던 제도적 요인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대신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는 국가별 고정 효과를 고려할 경우 임차인, 구매자 및/또는 공급자 등 주택 상황에 대한 지원이 높을수록 출산 시기가 빨라진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이들 연관성은 동유럽과 비동유럽 국가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00년대 초 주택 상황의 모든 측도에 적용됐다. 그 전에는 주택 구매 지원에 대해 반대되는 증거를 확인했으며 최근 몇 년간 임대 지원 또는 공급 측면 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출산의 양(TFR)을 고려할 경우, 동유럽과 비동유럽이 다른 관계를 보였다. 2000년대 초부터 동유럽 국가의 경우 공급 측면 요인이 비동유럽 국가의 경우 임차인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후반 주택 구매 지원과 출산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대든 자가든 관계 없이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할수록 출산 연령이 빨라진다고 가정한 중요한 이론적 틀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자녀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가소유와 임대 간 절충점이 있어 보인다. 1990년대에는 특히 동유럽 국가에서 주택 구매 지수와 TFR이 긍정적 관계를 보임에 따라, 자가소유가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임대 지원은 TFR과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최근 몇 년간 임차인 지원은 TFR과 양의 관계를 보인 반면 주택 구매 지수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규범 변화 또는 주거 비용 급증에 기인할 수 있다. 가정을 이루려면 자가주택이 필요하다는 규범이 약화되어 청년들이 임대 주택에서도 더욱 자유롭게 가정을 이루고 출산할 수 있다. 자가 소유보다 독립된 공간을 갖는 것이 주거에 중요해졌을 수도 있다. 또한 주택 시장이 서서히 변화했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기로 주택 가격이 상승해 청년들의 자가소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출산 시점에 이상과는 다른 조건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국가 내에서도 개인과 관련된 주택 상황의 구성요소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본 보고서는 국내보다 국가 간 차이에 초점을 맞췄다. 본 연구가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내에서는 일관되지만 국가 간에는 서로 다르고, 청년들의 자가 소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 상황 차원이 많다. 둘째, 국가 수준의 차이에 집중함으로써 이동으로 인한 효과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주택 가격을 살펴보자. 어느 나라든 지역마다 주택 시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10년 3분기 인디애나폴리스의

단독 주택 평균 가격은 123,300달러였지만 호놀룰루는 628,100달러였다(전미부동산 협회 2010). 국내 부동산 시장의 이러한 차이는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되지만, 청년에게 주택 상황이 보다 호의적인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국가 내 주택 효과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주택 문제로 인해 해외로 이주할 수도 있지만 이는 국내 이동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부동산 위기는 국가 차원의 연관성을 조사하는데 또 다른 동기를 제공한다. 최근 미국의 부동산 위기 동안 주택 가격 변화 정도는 지역 주택 시장마다 달랐지만 이는 확실히 전국적 현상이었다.

물론 이번 연구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단순한 이변량 분석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들 연관성이 변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규범과 기대가 변화했기 때문인가? 교육, 노동 시장과 같은 다른 제도가 변화했기 때문인가? 주택 상황의 이들 차원은 다른 제도적 요인에서 독립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들과 결합되어 있는가? 주택의 진정한 영향은 경제적 일자리 안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연구 기간 초기 발견한 임차인 지원과 기간 TFR 간 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거시적 차원의 조건이 개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들 조건에 의해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설명 가능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과 효과의 메커니즘 또는 방향을 조사하지 못했다. 역인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택 상황 측도와 출산 간 2년의 시차를 두었으나 인과 관계를 수립하지는 못했다. 향후 더욱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해 이들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주택과 출산 간 관계가 비논리적이고 일부 관측되지 않은 요소에 기인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각국의 일반 복지 국가 제도로 이러한 효과가 유발됐을 수 있다. 국가의 복지 유형이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단순히 복지 제도 자체만으로 인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공급 측면 요인에 대한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 금융 또는 재정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이들 요인을 주택 상황 차원의 조작화(operationalization)로 간주했지만 이는 경험적 시험이 아닌 이론적 정의이다. 신용평가기관과 같은 금융과 재정 요인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주택이 아닌 출산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 및 주택 구매 지원에 관한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러한 비판에 덜 민감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 상황 차원과 본 연구에 사용된 측도는 완벽하지 않고 이들이 항상 이상적 조작화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 측도를 사용하면 가장 많은 국가-년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oan-to-value ratio)과 같은 측도는 주택담보대출 접근성의 핵심 요소이다. 주택 가격의 상당 비율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저금리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Chiuri and Jappelli 2003). 안타깝게도 이 측도는 주택 구매 지수에 사용된 다른 측도와 공통 부분이 최소이다. 표본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연구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주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원 및 법률 제도의 일부 특성을 단순히 반영하는 이번 연구의 글로벌 사법 효율성 측도보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압류 및 퇴거 기간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 외에 이번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주요 요인으로는 주택 크기와 조건 등이 있다. 출산 결정과 관련된 기타 주택 차원은 많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이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시된 분석은 사회 제도로서의 주택과 출산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차원은 다양한 주택 및 금융 제도의 오랜 역사를 반영해 국가와 출산 측도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가족 형성 및 성장과 관련된 청년들의 주택 기대와 요구 사항에 관한 추가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Aassve, Arnstein, Francesco C. Billari, Stefano Mazzucco, and Fausta Ongaro. 2002. "Leaving Home: a Comparative Analysis of ECHP Dat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4):259-75.
- Adema, W., P. Fron and M. Ladaique (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Indicators on Social Spending, 1980-2012; and a Manual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2d2d4pbf0-en>
- Bélanger, Alain P. and Barry Edmonston, Kevin McQuillan, Benoît Laplante, and Sharon M. Lee. 2013 "Implications of Global Peak Population for Canada's

- Future. *Population Change and Lifecourse Strategic Knowledge Cluster Discussion Paper Series/Un Réseau strategique de connaissances Changements de population et parcours de vie Document de travail* 2(1): Article 1.
- Bongaarts, John. 2004. "Population Aging and the Rising Cost of Public Pens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23.
- Brauner-Otto, Sarah R. 2017. HoMe: Housing Metrics Database. (database). www.housingmetricsdatabase.com. Accessed 08/08/2018.
- Castles, Francis G. 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참고문헌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209-227.
- Chiuri, Maria C., and Tullio Jappelli. 2003. "Financial Market Imperfections and Home Ownership: A Comparative Study." *European Economic Review* 47:857-75.
- Dettling, Lisa J. and Melissa Schettini Kearney. 2011. *House prices and birth rates: The impact of the real estate market on the decision to have a baby*. No. w1748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Di, Zhu X., and Xiaodong Liu. 2006. "The Effects of Housing Push Factors and Rent Expectations on Household Formation of Young Adults."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28(2):149-66.
- Edmonston, Barry, Sharon M. Lee, and Zheng Wu. 2010. "Fertility Intentions in Canada: Change or no Change?"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37 (3-4): 297-337.
- EMF (European Mortgage Federation). 2008. *Hypostat 2007*. Bruxelles, Belgium.
- EC (European Commission). 2005. *Confronting Demographic Change: A New Solidarity between the Generations*. Brussels: Commission on the European Communities.
- Flynn, Lindsay. 2013. *Housing Costs and family formation: empirical evidenc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working paper series.
- Frejka, Tomas, and Jean-Paul Sardon. 2006. "First Birth Trends in Develop Countries: Persisting Parenthood Postponement." *Demographic Research* 15(6): 147-180.
- Fukuda, Setsuya. 2009. "Leaving the parental home in post-war Japan: Demographic changes, stem-family norm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emographic Research* 20(3): 731- 816.

- Haffner, M. E. A., and M. J. Oxley. 1999. "Housing Subsidies: Definitions and Comparisons." *Housing Studies* 14(2):145-62.
- Haurin, R. J., D. R. Haurin, P. H. Hendershott, and S. C. Bourassa. 1997. "Home or Alone: The Costs of Independent Living for Youth." *Social Science Research* 26(2):135-52.
- Hoekstra, J. 2005. "Is there a connection between welfare regime and dwelling type? An exploratory statistical analysis." *Housing Studies* 20(3): 475-495.
- Hughes, M. E. 2003. "Home Economics: Metropolitan Labor and Housing Markets and Domestic Arrangements in Young Adulthood." *Social Forces* 81(4):1399-1429.
- Human Fertility Database. 2018.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Germany) and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Austria). Available at www.humanfertility.org(datadownloadedon18May2018).
- Iacovou, M. 2002. "Regional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80:40-69.
- ILC Global Alliance. 2012. "Global Perspectives on Multigenerational Households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LC Global Alliance Report* March 2012. www.ilc-alliance.org
- Jappelli, Tullio, and Marco Pagano. 2002. "Information Sharing, Lending, and Defaults: Cross-Country Eviden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6(10): 2017-45.
- Lauster, Nathanael T. 2006. "A Room of One's Own or Room Enough for Two? Access to Housing and New Household Formation in Sweden, 1968-1992."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5(4):329-51.
- Lauster, Nathanael T. and U. Fransson. 2006. "Of marriages and mortgages: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homeownership in Sweden." *Housing Studies* 21(6): 909-927.
- _____. 2006. "A Room of One's Own or Room Enough for Two? Access to Housing and New Household Formation in Sweden, 1968-1992."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5(4):329-51.
- La Porta, Rafael, Florencio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 Vishny. 1997. "Legal Determinants of External Finance." *Journal of Finance*. 52(3): 1131-1150.
- _____. 1998. "Law and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6): 1113-1155.
- _____. 2008.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Legal Origi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2): 285-332.
- Lee, Samsik and Hyojin Choi. 2015. "Lowest-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outh Korea." In Rindfuss, Ronald and Minja Kim Choe (eds). *Low and Lower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pages 107-124.
- Mandič, Srna. 2008. "Home-Leaving and Its Structural Determinants in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 Exploratory Study." *Housing Studies* 23(4):615-36.
- McDonald, Peter. 2006.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485-510.
- McNicoll, Geoffrey. 2009. "Legacy, Policy and Circumstance in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4): 777-795.
- Mulder, Clara H. 2006. "Population and Housing: A Two-sided Relationship." *Demographic Research* 15:401-12.
- _____. 2013. "Family Dynamics and Housing: Conceptual Issues and Empirical Findings." *Demographic Research* 29 355-378.
- Mulder, Clara H., and Francesco C. Billari. 2010. "Homeownership Regimes and Low Fertility." *Housing Studies* 25(4): 527-541.
- Mulder, Clara H., William Clark and M Wagner. 2002. "A Comparative Analysis of Leaving Home in the United States, the Netherlands and West Germany." *Demographic Research* 7: 565-592.
- Mulder, Clara H. and Michael Wagner. 1998. "First-time Home-ownership in the Family Life Course: a West German-Dutch Comparison." *Urban Studies* 35(4): 687-713.
- _____. 2001. "The connections between family formation and first-time home ownership in the context of West Germany and the Netherland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7: 137-164.
- PRB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4. World Population Data Sheet

2014. <http://www.prb.org/Publications/Datasheets/2014/2014-world-population-data-sheet.aspx>
- Rajulton, F. 2011. "Households and Housing in Canada." Pp. 60-82 in *The Changing Canadian Population*, edited by B. Edmonston, and E. Fong. Montréal; Ithac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Régnier-Loilier, A., and D. Vignoli. 2011. "Fertility Intentions and Obstacles to their Realization in France and Italy." *Population* 66 (2):361-389.
- Rindfuss, Ronald R., and Sarah R. Brauner-Otto. 2008. "Institution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mplications for Fertility Tempo in Low-Fertility Setting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08:57-87. PMID: PMC2901179
- Rindfuss, Ronald and Minja Kim Choe (eds). 2015. *Low and Lower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Switzerland: Springer.
- _____. 2016.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witzerland:Springer.
- Rindfuss, Ronald R., K. B. Guzzo, and S. P. Morgan. 2003. "The Changing Institutional Context of Low Fertilit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 (5-6): 411-438.
- Simon, Curtis & Tamura, Robert 2009. Do Higher Rents Discourage Fertility? Evidence from Us Cities, 1940-2000.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9, 33-42.
- Spéder, Z., and B. Kapitány. 2014. "Failure to Realize Fertility Intentions: A Key Aspect of the Post-Communist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3 (3):393-418.
- Stephens, Mark. 2003. "Globalisation and Housing Finance Systems in Advanced and Transition Societies." *Urban Studies* 40(5-6):1011-26.
- Strom, Sara. 2010. "Housing and First Births in Sweden, 1972-2005." *Housing Studies* 25 (4):509-526.
- Toulemon, Laurent. 2011. "Should governments in Europe be more aggressive in pushing for gender equality to raise fertility? The first 'Yes'" *Demographic Research*. 24:179-200.
- UNdata. 2018.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Last updated 07/05/2018. Accessed 03/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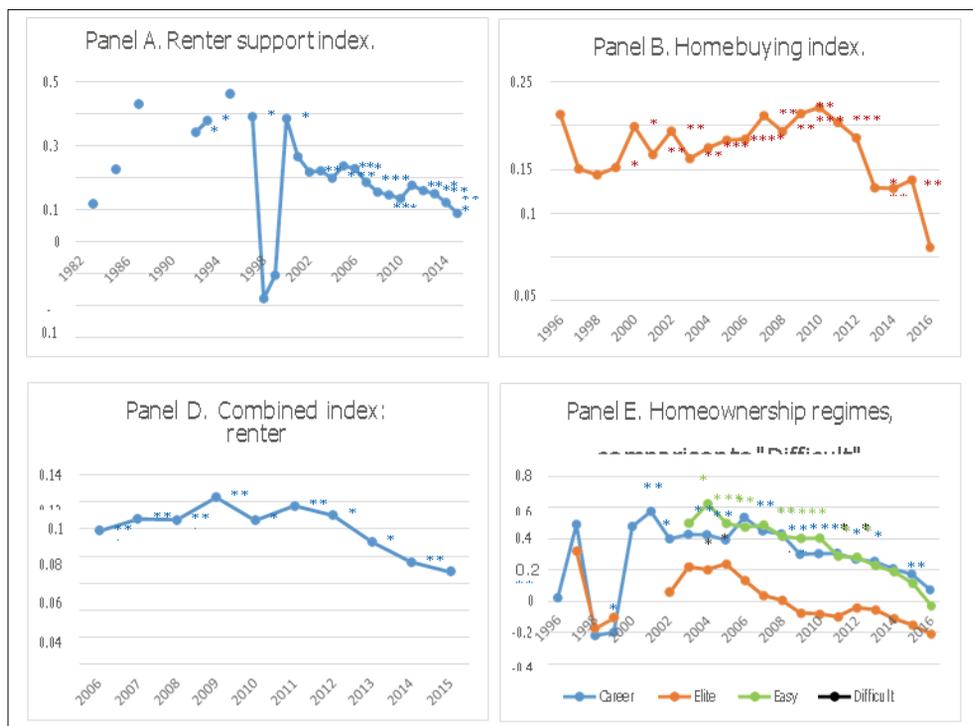
Vignoli, D., F. Rinesi, and E. Mussino. 2013. "A Home to Plan the First Child? Fertility Intentions and Housing Conditions in Italy." *Population, Space and Place* 19 (1):60-71.

Vestergaard, Hedvig. "Danish Housing System, Policy Trends and Research." December 6, 2002. Accessed March 16,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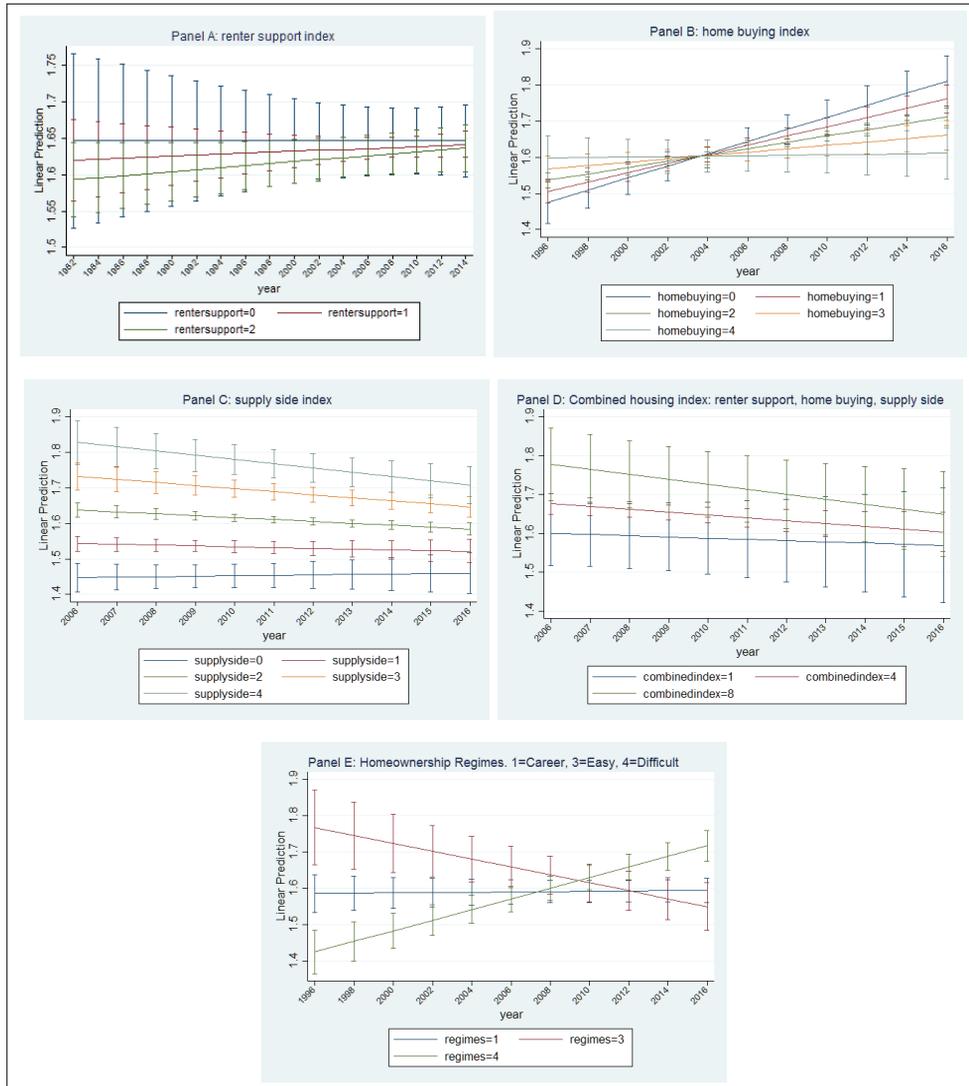
Wagner, M., and C. H. Mulder. 2000. "Home-Ownership: Cohort Dynamics, Family Formation, and Socioeconomic Resources." *Zeitschrift Fur Soziologie* 29 (1):44-+.

World Bank Data. 2018. Accessed 03/09/2018. <https://data.worldban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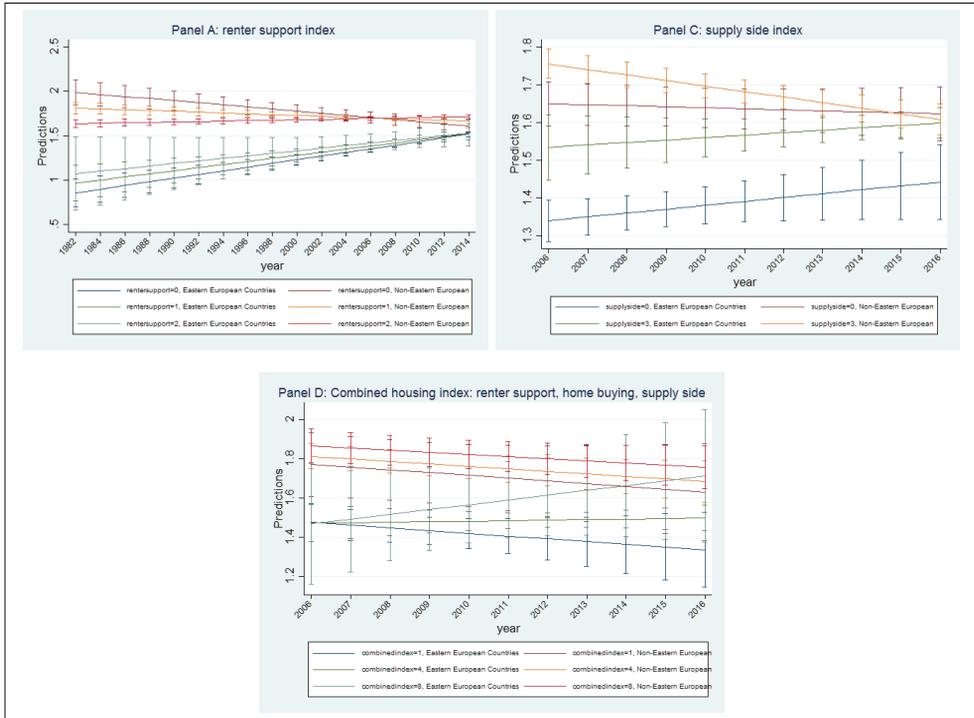
[그림 4-37] 주택 상황 지표 및 기간 TFR, 반복적 횡단면 분석의 회귀 계수. 주택과 출산 변수 간 2년 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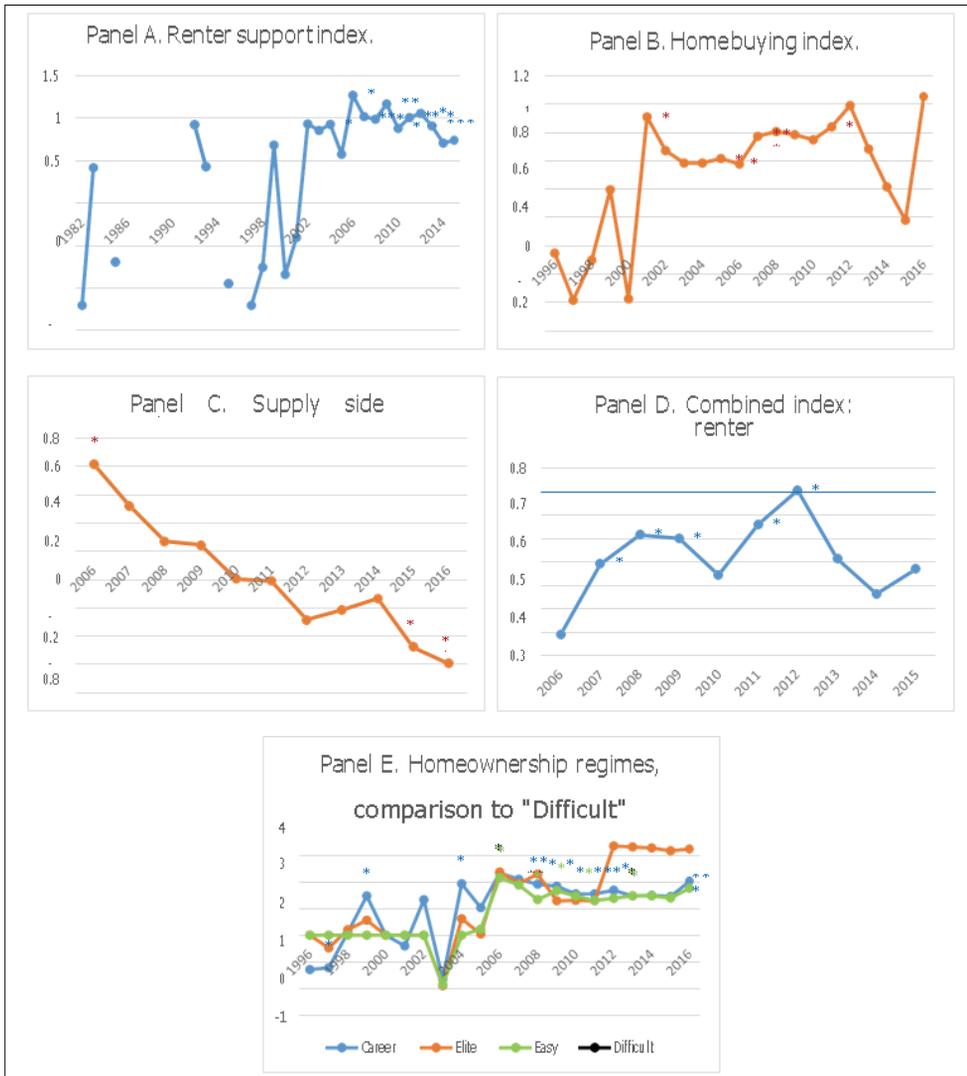
[그림 4-38] 선형 예측, 시간 경과에 따른 주택 상황 지표별 기간합계출산율(T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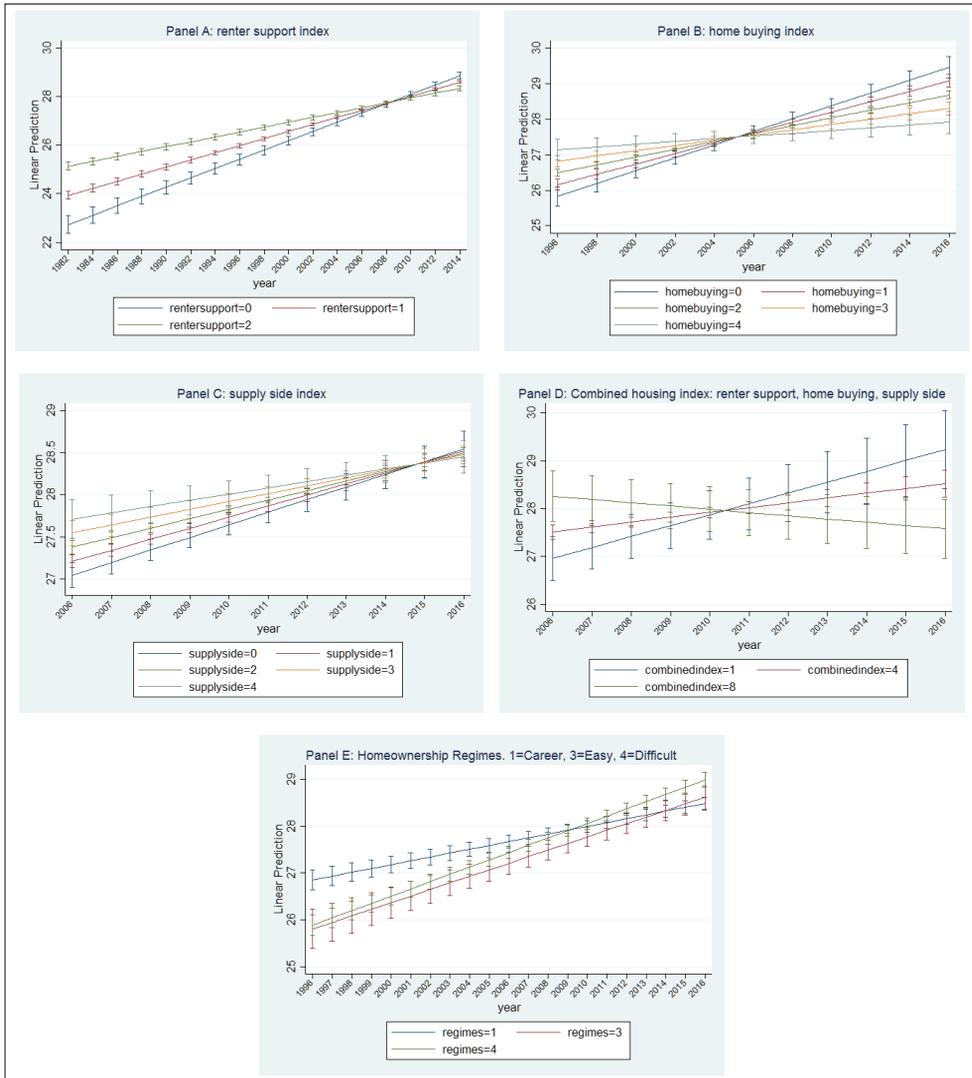
[그림 4-39] 선형 예측, 시간 경과에 따른 지역별 및 주택 상황 지표별 기간합계출산율(TFR)
(동유럽 대 비동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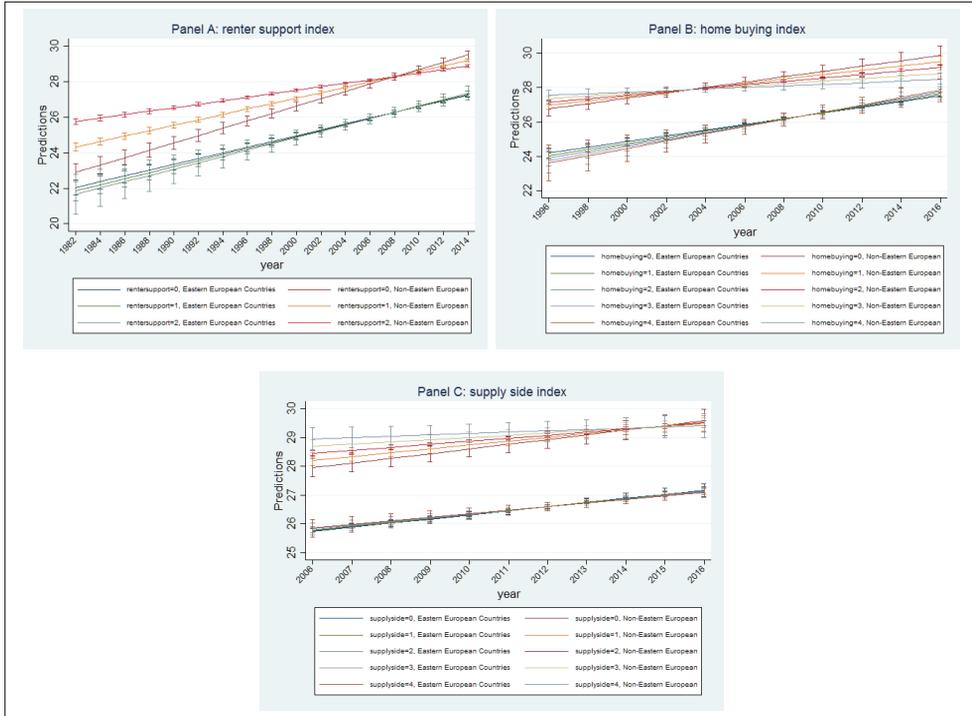
[그림 4-40] 주택 상황 지표 및 평균 초산연령. 반복적 횡단면 분석의 회귀 계수. 주택 및 출산 변수 간 2년 시차



[그림 4-41] 선형 예측, 시간 경과에 따른 기간평균 초산연령 및 주택 상황 지표



[그림 4-42] 선형 예측, 시간 경과에 따른 지역별 및 주택 상황 지표별 평균 초산연령(동유럽 대 비동유럽)



<표 4-14> 주택 상황 지표 및 기간 TFR.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임차인 지원 지수		주택구매지수		공급측면지수		결합지수	
	1	2	3	4	5	6	7	8
주택지표	-0.01 (-0.49)	-1.38 (-0.54)	-0.00 (-0.37)	8.08*** (3.49)	0.08*** (8.74)	6.68+ (1.88)	0.02+ (1.93)	2.80 (0.88)
연도	0.00 (1.42)	-0.00 (-0.00)	0.01*** (8.21)	0.02*** (6.62)	-0.00** (-3.03)	0.00 (0.33)	-0.01** (-2.84)	-0.00 (-0.20)
상호작용 항: 주택 지표*연도		0.00 (0.54)		-0.00*** (-3.49)		-0.00+ (-1.85)		-0.00 (-0.87)
상수	-0.49 (-0.33)	1.66 (0.39)	-15.84*** (-7.45)	-32.05*** (-6.30)	11.30*** (3.48)	-1.00 (-0.13)	18.66** (3.12)	5.00 (0.30)
국가-년 수	438	438	295	295	348	348	97	97
국가 수	34	34	24	24	35	35	16	16

+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4-15〉 자가소유 제도 및 기간 TFR.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1	2	3	4
커리어		-0.03 (-1.08)		28.58*** (5.89)
간편	0.02 (0.64)	-0.02 (-0.73)	-18.49** (-2.92)	10.09 (1.49)
엘리트	0.07+ (1.96)	0.03 (1.00)	22.74** (3.10)	51.32*** (6.61)
복잡	0.03 (1.08)		-28.58*** (-5.89)	
연도	0.00*** (3.99)	0.00*** (3.99)	0.00 (0.29)	0.01*** (7.63)
상호작용: 커리어 * 연도				-0.01*** (-5.89)
상호작용: 간편* 연도			0.01** (2.92)	-0.01 (-1.49)
상호작용: 엘리트 * 연도			-0.01** (-3.09)	-0.03*** (-6.61)
상호작용: 복잡 * 연도			0.01*** (5.89)	
상수	-7.33** (-3.27)	-7.29** (-3.27)	0.76 (0.26)	-27.82*** (-7.21)
국가-년 수	385	385	385	385
국가 수	31	31	31	31

+ p < 0.10; * p < 0.05; **p < 0.01; *** p < 0.001

〈표 4-16〉 주택환경지표 및 기간 TFR, 지역별(동유럽 대 비동유럽 국가).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임차인지원지수		주택구매지수		공급측면지수		결합지수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1	2	3	4	5	6	7	8
주택 지표	6.42 (0.69)	-14.36*** (-4.75)	11.80 (1.42)	4.72 (1.46)	2.57 (0.44)	8.09* (2.10)	-10.98 (-1.04)	-0.89 (-0.18)
연도	0.02*** (7.36)	-0.01*** (-4.58)	0.02*** (5.03)	0.01** (3.22)	0.01+ (1.70)	-0.00 (-0.67)	-0.02 (-1.12)	-0.01 (-0.97)
상호작용 항: 주택 지표*연도	-0.00 (-0.68)	0.01*** (4.76)	-0.01 (-1.42)	-0.00 (-1.46)	-0.00 (-0.43)	-0.00* (-2.10)	0.01 (1.04)	0.00 (0.18)
상수	-40.09*** (-7.10)	25.47*** (4.90)	-40.48*** (-4.86)	-23.15** (-3.00)	-19.20 (-1.58)	6.96 (0.88)	40.32 (1.16)	31.15 (1.03)
국가-년 수	107	331	66	229	139	209	39	58
국가 수	11	23	6	18	13	22	5	11

+ p < 0.10; * p < 0.05; **p < 0.01; *** p < 0.001

〈표 4-17〉 주택환경지표 및 기간평균 초산연령.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임차인지원지수		주택구매지수		공급측면지수		결합지수	
	1	2	3	4	5	6	7	8
주택 지표	-0.06 (-0.94)	91.75*** (12.06)	0.01 (0.15)	71.95*** (6.96)	0.08* (2.29)	38.09** (2.92)	0.12 (1.58)	84.92*** (4.82)
연도	0.12*** (44.27)	0.19*** (30.31)	0.11*** (20.92)	0.18*** (15.72)	0.12*** (18.54)	0.15*** (11.21)	0.06** (3.28)	0.27*** (5.82)
상호작용 항: 주택 지표*연도		-0.05*** (-12.07)		-0.04*** (-6.96)		-0.02** (-2.91)		-0.04*** (-4.81)
상수	-213.81*** (-39.16)	-356.52*** (-28.10)	-189.64*** (-18.29)	-337.07*** (-14.53)	-204.31*** (-16.36)	-273.77*** (-10.19)	-96.99* (-2.57)	-514.16*** (-5.53)
국가-년 수	394	394	263	263	329	329	96	96
국가 수	33	33	23	23	34	34	16	16

+ p < 0.10; * p < 0.05; **p < 0.01; *** p < 0.001

〈표 4-18〉 자가소유제도 및 기간평균 초산연령.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1	2	3	4
커리어		-0.05 (-0.40)		148.14 (7.89)***
간편	-0.02 (-0.23)	-0.07 (-0.73)	-69.34 (-2.65)**	78.80 (2.88)**
엘리트	-0.02 (-0.13)	-0.07 (-0.52)	-118.52 (-4.11)***	29.62 (0.99)
복잡	0.05 (0.40)		-148.14 (-7.89)***	
연도	0.11 (25.49)***	0.11 (25.49)***	0.08 (13.98)***	0.16 (21.51)***
상호작용: 커리어*연도				-0.07 (-7.89)***
상호작용: 간편*연도			0.03 (2.64)**	-0.04 (-2.88)**
상호작용: 엘리트*연도			0.06 (4.10)**	-0.01 (-1.00)
상호작용: 복잡*연도			0.07 (7.89)***	
상수	-201.61 (-22.34)***	-201.56 (-22.42)***	-136.46 (-11.59)***	-284.60 (-19.59)***
국가-년 수	360	360	360	360
국가 수	31	31	3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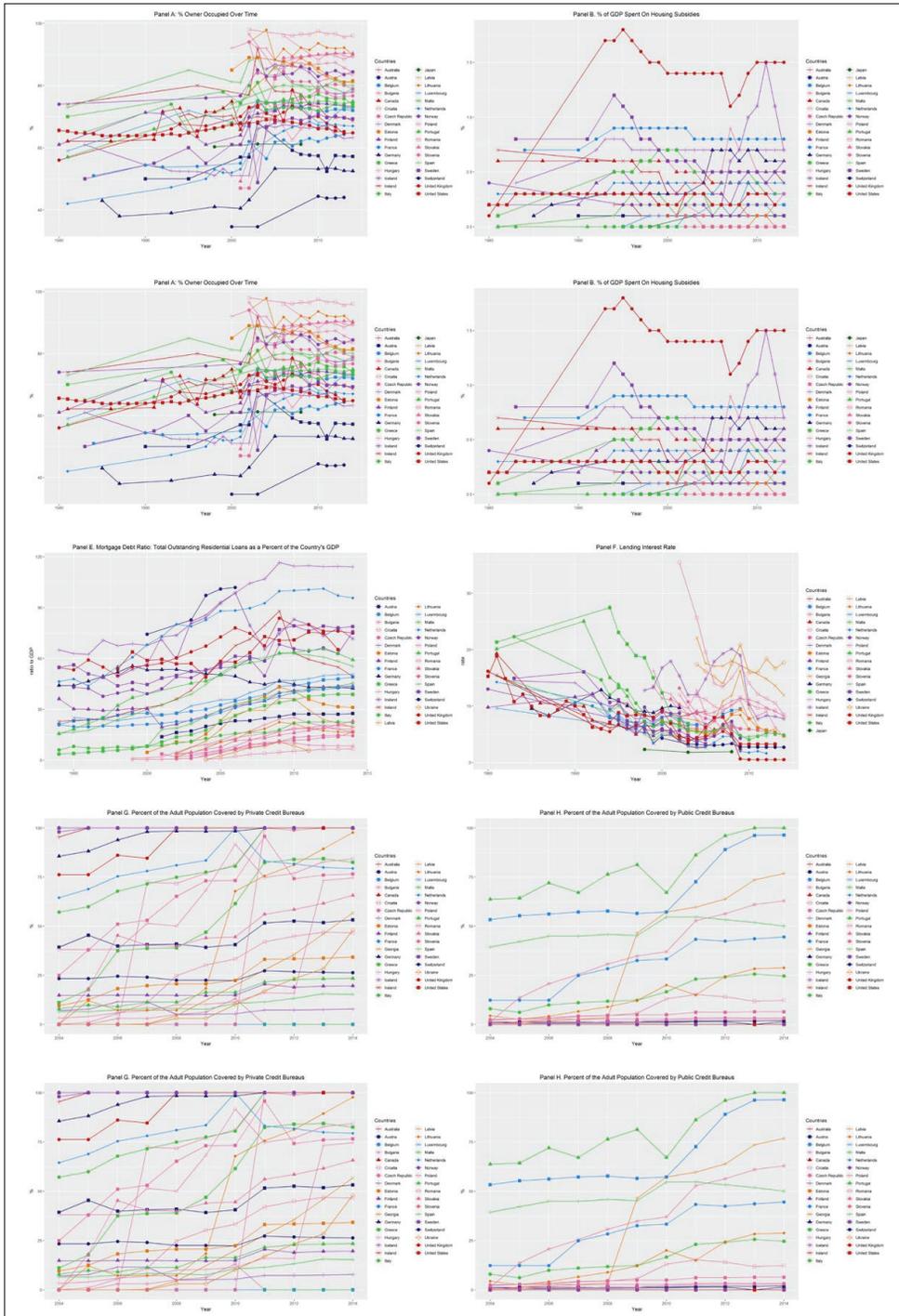
+ p < 0.10; * p < 0.05; **p < 0.01; *** p < 0.001

〈표 4-19〉 주택환경지표 및 기간평균 초산연령. 지역별(동유럽 대 비동유럽 국가), 국가 수준 고정 효과가 반영된 통합 모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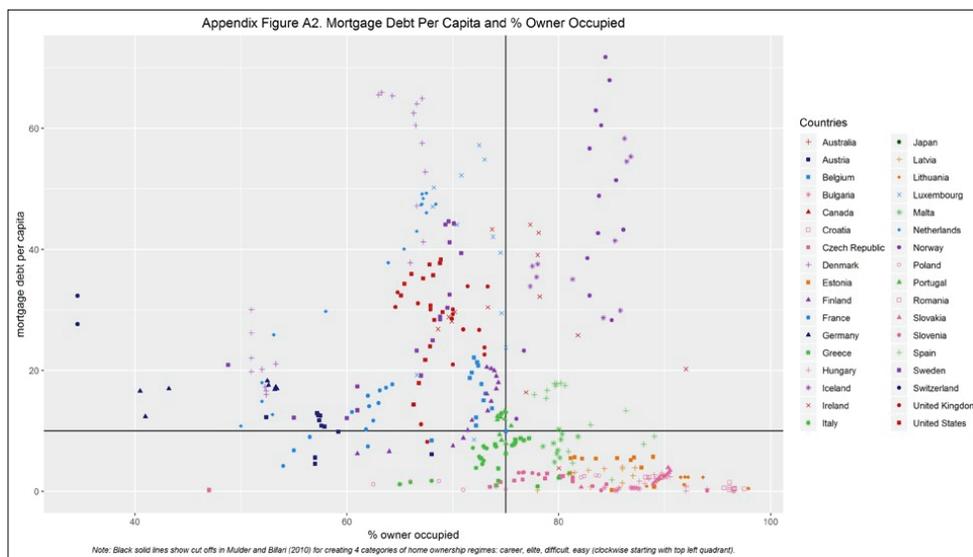
	임차인지원지수		주택구매지수		공급측면지수		결합지수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동유럽국가	비동유럽국가
	1	2	3	4	5	6	7	8
주택 지표	-15.26 (-0.60)	109.45*** (10.84)	-21.99 (-0.92)	54.81** (3.33)	9.74 (0.71)	58.75** (2.75)	71.69** (3.36)	108.77** (3.01)
연도	0.16*** (21.15)	0.21*** (23.85)	0.17*** (14.05)	0.16*** (7.69)	0.14*** (10.38)	0.16*** (7.47)	0.23*** (6.64)	0.35** (3.20)
상호작용 항: 주택 지표*연도	0.01 (0.60)	-0.05*** (-10.84)	0.01 (0.92)	-0.03** (-3.34)	-0.00 (-0.71)	-0.03** (-2.74)	-0.04** (-3.36)	-0.05** (-3.01)
상수	-299.81*** (-19.42)	-387.02*** (-22.22)	-309.24*** (-12.96)	-282.98*** (-6.99)	-262.61*** (-9.44)	-300.22*** (-6.82)	-438.29*** (-6.26)	-668.73** (-3.07)
국가-년 수	107	287	66	197	138	191	39	57
국가 수	11	22	6	17	13	21	5	11

+ p < 0.10; * p < 0.05; **p < 0.01; *** p < 0.001

[그림 4-43] 시간 경과에 따른 주택환경지표



[그림 4-44] 1인당 주택담보대출 및 자기점유율



제7절 육아에 대한 한국,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의 가족 의식 및 근로 환경

Eva Beaujouan (오스트리아 비트겐슈타인 인구통계센터)

1. 서론

본 보고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2개국과 한국의 출산 및 가족 관련 규범을 비교했다. 한국은 출산율이 매우 낮고(2016년 합계출산율: 1.17명)⁶²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가족보조금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편이다 (Gauthier 2016). 본 연구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2016년 TFR: 1.96)와 부유하지만 출산율이 비교적 낮은 오스트리아(2016년 TFR: 1.49) 등 유럽 2개국과 한국을 비교했다. 프랑스는 1932년 연방화되었다. 19세기부터 전통적으로 강

62) TFR 및 TFR 추세는 2018년 8월 세계은행데이터베이스를 참조했다.

력한 가족 정책을 시행해온 오스트리아는 1948년 최초로 정책을 수립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최근이다.⁶³⁾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회가 대규모 경제 변화에 대비하지 못했고 이는 장시간 노동, 노동 시장 규제 완화, 경제의 이중 속도 현상을 초래했다(Noland 2012). 둘째, 가부장 사회에서의 성 불균형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과 여성은 가정을 돌봐야 한다(“결혼 패키지”)는 통념이 가족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Bumpass et al., 2009). 아직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고 가족 규범이 경직되어 있다. 셋째, 교육비를 포함해 자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막대한 양육비는 확실히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다(Gauthier 2016). 본 연구는 비교 분석을 통해 날로 커지는 여성의 잠재력과 포부 간 격차와 경직된 현실이 첫 출산을 막고 막대한 양육비가 둘째 이상 출산을 저해하는 한국의 저출산 현황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가족 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 배경

가. 출산율 변화

프랑스는 18세기 중반까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다가 18세기말 크게 감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변천을 경험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세기 초까지 계속 감소했다(Blum 1988).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대부분 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이보다 훨씬 늦은 19세기 말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Knodel and Van de Walle 1979; Van de Walle 1986). 오스트리아의 코호트 출산율은 변천 전 동등한 수준에서 시작했지만, 프랑스보다 낮아졌고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3-1).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의 인구 변천은 유럽보다 훨씬 늦게 시작되지만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 이는 매우 빠른 경제 성장 하에서 발생했다. 지난 수십 년간 동아시아는 유럽

63) 법률 및 개혁에 대한 정보는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웹사이트(<https://www.issa.int/en/country-profiles>)와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문서(<https://www.caf.fr/presse-institutionnel/international/selection-etudes-et-recherches/politiques-familiales-dans-le-monde>)를 참조했다.

이 2-3세기 동안 겪었던 것과 유사한 인구 변화를 경험했다(Knodel and Van de Walle 1979; Frejka et al. 2010). 수십 년간 일본의 TFR은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의 TFR은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약 3명이었지만 곧 유럽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후 20년 동안 더욱 감소했다(2002년 약 1.2명 이하로 감소. 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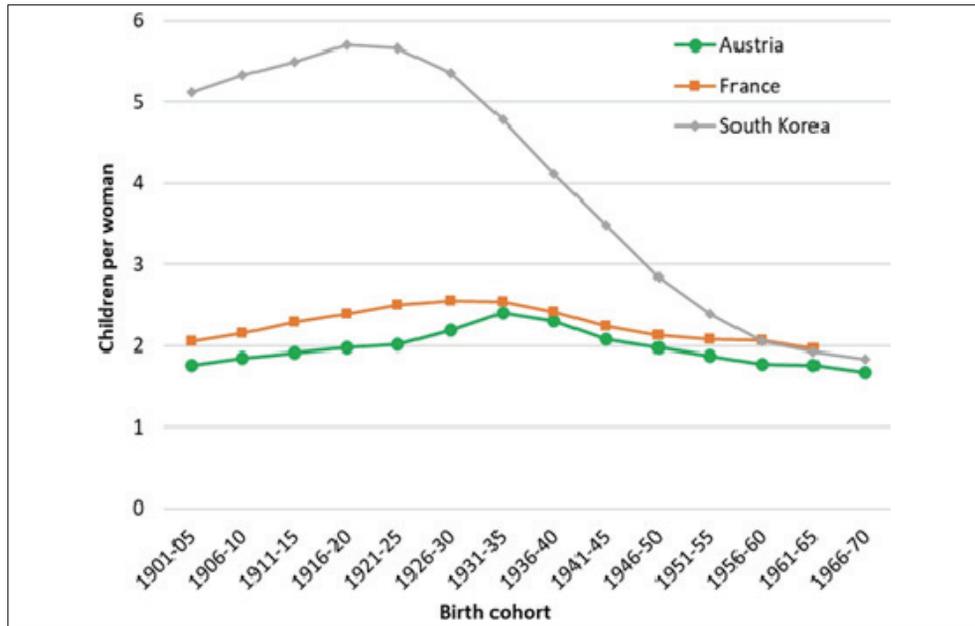
여성의 이상자녀수는 1985년 2명 이하로 감소했으나(Choe and Retherford (2009)) 190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97명에서 2012년 2.43명으로 증가했다. 자녀수감소 나아가 한 자녀 가정 장려에 초점을 맞춰 1882-1988년 시행되었던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이 폐지된 후 한국 여성의 이상자녀수는 3명까지 증가했다(그림 3). 이는 같은 시기 두 자녀를 이상적으로 간주한 프랑스나 출산아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오스트리아와는 반대된다. 2012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명이 약간 넘는다. 하지만 이들 해석하기 전에 한국과 프랑스/오스트리아의 “이상자녀수” 개념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한국의 이상자녀수 증가는 자녀수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중단되자 이들 정책의 영향이 약화되었고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실제보다 많은 자녀를 양육할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 이상자녀수를 출산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Choe and Retherford 2009).

최근 기간출산율 하락에 비해 CFR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970년 출생한 여성 1인 당 1.9명(Zeman et al. 2018)). 그러나 현재 유자녀 코호트에서 지난 30년 간 TFR이 극도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급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 회복”이 매우 높아야 한다. Myrskylä et al.(2013)는 CFR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다소 증가하고 오스트리아는 다소 감소하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 3개국의 출산진도비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1950년대 이후 출생한 코호트에서 첫째와 둘째로의 출산 이행률이 감소하고 다산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셋째 출산율은 두 유럽 국가(약 32-42%)보다 훨씬 낮은 20%에서 안정화되었다. 또한 첫째 및 둘째로의 출산 이행률은 더욱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Shin & Woo 참조).

한국은 출산율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 낮은 TFR을 감안하면 증가 징후가 보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3개국의 연령별 기간 첫째출산율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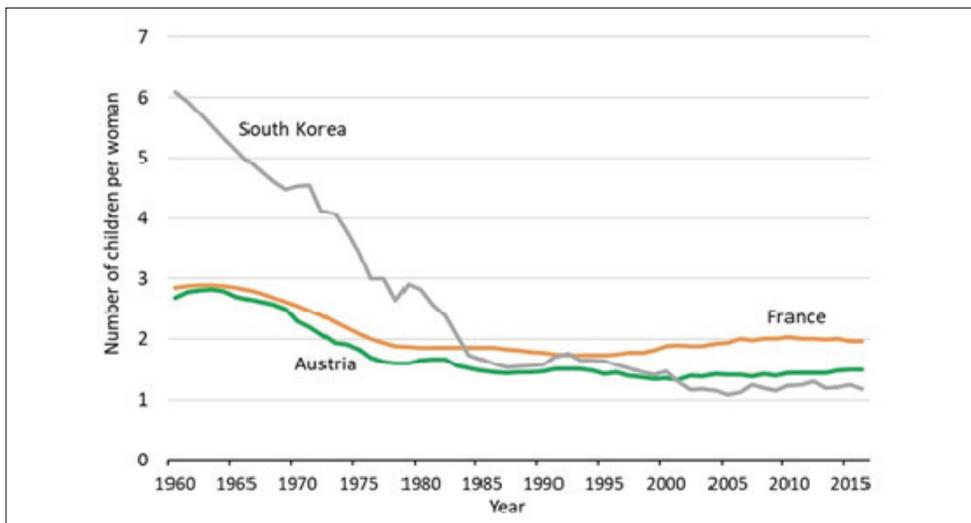
있다. 한국은 출산 연기로 인해 중위연령에 첫째 출산율이 매우 집중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와 달리 모두 출산을 연기하지만 지나치게 고령이 될 때까지 미루지는 않는다. 또한 상당수 한국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해 2015년 기준 25세 이전 첫째 출산율은 8%에 불과했다(표 3-1). 이는 오스트리아 25%, 프랑스 23%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반면, TFR1에 대한 35세 이상 여성의 첫째 출산 기여율은 유럽 2개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13-15%), 40세 이상의 기여율은 다소 뒤쳐져 있다. 청년들이 다시 출산을 시작하지 않는 한, “고령 출산” 증가가 출산율 증가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인다.

[그림 4-45] 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코호트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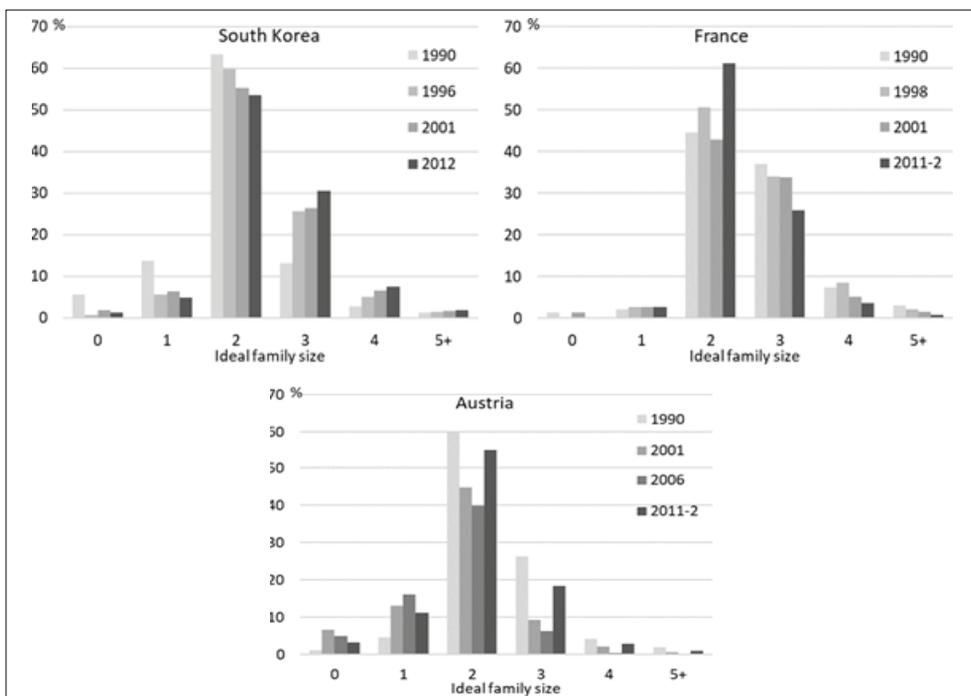
자료: 오스트리아 인구조사 1981, 1991, 2001년 및 오스트리아 거시 인구조사 1986, 1991, 1996, 2001, 2006, 2012, 2016년; 프랑스 가족 설문조사 1982, 1990, 1999, 2011년 및 Brée(2017); 한국 인구조사 1970, 1975, 1985, 1990, 2000, 2010년.

[그림 4-46] 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기간 합계출산율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

[그림 4-47] 한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이상자녀수 분포



자료: 세계가치관조사 1990, 1996, 2001년 및 한국에 대한 2012년 국제사회조사(ISSP) 및 온라인 부록 Sobotka & Beaujuouan (2014) 및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대한 2012년 ISSP

〈표 4-20〉 한국,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의 연령별 기간 첫째 출산율에 대한 35세 및 40세 이상의 출산 기여율(%)

	24세 이하	35세 이상	40세 이상
한국	7.9	14.5	1.7
오스트리아	24.7	13.7	2.2
프랑스	22.5	12.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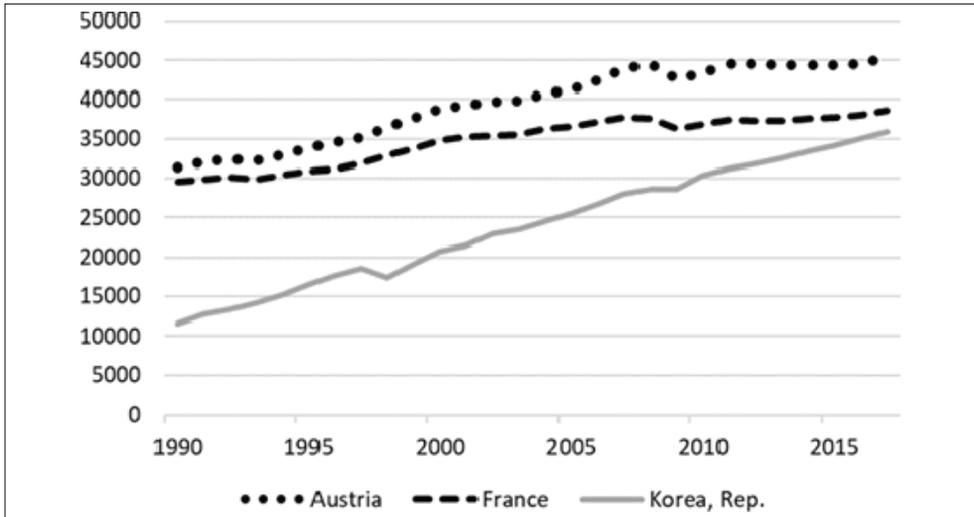
자료: 오스트리아의 인간출산데이터베이스(Human Fertility Database), 한국의 인간출산컬렉션(Human Fertility Collection) 및 Yoo & Sobotka(2018) 및 프랑스의 Volant(2017)

나. 최근 경제 상황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에 기반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1990년대에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나(그림 3-4) 최근에는 각각 39,000달러와 45,000달러로 차이가 나타났다(2011년 미국달러). 프랑스는 경제 위기로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1990년 한국의 1인당 GDP(PPP)는 약 12,000달러로 여전히 낮았으나 오늘날 거의 프랑스 GDP(36,000)로 수준으로 향상하였다. 3개국 중 프랑스는 여성 실업을 포함한 실업률이 가장 높다(그림 3-5). 1991-2017년 오스트리아의 여성 실업률은 6%를 넘지 않았고 한국은 거의 4% 이하를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남성 고용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의 금융 및 경제 상황은 최근 크게 개선되었지만 1980년과 1998년 경제 위기와 더불어 노동 시장 규제로 인해 불확실성과 사회 복지 관련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원론적 구조가 탄생했다(Noland 2012). 가부장적 공공 부문은 규제가 약한 민간 경제와 비교해 몇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평등하고 인구의 상당 수(특히 청년)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노동 시장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Noland 2012).

[그림 4-48] 구매력평가(PPP)에 기반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상수 2011년 미국달러)



자료: 세계개발지수, 05/09/2018 추출

[그림 4-49] 여성 실업률(여성 노동력 %)



자료: 세계개발지수, 05/09/2018 추출

다. 가족 정책

한국 정부는 지난 15년간 일련의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왔다. 출산장려 정책은 다양한 정책과제를 포괄한 5개년계획 형식으로 이루어졌다(Teitelbaum 2018). 출산 관련 조치는 특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 친화적이고 양성 평등한

문화 조성, 건전한 방식으로 한국의 차세대 육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등을 목표로 한다(Teitelbaum 2018). 그러나 적극적인 출산 억제 정책 후에 이들 정책이 이어졌고 처음 정책은 효과가 높았으나 (Choe and Retherford 2009) 최근에는 효과가 저하됐다.

이러한 한국의 최근 정책은 다각적으로 진화한 프랑스의 장기 정책과 대조를 이룬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낮았던 두 번의 세계대전 사이에 출산 장려 정책을 처음 시행했고 이후 사회의 요구를 정기적으로 반영했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보조금 수준은 높지 않지만(Gauthier 2002)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커서(Thévenon 2011)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간주된다. 1990년대 개혁으로 양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균형 등과 같은 현대적 관점에 도입됐다(Pailhé et al. 2008). 20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는 유아기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다(Thévenon 2011). 이후 오스트리아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했다(Sobotka 2015). 정부는 이를 위해 유연한 접근법을 통해 국민들의 선호도와 요구를 반영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에게 장기 육아 휴직을 부여하고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실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둔 모/부모의 니드에 응답했다. 또한 7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시간제근로 청구권을 부여했다(Berghammer and Riederer 2018). 그러나 양국 모두 유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랑스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고, 주변 국가의 TFR이 모두 감소하는 중에도 오스트리아의 TFR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국가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성공적으로 간주된다.

라. 출산 장애 요인

본 연구는 주로 한국,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일부 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역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가족을 돌볼 여유를 갖지 못했다(Kyung-Sup and Min-Young 2010; Riley 2016). 유교에 기반한 전통, 가치 및 사회 조직은 가족, 특히 여성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이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조건에 집중한 대책을 수립할 뿐 아니라 가족 형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 2개국의 가족 형성 환경을 비교해 이들의 차이점과 한국 가족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특이성을 살펴본다.

마. 근로 환경의 질

Anne Gauthier(2016)는 한국이 고용 안정, 직장 문화 및 근로 조건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가 경제 발전에 전념하는 동안 가족은 “기능적으로 과부하 상태”가 되었다(Kyung-Sup and Min-Young 2010). 앞서 설명한대로 한국은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한 편이다(Jones 2007). 이로 인해 기업은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무, 시간제근로 또는 기타 수익성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유연성 제한, 임신한 여성에게 퇴사 종용 등과 같은 압력을 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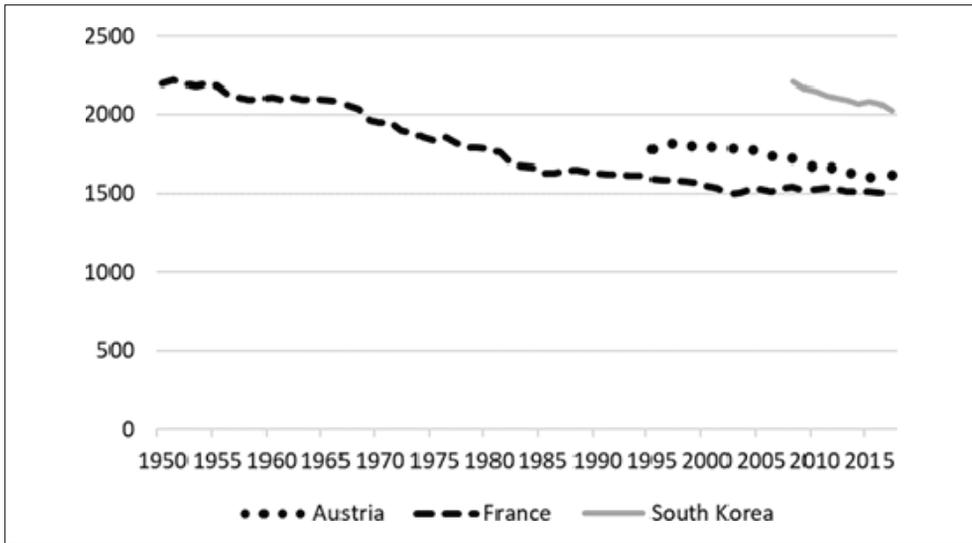
한국은 노동자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높아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보다 직무 긴장이 훨씬 높은 편이다(표 3-2 참조).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 또한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하고 가정보다 인적 자본 축적에 집중하는 원인이 된다(McDonald 2006). 한국은 특히 노동 시간이 길다. 2010년 이후에도 한국의 평균 노동 시간은 1950-60년대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극도로 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최근 정부의 노력 덕분에 노동 시간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후 노동 시간이 다소 감소했다.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목표 하에 2018년 주당 노동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주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상당히 극단적이고 2015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거의 4분의 1이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표 3-2).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유자녀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을 제한한다. 또한 개인주의가 점차 확산되면서 이는 관계를 시작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청년들은 일을 하지 않을 때 가족 구성과 같은 이타적 활동보다 친구를 만나거나 여가나 휴식 등과 같은 “경쟁 활동”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장시간 근무는 시간 부족으로 잠재 파트너를 만나는데 불리할 수 있다. 결혼 상대 결정 시 부모의 영향이 점차 줄고 있음을 감안하면(Kyung-Sup and Min-Young 2010) 파트너 선택 시 가족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연애 요건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1950년대(베이비붐 시대) 프랑스(및 오스트리아)에서 장시간 근무가 한국

과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는 효과적인 피임법도 보급되지 않았고, 오늘날과 같은 가전제품도 거의 없어서 가사 노동이 훨씬 힘들었고 여가에 대한 이러한 요구 사항도 없어 지금과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 개인주의가 출현하기 전까지 출산은 지역사회, 특히 시골 지역 생활의 중심이었다. 당시에는 주부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오늘날처럼 방송 매체에서 연애관계를 자세히 보여주지 않았고 개인주의도 확산되기 전이었다.

[그림 4-50]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 시간



자료: OECD(2018) 노동시간(지표). DOI: 10.1787/47be1c78-en(2018년 9월 24일 확인)

<표 4-21> 근로 환경의 질(직무 긴장 및 장시간 노동)

	직무 긴장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2015)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2015, 본업 기준)
오스트리아	44.4	4.9
프랑스	45.2	4.9
한국	53.7	22.6

자료: OECD 고용전망보고서(2017) 표 1.2 노동시장 성과 스코어보드: 일자리 수, 일자리의 질 및 포용성의 주요 지표

바. 노동 유연성 및 유자녀 여성의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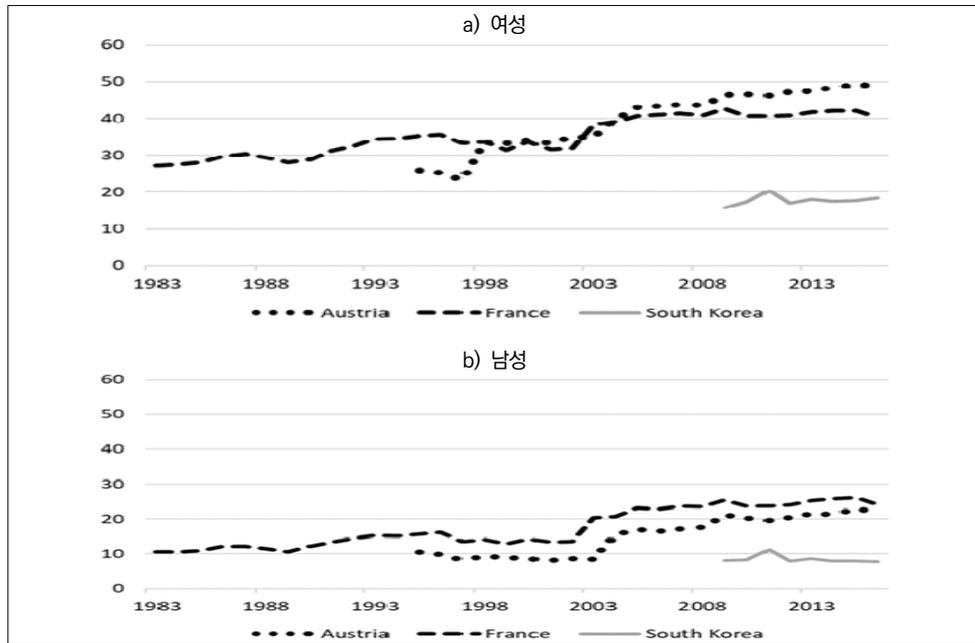
한국은 남성은 물론 여성도 시장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여성의 역할이 양면성을 가지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2012년 한국인 응답자의 70%가 “남성과 여성 모두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ISSP 2012에 기반한 자체 계산).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 노동 시장에 참여하려면 전일근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여성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Tsuya et al.(Tsuya et al. 2000)에 따르면 1994년 남성은 주당 평균 52시간, 여성은 50시간 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의 투자가 필요하다. 여성이 일을 계속할 경우 자녀의 유무 여부로 노동 시간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림 [4-51]은 한국에서 여성(프랑스: 40%, 오스트리아 50%, 한국 50% 이하)은 물론 남성(프랑스, 오스트리아: 25%, 한국: 10% 이하)들 사이에서도 시간제 고용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럽의 노동 유연성은 유자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꼽힌다(Berghammer 2014). 이는 또한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시간제 고용이 유자녀 여성의 비경제활동을 일부 대체했고 2015년 주당 노동 시간이 29시간 이하인 유자녀 기혼여성은 55.3%로 프랑스의 21.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아동 발달은 오스트리아 가정 생활의 핵심이고 부모(특히 여성)는 일과 경력 관리보다는 자녀 양육에 집중한다(Berghammer 2014). 노동 유연성이 크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회 생활에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다. 프랑스는 출산 휴가 후 자녀를 종일 보육 시설에 맡기고 더욱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다. 실제로 이는 프랑스 가정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념이 오스트리아보다 약하다. 소득 감소 시 생계 유지의 어려움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해야 한다. 또한 IFOP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소득에만 의지하면 불편할 것 같다고 응답한 여성이 1991년 47%에서 2014년 78%로 증가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강력한 가족 친화적 규범은 여전히 여성의 출산을 유도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했고 국민들은 강력한 가정 지원 정책의 장기 지속성을 신뢰한다(Thévenon 2016).

한국은 노동 시장에 참여해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여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유자녀 여성을 포함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장려는 남성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

동 참여가 자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통념이 있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는 시간제 고용률이 점차 증가하지만 한국에서는 최근에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부모에게 시간제근로 가능성을 보장해 여성이 가정 형성을 결정할 때 경력 단절의 불안을 줄이는 것이다. 마지막 정책 계획에 따라 개발된 보육 서비스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즉 한국에서 보육원이 널리 보급되어 0-2세 아동의 보육 시설 등록율이 2004년 7%에서 2014년 36%로 증가했다.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자녀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보육 인프라 강화가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여성의 노동 참여가 미취학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설문 항목에 15-29세 남녀 응답자의 49%가 동의한 반면 30-49세 응답자는 보다 고령층 응답자와 비슷한 동의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개혁에 따라 가족 조직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연령 효과일 수 있으나 유럽 2개국은 연령 효과가 부재해 세대별 가설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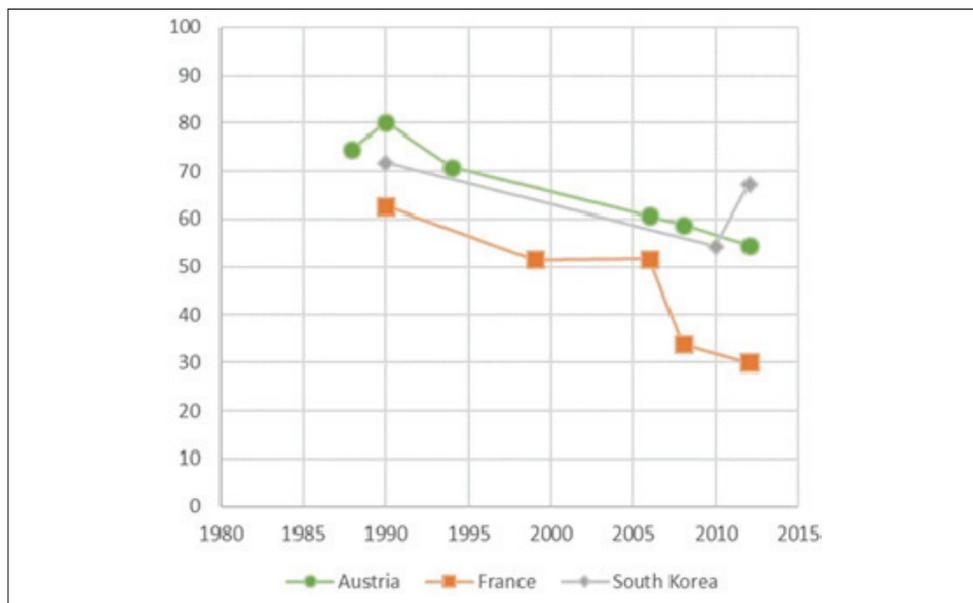
[그림 4-51] 시간제 고용, 여성 및 남성(여성/남성 총고용률)



주: 시간제 고용은 전일제 고용보다 근무 시간이 훨씬 짧은 정규직을 가리킨다. 시간제 고용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다.

자료: 세계개발지수, 05/09/2018 추출

[그림 4-52] “여성의 노동 참여가 미취학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에 대한 의식 지표(동의/매우 동의한 비율), 추세 1980-2012년



주: 한국의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이와 같은 증가세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변화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자료: 세계가치관조사 1990, 2010년 및 한국에 대한 2012년 국제사회조사, 1988, 1994년 국제사회조사, 2006년 유료바로미터 및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1990, 2008, 2012년 유럽가치관조사

<표 4-22> 성별 및 연령대별 의식 지표 “여성의 노동 참여가 미취학자녀에게 악영향을 칠 수 있다”(동의/매우 동의한 비율) 2004-2014년 설문조사

	남성				여성			
	15-29	30-49	50-69	전체	15-29	30-49	50-69	전체
오스트리아	52.5	58.8	65.9	56.6	54.9	56.0	62.0	55.6
프랑스	33.5	36.5	51.3	35.4	27.2	29.8	36.8	28.9
한국	48.7	59.2	67.5	55.8	48.8	67.7	67.4	61.7

자료: 그림 8 참조.

<표 4-23> 자녀 연령별 보육시설 참여율(보육시설 등록률)

	0-2세 등록률(%)		0-2세 평균 보육 시간		2013-14년 등록률(%)	
	2004*	2014	2014	3세	4세	5세
오스트리아	11.2	19.2	22.5	63.1	91.5	95.8
프랑스	42.2	51.9	32.3	99.6	100.5	100.8
한국	6.6	35.7		89.6	92.5	94.8

자료: OECD, 온라인 표 PF3_2, 2018년 7월 확인

사. 노동 시장에 대한 여성의 인식

Gauthier(2016)는 가정의 요구를 충족하는 의미에서 현재 개혁과 정부 지원이 한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휴가 제도 개선 및 보육 시설 확대가 실제 요구에 부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Gauthier는 직장 에서 여성의 요구와 직장조직 간 비양립성에 주목했다. 자녀 유무에 관계 없이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노동 시장에 대한 여성의 관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기업과 정부의 가부장적 태도로 인해 직장 환경이 여성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남성이 가사와 육아 부담을 꺼려 유자녀 여성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Teitelbaum 2018). 아시아는 개인주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결혼 패키지”, 결혼 비용 및 영향의 매력이 점점 감소할 수 있다(Jones 2017). 동아시아에서는 가사 노동을 많이 할수록 자녀를 많이 낳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중부담”이 여성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개념은 유효하다(Kan and Hertog 2017). 또한 남편이 가사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가 중요하다는 개념도 여전히 유효하다.

저출산 국가에서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련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Myrskylä et al. 2009;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와 육아 휴직은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다른 선택 예를 들어 일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프랑스를 포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는 여성이 이중부담에 시달리는 나라보다 출산 수준이 높다. Teitelbaum(2018)은 한국의 가족주의와 서유럽 가족제도를 심도 깊게 비교했다. 전통적으로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이를 양육했던 이탈리아는 대가족 해체와 장기 경제 위기로 인해 유럽 최저 수준으로 출산율이 감소했다. 그러나 가족 정책을 거의 개발하지 못한 이탈리아와 달리 한국은 인구 감소 위협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인식은 간단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중간 소득 기준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40%에 불과했으며 2015년에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의 남녀 소득 격차는 22%에서 17%로 감소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이보다 10% 정도 격차가 크다.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률은 프랑스가 61%, 오스트리아가 67% 한국이 83%이다. 이 수치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오히려 안정화되어 1994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Tsuya et al. 2000).

그림 3-9는 사회가 여성의 노동을 인식하는 방식과 시간 경과에 따라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를 보여준다. 1990년대 초 프랑스 응답자의 3분의 1, 오스트리아와 한국 응답자의 40%가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일자리에 우선권을 갖는다”는데 동의했다. 2000년대 말, 이 비율은 10%, 20% 및 30%로 각각 감소했다. 또한 1990년대 유럽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전업주부 활동이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 활동만큼 가치가 있다는데 동의한 반면 한국은 90% 이상이 동의했다(90%). 2010년대 초 이에 대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동의율은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80%를 유지했다. 그러나 한국의 응답 결과는 보다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와 2010년대 응답과 다른 연도의 응답 간 큰 차이로 인해 질문 방식의 변화가 나타났을 수 있고 이들 두 해의 질문 방식이 다른 해보다 유럽과 유사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모든 세대가 가정주부의 성취감에 대체로 동의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49세 이하 여성은 일자리에 대한 남성의 우선권에 남성만큼 동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30-49세 연령층은 남성의 경우 36%가 남성의 우선권에 동의했지만 여성의 동의율은 25%에 불과했다. 또한 고용권(right to job)에 대한 세대간 차이도 매우 컸다. 15-29세 응답자의 경우 여성의 12%, 남성의 24%가 동의한 반면, 50-69세는 48%가 동의했다(표 3-7).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처럼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 여성과 젊은 세대의 경우 프랑스와 유사한 동의율을 보였다(11-12%).

성균형의 관점에서 두 유럽 국가의 조건은 이상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오스트리아의 성평등은 프랑스보다는 뒤쳐져 있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Matysiak and Weziak-Białowska(2016)가 유럽 사회에 맞춰 구성한 일과 가정의 조정 조건 지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상위 3개국에 속한 반면 최하위 3개국에 위치했다. 2007년 이후 3개국 모두 25-34세 연령층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3차 교육 이수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여성의 노동과 작업 능력이 오스트리아의 경우 다소, 한국은 상당히 평가 절하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노동 친화적 보수주의의 좋은 예이다(Brinton and Lee 2016). “여성은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동시에 가정에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기업 또는 노동 시장 규정의 한계로 일과 가정이 여전히 양립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 시장은 여성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당연히) 남성은 자녀가 생긴 후에도 일을 계속하

는 반면 여성은 임신 후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식이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 4-24〉 남녀 소득 비율

(남성-여성)/남성(비율)		
	2005년	2015년
오스트리아	22	17
프랑스	9	10
한국	40	37

주: 남녀 임금 격차는 남성의 중간 소득 대비 남성과 여성의 중간 소득 차이로 계산한다. 노동 시간에 관계 없이 급여를 반영하고 조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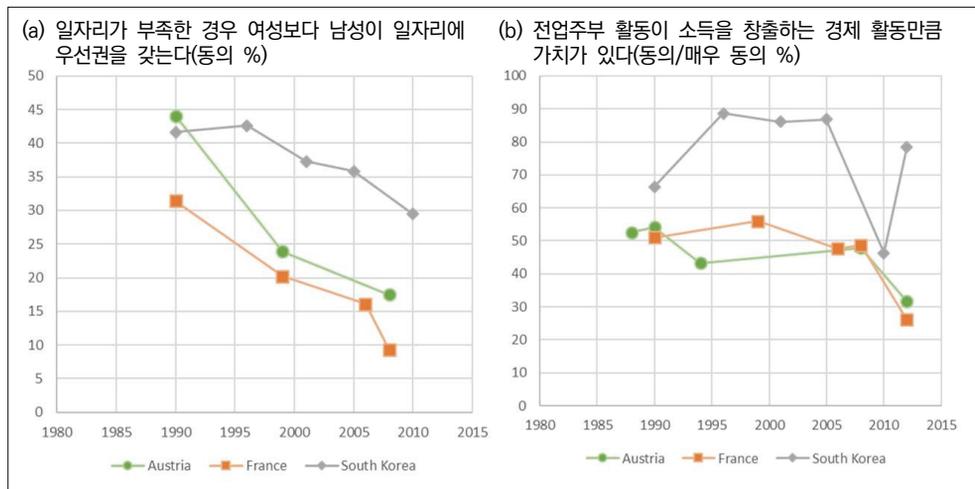
자료: OECD, <http://www.oecd.org/els/emp/employmentdatabase-earningsandwages.htm>

〈표 4-25〉 15-64세 남녀의 무급 가사 노동 시간(하루 평균)

	남성	여성	여성의 부담률
오스트리아	2.3	4.5	67
프랑스	2.2	3.7	62
한국	0.8	3.8	83

자료: OECD 2015년 9월 25일 OECD.Stat에서 추출

[그림 4-53] 의식 지표, 추세 1980-2012



자료: 1990, 1996, 2001, 2006,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 및 한국에 대한 2012년 국제사회조사, 1988, 1994년 국제사회조사, 2006년 유로바로미터 및 오스트리아와 호주의 1990, 2008, 2012년 유럽가치관조사

〈표 4-26〉 성별 및 연령대별 의식 지표 2004-2014년 설문조사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남성				여성			
	15-29세	30-49세	50-69세	전체	15-29세	30-49세	50-69세	전체
오스트리아	11.3	17.6	23.6	15.5	11.8	11.8	25.3	11.8
프랑스	6.9	8.4	16.4	7.9	11.4	11.5	16.6	11.4
한국	23.6	36.2	48.3	32.2	12.0	24.5	47.4	20.7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남성				여성			
	15-29세	30-49세	50-69세	전체	15-29세	30-49세	50-69세	전체
오스트리아	36.5	43.3	46.8	41.0	40.1	40.1	49.0	40.1
프랑스	35.9	37.6	44.2	37.0	40.0	38.6	37.8	39.1
한국	69.7	71.8	70.9	71.1	66.3	75.2	71.9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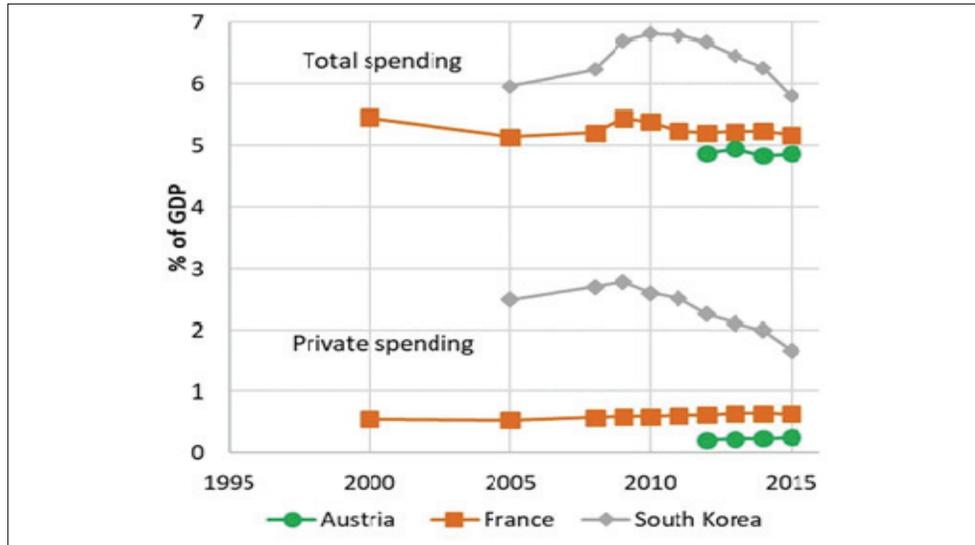
아. 자녀의 질에 대한 헌신

다른 가족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모는 자녀에게 가능한 최고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한다. 특히 한국 부모는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자원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양질”의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극도로 높은 압력을 받고 있다(Jones 2007; Teitelbaum 2018). 그리고 사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한 덕분에 자녀 양육의 사적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로 많은 부모가 자녀를 최고의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입시 학원에 보내고 있다.

따라서 Gauthier는 자녀 양육비를 출산의 중요한 장애물로 간주하고 “자녀의 질과 양 간 명확한 절충점”을 강조했다(Gauthier 2016). 이러한 조건에서 가정을 시작하려는 이들은 둘을 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하나만 낳아야 할 수도 있다. Fukuda는 전반적으로 높은 한국의 교육비가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교육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그림 3-10). 한국의 전체 교육비는 유럽 2개국보다 GDP의 1%P 이상 높고 2010년에는 GDP의 7%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지난 개혁까지 한국 가정의 교육비 지출은 프랑스보다 최고 5배나 높았다. 현재 정부의 지원이 증가해 이 수치는 3배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들 사적 비용에는 한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입시 학원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입시 학원이 많지 않은 다른 나라와의 교육비 차이가 과소평가되어 있고 정부의 지출 확대로는 이러한 “교육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림 5-54] 2000-2015년 교육비 지출, GDP 대비 초등부터 제3차 교육까지



주: 교육비 지출은 학교, 대학교 및 기타 공립 및 사립 교육 기관에 사용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 기관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부수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가족이 구매한 교과서, 사교육 비용, 학생의 생활비와 같은 교육 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된다.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교육 기관에 대한 직접 지출은 물론 가계에 제공하고 교육 기관이 관리하는 교육 관련 공적 보조금을 포함한다.

자료: OECD, <https://data.oecd.org/eduresource/private-spending-on-education.htm#indicator-chart> 및 <https://data.oecd.org/eduresource/public-spending-on-education.htm#indicator-chart>.

자. 토론

한 자녀(부모 입문) 출산 후 둘째 출산 이행에는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새로운 일과 경제 조직을 고려하면, 청년들(여성 포함)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학업과 일에 집중한다. 이는 경제 및 다양한 이유로 (승진 등) 출산이 연기됨을 의미한다. 가정 생활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가정 생활은 자유를 잃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자유로부터 가정이라는 한정된 세계로의 전환은 매력적이지 않다. 또한 근로 조건을 고려하면 남성은 소득 제공자이지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여성은 남성이 장시간 일할 경우 자녀 출산을 더욱 꺼릴 수 있고 개인주의와 핵가족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1966-70년생 코호트의 무자녀율은 아직 10% 이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다음 기간 코호트는 서유럽 수준인 12-1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 생활을 시작하면 둘째 이상 출산 시 경제 상황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자녀

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압박은 양육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 수를 제한해 이미 낳은 자녀에게 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출산율은 8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7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Zeman et al. (2018), 온라인 부록 참조).

이번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되었던 양국의 차이는 셋째 출산율이 동유럽과 남유럽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낮아 한국의 코트 출산율은 오늘날 서유럽 수준인 1.5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와 달리 한국은 가족 정책을 시행 중이고 따라서 향후 이들 정책이 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바란다. 그러나 일과 가정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한 출산율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현재 한국 여성이 가정을 이루려면 경력과 포부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지만 남성은 일을 계속한다. 직업이 사회적 지위를 정의하는 사회에서 이는 당연한 선택이 아니다. 기업은 여성은 물론 남성을 위해서도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 유럽 국가는 남녀 모두 한국보다 근무 시간이 짧고 시간제고용이 발달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되어 있고 경제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다(취업이 어려울 경우 남성에게 우선권 제공). 시장은 (적어도 일정 기간) 생산성이 낮은 이들을 탈락시키고 있으며 유자녀 여성은 여전히 노동 시장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사회는 남성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성(특히 유자녀 여성)의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 보편적 교육과 성평등한 대학 입학으로 여성의 숙련도가 남성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여성의 소득이 남성만큼 증가하고 자녀를 낳은 후에도 일을 계속해 가정의 경제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적 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확대는(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자녀들이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정책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 없음)를 높여야 한다. 안정적인 장기 인프라의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었는지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차. 권고안

본 연구는 한국과 프랑스/오스트리아의 거시적 비교를 통해 한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의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평가했다. 가족 정책의 대상이 아닌 맥락의 몇 가지 요소는 가족 형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형성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산의 물적 조건을 직접 개선하기 위한 정책뿐 아니라 근로 환경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유자녀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출하고 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유급 노동을 재구성하고 남녀 모두의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매우 높은 양육비(주로 교육비)는 자녀수를 제약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간주된다. 빠른 경제 발전 속에서 이데올로기는 천천히 변하지만 불평등은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 출산 연기 및 기타 지금까지 무시되어온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세대에 걸쳐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 이전과 청년 특히 여성들의 정치 개입은 물론 노동 시장 참여는 이러한 변화를 시행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

□ 가족 형성과 첫째 출산

1) 노동 시장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본 연구는 신세대에서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한국 노동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여성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경제 발전으로 개인의 전망이 빠르게 바뀌었고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필수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 문화는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성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팽배하고 유자녀 여성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이다(Riley 2016). 경제는 여전히 남성의 노동력에 의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남아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낮은 임금 수준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조직 문화는 성불평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만이 노동 시장 통합을 증진할 수 있다.

2) 근로 조건, 근로 환경의 질

한국은 대다수 노동자가 주 60시간 이상 일할 정도로 노동 시간이 길다. 노동자의

직무 긴장이 또한 높다. 동반자 관계는 여전히 까다로운 사회적 참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시간에 가능한 덜 까다롭고 여유로운 활동을 선호할 수 있다. 이는 가족 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과 생활의 균형은 여전히 정치적 우선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Noland(2012)는 기존 노동력뿐 아니라 여성 노동력의 효과적 활용은 최근 경제 침체에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제안했다.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절되어 있는 유자녀 여성의 의도적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3) 노동 경직성

현재 남성은 물론 여성도 40시간 이상 매우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노동 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여성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보수적 사회에서 노동 유연성과 특히 시간제근로를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첫째 이를 통해 남녀의 노동 긴장을 더욱 적절히 재분할 수 있다. 둘째 가정을 형성한 후 여성에게 주부가 되는 것보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남성보다 여성이 임금이 현저히 낮으면 가정에서 일하는 여성의 장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녀의 임금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4) 남성의 중요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세계가치관조사와 기타 설문조사는 동아시아에서 남성의 중요성은 묻지 않아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반길 수 있다.

남성의 장시간 노동은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크게 줄여 출산 포기를 불러올 수 있다. 한국은 현재 “결혼 패키지”가 여성에게 매력적인지 그리고 가사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사 분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한국은 최근 근로 시간을 개혁했기 때문에 직장 문화도 함께 변화한다면 가정 형성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여기서도 남녀의 균형 그리고 출산 의향이 중요하다.

□ 둘째 이상 출산

둘째 이상 출산은 출산율을 대체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 형성의 1단계를 완료한 후(이 시점에 여성은 이미 주부임), 자녀를 늘리려면 근로 환경 및 성평등 이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고려 사항은 이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현재 자녀(첫째)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고려하면(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임), 최고의 교육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둘째 이상의 출산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러한 교육열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고령 출산과 기타 결합 형태

여기서는 가정 환경이 출산율 향상을 저해하는지에 관해 간단히 논의한다. 연령별 초산율 그래프는 출산 연기가 보편적이지만 출산 연령이 완만하게 많아진다는 것을 보인다. 고령 출산은 제한적이며 TRF가 매우 낮음에도 2014년 기준 40세 이후 초산율은 대부분 서양 국가가 2-5%인 것에 반해 1.4%에 불과했다(Beaujouan and Sobotka 2019). 첫째 출산을 위한 파트너십 형태가 더욱 유연하면 출산 지연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은 제약이 많은 결혼보다 자유로운 관계에서의 출산을 선호할 수 있고 따라서 출산 연령이 빨라질 수 있다. 둘째 여성은 여전히 고령 출산과 결혼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 이는 출산율 회복에 방해가 된다. Yoo(2016)는 1980년생 코호트에서 45세 기혼율은 “회복” 시나리오에 따라 (95%에서) 70-85%까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자녀들이 파트너십 관계에서 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물론 총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35세 이상 여성들과 커플의 파트너십 형성과 출산 장려는 한국의 출산율 회복을 촉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이들 연령층의 특수성을 겨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Yoo(Yoo 2016)에 따르면 출산율 회복은 초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그룹과 교육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가장 낮았다. 이들은 노동 시장 참여가 활발하고 가족을 위해 특히 경력과 같은 개인의 꿈을 포기하기를 꺼려한다.

□ 빠른 변화로 인한 세대 간 차이

시장 경제는 고대 사회와 매우 다른 생활 방식을 추구한다. 신세대와 구세대는 사회에 대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Kyung-Sup and Song (2010)는 가족 제도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은 빠른 시장 경제 침투로 일부 신세대에서 전통 규범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수 있다(Teitelbaum 2018).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번 연구를 통해 세대 간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세대는 여성의 유급 노동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 세대는 더욱 평등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성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신세대 혹은 여성의 바램과 구세대가 만든 현실 간 차이로 인해 개혁 과정이 둔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교육받고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문화 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Teitelbaum 2018).

□ 가족 정책 및 정부 개입

한국 정부는 지난 계획에서 부모에게 물질적 복지를 제공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책은 단기간에 출산 추세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국가의 특이성은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남아 있다. 이제 정부는 직장 문화, 출산 시 남성의 역할, 성평등 등 전통성이 약해진 사회의 출산율 개선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민들이 출산에 긍정적(부정적)인 이유를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이 제도를 여전히 신뢰하는가? Thévenon(2016)은 프랑스가 시민들이 정책 지속성을 신뢰하고 참여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족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 Beaujouan, Éva, and Tomáš Sobotka. 2019. “Continuing increase in late childbearing in low-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 Societies*.
- Berghammer, C. 2014. “The return of the male breadwinner model? Educational

- effects on parents' work arrangements in Austria, 1980-2009," *Work, Employment & Society* 28(4): 611-632.
- Berghammer, Caroline, and Bernhard Riederer. 2018. "The Part-Time Revolution: Changes in the Parenthood Effect on Women's Employment in Austria,": 0-29.
- Blum, Alain. 1988. "L'évolution de la fécondité en France aux XVIIIe et XIXe siècles - Analyse régionale," *Annales de démographie historique*: 157-177.
- Brée, Sandra. 2017. "Changes in Family Size over the Generations in France (1850-1966)," *Population (English Edition)* 72(2): 297-332.
- Brinton, Mary C., and Dong-Ju Lee. 2016. "Gender-Role Ideology,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st-industrial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2(3): 405-433.
- Bumpass, Larry L., Ronald R. Rindfuss, Minja Kim Choe, and Noriko O. Tsuya. 2009.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Low Fertility," *Asian Population Studies* 5(3): 215-235.
- Choe, Minja Kim, and Robert D. Retherford. 2009. "The Contribution of Education To South Korea's Fertility Decline To 'Lowest-Low' Level," *Asian Population Studies* 5(3): 267-288.
- Esping-Andersen, Gøsta, and Francesco C. Billari.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Frejka, Tomas, Gavin W. Jones, and Jean Paul Sardon. 2010. "East Asian childbearing patterns and policy developmen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3): 579-606.
- Gauthier, Anne H. 2016. Governmental support for families and obstacles to fertility in East Asia and other industrialized regions. In: Rindfuss, Ronald R. and Choe, Minja Kim (eds.),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283-303.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Switzerland.
- Gauthier, Anne H. 2002.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s there convergence?," *Population* 57(3): 457-484.
- Jones, Gavin. 2017. What is driving marriage and cohabitation in low fertility countries? In: Poston, Dudley L., Lee, Samsik and Kim, Han Gon (eds.), *Low*

- Fertility Regimes and Demographic and Societal Change*, 149-166. Springer.
- Jones, Gavin W. 2007. "Delayed marriage and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3): 453-478.
- Jones, Randall S. 2013. "Education reform in Korea,"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067*(1067): 50.
- Kan, Man-Yee, and Ekaterina Hertog. 2017. "Domestic division of labour and fertility preference in China,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Demographic Research* 36(February): 557-588.
- Knodel, John, and Etienne Van de Walle. 1979. "Lessons from the Past: Policy Implications of Historical Fertility Stud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5(2): 217-245.
- Kyung-Sup, Chang, and Song Min-You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39-564.
- Matysiak, Anna, and Dorota Weziak-Białowska. 2016. *Country-Specific Conditions for Work and Family Reconciliation: An Attempt at Quantification*. Vol. 32.
- McDonald, Peter. 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485-510.
- Myrskylä, Mikko, Hans-Peter Kohler, and Francesco C. Billari. 2009.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Nature* 460(7256): 741-743.
- Myrskylä, Mikko, Joshua R. Goldstein, and Yen Hsin Alice Cheng. 2013. "New cohort fertility forecasts for the developed world: Rises, falls, and reversal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9(1): 31-56.
- Noland, Marcus. 2012. "Korea's Growth Performance: Past and Future,"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7(1): 20-42.
-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Pailhé, Ariane, Clémentine Rossier, and Laurent Toulemon. 2008. "French family policy: Long tradition and diversified measure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9(1): 149-164.
- Riley, Nancy E. 2016. Good Mothering in China: Effects of Migration, Low Fertility, and Birth Constraints. In: Poston, Dudley L., Lee, Samsik and Kim, Han Gon

- (eds.), *Low Fertility Regimes and Demographic and Societal Change*, 115-132. Springer.
- Sobotka, Tomáš. 2015. "Low fertility in Austria and the Czech Republic: Gradual policy adjustments,"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Working Papers*, No. 2/2015.
- Sobotka, Tomáš, and Éva Beaujouan. 2014. "Two is best? The persistence of a Two-child Family Ideal in Europe,"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Working papers* 3/2014.
- Teitelbaum, Michael S. 2018. Political Effects - Real and Imagined - In Low Fertility Societies. In: Poston, Dudley L., Lee, Samsik and Kim, Han Gon (eds.), *Low Fertility Regimes and Demographic and Societal Change*, 193-212. Springer.
- Thévenon, Olivier. 2011. "Family Policie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1): 57-87.
- Thévenon, Olivier. 2016. The influence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France: Lessons from the past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In: Rindfuss, Ronald R. and Choe, Minja Kim (eds.),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49-76.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Switzerland.
- Tsuya, Noriko O., Larry L. Bumpass, and Minja Kim Choe. 2000. "Gender , Employment, and Housework in Japan , South Korea , and the United States,"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9): 195-220.
- Volant, Sabrina. 2017. "Un premier enfant à 28,5 ans en 2015 : 4,5 ans plus tard qu'en 1974," *INSEE Première* 1642.
- Van de Walle, Etienne. 1986. "La fécondité française au XIXe siècle," *Communications* 44: 35-45.
- Yoo, Sam Hyun. 2016.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in cohort marriage: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35(1): 1045-1078.
- Yoo, Sam Hyun, and Tomáš Sobotka. 2018. "Ultra-low fertility in South Korea: The role of the tempo effect," *Demographic Research* 38(1): 549-576.
- Zeman, Kryštof, Éva Beaujouan, Zuzanna Brzozowska, and Tomáš Sobotka. 2018. "Cohort Fertility Decline in Low Fertility Countries: Decomposition Using Parity Progression Ratios," *Demographic Research* 38: 651-690.

부록

부록 1: 코호트 출산 추세

부록에서는 출산진도비를 살펴본다. 문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첫째 출산과 둘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 입문은 개인적 차원에서 수반되는 모든 제약 조건을 고려해 “가족을 형성”하는 단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양성평등과 근로 조건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첫째를 출산한 후 둘째 출산하려면 자녀들에게 최적의 자원을 통해 “최선”의 인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한국의 TFR 급감은 결국 신세대의 자녀수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Frejka et al.(2010)는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미약한 출산율 회복세를 확인했다. 그림 1은 장기적 관점에서 3개국의 완결 출산율 추세를 보여준다. 마지막 코호트(1966-70)의 여성 1인당 CFR은 1.84명으로 여전히 오스트리아보다 높지만 프랑스보다는 확실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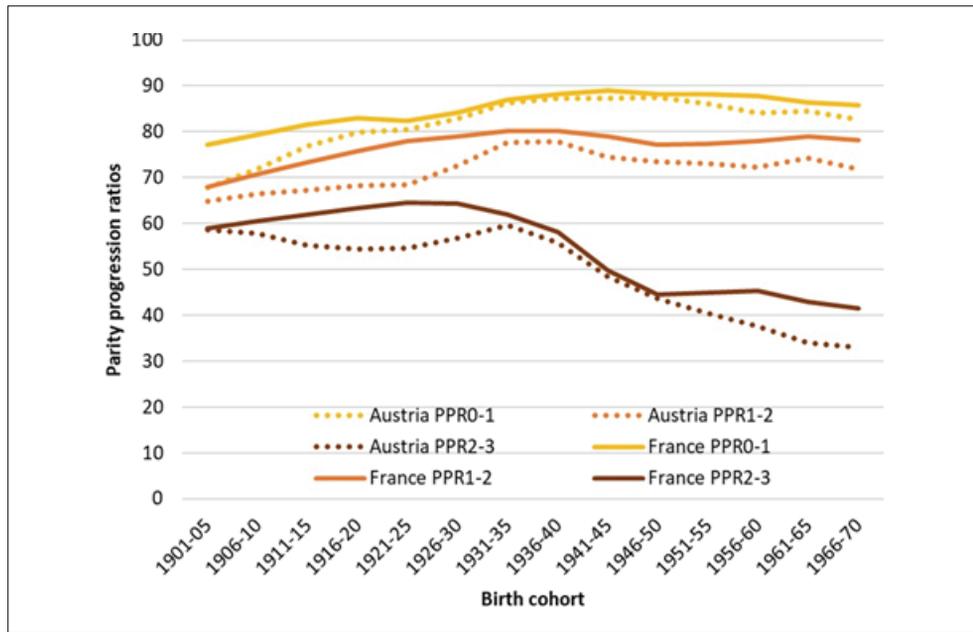
이들 국가의 출산진도비(PPR: Parity Progression Ratio) 연구를 통해 현재 CFR과 향후 가능한 추세에 대한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베이비 붐 이후 첫째와 둘째 출산 진도비가 각각 5%P와 6%P 감소했고(그림 11) 프랑스는 이보다 낮은 3%P와 2%P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20세기 초 출생한 코호트보다는 아직 훨씬 높은 수준이다. 셋째 출산 진도비는 베이비 붐 코호트에서 다소 회복되긴 했지만 20세기 초부터 크게 감소했다. 1901-05년과 1966-70년생 코호트 간 출산진도비의 경우 오스트리아는 59%에서 33%로, 프랑스는 59%에서 41%로 감소했다. 첫째와 둘째 출산 진도비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기 전까지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출산력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다. 급감한 둘째 자녀에서 셋째 자녀로의 출산 진도비는 회복 가능성이 좀더 낮아 보인다.

한국의 1901-35년생 코호트는 모든 출산 진도비가 90% 이상이고 특히 이 기간 무자녀 여성의 비율은 2%로 가장 낮았다. 셋째 출산 진도비는 1961-70년생 코호트에서 20%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코호트 합계 출산율을 낮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보다 최근에는 둘째 출산 진도비가 가장 크게 줄었고 30년 동안에는 14%P 감소

했다. 첫째 출산진도비 또한 7%p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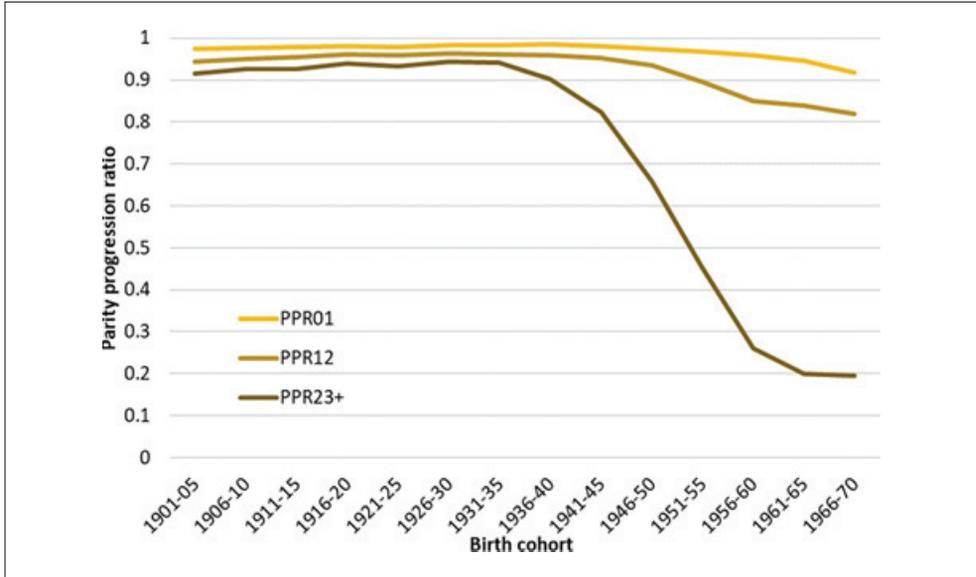
1966-70년생 코호트까지 셋째 자녀 출산 진도비는 유럽 2개국보다 낮았지만 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와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현재 TFR과 향후 예상되는 낮은 회복률을 고려하면 현재 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와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의 추세가 다음 출생 코호트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늘날 유자녀 코호트의 완결 출산율은 원래 결합이 크다(Frejka et al., 2010). 셋째 출산율이 약 20%에 고착되고 있어 첫째와 둘째 출산율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그림 4-55] 코호트 출산 진도비의,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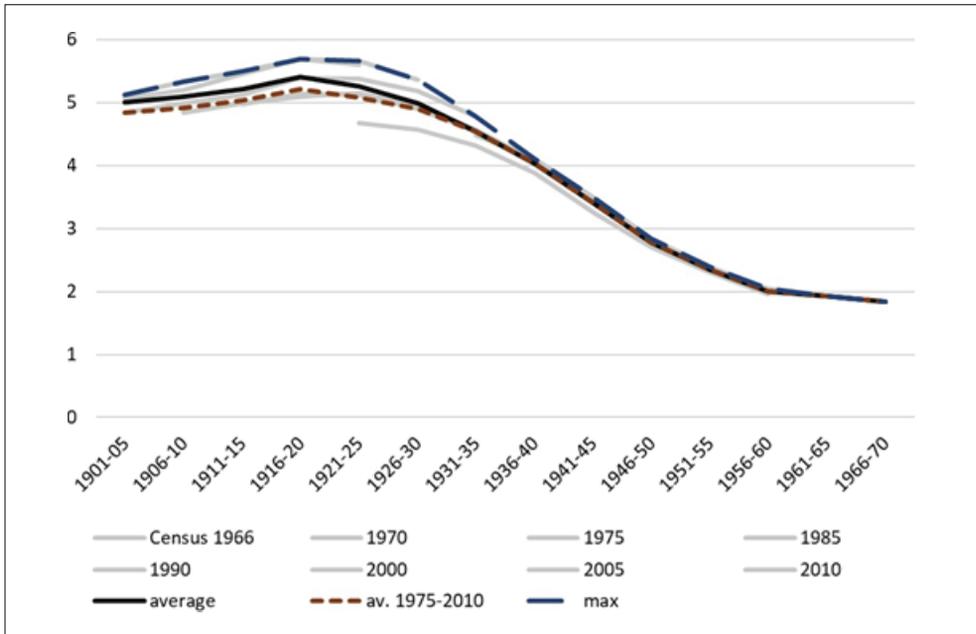
자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주 그림 1 참조

[그림 4-56] 1901-1970년생 여성의 출산진도비, 한국



자료: 한국의 경우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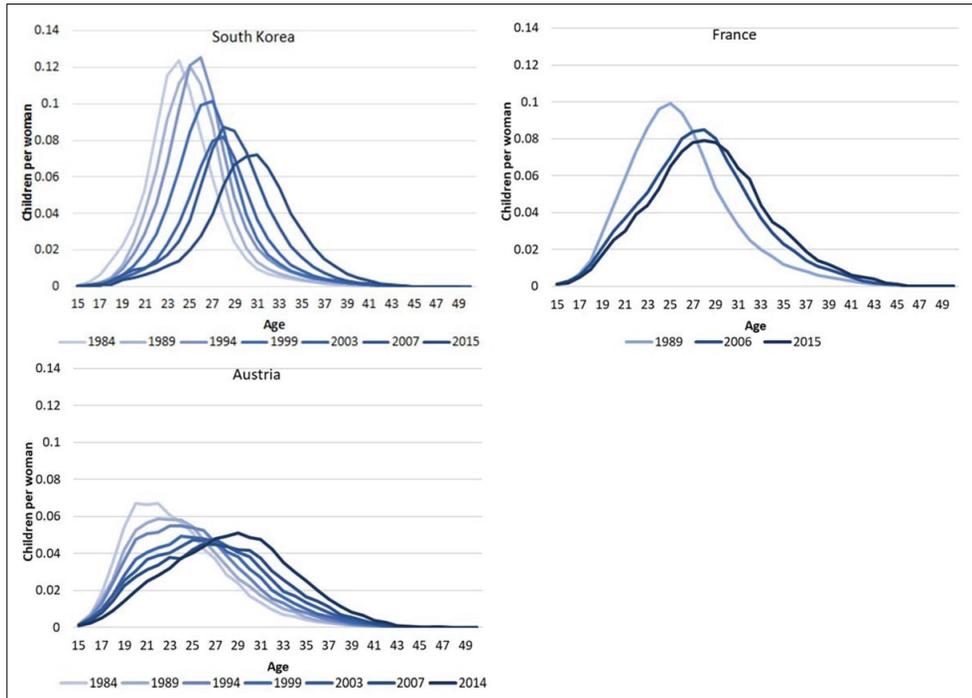
[그림 4-57] 코호트 출산율, 7개 인구조사 기반, 1901-2010년생 여성, 한국



자료: 1966, 1970, 1975, 1985, 1990, 2000, 2010년 한국 인구조사(2005년 누락 값으로 인해 하락함)

부록 2: 연령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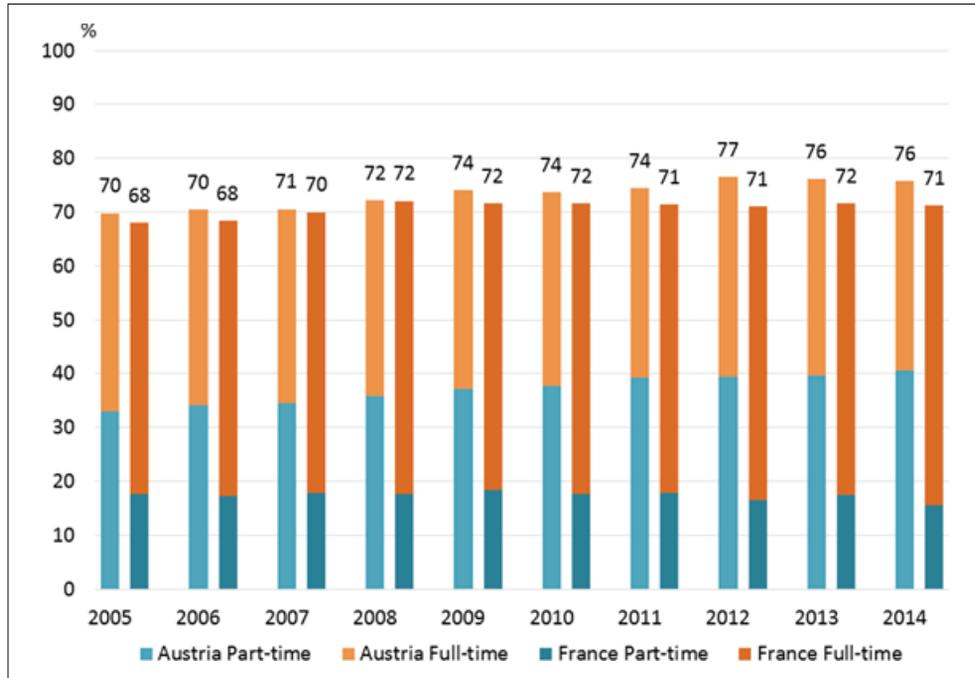
[그림 4-58] 한국,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의 연령별 기간 초산율



자료: 오스트리아의 인간출산율(Human Fertility), 한국의 인간출산율 및 Yoo & Sobotka (2018) 및 프랑스의 Volant (2017).

부록 3: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유자녀 여성의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그림 4-59] 고용 형태별(시간제/전일제) 유자녀 여성 고용률(0-14세 자녀 1명 이상)



자료: 보완 작업은 효과가 없었다. 오스트리아는 시간제고용이 유자녀 여성의 비경제활동을 일부 대체했고 프랑스는 과거보다 시간제고용률이 다소 낮아지고 비경제활동률이 다소 높아졌다(프랑스의 경우 30%, 10%는 확실한 실업... 및 일부 학생). 비경제활동률은 2005년 동일한 비율에서 벗어났으며 2015년 동일한 비율로 이동했다.

프랑스는 남성의 소득이 낮아(전일제에 상응하는 소득이 더욱 낮음) 여성도 전일제로 일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시간제근무제가 발전해 프랑스보다 노동 시간이 짧다(2015년 주당 노동시간이 29시간 이하인 유자녀 기혼 직장 여성 비율, 오스트리아: 55.3%, 프랑스 21.4%).

부록 4: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가족 정책 비교

오스트리아는 1960년 출산 후 여성에게 12개월(자녀 1살 생일까지)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이래 휴가 기간과 지원금을 계속 확대해왔다. 반면 프랑스는 육아휴직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지원금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들은 매우 적다. 1996년부터 남성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남성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라지는 육아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보육제도(보조금 지급)가 발달해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률이 매우 높다. 프랑스의 보육제도는 20세기 초 거의 발전이 없었으나(아동의 5분의 1 미만 등록) 1950년대 3-5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유아교육을 받았고, 이후에도 이 수치는 계속 높아졌다. 오스트리아 보육시설 등록률은 1960년대까지 아동의 4분의 1로 낮은 수치를 유지했다. 2008년 오스트리아는 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다중속도 육아휴직제를 채택했다. 현금 급여는 양국 모두 높은 수준으로 급여 액수는 오스트리아가 더 높지만 프랑스가 좀 더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